

18

독일통일 총서

외교 분야 I

관련 정책문서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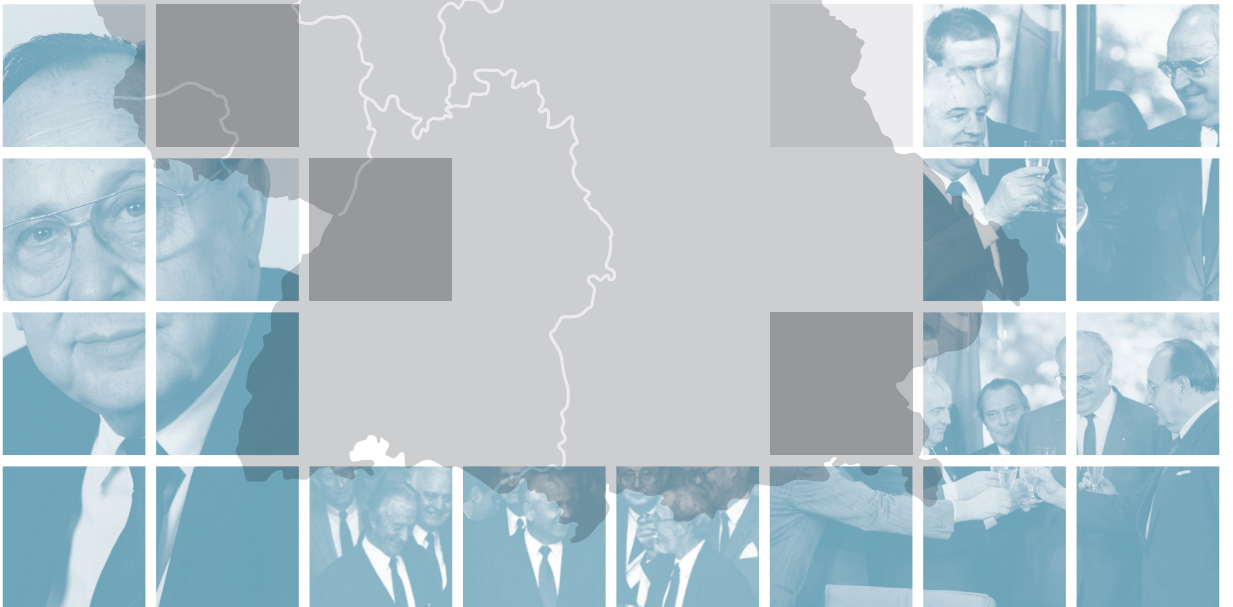


18

독일통일 총서

외교 분야 I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 총서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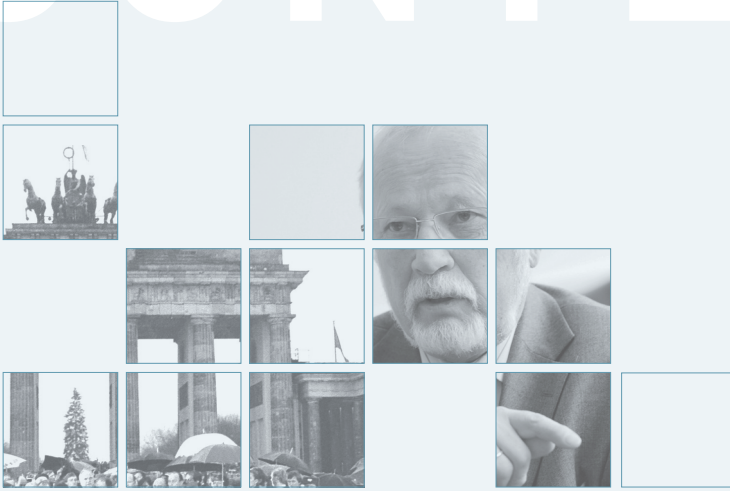
외교 분야 I 관련 정책문서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처 통일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5757

디자인·제작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전화 02-2272-0307

CONTENTS



동독주민의 평화혁명과 통일 추진

제1장 통일외교의 중요성과 연구의 목적	10
제1절 독일통일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10
제2절 독일통일 과정에서 '외교'의 중요성	11
제3절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	13
제2장 동독주민의 평화혁명과 독일의 외교활동	16
제1절 1989년의 동유럽과 동독의 상황	16
제2절 동독 피난민의 송환을 위한 외교활동	18
제3절 1989년 가을의 평화혁명	22
제4절 평화혁명의 성공 요인	24
제3장 콜 총리의 통일 추진과 전승 4개국의 입장	27
제1절 콜 총리의 독일통일 10개 방안	27
제2절 독일통일에 대한 전승 4개국의 입장	31
제3절 점진적인 통일에서 신속한 통일로 선회	36
제4절 서독정부의 통일 방향 결정	38
제5절 동독정부의 통일 방향 결정	39

제4장 독일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와 2+4회담 기구 구성	40
제1절 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들	40
1. 4개국의 '베를린과 전 독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해제 문제	41
2. 통일독일의 NATO 잔류 문제	42
3. 통일된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 문제	43
4. 독일 군 병력 감축과 ABC 무기 보유 문제	46
5. 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수 문제	46
6. 점령 기간 중 몰수된 재산(토지)의 소유권 문제	47
제2절 2+4회담 기구 구성	49
제3절 헬싱키 프로세스와 독일통일	52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을 위한 외교

들어가며	62
제1장 독일문제와 내독정책	64
제1절 기민당 주도의 서구지향 외교(1949-1958년)	64
제2절 신동방정책과 긴장완화(1963-1988년)	68
제2장 동독의 변혁을 지원하기 위한 외교	72
제1절 동구권의 개혁과 서독과의 협력	73
제2절 '대사관 난민문제'를 위한 협상	75
제3장 통일외교의 가동	86
제1절 장벽의 붕괴와 통일로 가는 길	87
제2절 2+4협상을 위한 결정	95

CONTENTS

제4장 동독 외무부의 해체	98
제1절 동독 외무부의 조직과 인력	98
제2절 동독 외무부의 해외공관과 해외 재산의 처리	104
제3절 동독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	105
나가며	107



외교 분야 I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112
문서 요약	152
문서 요약(문서번호 1~306)	152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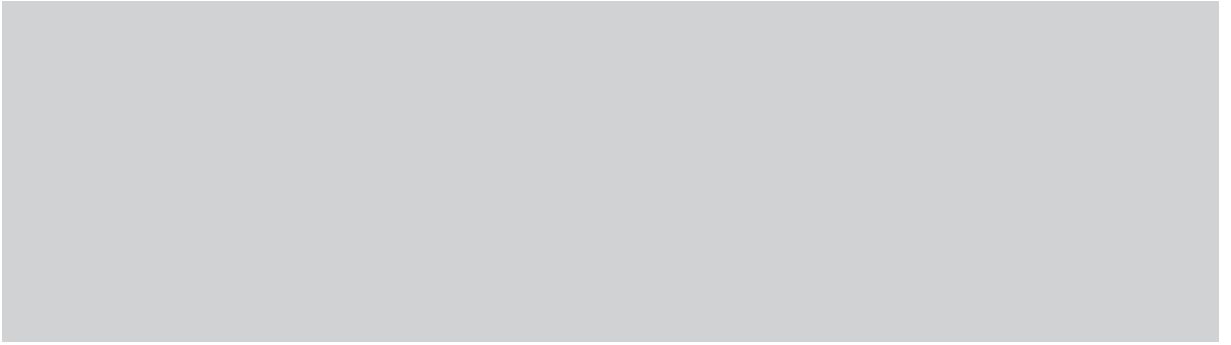


표 1-1) 동독주민의 서독 이주현황	21
----------------------	----



그림 1-1) 포츠담협정에 의해 폴란드 관할 아래에 들어간 독일영토	45
---------------------------------------	----

외교 분야 I
관련 정책문서



동독주민의 평화혁명과 통일 추진

손 선 홍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특임교수, 전 주함부르크 총영사)



통일외교의 중요성과 연구의 목적

제1절 독일통일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한반도에는 아직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다. 분단 극복에 대한 염원이 크나 북한의 핵문제와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분단국의 주요 과제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꾸준히 통일 준비를 하는 등 통일을 위한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 외교·안보, 경제, 노동, 사회, 교육, 문화 등 국가 업무 전반에 걸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실제 통일과정이 준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통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통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최선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유럽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독일은 분단 시절은 물론이고 통일을 이룩한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의 분단 원인은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분단되었던 독일의 상황과는 다르다. 또한 동·서독 관계와 오늘날의 남북한 관계도 다르다.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으나 독일은 그렇지 않았다. 동·서독 간에 꾸준한 교류가 있었으나, 남북한 간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동독과 달리 핵

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날의 남북한 관계가 동·서독 관계와 다르지만 우리는 독일통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왜 그런가?

첫째, 독일통일이 자유민주주의에 의해 평화통일을 이룩한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독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이룩한 통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통일도 바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평화통일이다. 물론 북한주민의 지지도 얻어야 한다.

둘째, 독일통일이 주변 강대국의 반대를 극복하고 이룬 통일이기 때문이다. 소련, 영국, 프랑스 등 주변 강대국들이 독일통일을 강하게 반대했으나, 독일은 외교력으로 이들 나라를 설득하여 통일을 이룩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북한과 중국의 유대관계,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등 한반도 주변의 통일 환경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독일이 주변 강대국의 반대를 극복하고 이룬 통일 외교전략을 우리가 참고해야 할 이유이다.

셋째, 독일통일의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통일의 발단은 독일과는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독일통일 과정에서 있었던 동독주민의 대량 이주 사태, 주변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외교활동, 동·서독 화폐 통합 문제, 통일비용 조달 문제, 동·서독주민들 간의 심리적 격차 문제, 동독 지역 내 몰수 재산의 소유권 처리 문제 등 독일통일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은 우리의 통일과정에서 그대로 일어날 문제들이다. 따라서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잘한 점은 잘한 대로, 잘못했거나 실수한 점은 우리가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독일통일에서 참고하고 배울 점이다.

제2절 독일통일 과정에서 ‘외교’의 중요성

독일통일이 외교력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교는 독일통일에 큰 역할을 했다. 독일의 정치학자 칼 카이저(Karl Kaiser)는 전후

질서의 붕괴를 가능케 한 독일통일을 ‘직업 외교가 거둔 위대한 승리의 하나’로 평가했다.¹ 통일을 이루기 위해 독일이 추진했던 외교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동독을 탈출하는 주민들을 데려오기 위한 송환교섭 외교활동이다. 폴란드와 헝가리 등 일부 동유럽 국가들이 개혁을 추진하며 변화하고 있었으나 동독 공산정권은 개혁의 의사가 없었다. 이러한 동독정권에 실망한 주민들은 서독으로의 탈출과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며 저항했다. 헝가리, 동독과 소련을 상대로 한 서독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으로 서독으로 오고자 하는 동독주민들을 모두 데려올 수 있었다.

동독주민들의 대규모 탈출은 동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민운동가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서독의 송환교섭 외교가 실패하여 주민들이 동독으로 되돌아갔더라면 탈출 희망자들이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개혁을 요구하는 동독 내 시위도 탄력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점이 송환교섭 외교활동이 갖는 중요성인 것이다. 동독주민의 대규모 탈출과 개혁 요구 시위는 1989년 가을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가져온 평화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

둘째, 사실상 독일통일의 성패가 달려있는 2+4회담의 성공을 위한 외교 활동이다. 독일통일의 당사자는 서독과 동독이었지만 통일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전후 독일을 점령·통치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전승 4개국이 ‘베를린과 전(全) 독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고, 전승 4개국의 승인이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헬무트 콜 총리와 한스-디트리히 젠서 외무장관이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한 통일외교로 전승 4개국의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다.

¹ Richard Kiessler/Frank Elbe, *Ein runder Tisch mit scharfen Ecken : Der diplomatische Weg zur deutschen Einheit*, Baden-Baden, Nomos, 1993, p.14.

제3절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

독일통일에 관해 우리나라에서 많은 논문 발표와 저서 출간이 이어지고 있으나 주로 경제와 사회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다. 독일통일이 가능했던 주요 요인은 전승 4개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서독이 추진했던 통일외교 때문이다. 그럼에도 독일통일의 대외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는 다른 분야의 연구에 비교하여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첫째, 독일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대외적인 문제의 해결 과정을 살펴보고 둘째, 독일통일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 셋째, 한반도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세부적으로 (1) 독일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들로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으며, 독일이 이러한 ‘대외적인 문제’를 해결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즉, 독일정부가 추진했던 통일외교가 통일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다루고자 했다. (2) 이러한 외교 활동으로 이룩한 독일통일이 분단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3) 한반도통일을 위한 통일환경을 살펴보고, 우리가 추진해야 할 통일외교 전략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분단 시점부터 통일 이후의 통합 과정까지 다루었기 때문에 그 범위는 대단히 광범위하다. 시간적 범위는 전후 독일문제 처리를 위한 1945년 7월의 포츠담회담에서부터 통일 이후의 대외적인 문제 처리 완료시점까지이다. 독일통일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1989년 가을 동독주민의 평화혁명, 콜 총리의 ‘독일과 유럽 분단 극복을 위한 10개 방안’, 통일 여부가 달려있는 2+4회담 과정 등 통일과정에서 외교와 관련 있는 내용들을 가급적 최대한 다루었다. 이러한 외교문제를 다루면서 해결하는 과정도 가급적 상세하게 다루고자 했다. 이를 통해 독일통일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독일통일의 시사점을 제대로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독일을 중심으로 하여 독일통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전승 4개국과 전 유럽 국가들을 포함했다.

연구 방법은 1차적으로 독일정부가 발행한 분단 및 통일과 관련 있는 각종 조약과 협정문을 토대로 했다. 이를 토대로 독일통일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주요 인사들의 회고록과 저서를 참고했다. 헬무트 콜 총리, 2+4회담 서독 측 대표였던 한스-디트리히 겐서 외무장관, '통일조약'을 담당했던 볼프강 쇼이블레 내무장관, '통화·경제와 사회동맹 조약'을 담당했던 테오 바이젤 재무장관, 콜 총리의 외교안보 보좌관 호르스트 텔칙과 겐서 외무장관의 보좌관이었던 프랑크 엘베는 회고록과 저서를 통해 통일과정에서 있었던 생생한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겼다. 또한 독일통일과 우리의 통일문제를 다룬 국내외 서적도 참고했다.

본 연구 내용의 분량이 많아 부득이 외교 분야 I(동독주민의 평화혁명과 통일 추진)과 외교 분야 II(독일통일을 위한 외교활동과 한반도 통일외교 전략)로 나누었다.

외교 분야 I의 제1장에서는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통일과정에서 외교의 중요성과 본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에 관해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1989년 가을의 평화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동독주민의 송환 교섭 외교활동과 개혁을 요구하는 동독주민의 시위활동 내용을 설명했다. 제3장에서는 독일의 통일 추진 계획과 독일통일에 대한 전승 4개국의 입장을 알아보았다. 제4장에서는 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4회담 기구 구성문제를 다루었다.

외교 분야 II의 제1장에서는 2+4 본 회담을 앞두고 독일이 미국, 영국, 프랑스와 소련의 전승 4개국을 상대로 추진했던 외교활동을 설명했다. 제2장에서는 4차례에 걸친 2+4회담 내용과 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이 추진했던 정상회담과 외무장관 회담 등에 관해 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역대 독일정부의 독일정책을 알아보고, 독일통일의 특징을 분석

했다. 제4장에서는 통일 이후 동독의 외교관계 정리 내용과 독일 주둔 외국군 철수 등 대외적인 문제의 후속 처리 내용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통일환경에 관해 알아보았다. 이어서 이러한 환경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통일의 교를 추진해야 하는가를 제시하였다.

필자는 외교관으로 주독일 대사관 등 독일 공관에서 여러 차례 근무하며 통일 전의 동·서독 관계와 통일 이후의 독일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또한 2+4회담에 서독 측 대표로 활동했던 겐서 외무장관을 비롯하여 여러 독일인들과 독일통일에 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독일에서의 현장 경험과 주요 인사들과 나눈 대화가 이 논문을 쓰는 데 많은 참고가 되었음을 밝히둔다.

동독주민의 평화혁명과 독일의 외교활동

제1절 1989년의 동유럽과 동독의 상황

독일은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이룩했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의 무조건 항복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와 소련의 점령 통치를 받은 지 45년 만에, 1949년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된 지 41년 만에 이룬 통일이다. 독일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계기는 1989년 가을에 동독주민들이 일으킨 평화혁명이다. 동독주민들은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 공산당 서기장을 퇴진시키고 마침내 11월 9일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며, 통일의 길을 여는 평화혁명을 이끌어 냈다. 서독은 동독주민이 일으킨 이 평화혁명을 토대로 통일을 이룩했다.

동독주민들이 이처럼 평화혁명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으로 1980년 자유노조연대가 시작한 폴란드혁명과 동유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1985년 3월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는 개혁과 개방을 표방하며 ‘신사고’ 정책을 추진했다. 이 결과 철의 장막이 굳게 드리워졌던 동유럽에 1989년 들어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동유럽의 변화는 특히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두드러졌다.

폴란드에서는 1989년 6월의 자유총선에 의해 자유노조연대 출신의 타데우

시 마조비에츠키(Tadeusz Mazowiecki)가 공산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총리가 되었다. 동유럽 국가 중에서 비공산당 정부가 들어서기는 폴란드가 처음이다. 헝가리에서는 1989년 5월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선에 설치한 감시초소와 철조망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헝가리 공산당은 헌법에 명시된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포기하고 다당제를 허용하는 등 개혁을 추진했다. 1989년 10월 23일에는 국명을 ‘헝가리인민공화국’에서 ‘헝가리공화국’으로 바꾸었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동유럽 국가들의 주권을 제한했던 ‘브레즈네프 독트린’²의 폐기였다. 1988년 12월 UN 총회 연설에서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한 약속이 실현된 것이다. 이로 인해 동유럽 국가들은 좀 더 자유롭게 국내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바람도 폴란드와 헝가리에 국한되었으며 다른 동유럽 국가로 전파되지는 못했다.

동독의 경우, 호네커 서기장은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개혁과 개방정책을 비난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고수했다. 이러한 가운데 1989년 1월 15일 동독 라이프치히에서는 로자 룩셈부르크의³ 사망 70주년을 맞이하여 의사 표현, 집회, 언론의 자유와 국외여행 자유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다. 이후 동독에도 변화가 왔다. 그 계기는 1989년 5월 7일에 실시된 지방선거였다.

지금까지 동독에서 선거란 공산정권에 대해 집단적으로 동의해 주는 하나의 의식행위였으나 1989년에는 달랐다. 투표율 98.77%에 투표자의 98.85%

.....

²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968년 8월 21일 체코슬로바키아의 자유화 운동을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했다.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1968년 11월 12일에 열린 제5차 폴란드 공산당 대회에서 체코슬로바키아 자유화 운동 진압을 정당화했다. 그는 사회주의 국가가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에 이를 사회주의 국가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개입할 수 있고, 사회주의 국가의 주권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89년 10월 27일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폐기로 동유럽 국가들은 국내문제에 좀 더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³ 로자 룩셈부르크(1871-1919년)는 폴란드 태생의 독일의 사회주의자, 혁명가였다. 룩셈부르크는 독일 극좌 성향주의자들과 함께 1919년 1월 혁명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으며 체포되어 살해되었다.



가 국민전선의 후보자를 지지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동독 시민운동가들은 선거와 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며 고발을 하고 항의 시위를 했다. 그러나 부정 선거에 대한 고발은 반국가적이고 적대적 행위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의 시위는 진압되었다. 5월 7일 지방선거는 공정했다는 동독 외무부의 발표는 주민들의 반발을 고조시켰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 폴란드와 헝가리의 변화,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폐기는 동독주민들에게 공산정권에 저항하는 용기를 주었다. 변화를 거부하는 호네커 정권에 실망한 주민들은 두 가지 형태로 저항했다. (1) 서독으로의 탈출과 (2) 공산정권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였다.

제2절 동독 피난민의 송환을 위한 외교활동

동독정권이 개혁의 의지가 없고 변화를 거부하자 주민들은 동독에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서독으로 탈출하고자 했다. 서독에서 누릴 자유와 풍요로운 삶에 대한 희망도 이들을 움직이게 했다. 특히 젊은이들이 적극적이었는데, 이들은 탈출이 비교적 용이한 헝가리로 몰려들었다.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선에 설치한 감시초소와 철조망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헝가리는 감시초소와 철조망을 제거하기 시작하여 1989년 6월 27일 호른(Gyula Horn) 외무장관은 모크(Alois Mock) 오스트리아 외무장관과 함께 철조망 절단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 장면이 텔레비전을 통해 동독주민들에게도 알려졌다. 헝가리는 6월에 유엔 난민협약에도 가입했다. 헝가리의 이러한 조치로 삼엄하기만 했던 공산 세계에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 탈출할 수 있는 ‘빈틈’이 생겨난 것이다.

이로 인해 헝가리로 오는 동독주민들이 크게 늘어났다. 8월 19일에는 범유럽연맹이 헝가리 국경도시 소프론에서 개최한 ‘범유럽 피크닉 행사’를 계기로 661명의 동독주민들이 오스트리아를 경유하여 서독으로의 탈출에 성

공했다. 탈출하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자 동독정부는 헝가리정부에게 자국민을 동독으로 돌려보내 주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을 데려오고자 하는 서독정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대사관에 있던 180여 명의 동독주민들은 8월 24일 국제적십자의 신분증을 받아 서독으로 넘어왔다.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는 서독으로 오기 위해 헝가리에 머물고 있는 동독주민들이 1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콜 총리는 8월 25일 헝가리 미클로스 네메트(Miklós Németh) 총리와 호른 외무장관을 본으로 초청하여 정상회담을 통해 협조하겠다는 헝가리 측의 약속을 받아들였다. 이 결과 헝가리정부는 인도적인 사유로 9월 11일 0시를 기해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전격 개방했다.⁴ 이 조치로 3일 동안에 약 1만 5,000명의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 떠났으며, 9월 한 달 동안 약 3만 명의 주민들이 서독으로 넘어왔다. 이에 대해 동독정부는 ‘조직적인 인신매매’와 ‘국제법 위반’ 등을 거론하며 항의했으나 헝가리정부는 무시했다. 서독정부의 외교가 결실을 거둔 첫 번째 성과였다. 헝가리가 국경을 개방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동독의 붕괴는 좀 더 늦추어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⁵ 헝가리의 국경 개방조치가 동독의 붕괴를 앞당긴 것이다.

이후 동독정부의 요청으로 체코슬로바키아정부가 헝가리로 가는 국경을 통제하자 동독주민들은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로 몰려들며 서독대사관으로 들어갔다.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으로 들어갔던 주민들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동독정부의 약속을 받고 9월 12일 동독으로 되돌아가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9월 중순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으로 다시 수천 명이 몰려 들어갔다. 몰려든 동독주민들로 인해 대사관이 잠시 폐쇄되기도 했다. 식사 제

⁴ 헝가리정부는 동독정부와 체결한 국경통과에 관한 협정(1969년 6월 20일 체결)에 의해 제3국으로의 유효한 여행증명서(비자)가 없는 동독주민들이 떠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었다. 헝가리정부는 이 협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⁵ Karl-Rudolf Korte, *Die Chance genutzt?, Die Politik zur Einheit Deutschlands*, Frankfurt/Main: Campus, 1994, p.45.



공도 문제였지만 위생문제가 더 심각했다. 서독 내에서는 인도적인 견지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UN 총회에 참석차 뉴욕에 있었던 한스-디트리히 겐셔(Hans-Dietrich Genscher) 외무장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9월 27일 겐셔는 스쿠비 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과 요하네스 체코슬로바키아 외무장관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폴란드 장관은 ‘인도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으나, 체코 장관은 동·서독정부가 해결할 문제라며 협조에 부정적이었다. 이날 저녁 겐셔는 오래 전에 예정된 오스카 피셔 동독 외무장관과의 만찬 기회에 해결방안을 협의한 결과 피셔로부터 본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을 얻었다. 다음날 9월 28일 수백 명의 주민들이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으로 몰려들자 사정이 심각해져 더 이상 지체하기 어려웠다. 겐셔 장관이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에게도 협조를 요청한 결과 세바르드나제 장관은 고르바초프 서기장에게 보고하여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9월 30일 아침 동독정부는 서독정부에게 프라하와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에 있는 동독주민들을 서독으로 보내겠다고 통고했다. 다만, 이들은 열차편으로 동독을 경유하여 갈 것이라고 했다. 서독정부는 동독주민들을 안전하게 데려오기 위해 겐셔 외무장관과 자이티스 총리실 장관을 프라하로, 쥐드호프 외무부 차관을 바르샤바로 파견했다. 수십 명의 외무부, 내무부와 총리실 고위 공무원들도 따라 갔다.

이날 저녁 겐셔 장관은 대사관 내 약 5,500여 명의 동독주민들에게 서독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렸다. 10월 1일 새벽 제1진이 특별열차편으로 동독을 경유하여 서독으로 왔고, 바르샤바대사관에 있던 800여 명의 주민들도 넘어왔다. 이후 프라하로부터 두 차례(10월 4일과 11월 4일) 더 대규모로 넘어왔다. 헝가리 체류 동독주민의 송환 성공에 이어 서독정부가 거둔 두 번째 외교 성과였다.

이렇게 하여 1989년 한 해에만 서독으로 넘어 온 동독주민들은 총 34만

3,854명이었다. 이들 중 40대 미만이 약 70%였으며 이들은 동독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평균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므로 동독에게는 타격이 컸다.⁶ 능력 있는 젊은 노동력이 빠져나가자 동독경제는 더 어려워졌다. 동독을 떠나고자 하는 주민들의 결단과 이들을 데려오고자 했던 서독정부의 외교활동이 동독정권의 붕괴를 촉진시켰다.

표 1-1) 동독주민의 서독 이주현황

(단위 : 명)

시기	이주자 수
1989년 1월	4,627
2월	5,008
3월	5,671
4월	5,887
5월	10,642
6월	12,428
7월	11,707
8월	20,935
9월	33,255
10월	57,024
11월	133,429
12월	43,221
소계 1989년	343,854
1990년 1월	73,729
2월	63,893
3월	46,241
4월	24,613
5월	19,217
6월	10,689
소계 1990년 1-6월	238,384
합계 1989년 1월-1990년 6월	582,238

⁶ 손선홍, '호네커의 퇴진과 베를린 장벽 개방,' 『외교』 제12호(한국외교협회, 1989.12).

제3절 1989년 가을의 평화혁명

개혁과 변화를 거부하는 동독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두 번째 저항 수단은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였다. 시민운동가들은 동독의 장래는 개혁에 달려 있다고 보고, 단체와 정당을 결성하며 정부에 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신포럼(Neues Forum)', '민주주의 지금(Demokratie Jetzt)', '민주주의 출발당(Demokratische Aufbruch)' 등의 단체나 정당을 결성하며 동독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공산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첫 시위는 1989년 9월 4일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St. Nikolai Kirche)에서 있었다. 약 1,200명의 주민들은 기도 모임을 가진 후 '국외여행 자유화'와 '슈타지 축출'⁷ 등을 요구했다. 이후 매주 월요일 니콜라이 교회에서 기도 모임 후 시위가 이어졌다.⁸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일 모임은 보안요원의 감시를 받으며 강제로 해산되기도 했으나, 꾸준히 이어지며 드레스덴 등 다른 도시로 전파되어 갔다. 동독주민들의 계속되는 대규모 탈출은 주민들로 하여금 공산정권에 저항하는 데 큰 용기를 주었다.

주민들의 탈출은 동독사회가 실제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했다.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는 동독정권 수립 40주년 기념식이 열린 10월 7일에도 있었다. 이 행사에 참석했던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너무 늦게 오는 자는 인생이 벌을 내린다(Wer zu spät kommt, den bestraft das Leben)”라며 호네커 서기장에게 개혁을 촉구했다. 그러나 호네커는 개혁할 의도가 없어 고르바초프의 조언을 무시했다. 이 당시 고르바초프는 동독의 엄격한 공산주의체제를 개혁하여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한 국가로 남아 있도록

⁷ 슈타지는 국가보안부(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Stasi)의 약자로 비밀경찰을 운영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여 이 부처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⁸ 동독 교회에서 평화의 기도 모임은 1982년부터 정기적으로 있어 왔다. 이 기도 모임은 1989년 5월 공산정권의 지방선거 조작 이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며 주민들은 9월 4일 첫 모임을 갖고 시위를 했다.

하고자 했다.⁹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그럴 여력이 없었다. 소련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소련 연방 내 민족 문제로 동독에서 일어나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10월 9일 월요일 시위에 참가한 약 7만 5,000명의 시위대는 “우리는 이곳에 남는다(Wir bleiben hier)”와 “우리가 국민이다(Wir sind das Volk)”¹⁰라는 구호를 외치며 개혁을 촉구했다. 10월 16일의 시위에는 가장 많은 인원인 10~12만 명이 참가했다. 호네커는 시위대 진압을 위해 장갑차 부대 배치와 필요 시 무기 사용을 지시했으나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와 같은 무력 진압은 없었다. 시위대 규모가 예상보다 커 강제진압이 어려웠고, 주민들도 평화적으로 시위했기 때문이다.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자 10월 18일 호네커 서기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에곤 크렌츠(Egon Krenz)가 후임 서기장으로 선출되었다.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으나 11월 4일 동베를린에 약 70만 명이 참가한 시위를 비롯하여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계속되었다. 이에 11월 8일 슈토프 총리가 사퇴하고, 드레스덴 시당 제1서기인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가 총리로 취임했으나 주민들의 개혁 요구에 부응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했다.

11월 9일 동독정부는 국외여행 자유화 규정을 마련했다. 이날 오후 6시경 정부 대변인 귄터 샤보브스키(Günther Schabowski)가 기자회견 도중에 국외여행 자유화 조치를 발표했다. “개인적인 외국여행은 전제 조건(여행 사유와 친척 관계)을 제시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고, 허가는 바로 내려진다”라고 했다. 기자회견 준비에 소홀했던 샤보브스키는 신규정이 언제부터 발효하느냐고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즉시, 지체 없이(sofort, unverzüglich)” 발효

⁹ 게르하르트 리터, ‘통일독일의 사회정책’, 『한반도는 통일독일이 될 수 있을까?』(서울: 송정문화사, 2010).

¹⁰ 공산정권이 아닌 동독주민들이 주권자라는 뜻이다.



된다고 했다.¹¹ 기자회견 내용을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한 주민들이 서베를린으로 가는 검문소에 몰려들었고 결국 베를린 장벽은 붕괴되었다.

동독정권은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1961년 8월 13일에 베를린 장벽을 쌓았다.¹² 28년이 지난 뒤에는 주민들의 탈주와 이주를 막기 위해 베를린 장벽을 개방한 것이다. 11월 11~12일의 주말을 기해 약 3백만 명의 동독주민들이 서베를린과 서독을 방문했다. 동독주민들이 평화혁명을 이룬 것이다.

제4절 평화혁명의 성공 요인

베를린 장벽이 이처럼 붕괴할 것이라고는 동독정부는 물론 서독정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¹³ 장벽이 붕괴되던 11월 9일에 헬무트 콜 총리는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이었다. 콜 총리는 방문을 중단하고 11월 10일 독일로 돌아와 베를린에서 열린 베를린 장벽 개방 행사에 참석하고 본으로 돌아왔다. 콜 총리는 전승 4개국의 정상들에게 베를린 장벽 붕괴 후의 상황을 설명하며 베를린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1월 10일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 및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데 이어 11월 11일에는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크렌츠 동독 서기장, 그리고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통화했다.

콜 총리는 고르바초프 서기장에게 동독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서독정부가 바라는 바가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동독주민들의 대규모 탈출은 심각

¹¹ 샤보브스키 대변인은 신국외여행규정을 채택한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에 늦게 참석하여 상세 내용을 모르고 크렌츠 서기장의 지시로 기자회견을 했다. 신국외여행규정은 11월 10일 4시를 기해 발효되게 되었는데 그의 실수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¹² 1949년 1월 1일부터 1961년 8월 12일까지 268만 6,942명의 동독주민이 서독으로 넘어왔다. 대규모 인력 유출로 인해 동독경제가 크게 어려워졌으며, 국가 존립 자체도 위태로웠다. 동독은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소련과 협의를 거쳐 장벽을 쌓았다.

¹³ 서독 정보기관도 예상하지 못했다. Richard Kiessler /Frank Elbe, *Ein runder Tisch mit scharfen Ecken : Der diplomatische Weg zur deutschen Einheit*, Baden-Baden, Nomos, 1993, p.45.

한 경제적인 피해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또한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도 콜 총리가 베를린 사태를 잘못 판단하여 선부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자 유의했다. 동독 지도부가 동독을 어떻게 민주화시키고 경제체제를 새롭게 할 것인가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작업은 간단한 일이 아니고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모든 변화는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서두르면 혼란을 초래하고, 이는 독일과 소련 두 나라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콜 총리는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통화 후 소련이 베를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1953년 6월처럼 무력으로 개입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¹⁴ 이는 매우 중요했다. 이는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킨 동독주민의 행동이 성공할 것임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소련 국내에서는 베를린에서 일어나는 일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1) 소련 국내 경제의 악화, (2) 소연방 내 민족 분열의 움직임과 폴란드 내 사태로 인해 소련은 개입할 여력이 없었다. 또한 (3) 무력 개입은 개혁을 추진하는 고르바초프의 이미지에도 맞지 않으며 무력 개입 시 미국 등 서방 측과의 관계악화도 염두에 두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1989년 가을 동독에 평화혁명이 이루어졌다. 평화혁명이 가능했던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동독주민들이 동독을 변화시키겠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시민운동가들은 공산정권의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항하며 개혁을 요구했다.

둘째, 동독 피난민을 데려오기 위한 서독정부의 외교 교섭이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에 몰려들었던 동독주민들

¹⁴ 1953년 6월 동베를린 건축 공사장의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한 파업이 동독 전역으로 퍼지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었다. 소련은 6월 17일 이 시위를 탱크 등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했다. 독일정부는 6월 17일을 ‘독일통일의 날’로 지정하여 이날을 해마다 기념해 왔다. 1990년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는 ‘통일의 날’은 10월 3일이 되었다.



의 탈출이 성공했기 때문에 동독 내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점에 서독정부의 송환을 위한 외교활동의 중요성이 있다.

셋째, 주민들의 개혁 요구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시위 과정에서 피를 흘렸더라면 시위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넷째, 서독의 TV 방송도 일부분 역할을 했다. 서독 TV가 동독주민들의 탈출에 관해 지속적으로 보도하였으며, 이를 시청한 동독주민들로 하여금 서독으로의 탈출을 자극했다. 서독 TV가 동독주민들에게 평화혁명을 부추기지는 않았지만, 평화혁명의 발생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TV가 혁명의 중재자였으며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다.¹⁵

1989년 가을 동독주민들이 일으킨 평화혁명은 독일의 장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어 통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었다. 독일의 장래는 독일정부가 이 평화혁명으로 조성된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었다.

.....
¹⁵ Karl-Rudolf Korte, 앞의 책, p.54.

콜 총리의 통일 추진과 전승 4개국의 입장

제1절 콜 총리의 독일통일 10개 방안

서베를린을 둘러싼 베를린 장벽은 독일 분단의 상징이었다.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자 독일 내 여러 변화가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잠복되었던 ‘독일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점이다. 독일인들 사이에 ‘독일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독일문제’의 해결이란 독일의 분단을 초래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 통일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전승 4개국은 물론 유럽 내 주변국들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독일의 움직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9년 가을 동독주민의 평화혁명을 계기로 통일의 주도권을 잡은 이는 헬무트 콜 총리였다. 통일에 대한 독일정부의 입장을 가능한 조속히 국내외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콜 총리는 극도의 보안 속에 준비 작업을 했다.¹⁶ 발표 일시와 장소는 1989년 11월 28일 예산문제를 토론하는 연방 하원으로 정했다. 이 회의에 콜 총리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

¹⁶ 호르스트 텔치 외교안보 보좌관이 작성한 초안을 주말(11월 25일)에 넘겨받은 콜 총리는 내용을 보완하여 부인에게 타이핑하게 할 정도로 보안을 유지했다.

어 별도 일정을 잡을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발표할 수 있었다. 콜 총리는 연방 하원에서 ‘독일과 유럽의 분단 극복을 위한 10개 방안(Zehn Punkte-Programm zur Überwindung der Teilung Deutschlands und Europas)’을 전격 발표하며 독일정부가 추구하는 통일 목표를 밝혔다.¹⁷

첫째, 연방 정부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인도적인 분야와 의료 분야의 지원을 즉시 착수한다. 동과 서 어느 쪽으로나 아무런 제한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이다.

둘째, 경제, 과학·기술, 문화, 환경 분야에서 동독과 협력을 확대한다. 동독과의 전화선을 확장하고 철도 등 교통 노선을 개선·확충한다.

셋째, 동독의 정치·경제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구속력 있게 결정되고 되돌릴 수 없게 된다면, 서독은 경제원조와 협력을 확대한다.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동독의 국가 지도층이 재야 단체와 함께 헌법 개정과 새로운 선거법 제정에 합의하는 것을 뜻한다.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ED)의 권력 독점이 폐지되어야 하고, 계획경제체제도 철폐되어야 한다.

넷째, 동독 모드로우 총리가 국정 연설에서 제기한 조약공동체(die Vertragsgemeinschaft)를 고려해 볼 용의가 있다. 경제, 교통, 환경보호, 과학·기술, 보건, 그리고 문화 분야의 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각종 현안 문제의 대상 지역에 베를린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독일 연방국 건설을 목표로 동·서독은 국가 연합적 조직(die Konföderative Struktur)으로 발전시켜 나갈 용의가 있다. 이를 위해 동독에 민주적이고 정통성이 있는 정부가 구성되는 것이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다.

여섯째, 동·서독 관계의 발전은 전 유럽의 통합과정, 즉 동·서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미래의 독일이라는 건축물은 미래의 전체 유럽이라는 건축물에

¹⁷ Protokoll der 177. Sitz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vom 28. November 1989.

부속되어 있어야 한다.

일곱째, 유럽공동체(EC)가 갖고 있는 매력과 영향력은 전체 유럽 발전 과정의 중요한 요소였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 동독이 EC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덟째,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¹⁸는 전 유럽의 핵심 조직이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동·서 경제 협력 조정을 위한 공동기구와 전 유럽의 환경 보호를 위한 기구 설립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아홉째, 유럽의 분단과 독일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군비 축소와 군비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열째, 이러한 광범위한 정책을 통해 유럽의 평화를 달성하고, 이를 토대로 독일 민족은 자유로운 자결권을 행사하여 통일을 이룩하도록 노력한다. 통일독일은 독일정부의 변함없는 정치적 목표이다.

콜 총리의 독일통일 10개 방안은 결국 (1) 동독의 정치, 경제와 사회 개혁이 되돌릴 수 없이 확고히 이루어지고 난 뒤에 (2) 동·서독이 ‘국가 연합적 조직’으로 발전하여 (3) 마지막에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통일을 이룩한다는 3단계 방안으로 요약된다. 독일 분단과 유럽 분단 극복의 마지막 단계가 독일 통일인 것이다. 다섯 번째의 ‘연합적 조직’은 모드로우 총리가 취임 연설에서 제의한 ‘조약공동체’보다 발전된 것이나 과도기적인 것이다.¹⁹

콜 총리는 통일 추진에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 하나는 동독과 협

.....

¹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는 냉전시대 동·서 진영 간의 긴장완화와 인권보호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1975년 8월 1일 헬싱키에서 창설되었다. 독일이 통일이 된 이후인 1994년에 CSCE는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로 명칭을 바꾸고, 유럽 내 민주주의 증진과 군비통제, 인권보호, 긴장완화, 분쟁방지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 OSCE의 회원국은 57개국이다.

¹⁹ 손선홍, 『독일통일 한국통일 : 독일통일에서 찾는 한반도통일의 길』(서울: 푸른 길, 2016), p.60.

력하여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1~5항이 이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독일이 통일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으며, 주변국들과 협의하여 유럽의 통합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점이다.²⁰ 바로 6~9항까지가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한 부분이다.

콜 총리는 통일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독을 안정시킨 후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통일을 이루고자 했다. 빨라야 3~5년, 유럽 역내 시장이 통합된 이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²¹ 즉 ‘점진적인 통일’을 이루고자 했다. 그 이유는 (1) 갑작스럽게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상황에서 통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시간이 필요했으며 (2)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전승 4개국이 갖고 있는 ‘베를린과 전 독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해제 등 ‘대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대외적인 문제의 해결에는 전승 4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시일이 필요했다. 콜 총리가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독일통일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독일통일 문제는 독일만이 아닌 전 유럽의 큰 정치적 변혁을 초래할 중대사안인 점을 고려하여 콜 총리는 통일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겐서 외무장관에게도 알리지 않을 정도로 보안을 철저히 유지했다. 연정(聯政)을 이루고 있는 다른 정당 또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협의할 경우에, 이들의 반대로 통일 방안 발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10개항 연설문을 부시 미 대통령에게 연설 직전에 보냈고, 고르바초프 서기장에게는 연설 직후에 전달했다. 대처 총리와 미테랑 대통령에게도 독일 주재 대사들을 통해 전달했다. 통일 방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전승 4개국과 사전 협의도

²⁰ Karl-Rudolf Korte, *Die Chance genutzt?, Die Politik zur Einheit Deutschlands*, Frankfurt/Main: Campus, 1994, p.90.

²¹ Helmut Kohl, *Ich wollte Deutschlands Einheit*, Berlin: Propyläen, 1996, p.167.

없었고, 통보도 늦어 독일은 한동안 4개국 정상들로부터 많은 원성과 비난을 받는 어려움을 겪었다.²²

제2절 독일통일에 대한 전승 4개국의 입장

콜 총리는 유럽통합의 테두리 내에서 주변국들과 협의하여 통일을 이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승 4개국의 정상들은 독일통일이 몰고 올 유럽의 변화를 염려하며 콜 총리가 사전 협의 없이 통일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데 대해 놀라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독일통일에 대한 미국, 영국, 프랑스와 소련의 전승 4개국의 입장을 알아본다.

(1) 영국: 영국은 NATO의 충실한 회원국인 독일의 통일을 당연히 지지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영국은 독일통일에 반대했다. 마가렛 대처 총리는 베를린 장벽 붕괴 6주 전에 모스크바에서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독일통일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²³ 1989년 가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독일통일 10개 방안이 발표되자 영국은 대단히 놀랐다. 독일통일 과정이 적어도 10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판단했는데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대처 총리는 독일통일을 반가워하지 않았으며,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늦게 오기를 바랐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의 유럽 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89년 11월 18일 파리에서 긴급 소집된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²⁴ 특별 정

²²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은 2010년 9월 독일『슈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 “콜 총리가 통일 방안을 발표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내용보다도 미리 통보를 받지 못해 기분이 좋지 않았었다”고 했다. 『DER SPIEGEL』Nr.39/2010(27. September 2010).

²³ 『DER Spiegel』Nr. 39/2010(27. September 2010).

²⁴ 유럽공동체(EC)는 1967년 7월 1일 ‘유럽공동체의 단일 이사회 및 단일 집행위 설립에 관한 조약(Merger Treaty)’에 의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3개의 공동체를 단일 공동체로 통합하여 발족한 기구이다.

상회의에서 대처 총리는 유럽의 현상유지(Status quo)를 강조했다. 현상유지란 동·서독의 국경선 등 유럽 내 모든 국경선이 현재 있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독일통일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대처 총리는 통일로 인해 독일의 정치적인 힘이 경제력에 비례하여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독일정부는 대처 총리의 독일통일 반대에 대해 영국정부 전체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더글라스 허드 외무장관과 다른 각료들의 입장이 대처 총리와는 달랐기 때문이었다. 허드 장관은 쾨서 장관에게 “유럽의 질서정연한 변화가 완료되면, 독일통일과 유럽의 새로운 체제가 함께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독일통일에 대해 유연한 입장이었기 때문이다.²⁵ 이는 대처 총리가 독일통일이 유럽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대조되는 것이었다.

(2) 소련: 소련도 독일통일에 반대했다. 1945년 이후 4년 동안 동독지역을 점령·통치했던 소련에게 동독은 동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위성국가였다. 소련은 동독을 잃게 되는 독일통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1989년 12월 3일 몰타 미·소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럽에 두 개의 독일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 현실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독일통일에 반대했다. 또한 “독일문제를 인위적으로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성급한 독일통일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다.

12월 5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쾨서 외무장관에게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통일 방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독일통일을 반대했다. 12월 10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전략적인 동맹 파트너이며,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회원국인 동독이 어려움

²⁵ Richard Kiessler/Frank Elbe, *Ein runder Tisch mit scharfen Ecken : Der diplomatische Weg zur deutschen Einheit*, Baden-Baden, Nomos, 1993, p.65.

에 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영토에 두 개의 독일이 있어야 한다는 역사적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이 현실을 인위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시도는 유럽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되풀이 했다.

12월 11일 소련은 베를린에서 베를린이 전승 4개국의 관리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주관했다. 베를린 연합국 통제위원회 건물에서 독일에 주재하는 전승 4개국 대사들이 베를린을 오가는 항공운항의 개선 문제에 관한 회의를 했다. 그러나 이 모임의 실제 목적은 베를린이 4개국의 관리 아래에 있고 동·서독 관계의 발전은 4개국의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모임에 대해 겐서 외무장관이 격분했다. 수일 후 NATO 외무장관 회의에서 겐서 장관은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에게 “4개국 대사 회의가 독일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시켰으며, NATO와 EC의 회원국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강력 항의했다. 지난번 모임이 마지막 모임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베이커 장관은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²⁶ 베이커 장관의 약속대로 전승 4개국만의 모임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독일통일에 강하게 반대하던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입장에 변화가 왔다. 1990년 들어 독일통일을 이해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1월 30일 동독 모드로우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전에 그는 “독일이 통일이 될 것이라는 데 대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독일통일을 사실상 지지한 것이다.

(3) 프랑스: 프랑스도 독일통일에 반대했다. 전후 프랑스의 대독일 정책의 기본입장은 독일이 계속해서 분단국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프랑스는 독일이 통일이 되어 유럽 내에서 영향력이 더 커지고, 상대적으로 자국의 힘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했다. 이는 영국의 입장과의도 같았다. 이러

²⁶ Richard Kiessler/Frank Elbe, 앞의 책, p.75.

한 입장에서 미테랑 대통령은 콜 총리가 프랑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 통일 추진계획을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데 대해 불만이 컸다.

콜 총리가 독일통일 10개항을 전격 발표하자 미테랑 대통령은 8일 후인 12월 6일 키예프에서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현재 유럽의 안정과 평화는 동·서독이 모두 존립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독일통일에 반대하는 두 국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²⁷ 이어 미테랑 대통령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서방 측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12월 20-22일 동독을 공식 방문하여 동독의 발전을 기원했다.²⁸ 미테랑은 동베를린 방문을 통해 베를린이 전승 4개국의 관리 아래에 있다는 ‘유럽의 현실’을 독일인들에게 일깨워주고, 국경선을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경고하고자 했다.

프랑스의 이러한 행동은 독일통일에 대한 반대와 함께 독일이 유럽의 통합과정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²⁹ 서독은 미테랑의 동독 방문에 대해 불만이 많았으나 저지할 수 없었다. 이처럼 소련,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통일에 반대했다.

(4) 미국: 전승 3개국이 독일통일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지지했다. 특히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적극 지지했다. 부시 대통령은 1989년 11월 21일 워싱턴에서 켄서 외무장관에게 미국은 독일인들의 자결권에 의한 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³⁰ 다만 독일이 NATO에 계속 잔류해야 하고, 통일이 EC 통합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즉 군사적으로 중립화에 의한 통

²⁷ 김영운·양현모 편,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 문답으로 알아보는 독일통일』(통일부, 2009), p.120.

²⁸ 미테랑 대통령은 12월 6일 키예프 정상회담 시 고르바초프 서기장에게 동독을 함께 방문하자고 제의했으나 고르바초프가 응하지 않아 혼자 방문했다.

²⁹ Karl-Rudolf Korte, 앞의 책, p.133.

³⁰ Hans-Dietrich Genscher, *Erinnerungen*, Berlin: Siedler, 1995, p.665.

일을 반대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2월 4일 부시 대통령은 브뤼셀에서 열린 NATO 16개국 정상회의에서 독일통일에 대한 4대 원칙을 제시했다. (1) 통일이 독일인의 자결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2) 통일이 NATO에 대한 독일의 항구적인 의무와 EC의 통합과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과정에서 연합국의 권한과 책임이 적절한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3) 통일과정은 유럽의 안정을 위해 평화적으로,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4) 국경선 문제는 헬싱키 최종 의정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³¹ 부시 대통령의 지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첫째, 미국이 독일통일을 지지하고 있음을 NATO 정상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혔고, 둘째, 향후 독일통일의 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1990년 2월 1일 베이커 국무장관은 미 하원에서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NATO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4대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독일통일이 미국의 주요 정책이라며 계속 지지했다. 또한 미국은 독일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를 협의할 회담기구 구성 문제에 관해서도 독일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독일통일에 대해 영국, 소련과 프랑스가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지는 독일이 통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강력한 발판이었다.

그러면 미국이 이처럼 독일통일을 지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1) 독일이 통일된다고 해도 미국이 유럽 문제에 계속 관여할 수 있게 되고(다만, 통일된 독일이 NATO에 계속 잔류해야 함), (2) 미국은 유럽대륙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독일통일이 영국이나 프랑스가 우려하는 것처럼 미국에게 불리하거나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통일된 독일이 소련을 견제하여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3) 독일의 통일은 시간문제이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는 판단에서였다.

.....

³¹ Philip Zelikow and Condoleezza Rice, *Germany Unified and Europe Transformed: A Study in Statecraft*, 1977, p.113.



제3절 점진적인 통일에서 신속한 통일로 선회

콜 총리는 1989년 11월 28일 독일통일 10개항을 발표할 때만 해도 통일을 3~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다. 야당인 사민당(SPD)도 12월 18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국가 연합의 과정을 거쳐 연방국가로 통일하는 단계적인 통일 방안을 채택했다. 이처럼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려던 콜 총리의 입장에 변화가 왔다.

콜 총리는 1989년 말에서 1990년 초에 통일을 조속히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 첫 번째 계기는 1989년 12월 19일 모드로우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도착한 드레스덴 공항에서였다. 콜은 공항에서 동독정권은 이미 끝났으며, 통일을 확신했다.³² 자발적으로 환영 나온 수천 명의 동독 주민들의 손에 서독 국기가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콜 총리는 정상회담 후 동독주민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나의 목표는, 역사가 허락한다면, 통일”이라며 통일 가능성을 주시켰다.³³

1990년 들어 콜 총리는 통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입장을 바꾸었다. 그가 통일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내부적인 이유’와 ‘대외적인 이유’가 있다.

첫째, 내부적인 이유로 동독의 정치·경제 사정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이유는 (1) 서독으로 이주하는 동독이주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³⁴ (2) 265억 달러나 되는 대외부채와 이주민 증가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3) 동독의 지방조직이 붕괴되어 가고 있고, (4) 이러한 상황에

³² Helmut Kohl, *Ich wollte Deutschlands Einheit*, Berlin: Propyläen, 1996. pp.213-214.

³³ 콜 총리는 모드로우 동독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저녁 늦은 시간에 폐허가 된 드레스덴 프라우엔 교회(Dresdner Frauen Kirche) 앞 광장에서 동독주민들에게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예정에 없었던 것으로 동독주민들의 요청으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³⁴ 국외여행이 자유화되었음에도 서독으로 오는 동독이주민들이 하루에 2,000~2,500명 정도였다. 1989년 12월 4만 3,221명이었던 이주민은 1990년 1월 7만 3,729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서 동독 공산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³⁵

모드로우 동독 총리는 1990년 1월 29일 인민의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경제 현황을 설명하며 경제가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과도한 대외부채도 문제지만 이주민들의 증가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주민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동독 내 생활여건이 나빠져 가고 있고,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이었다. 이주민이 늘어나자 서독 내에서도 수용능력이 소진되어 가고 있었다. 또한 동독주민들은 독일 마르크(DM)화 도입을 원하며, 통일을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콜 총리는 이주민을 줄이고, 동독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한 통일이라고 판단했다. 동독을 떠나는 이들이 더 늘어나 동독이 붕괴된다면, 쓰러진 동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어렵고, 또 비용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었다.

둘째, 대외적인 이유로는 소련의 국내정세 때문이었다. 독일통일에는 전승 4개국의 동의를 필요했는데, 특히 소련의 동이가 중요했다. 소련이 독일통일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소련의 다른 정치인들보다도 비교적 호의적인 입장이었다. 따라서 콜 총리는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1990년 1월 서독정부는 소련 국내정세 분석을 통해 소련이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1) 생필품(특히 식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심각했고, (2) 소연방의 존속을 위협하는 민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실정을 비난하는 소련 내 보수파의 공격도 거세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언제까지 집권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웠으며 그가 집권하는 동안에 통일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점진적인 통일을 추진하려던 콜 총리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에서 신속한

.....

³⁵ 손선홍, 『독일통일 한국통일: 독일통일에서 찾는 한반도통일의 길』(서울: 푸른 길, 2016), p.85.



통일로 전환했다. 동독의 정치, 경제 사정도 심각했지만 소련의 국내 상황은 콜 총리로 하여금 통일을 서두르게 했다.

제4절 서독정부의 통일 방향 결정

통일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 콜 총리는 1990년 2월 7일 연방각의의 결정을 통해 동독에게 통화와 경제동맹 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했다. 동독의 경제를 안정시키고 주민들에게 통일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시켜 늘어나는 이주민들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또한 ‘독일통일 각료위원회’(위원장: 연방 총리)를 발족시켜 통일 준비에 들어갔다.

3월 6일 서독정부는 통일 추진에 관해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다. 첫째, 통일을 기본법(das Grundgesetz, 헌법) 제23조에³⁶ 따라 이룩하고, 둘째, 통일된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으로 현재 동독과 폴란드의 국경선인 오테르(Oder)강과 나이세(Neisse) 강을 연결한 선(이하 오테르-나이세 강 선)으로 결정한 것이다.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통일은 동독의 주가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여 통일을 이루는 방안으로 통일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동시에 국제법적으로 ‘통일된 독일’이 독일연방공화국을 계승한다는 점도 있었다.

콜 총리가 독일통일 10개 방안을 밝혔으나 1989년 말에서 1990년 초의 상황에서 통일의 길이 언제, 어떻게 들어서게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했다. 미국이 지지하고 있었으나 소련, 영국과 프랑스가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정부는 통일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했다. 전승 4개국을 경유하지 않고 통일을 이루려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³⁶ 통일 전 기본법 제23조는 “이 기본법은 우선 바덴, 바이에른, 브레멘, 대-베를린, 함부르크, 헤센,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쉘레스비히-홀스타인, 뷔르템베르크-바덴과 뷔르템베르크-호헨졸레른 주에 효력이 있다. 이 기본법은 독일의 다른 지역이 가입하면, 그 지역에도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은 통일 이후 삭제되었다.

였다.³⁷ 서두르다가 자칫 통일을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제5절 동독정부의 통일 방향 결정

서독정부가 통일 방향을 결정했기 때문에 동독정부도 통일 방향을 결정해야 했다. 동독의 통일 방향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했기 때문에 총선이 실시된 후 새로 수립된 민주정부에서 나왔다. 1990년 3월 18일 실시된 총선에서 동독 기민당이 주축이 된 ‘독일동맹’이 승리했다. ‘독일동맹’은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신속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4월 5일 구성된 인민의회는 새로운 헌법 제정을 포기하고 가급적 조속히 통일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4월 11일 동독 기민당(CDU)은 사민당 및 자민당과 대연정(大聯政)을 구성했다. 이로써 앞으로 체결될 통일 관련 조약 비준에 필요한 2/3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다. 4월 12일 기민당 대표인 로타르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ere)가 총리로 선출되어 신정부가 출범했다. 통일에 관해 동독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정통성 있는 정부가 수립되어 서독과의 통일 협상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4월 19일 드 메지에르 총리는 인민의회에서 행한 첫 국정 연설에서 동독 정부의 통일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통일에 관한 대외적인 문제에 관해 (1) 기본법 제23조에 의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을 이룩하며 (2) 통일된 독일이 NATO에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독 신정부가 기본법 제23조에 의해 통일을 하겠다고 밝혀 통일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통일된 독일의 군사동맹체 잔류문제와 관련하여 서독과 같이 NATO 잔류 입장을 밝혀 동·서독은 대외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
³⁷ Thilo Sarrazin, “Die Entstehung und Umsetzung des Konzepts der deutschen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in Theo Waigel/Manfred Schell, *Tage, die Deutschland und die Welt veränderten*, München: Ed. ferenczy bei Bruckmann, 1994, p.168.

독일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와 2+4회담 기구 구성

제1절 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들

독일통일의 당사자는 동·서독이었으나 동·서독의 합의만으로 통일을 이룰 수가 없었다. ‘대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대외적인 문제’의 발생은 1945년 8월 2일의 ‘포츠담협정’에 기인한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전승 4개국은 독일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 분할·통치하였다. 4년 후 독일이 동·서독으로 분단되면서 ‘대외적인 문제’들이 발생했다.

주요 ‘대외적인 문제’로 (1) 4개국의 ‘베를린과 전(全) 독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해제 문제, (2) 통일된 독일의 NATO 잔류 문제, (3) 통일된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 문제, (4) 통일된 독일의 군 병력 감축 및 ABC 무기 보유 문제, (5) 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수 문제, (6) 소련 점령 당국이 동독지역 점령 기간 중에 실시한 토지개혁과 몰수 재산의 소유권 효력 문제 등이 있었다. 이 문제들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독일과 소련의 입장을 알아본다.³⁸

³⁸ 손선홍, 『독일통일 한국통일: 독일통일에서 찾는 한반도통일의 길』(서울: 푸른길, 2016), pp.133-139.

1. 4개국의 ‘베를린과 전 독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해제 문제

4년의 점령 통치를 끝내고 1949년 9월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이 출범했으나, ‘점령규약(The Occupation Statute)’³⁹으로 인해 서독의 주권은 여전히 제한되었다. 외교권이 제한되고, 군대 보유도 금지됐으며, 미국, 영국과 프랑스의 서방 3개국 군이 계속 주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서독의 안보 문제를 강화하기 위해 군대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독일연방공화국과 3개국 간의 관계에 관한 조약(독일조약)’이 1952년 5월 26일 체결됐다. 서방 3개국은 ‘독일조약’이 발효되면 ‘점령규약’을 철폐하여 점령 지배를 종료하기로 했다. 이 조약이 발효되면 독일은 대내외적인 문제에 관해 완전한 주권을 갖게 되었다(제1조). 다만, 독일이 통일이 되지 않았고 강화조약도 체결되지 않은 국제상황을 고려하여, 3개국은 “독일통일과 강화조약 체결 문제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갖고 있던 ‘베를린과 전 독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Rechte und Verantwortlichkeiten in bezug auf Berlin und auf Deutschland als Ganzes)’을 계속 갖기”로 했다(제2조). 이 ‘독일조약’의 발효는 프랑스가 제의한 ‘유럽방위공동체 설립에 관한 조약’⁴⁰의 발효와 연계되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유럽방위공동체 설립에 관한 조약’은 1954년 8월 30일 제안국인 프랑스 의회의 반대로 부결되어 발효되지 않았다. 이후 미국의 주도로 서방 3개국은 10월 23일 파리에서 ‘독일조약’을 체결했다. 1955년 5

.....
³⁹ ‘점령규약’은 서부 독일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미국, 영국, 프랑스의 서방 3개국 군정 청장 겸 점령군 사령관들이 1949년 5월 12일 공표한 규약으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출범한 9월 21일 발효되었다.

⁴⁰ 6.25전쟁의 영향으로 미국은 서독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재무장을 추진했다. 프랑스는 서독의 재무장을 막고자 했으나 무턱대고 반대만 할 수 없었다. 이에 플르방(René Pleven) 프랑스 총리는 1950년 10월 25일 서독의 재무장을 막고, 소련의 무력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서독도 참여하는 유럽군 창설을 제의했다. 이 결과 미국의 주도로 1952년 5월 27일 파리에서 ‘유럽방위공동체 설립에 관한 조약’이 서명되었다. 그러나 서독의 재무장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프랑스의 반대로 이 조약은 발효되지 못했다.



월 5일 이 조약이 발효되어 서방 3개국은 ‘독일통일과 강화조약 체결 문제를 포함하여 베를린과 전 독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었다. 서독은 군대를 보유하게 되었고, NATO에도 가입하여 주권이 강화되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주권국가는 아니었다. 소련은 독일조약의 당사자는 아니었으나, ‘포츠담협정’이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소련도 ‘베를린과 전 독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독일이 통일이 된다는 것은 동·서독이 하나가 된다는 점 이외에 독일이 완전한 주권국가가 된다는 의미도 있었다. 통일독일이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4개국이 갖고 있는 ‘베를린과 전 독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해제되어야 했다.

2. 통일독일의 NATO 잔류 문제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 전승 4개국 중 유일하게 미국이 독일통일을 지지했는데, 전제 조건이 있었다. 통일된 독일이 계속 NATO에 잔류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미국은 통일된 독일이 NATO에 잔류하지 않는다면, NATO가 존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NATO가 해체된다면 미국은 유럽 문제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유럽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점을 우려했다. 통일된 독일의 NATO 잔류는 미국의 핵심 관심사였다.⁴¹

독일도 유럽의 안정을 위해서는 중립국으로 있는 것보다 NATO에 계속 잔류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독일과 같이 큰 나라가 유럽의 한복판에서 중립국으로 남아 있는 것은 유럽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는 통일독일이 NATO에 잔류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것이기도 했다.

⁴¹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이 2010년 9월 독일 슈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DER SPIEGEL』Nr. 39/2010(27. September 2010).

미국과 독일의 입장과는 달리 소련은 통일된 독일의 NATO 잔류에 강하게 반대했다. 즉, NATO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소련과 동유럽 국가는 물론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취해왔는데, 통일된 독일이 이러한 NATO에 남아서는 안되고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이 NATO에 잔류할 경우, NATO는 더 강력해질 것이며, 강력해진 NATO는 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통일된 독일의 군사동맹체 소속 문제에 관해 독일과 소련의 입장이 이처럼 크게 달랐기 때문에 독일의 NATO 잔류 문제는 통일 전 과정에서 핵심 문제였다. 독일과 미국은 독일통일로 인해 소련이 우려하는 안보 불안감을 인정하면서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3. 통일된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 문제

서독과 폴란드 간의 관계에서 주요 쟁점이 되어온 사안이 있었다. 바로 독일과 마주하는 폴란드의 서부 국경선 문제였다.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이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시작되었다. 나치 독일에 점령당한 폴란드는 영국에 망명정부를 두고 나치 독일과 싸웠으나 전쟁이 끝나고 소련에게 많은 영토를 빼앗겼다. 1945년 2월의 ‘얄타협정’과 8월의 ‘포츠담협정’에 의해 소련은 폴란드영토의 절반 가까이(46.1%) 되는 17만 9,000km²를 차지했다. 줄어든 폴란드의 영토를 보전해 주기 위해 소련은 ‘포츠담협정’에서 오데르-나이세강 선의 동부 독일지역을 떼어내 폴란드의 관할 아래에 두도록 했다.

‘포츠담협정’에서 “폴란드 서부 국경선이 확정되면 강화조약 체결 시 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발트해로부터 오데르 강(江)을 따라 나이세 강(江)과의 합류 지점까지, 그리고 나이세 강을 따라 체코 슬로바키아 국경에 이르는 독일의 동부지역과 소련의 관할 아래에 들어가지 않는 동프로이센의 일부 지역 및 단치히시를 폴란드의 관할 지역’으로 두



도록 했다.⁴² 이로 인해 폴란드의 서부 국경선은 독일영토 쪽으로 더 이동했다. 소련이 차지했거나 폴란드의 관할 아래에 들어간 독일영토의 면적은 11만 4,300km²로 1938년 독일의 국경선을 기준으로 전 영토의 24%나 되는 광활한 면적이었다.⁴³

포츠담협정에서 폴란드의 서부 국경선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었으나, 폴란드와 동독은 오데르-나이세 강 선을 국경선으로 인정했다. 동독은 1950년 7월 6일 폴란드와 체결한 ‘괴를리츠조약’에서 오데르-나이세 강 선을 평화와 우호의 국경선으로 승인했다(제1조). 그러나 서독은 이 지역을 폴란드에게 완전히 넘겨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그 당시 협상능력이 있는 독일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포츠담협정’은 강화조약이 아니며, 따라서 국경선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1954년 10월 서독이 서방 3개국과 체결한 ‘독일조약’에서도 독일 국경선의 확정은 강화조약 체결 시까지 유보된다고 했다(제7조). 또한 서독은 1972년 12월 7일의 ‘바르샤바조약’이 “포츠담협정에 의해 현존하는 국경선이 폴란드의 서부 국경선을 형성한다는 점을 확인한다”라고 했지만 ‘바르샤바’ 조약이 국제법적으로 효력 있는 국경보장 조약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⁴⁴

이처럼 폴란드와 서독이 다르게 해석해 온 오데르-나이세 강 선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다. 그 해결은 서독이 오데르-나이세 강 선을 국경선으로 승인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동부 독일지역에서 강제로 쫓겨나 독일에 정착한 주민들은 이러한 승인 움직임에 거세게 반대했다. 즉, 통일의 사명에는 영토회복

⁴² ‘포츠담협정’ 제9장 폴란드의 b)조. Ingo von Munch(Hrsg.), Dokumente des geteilten Deutschland, Stuttgart: Alfred Kröner, 1976. p.42.

⁴³ 손선홍, 『분단과 통일의 독일 현대사』(서울: 소나무, 2005), p.33.

⁴⁴ ‘바르샤바조약’은 빌리 브란트 총리가 추진했던 ‘신동방정책(die neue Ostpolitik)’의 일환으로 폴란드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이다. 두 나라는 이 조약에서 “1945년 8월 2일 포츠담회담의 결정 제9장에 따라 정해진 현존하는 국경선이 폴란드의 서부 국경선을 형성한다는 점을 확인한다”(제1조 1항)라고 했다.

의 의미도 있다며 독일통일은 1937년 12월 31일 독일제국의 영토가 유지되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⁵

한편,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 문제에 대해 전승 4개국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1990년 3월 8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마조비츠키 폴란드 총리와 의 정상회담 후 국경선 문제가 통일 전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조비츠키 총리는 동독 총선 후 우선 국경조약에 가서명을 하고 통일 이후에 정식으로 서명하자고 제의했다. 전승 4개국의 입장은 통일된 독일이 오데르-나이세 강 선을 국경선으로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림 1-1> 포츠담협정에 의해 폴란드 관할 아래에 들어간 독일영토



발틱해에서 체코슬로바키아로 이어지는 굵은 점선이 오데르-나이세 강 선이다. 이 굵은 점선 안쪽의 포메른(Pommern), 슐레지엔(Schlesien)지방과 단치히시 및 동프로이센(Ost Preussen)의 점선 아래쪽이 ‘포츠담협정’에 의해 폴란드 관할 아래에 들어간 독일영토이다.

⁴⁵ Richard Kiessler/Frank Elbe, 앞의 책, p.115.

4. 독일 군 병력 감축과 ABC 무기 보유 문제

전승 4개국의 대독일 주요정책 목표 중의 하나는 독일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서독과 서유럽의 군사력은 소련에게 줄곧 주요 관심사였다. 분단 시 서독 연방군은 49만 5,000명, 동독 인민군은 17만 5,000명을 유지하고 있어 통일된 독일은 67만 명의 군사 대국이 된다. 소련은 통일된 독일의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통일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군 병력의 20-25만 명 선으로의 감축과 ABC(핵 및 생화학 무기) 무기의 포기를 요구했다.

독일로서도 통일이 되면 많은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 콜 총리는 이미 1989년 11월 28일의 독일통일 10개 방안에서 광범위한 군비 축소와 군비 통제를 제안한 바 있다(제9항). 따라서 통일 후 3~4년 내에 군 병력을 35~40만 명 선으로 감축하고, ABC 무기는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된 독일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보유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입장에서 핵 비확산 조약(NPT)에도 계속해서 남아 있고자 했다. 다만, 군 병력 감축 문제는 2+4회담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고 전 유럽의 재래식 군축협상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5. 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수 문제

분단 시 동독에는 약 34만 명의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이는 22개 사단과 42개 독립 여단 규모로 동독 인민군 17만 5,000명의 약 2배 규모였다. 여기에 군속과 군인 가족 22만 명이 있었다. 소련은 군 병력과 군속 등을 독일이 통일된 이후 5~7년에 걸쳐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고자 했다. 또한 소련은 독일에게 철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철수 군인들이 소련에서 거주할 주택건설 비용과 직업전환교육 비용도 부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독일은 소련군이 통일 후 가능한 빨리 철수하기를 원했다. 철수 군인들을 위한 주택건설 비용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었다.

6. 점령 기간 중 몰수된 재산(토지)의 소유권 문제

전후 독일의 동부지역을 점령했던 소련은 점령기간 동안(1945년 5월-1949년 10월)에 이 지역의 주요산업을 국유화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토지개혁으로 100헥타르 이상을 소유한 대지주, 나치주의자와 전쟁범죄자의 토지는 보상 없이 몰수했다. 이 조치로 몰수된 면적은 점령지역의 약 1/3인 330만 헥타르였다.

1949년 10월 수립된 동독정권도 주민들의 재산을 몰수했다. 대지주들의 토지는 이미 소련 점령 당국이 몰수했기 때문에 주로 형무소에 수감되었거나 서독으로 탈출한 반체제 인사들의 재산을 몰수했다. 동독정권 아래에서 집단농장과 관련하여 7만 5,000건의 몰수행위가 있었다.⁴⁶ 전쟁이 끝나고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까지 동독지역을 떠나 서독으로 넘어온 이들은 약 341만 9,000명이었다.⁴⁷

1990년 들어 독일통일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몰수된 재산의 소유권 문제가 제기되었다. 소련 점령기간 중에 토지를 빼앗겼던 독일 대지주들은 신문 등 언론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며 몰수된 재산의 반환을 요구했다. 서독 법무부는 일반적으로 몰수된 재산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옳기 때문에 원소유자에게 돌려주고자 했다. 서독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소련정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소련정부는 모스크바 주재 독일대사관에 보낸 1990년 4월 28일자 공한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⁴⁸

⁴⁶ Hildigund Neubert, '복권과 배상, 독재 정권의 희생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 『독일통일을 함께 경험한 그들의 이야기』(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2014), p.76.

⁴⁷ 독일 연방내무부 자료.

⁴⁸ Wolfgang Schäuble, *Der Vertrag: Wie ich über die deutsche Einheit verhandelte*, München: Knauer, 1993, p.103 및 Helmut Kohl, *Ich wollte Deutsche Einheit*, Berlin: Propyläen, 1996, pp.376-377.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이 체결할 조약안에는 전승 4개국이 독일의 탈나치화, 비군사화와 민주화 문제에서 공동으로 또는 점령지 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한 조치와 법령에 대해 정당성을 의문시하는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소유권과 토지문제에 관한 결정의 적법성에 관해 독일 법원 또는 다른 독일 국가기관에 의해 새로이 검토되거나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이 공한에 대해 서독 내에서 찬·반 의견이 대립되었다. 그런데 3·18 총선에 의해 수립된 동독정부가 소련 측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즉, 드 메지에르 총리는 “향후 동·서독이 체결할 조약에 소련 점령기간 중에 있었던 재산권 조치에 대해 원상회복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프로이센 등지에서 동독으로 이주해 온 수백만 명의 독일인들이 소련 점령당국의 토지개혁 조치로 땅을 얻었는데,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도로 뺏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서독 법무부는 동독정부가 제시한 “1945~1949년에 시행된 토지몰수 조치는 보상 없이 유효하다”라는 안을 거부하며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정부 내에서 이러한 입장을 관철시킬 수가 없었다.⁴⁹ 독일정부는 소련정부의 요구와 동독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야 했다.

동·서독정부는 협의 끝에 1990년 6월 15일 ‘미해결 재산 문제의 규정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⁵⁰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소련이 점령법적인 또는

⁴⁹ 아르트 바우어캠퍼, ‘통일과정 중 무언급-1989년 이후 동독지역 농업 분야에서의 소유 및 경영 구조의 험난한 이행: 통일한국의 농업 개혁에 주는 교훈,’ 『한반도는 통일독일이 될 수 있을까?』 (서울: 송정문화사, 2010).

⁵⁰ Bulletin, 77-90, Gemeinsame Erklärung der Regier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19. Juni 1990.

점령 당국의 특권으로 1945-1949년 사이에 몰수한 재산은 원상회복되지 아니한다. 둘째, 동독정권이 몰수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원소유자에게 반환한다. 원소유자는 원상회복 대신에 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할 목적인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이 원상회복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공동성명 내용은 8월 31일 체결한 ‘통일조약’(제4조 제5항, 제41조)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2+4회담 과정에서 점령기간 중에 몰수된 재산의 원상회복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2+4조약’에 포함시키자고 끈질기게 요구했다. 그러나 독일은 ‘공동성명’과 ‘통일조약’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2+4조약’에는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독일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여섯 가지 ‘대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다. ‘화폐·경제와 사회통합 조약’과 ‘통일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동·서독 간의 협상도 있었지만, 독일의 통일 여부와 통일 시기는 이 ‘대외적인 문제’를 어떻게,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제2절 2+4회담 기구 구성

전후 독일문제 처리와 관련된 이러한 대외적인 문제들은 동·서독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었다. 전승 4개국이 결정할 문제였는데, 4개국만이 결정하느냐 또는 결정과정에 동·서독도 함께 참여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다. 서독은 동·서독이 전승 4개국과 동등한 권리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1989년 11월 말 독일통일 10개항 발표 이후 서독정부는 통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우선 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전승 4개국의 ‘베를린과 전 독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해제되어 독일이 완전한 주권 국가가 되는 문제, 통일된 독일의 NATO 잔류 문제,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 문제 등을 누가, 언제, 어



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검토했다. 또한 이러한 대외적인 문제를 다룰 기구 구성 방안에 관해서도 생각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룰 회담 기구 구성에는 세 가지 방안이 있었다.⁵¹ 첫째, 1945년 종전 당시의 53개 연합국이 전부 참여하는 방안이다. 이 안은 참가국이 많아 회의 소집이 쉽지 않고, 문제 해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폴란드 등 일부 국가가 독일에게 배상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배제했다. 둘째, ‘베를린과 전 독일에 대해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전승 4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당사자로 참여하고, 동·서독은 보조로 참여하는 안이다. 이미 1955년 7월 제네바에서 전승 4개국 정상들이 독일문제를 협의하는데 동·서독은 옵서버로 참가하여 옆의 작은 탁자에서 지켜보아야 했던 경험이 있었다. 독일은 이를 치욕적인 굴욕으로 여겼는데 당연히 이 방안도 제외했다. 셋째, 동·서독이 전승 4개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안이다. 겐서 외무장관은 동·서독이 4개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야 하며, 회의 주체는 4개국이 아닌 동·서독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독일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를 다룰 6자 회담(동·서독과 전승 4개국 참여)의 안은 미국 국무부에서 나왔다.⁵² 전쟁이 끝난 지 45년이 지난 상황에서 독일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를 전승 4개국만이 해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통일의 당사자인 동·서독도 함께 참여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미 국무부가 6개국이 참여하는 기구 구성을 고안해 낸 이유는 다음과 같다.⁵³

(1) 소련도 이 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 독일통일에 따른 소련의 우려를 표

.....
⁵¹ 「DER SPIEGEL」Nr.39/2010(27. September 2010).
⁵² Hans Georg Lehmann, *Deutschland-Chronik 1945 bis 1995*. Bonn, 1995, p.425.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국무부와 달리 2+4 회담 기구 구성에 다소 부정적이었으나, 통일의 당사자인 독일을 참여시키려면 2+4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국무부의 입장에 동조했다.
⁵³ 필립 켈리코·콘돌리자 라이스(김태현·유복근 옮김), 『독일통일과 유럽의 변환: 치국경제술의 연구』 (서울: 서울모음박스, 2008), p.243.

명할 기회를 주고, (2) 소련에게 독일통일에 대한 입장과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하여 소련의 불만을 달래며, (3) 독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소련이 제의한 전승 4개국만의 회담을 무산시키기 위해서였다. 또한 (4) 독일통일 문제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가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미국과 공동의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5) 동·서독도 참여하도록 하여 통일의 당사자인 독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1990년 2월 2일 겐서 외무장관은 워싱턴에서 베이커 미 국무장관과 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협의했다. 겐서는 독일통일 문제를 협의할 기구에 동·서독도 참여해야 하고, 회담 기구의 명칭은 ‘6자 회담’이나 ‘4+2회담’이 아닌 ‘2+4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커는 통일문제를 다룰 기구는 ‘2+4회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베이커 장관은 2+4회담 기구 참여에 대해 더글라스 허드(Douglas Hurd) 영국 외무장관과 롤랑 뒤마(Roland Dumas) 프랑스 외무장관의 동의를 얻었다.⁵⁴ 2월 9일에는 모스크바에서 고르바초프 서기장 및 세바르드나제 장관에게 전후 독일문제 처리는 동·서독과 전승 4개국이 같은 테이블에서 협의할 계획이며, 전승 4개국만의 협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⁵⁵ 소련의 2+4회담 참여를 요청했으나 확답을 얻지 못했다.

2+4회담 기구는 1990년 2월 1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외무장관 회의 계기에 결성되었다. ‘오픈 스카이(Open Sky)’ 문제⁵⁶를 협의하기 위한 이 회의에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 외무장관들

⁵⁴ 처음에 영국과 프랑스는 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를 협의하는 자리에 동·서독이 참여하지 않는 4개국만의 협의를 선호했다. 베이커 장관의 설득으로 허드 장관에 이어 뒤마 장관도 2+4회담 기구 참여에 동의했다. Hans Georg Lehmann, *Deutschland-Chronik 1945 bis 1995*, Bonn: 1995, p.425.

⁵⁵ Richard Kiessler/ Frank Elbe, 앞의 책, p.91.

⁵⁶ ‘오픈 스카이’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제기한 개념으로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상호 간에 군사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외국의 영공을 비행하여 관찰할 수 있도록 영공을 개방하여 신뢰를 조성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자고 제의했다.

이 모두 참가했다. 소련만이 2+4회담 참여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았는데, 베이커 장관으로부터 2+4회담 참여를 제의받은 세바르드나제 장관은 본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참여하기로 했다. 이 기구의 활동이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⁵⁷ 이처럼 2+4회담 기구 구성에 베이커 장관이 큰 역할을 했다.

2+4회담 기구의 구성은 독일에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었다.⁵⁸ (1) 독일통일 문제를 협의하는 기구에 동·서독이 전승 4개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기로 한 점이다. (2) 협의할 내용도 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로 제한한 점이다. (3) 동독도 이 회담에 참가함으로써 통일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점이다. 이로써 통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동독 내 일부 강경파들은 더 이상 통일을 반대할 명분이 없게 되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독일통일에 대한 원칙적인 동의(2.10)에 이어 2+4회담 기구도 구성됨으로써(2.13) 일주일 사이에 통일에 유리한 국제 환경이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해결해야 할 대외적인 문제들이 많은데다가 소련은 2+4회담을 가능한 한 오래 끌어 통일을 늦추려고 하였다. 독일이 통일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놓여 있었다.

제3절 헬싱키 프로세스와 독일통일

독일이 통일을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유럽의 긴장완화와 변화를 가져온 헬싱키 프로세스를 빼놓을 수 없다. 유럽에서 동·서 진영 간의 긴장완화는 1975년 8월 1일 헬싱키에서 채택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최종 의정서(Final Act)가 그 출발점이었다.

소련은 전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안보기구 구성 문제에 대해 일찍부터

⁵⁷ 세바르드나제 장관은 모스크바로 돌아간 후 2+4회담 기구 참여에 너무 성급하게 동의해 주었다고 비난을 받았다. Hans-Dietrich Genscher, *Erinnerungen*, Berlin: Siedler, 1995, p.788.

⁵⁸ 손선홍, 『독일통일 한국통일: 독일통일에서 찾는 한반도통일의 길』(서울: 푸른길, 2016), p.144.

관심을 기울여 왔다. 1954년에 소련이 전 유럽안보회의의 구성을 제의했으나 헝가리 민주화 운동(1956년)과 베를린 장벽 구축(1961년) 등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소련이 안보회의의 구성을 제의한 이유는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유럽의 변화와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존재와 국경선을 승인받고, (2) 소련과 동유럽에 대한 서유럽 국가들의 적대적이고 경직된 태도를 완화시키며, (3) 소련이 우위를 차지하는 범유럽안보기구를 만들어 서유럽과 미국 간의 유대관계를 점차 약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다.⁵⁹ 또한 서독의 NATO 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후 한동안 가라앉았던 전 유럽안보회의의 개최문제가 1970년대 들어 급속히 진전되었다. 그 계기는 1969년 3월의 중·소 분쟁, 1969년 서독정부의 신동방정책과 미·소 간의 긴장완화 등으로 분위기가 성숙되고, 1970년 모스크바조약과 바르샤바조약에 이어 1971년 전승 4개국 간 베를린협정이 체결되면서였다.⁶⁰ 당시 소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핀란드정부의 이니셔티브로 1972년 11월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준비를 위한 대사급 회의가 헬싱키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1973년 9월 18일부터 1975년 7월 21일까지 제네바와 헬싱키에서 2년 여의 협의를 거쳐 헬싱키 최종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최종 의정서 서명식에 미국, 캐나다를 비롯하여 소련과 동·서독 등 35개국(알바니아 제외)이 참여했다. 이를 일반적으로 헬싱키 프로세스라고 한다.

헬싱키 최종 의정서는 국제법적인 조약이 아니다. 동·서 진영의 국경을 넘어 유럽에 다자 정치와 도덕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선언문이다. 그럼에도 최종 의정서를 채택한 주된 이유는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유럽 내 전쟁을 방지하여 평화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헬싱키 최종 의정서는 유럽 내 동·서 양 진영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⁵⁹ 김영희, 『베를린 장벽의 서사: 독일통일을 다시 본다』(서울: 창비, 2016), p.152.

⁶⁰ 신용기, '탈냉전기 유럽안보질서의 중층구조에 관한 연구,' 1999, p.28.

틀로 크게 세부분으로 되어 있다. 제1부는 유럽의 안보 문제이다. 회원국 간 관계의 원칙으로 주권의 동등권,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의 자제, 국경선의 불가침, 영토의 불가침성,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내문제 불간섭, 인권과 기본권의 존중, 민족의 동등권과 자결권, 국가 간의 협력 등 10개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부는 경제·과학·기술 및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이 분야에서 정보 공유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규정하고 있다. 제3부는 인도적 및 기타 분야에서 원칙을 규정했다. 즉, 가족 관계에 기초한 인간적인 접촉, 가족의 만남, 여러 국가 시민들 간의 결혼, 개인적인 또는 직업적인 이유로 여행 및 관광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지중해에서의 안보와 협력문제에 관한 부분도 있다.

헬싱키 최종 의정서에 대한 동·서 진영 간의 입장은 서로 달랐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유럽 국가들 간의 국경선의 현상 유지(Status quo)와 서방 측으로부터 경제협력을 얻으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반면에 미국 등 서방 진영은 인권문제에 중점을 두고 동유럽 국가에도 인권문제를 확대해 나가고자 했다.⁶¹ 그럼에도 유럽 내 긴장완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두 진영 간의 입장은 같았다.

헬싱키 최종 의정서에 따라 서독은 제1부 유럽의 안보 분야에 규정된 국경선의 불가침과 영토의 불가침성에 따라 동독과의 경계선은 물론 동독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인 오데르-나이세 강 선을 인정해야 했다. 그러나 민족의 자결권이 인정됨으로써 서독은 기본법(das Grundgesetz, 헌법)상의 통일 의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제3부에 규정된 인도적인 문제와 기타 분야에서 협력에 따라 동독의 인권침해 행위를 지적하며, 동독과 인적교류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⁶²

⁶¹ Hans Georg Lehmann, 앞의 책, 1995, p.248.

⁶² 손선홍, 『분단과 통일의 독일 현대사』(서울: 소나무, 2005), pp.214-215.

서독과 서방 측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동독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다. (1)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인권개념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방 측의 인권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2) 최종 의정서 제1부 유럽의 안보에 규정된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겠다. (3) 최종 의정서가 요구하는 인권문제가 동독에서는 모두 충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⁶³

헬싱키 프로세스는 동유럽에 변화의 바람을 가져왔다. 이후 폴란드의 자유노조연대 운동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개혁정책으로 동유럽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 영향으로 1989년 가을 동독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평화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다. 독일통일 문제는 단순한 동·서독의 통합문제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독을 관리하던 전승 4개국과 통일된 독일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고, 유럽 내 새로운 안보질서를 구축하는 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

따라서 서독은 통일을 헬싱키 프로세스와 연관시키는 전략을 추진했다. 즉, 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는 2+4회담에서 논의하되, 유럽안보질서와 관련된 부분은 유럽안보협력회의와 NATO의 발전이라는 토대 위에 해결하려고 했다.⁶⁴ 독일통일이 전 유럽 국가의 안보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1990년 11월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안보협력회의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될 정책은 추진했다. 또한 2+4회담을 지연시켜 독일통일을 늦추려는 소련의 의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콜 총리는 독일통일 10개 방안에서 통일을 헬싱키 프로세스 테두리 안에서 이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전 유럽의 핵심 조직이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제8항). 또한 독일이 통일을

⁶³ 김영윤·양현모 편,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 문답으로 알아보는 독일통일』(통일부, 2009), p.21.

⁶⁴ 신용기, 앞의 글, p.29.



통해 유럽의 강자(強者)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동·서로 나누어진 유럽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즉, 독일통일이 유럽의 통합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했다. 통일과정에서 핵심 문제였던 독일의 NATO 잔류 문제에서도 헬싱키 최종 의정서를 거론하며 통일된 독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참고 문헌

〈국내 문헌〉

(단행본)

- 김영윤·양현모 편,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 문답으로 알아보는 독일통일』 (통일부, 2009).
 김영희, 『베를린 장벽의 서사: 독일통일을 다시 본다』 (서울: 창비, 2016).
 김정섭, 『외교 상상력』 (서울: MID, 2016).
 서병철, '독일통일과 외교의 역할', 『통일의 저력』 (서울 : 백산문화, 1999).
 손선홍, 『독일통일 한국통일: 독일통일에서 찾는 한반도통일의 길』 (서울:푸른 길, 2016).
 손선홍, 『분단과 통일의 독일 현대사』 (서울: 소나무, 2005).
 임혁백·이은정, 『한반도는 통일독일이 될 수 있을까?』 (서울: 송정문화사, 2010).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독일통일을 함께 경험한 그들의 이야기』 (서울: 늘품플러스, 2014).
 필립 젤리코·콘돌리자 라이스(김태현·유복근 옮김), 『독일통일과 유럽의 변환: 치국경제술 연구』 (서울: 서울모음박스, 2008).

(논문)

- 손선홍, '독일통일에 따른 대외관계 처리 내용: 피난민 송환교섭, 2+4회담 및 조약 처리,' 1995.
 손선홍, '호네커의 퇴진과 베를린 장벽 개방', 『외교』 제12호(한국외교협회, 1989.12)
 신용기, '탈냉전기 유럽안보질서의 중층구조에 관한 연구', 1999.

〈외국 문헌〉

(조약·협정집)

- Munch, Ingo von(Hrsg.), *Dokumente des geteilten Deutschland*, Stuttgart: Kromer, 1976.
 - Presse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Die Vereinigung Deutschlands im Jahre 1990: Eine Dokumentation*, Bonn, 1991.

(단행본)

- Bahr, Egon, *Zu meiner Zeit*, Karl Blessing Verlag: München, 1996.
 - Brandt, Willy, *Erinnerungen*, Frankfurt am Main: Propyläen, 1989.
 - Genscher, Hans-Dietrich, *Erinnerungen*, Berlin: Siedler, 1995.
 - Kiessler, Richard/Elbe, Frank, *Ein runder Tisch mit scharfen Ecken : Der diplomatische Weg zur deutschen Einheit*, Baden-Baden, Nomos, 1993.
 - Kohl, Helmut, *Ich wollte Deutsche Einheit*, Berlin: Propyläen, 1996.
 - Kohl, Helmut, *Erinnerungen 1982-1990*, München, Droemer,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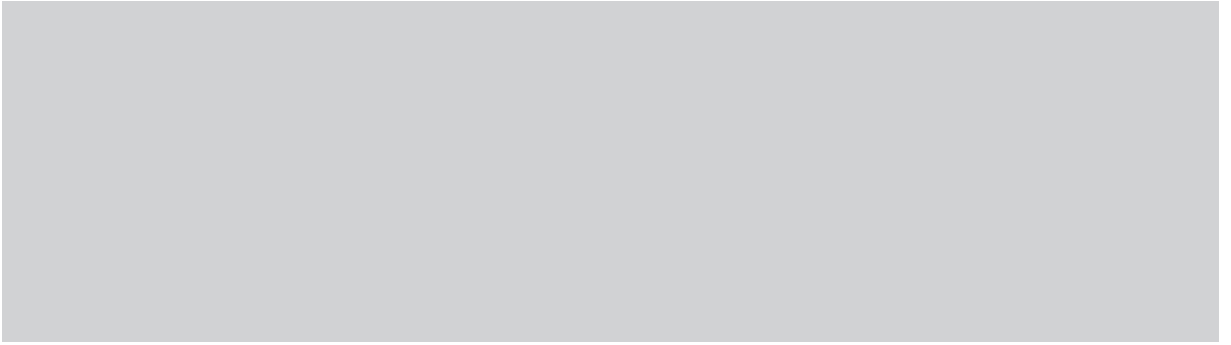


- Kohl, Helmut, *Erinnerungen 1990-1994*, München, Droemer, 2007.
- Korte, Karl-Rudolf, *Die Chance genutzt?: Die Politik zur Einheit Deutschlands*, Frankfurt/M: Campus, 1994.
- Lehmann, Hans Georg, *Deutschland-Chronik 1945 bis 1995*, Bonn, 1995.
- Schäuble, Wolfgang, *Der Vertrag: Wie ich über die deutsche Einheit verhandelte*, München: Knauer, 1993.
- Teltchik, Horst, *329 Tage: Innenansichten der Einigung*, Berlin: Siedler, 1991.
- Waigel, Theo /Schell, Manfred, *Tage, die Deutschland und die Welt veränderten*, München: Ed. ferenczy bei Bruckmann, 1994.

<신문 및 주간지>

- 『DER SPIEGEL』, Nr.39/2010(2010.9.27).

외교 분야 I
관련 정책문서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을 위한 외교

이은정
(독일 베를린 자유대)



들어가며

1989년 여름 수많은 동독주민이 동유럽의 수도에 있는 서독대사관에 진입하여 서독으로 이주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당시 동독의 붕괴를 알리는 서막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을 때에도 유럽의 많은 정치인들은 독일통일 과정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독과 동독의 외교정책문서를 통해서 보면 1989년과 1990년 미국, 소련 그리고 유럽의 주변 국가들이 ‘독일문제’를 대하던 방식에서도 독일통일이 그렇게 빨리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게다가 미국을 제외한 소련, 영국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1990년 초까지만 해도 독일통일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이 실현되기까지는 당시 서독 연방정부의 성공적인 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990년까지도 동독과 서독의 국제법적인 위상은 완전한 주권국가라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였다. 1949년에 서독과 동독이 모두 건국을 선포하였지만, 양국의 정부는 1945년 이후 점령기간 동안 전승 4개국이 선포한 어떠한 법률규정도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었다. 그것은 물론 전승국들이 독일로 하여금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을 지게 하고, 독일땅에서 또다시 유럽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 이런 법적인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의 통일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당사자들만이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독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승 4개국의 동의가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 말에도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국제법적으로는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 독일통일보다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독일통일이 실현된 지 4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한반도는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성공적인 외교’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정책문서를 바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1989년 동유럽의 변혁이 시작되었을 때 이미 서독은 1950년대 이후 서방연합으로의 통합, 그리고 1970년대 이후 신동방정책과 함께 동구권과의 교류 등을 통해 동서 진영의 국가들과 구축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펼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서독정부의 외교가 항상 통일외교였다고 할 수도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과 관련된 외교정책문서에 1945년 포츠담협정서를 포함하여 그 이후 체결된 독일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국제조약의 문서를 포함하였다.

외교문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통일과 관련된 외교에서는 정치적 지도자들의 정치적·외교적 협상능력이 항상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외무부의 관료들은 외무장관과 국장들에게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분석해서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각 지역의 외교관들이 현지에서 보내온 전문이 경우에 따라서는 장관급회의의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미 시기적으로 지나간 정보를 보낸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문제는 1990년 당시에 사용되던 제약된 통신수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도 있다.

아래에서는 독일통일과 관련된 외교문서를 시기별로 분류하여 1945년부터 1988년까지를 1장에서, 1989년 초부터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때까지를 2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3장에서는 1989년 11월 9일 이후부터 2+4회담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문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4장에서는 동독 외교부의 해체와 관련된 문서들을 별도로 분류·분석할 것이다.

독일문제와 내독정책

제1절 기민당 주도의 서구지향 외교(1949-1958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전승 4개국이 포츠담에서 합의한 소위 ‘포츠담협정’으로 불리는 문서는 엄격하게 보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라 ‘합의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문은 1990년까지 독일문제와 관련된 기본원칙을 규정한 가장 중요한 문서였다. 그렇기 때문에 2+4회담 중에 소련 측의 대표가 포츠담협정의 규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서독 연방정부의 외무부에서 그것이 실제로 유효한 것인지 검토하기도 했다.¹ 포츠담협정서에 언급된 독일과 주변국들 간의 평화협정은 1990년 통일이 될 때까지 체결되지 않았지만, 오테르-나이세 강을 폴란드와 독일 간의 국경선으로 정한 규정은 동독과 폴란드 간, 그리고 서독과 폴란드 간의 조약을 통해 상호 합의 하에 국경선으로 확인되었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폴란드정부와 국민이 새로운 독일이 오테르-나이세 강을 양국 간의 국경선으로 정한 이 규정을 인정하지 않

¹ 포츠담선언-2+4회담의 틀 속에서 안보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고려·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하여(외교 분야 II, 문서번호 74).

² 베를린에서 열린 3개국 정상회의 보고서-포츠담협정(문서번호 1).

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가능하면 신속하게 동독과 서독이 공동으로 폴란드와 조약을 체결하여 국경선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를 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1990년 당시 독일에 대한 유럽 주변 국가들의 시각이 얼마나 우려가 섞인 것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였다.

미국이 일본과 샌프란시스코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한 1952년에 유럽에서도 독일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던 일본문제와 달리 독일문제는 전승 4개국이 함께 결정해야만 했고, 전후 세계질서는 이미 냉전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상황이었다. 소련이 조속한 시일 내에 독일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지만³ 그들이 특별히 독일의 입장을 고려한 것도 아니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전승 3개국은 1952년 5월 26일에 서독과 소위 말하는 ‘독일조약’을 체결하여 전승국에 의한 서독의 점령조약의 해지를 선포하고 서독에게 대내외적으로 주권을 부여하고, 서독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유지하며, 서독을 서방 진영의 일원으로 통합하였다.⁴ 그리고 서독정부는 동독의 영토 한가운데 고립된 섬처럼 남아 있던 서베를린의 지위에 관한 별도의 성명을 통해 서독과 서베를린이 하나의 국가단위체임을 밝히기도 하였다.⁵ 같은 날, 즉 1952년 5월 26일에 서독과 전승 3개국 간에는 독일조약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관할할 수 있는 중재법원의 설치, 그리고 서독에 주둔하는 군대의 의무 그리고 서독에 주둔하는 연합군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에 서독이 부담할 것들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⁶ 같은 날 체결된 전환협정을 통해 연합국 감독위원회가 선포한 어떤 법률규정도 서독이 임의로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

.....

³ 독일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소련 측 보고(문서번호 3).

⁴ 서독과 서방 전승 3개국 간의 관계에 대한 조약(독일조약)(문서번호 4).

⁵ 베를린에 대한 원조와 관련한 서독의 성명(문서번호 5).

⁶ 서독과 서방 전승 3개국 간의 중재법원 규약(문서번호 6), 서독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한 조약(문서번호 7).

였다.⁷ 그리고 점령국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3인이 아테나워 수상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서베를린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승 3개국이 형식적으로라도 점령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도 통보하였다. 물론 서독의 법률이 서베를린에 그대로 적용되는 등 서베를린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는 서독이 하게 되겠지만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전승 3개국이 서베를린에 대한 통치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였다.⁸ 이러한 서방 연합국의 결정에 대해 서독정부가 이의를 제기한 문서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종전 이후 프랑스로 귀속되었던 자르지역에 대한 통치권이 반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테나워 수상이 불만을 표시한 서신이 남아 있다.⁹

1952년에 아테나워 수상이 서방 전승연합국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서독과 서방 연합국들 간의 신뢰관계가 이미 그만큼 깊이 구축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서독의 건국 후부터 아테나워 수상이 추진하였던 서방연합으로의 통합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1954년 10월 런던에서 9개국 회담을 통해 서독이 나토에 가입하게 된 것 또한 아테나워 정부의 외교정책이 거둔 중요한 성과였다.¹⁰ 런던조약으로 불리는 이 조약을 통해 독일에 대해 서방연합국이 갖고 있던 점령규약이 해지되었으며, 서독이 국제사회에서 독일 전체를 대변한다는 점이 적어도 서방 진영에서는 인정되게 되었다. 동시에 서독은 유엔규약을 승인하기로 합의했고, 통일이나 국경 변경 시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서독이 앞으로 총 50만 명의 전력을 재건하는 것이 허용되는 한편, 원자력 및 생화학 무기를 독일

⁷ 전쟁과 점령에서 기인하는 문제들의 규율을 위한 협정(전환협정)(문서번호 9).

⁸ 연방 수상 앞으로 보내는 전승국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3인의 베를린에 대한 서신(문서번호 10).

⁹ 자르지역과 관련한 연방 수상 아테나워의 서신(문서번호 11), 연방 수상 앞으로 보내는 전승국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3인의 자르지역에 대한 서신(문서번호 12).

¹⁰ 런던 9개국 회담 최종문서(문서번호 14).

영토에서 생산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원자력 무기를 서독영토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영국, 미국 및 캐나다는 서독에 군대를 진주시키기로 약속하였다. 이 협약을 통해 서방 9개국은 앞으로 전 독일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독일의 국경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¹¹

서독과 연합국 간의 런던조약이 체결되기 6개월 전인 1954년 3월에 소련은 동독의 완전한 주권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서방 연합국이 서독에 대한 점령규약을 유지하는 것이 독일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라고 비난하였다. 서방 연합국들과는 달리 소련은 독일의 국가적 통일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내세우면서, 그를 위해 동독과 서독 간의 접근, 전 독일 자유총선거의 시행, 승전연합국과 독일 간의 평화협정 체결 등과 같은 실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서독과 서방 진영을 비난하였다.¹²

런던조약의 체결을 통해 서독의 재무장이 가능해진 것에 대해서는 당시 서독의 야당이었던 사민당도 크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서구 진영으로의 통합을 서독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았던 아데나워 수상의 입장은 확고하였다. 1958년 3월 서독 연방의회 의장이었던 게서스텐마이어는 인터뷰를 통해서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1950년대 초반 서독이 국제사회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서독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서독의 재무장이 소련의 더 큰 팽창을 막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오히려 당시 연방정부가 독일 전역에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자고 요구해서 동독과 서독 간의 긴장완화의 여지가 없어졌다고 비난하는 사민당 하이네만 의원의 시각이 잘못된 것이

¹¹ 런던 9개국 회담 최종문서(문서번호 14). 이러한 조항을 보면 폴란드가 오데르-나이세 강을 기준으로 하는 독일과의 국경선에 대해 불안해 했던 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

¹² 동독의 주권에 대한 소련의 성명서(문서번호 13).



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런 논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독에서도 대동독정책과 관련하여 항상 의견이 통일된 것은 아니었다.¹³

제2절 신동방정책과 긴장완화(1963-1988년)

대동독정책을 둘러싼 서독 내의 논란은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 신동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1963년 7월 15일, 당시 빌리 브란트가 시장이었던 서베를린 시정부의 정부 대변인이었던 에곤 바가 남부 독일 바이에른주의 투칭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강연했던 연설을 보면 브란트와 바가 주도했던 신동방정책이 당시 국제질서의 새로운 바람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에곤 바는 이 강연에서 미국의 전략은 공산주의가 제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 상태를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와 함께 기민당 정치인들이 주장하던 ‘전부 아니면 제로’라는 식의 정책, 즉 ‘동독에서 자유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한 동독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정책이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그런 방식으로 하루아침에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통일은 수많은 발걸음과 정치역들로 이루어진 과정이라고 그는 설명하였다. 동독을 직접 전복시키려 하는 시도가 부질없는 무모한 것이며, 동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련의 동의 하에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그는 서방 진영이 동독에게 경제제재와 같은 조처를 취해 동독이 이미 안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강화시켜서 동독의 붕괴를 유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정책은 궁극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켜서 결국 독일의 분열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분석하였다. 협상과 대화를 한다고 해서 동

¹³ 평화협정에 대한 독일 연방의회 의장 인터뷰(문서번호 16).

독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동서독 간의 무역 강화가 미국의 정책에 부응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 결국 동독에서 소비욕구가 증가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 동독체제가 유연해지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를 통해 동독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와 긴장완화를 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자는 것이며, 현실에 대한 환상 없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독이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¹⁴ 이런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서베를린 시정부는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지 2년 후인 1963년 12월에 서베를린의 주민들이 동독의 친척방문을 위한 통행증의 발부에 관한 의정서를 동독정부와 체결하였다.¹⁵

신동방정책을 내세운 사민당에 대해 기민당의 보수정치인들은 그들이 ‘소련군 7중대’가 아니냐고 이념공세를 퍼부었다는 것은 신동방정책까지도 서독 내에서 아무 논란이 없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1969년에 연방정부의 수상으로 취임한 빌리 브란트는 1970년 8월에 소련과 조약을 체결하고 양국 간의 분쟁은 전적으로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유럽 내의 기존의 국경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¹⁶ 1970년 12월에는 폴란드와 국교정상화조약을 체결하여 서독과 폴란드는 두 국가 사이에 정해진 기존의 국경은 폴란드의 서부 국경이며, 두 나라는 기존의 국경이 현재와 미래 언제든지 침해될 수 없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¹⁷ 1971년 12월에는 동독정부와 서독 연방정부 간에 민간인 통행과 물자의 수송을 규율하는 통행협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서독은 동독에 대해 매년 통행로의 이용에 대한 비용을 총괄 지불하고, 1972년에서 1975년까지 서독이 동독에 연 2억 3,490만 서독 마르크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서독과 동독은 이 협정의 적용 및 해석

.....

¹⁴ 접근을 통한 변화-에곤 바의 투칭에서의 연설(문서번호 17).

¹⁵ 서베를린주민의 친척 방문 목적 통행증 발부에 대한 의정서(문서번호 18).

¹⁶ 서독과 소련 간의 조약(문서번호 20).

¹⁷ 서독과 폴란드 간의 국교정상화 조약(문서번호 21).



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양국의 교통부장관이 주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¹⁸ 그리고 1972년 12월 21일에는 잘 알려진 것처럼 동독과 서독 간의 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¹⁹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수상에 의해 주도되었던 신동방정책은 1960년대 초반 쿠바 위기 이후 동서 양 진영이 상호 긴장완화를 추구하던 국제정치적인 변화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치적인 조건이 변하더라도 서독이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1982년에는 헬무트 슈미트 수상이 이끄는 사민당과 겐서 외무장관이 이끌던 자유민주연합(자민련-FDP)의 연립정부가 결렬되고 자민련과 기민당이 새로운 판을 짜고 기민당의 대표 헬무트 콜이 새로운 수상으로 취임하였을 때, 새로운 정부에서도 외무장관을 맡게 된 겐서가 적어도 외교에서 연방정부의 노선이 변화하지 못하도록 막고, 국제사회의 긴장완화 정책에 기반을 둔 신동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특히 그때까지 체결된 조약들이 그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다.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에 긴장완화가 더 이상 동서관계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게다가 1980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기존의 긴장완화정책을 거부하고 군축과 관련된 모든 협정을 거부하던 로널드 레이건이 승리하였다. 그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소련에 대한 미국의 우위를 확실히 회복해야만 한다고 보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완화를 위한 신동방정책을 유지하던 슈미트 수상이 이끌던 서독 연방정부와 미국 레이건 행정부 간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미국과 서독 간의 이러한 긴장관계가 헬무트 콜이 새로운 수상으로 등장한 이후에도 이어졌다. 야당 당수로 기민당을 이끌던 헬

¹⁸ 동서독 간 통행협정(문서번호 23).

¹⁹ 동독과 서독 간 관계의 기초에 대한 조약(동·서독 기본조약)(문서번호 25).

무트 콜이 외교정책에서 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에 중점을 두었고, 연방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신동방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긴장완화정책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던 정치인은 아니었다. 사실 기민당 내에서 동방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던 그룹은 소위 말하는 실향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극히 소수 뿐이었다. 그들조차도 기본조약을 비롯하여 신동방정책의 틀에서 체결된 다양한 조약을 파기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서독이 일방적으로 선금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내용을 수정할 것만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오데르-나이세 강이 폴란드와 독일 간의 국경선이라고 인정했던 바르샤바조약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임시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 실향민그룹이 기민당 내에서 영향력 있는 세력을 형성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동방정책의 기초가 기민당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무트 콜 수상이 이끄는 기민당 정부는 빌리 브란트가 이야기했던 ‘작은 걸음의 정치’를 지속하면서 독일인들이 겪는 분단의 고통을 감소시켜 주기 위한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였다. 콜 수상의 대동독 정책의 정점을 찍은 것이 1987년 9월 10일 동독 사회주의통합당의 총서기장 에리히 호네커가 서독의 수도 본을 방문하여 콜 수장과 함께 연방군의 사열을 받고 자신의 고향을 방문한 것이었다.²⁰

1989년 3월 1일에 서독의 외무부가 작성한 문서를 보면 1988년까지 내독관계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발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¹ 특히 호네커의 서독방문 이후 시작된 인도적 영역에서의 개방정책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1988년에 동독주민이 개별방문을 신청한 횟수도 670만 건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교류협력 또한 지속적으로 다원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²⁰ 에리히 호네커의 서독 방문(문서번호 27).

²¹ 내독관계와 동독 내부의 상황-외무부 210과의 현황보고(문서번호 29).

동독의 변혁을 지원하기 위한 외교

1989년 1월 19일에 동독과 서독의 외무장관 회의가 열렸을 때 폴란드와 다른 동구권 국가에서는 변혁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겐셔가 피셔 동독 외무 장관에게 서독이 동독의 내부문제에 간섭할 의향은 없지만 그래도 동독정부가 좀 더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고 언급하였다.²² 그로부터 약 반 년이 지난 1989년 6월 27일에 동베를린에 있는 서독 상주대표부의 책임자는 자이터스 연방수상청장에게 보내는 보고서를 통해 당시 동독 내부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동독 지도부가 동유럽의 다른 사회주의 진영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 동독주민들과 사회주의통합당(사통당) 일부 당원들의 개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서방으로부터의, 특히 인권개선과 같은 변화에 대한 요구 등 세 가지 요인으로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동독 지도부가 방어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호네커의 통치가 지속되는 한 동독 내에서 개혁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하였다.²³ 그리고 다시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1989년 초부터 동독 주민들이 대량 탈출하기 시작한 여름을 거쳐 11월 9일까지 급박하게 돌아가던 서독의 외교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전개되었다.

²² 동·서독 외무장관 회담(문서번호 28).

²³ 베어틀레 상주대표가 수상청장에게 보낸 동독 내부 상황에 관한 보고서(문서번호 37).

제1절 동구권의 개혁과 서독과의 협력

1989년 5월과 6월, 소련과 폴란드 그리고 헝가리에서 진행되던 민주적 개혁과정이 기존의 정치체제를 어느 정도 위협할 수 있는지, 나아가 그런 변화가 유럽의 전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당시 서방 진영의 국가들은 동구권 국가들이 국내정치적·외교정책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점진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런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것은 기존의 긴장완화정책을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당시 새로운 긴장완화정책을 위한 특별한 구상이 만들어진 것은 없었다. 그 결과 동구권의 변화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은 이 모든 변화를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태도를 취했다. 동서대결이라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진 사고를 버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긴장완화정책의 수호자로서 서독의 비중이 높아졌다. 1989년 초 미국 대통령 부시와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총서기장이 연이어 서독의 수도 본을 방문한 것이 바로 그 증거였다.

부시 대통령의 서독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1990년 4월 14일에 미국을 방문한 기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 자문 로버트 블랙윌은 미국정부가 동구 유럽이 복합적이고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국이 동유럽 국가의 변화를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으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상황, 시장경제의 도입 정도, 마약과 범죄정책과 대미국 첩보활동 등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그런 경우 소련뿐만 아니라 미국도 유럽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²⁴

.....

²⁴ 기민당/기사당 연합 국방정책 실무단의 1989년 4월 10-14일 중의 워싱턴 방문. 미국 대통령의 독일문제 자문 로버트 블랙윌(Robert Blackwill)을 통한 독일통일 문제에 대한 미국정부 정책의 현

블랙월의 분석 중에 주목할 것은 그가 당시 유럽에서 논의되던 ‘유럽 공동의 집’ 개념이 두 개의 오류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 오류의 하나는 동유럽 국가들이 그럴 자유만 있다면 소련을 유럽에서 내쫓아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런 유럽 공동의 집에 미국의 위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당시 미국이 유럽의 변화에 대해 일정한 정도 우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블랙월은 당시 기민당 의원들에게 미국이 서독과 함께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것은 특히 미국과 유럽의 공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서독 간의 관계를 특별히 부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열린 다양한 회담에서 소련 또한 서독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겐서 서독 외무장관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소련과 서독 간에 공동성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²⁵ 상호 신뢰와 존중의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베를린 장벽도 붕괴할 것이라는 세바르드나제의 발언이나 소련의 개혁에 동독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겐서의 응답을 통해 1989년 전반기 독일 분단의 극복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소련을 비롯하여 동구 유럽에서 진행되던 개혁이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1989년 6월 서독의 수도 본을 방문한 고르바초프와 세바르드나제 등 소련 정부사절단에 대한 서독주민과 정부의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환영과 환대는 당시 서독 내에서 소련의 개혁에 열

황 파약-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보고(문서번호 30).

²⁵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간의 본(Bonn) 회담(통역 기록)(문서번호 31). 두 외무장관 간의 각별한 친분관계는 1989년 7월 27일에 겐서가 세바르드나제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특별히 강조된 것을 볼 수 있다. 연방 외무장관 겐서가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에게 보내는 서신-더 강화된 협력을 위해(문서번호 44).

마나 많은 기대를 하였는지 보여주는 것이었다.²⁶

더욱이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에서 수상청장에게 보고한 것처럼 동독 지도부가 개혁의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서독은 소련과 다른 동구권 국가에서 진행되는 개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또 이를 지지하였다. 1989년 7월 7일 서독을 방문한 폴란드 자유노조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겐서 외무장관은 서독이 폴란드의 개혁정책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까지 아끼지 않았다.²⁷ 서독 연방정부는 특히 경제협력을 통해 동구권 국가들의 개혁을 지원하고 아직 개혁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가들에게 개혁을 위한 자극을 주고자 하였다. 그때까지도 호스트 텔칙이 동독의 주민들이 민주적인 동독국가를 선택한다면 장래에도 독일영토에 두 개의 국가가 유지되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동독이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었다.

제2절 ‘대사관 난민문제’ 를 위한 협상

1989년 7월에도 서독정부는 동독 지도부가 개혁 대열에 동참한다면 서독이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었다. 동시에 동독과 서독 간의 국경을 통해 동독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하거나 동독 내에서 언론인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통해 양국 간의 관계에 부담을 주는 일을 중단하기를 촉구하였다.²⁸ 개혁을 거부하는 동독 지도부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대답은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이주하는 것이었다.

1987년 가을 이후 동독의 도시 라이프치히 주민들은 언론인들이 대거 참

.....

²⁶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간의 회담-본 근교 바흐트베르크-폐히지역 개최(통역 기록)(문서번호 33).

²⁷ 겐서 외무장관과 게레멕 교수 및 다른 폴란드 ‘연대’ 자유노조 소속 대표들과의 대화-외무부 214과(문서번호 40).

²⁸ 내독관계-수상청장 자이티스의 동베를린 공식방문(문서번호 43).



가하는 라이프치히 박람회에서 자신들의 이주의사를 알리기 위한 시위를 조직해 왔다. 1989년 3월에 열린 라이프치히 박람회에서도 그런 시위가 있었다. 약 300명의 시민들이 니콜라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 “우리는 나가고 싶다!”라고 외치면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당시 동독의 비밀경찰은 불만이 폭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89년 7월에 열릴 ‘교회의 날’ 행사 때까지 라이프치히시와 주변 지역의 이주신청자 중 4,000명에게 이주를 허락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비밀경찰의 발표는 그들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오히려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을뿐만 아니라 동독의 개혁을 위한 ‘평화의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²⁹

동독 당국으로 하여금 이주신청서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압력을 넣는 좋은 방법으로 동독주민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또는 동구권에 있는 서독대사관에 들어가는 방법이었다. 동독정부는 그런 사례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때까지 종종 있었던 ‘대사관 점령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주를 허락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었다. 그러나 1989년 여름 신속하게 서독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동독주민들이 대거 서독 외교공관으로 진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서독 연방수상청장에게 제출된 보고서에서 국장은 동독주민들이 이주를 원하는 주요 원인이 지속적인 공급부족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 심리적 위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 사회주의통합당(사통당) 중앙위원회의 7차 회의를 통해 동독에서는 장래에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

²⁹ 서독정부가 당시 작성한 이주자에 관한 통계자료에서는 ‘이주자’, ‘탈출자’ 그리고 ‘기타’ 등의 용어로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해 온 주민들이 분류된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해 온 사람의 수가 1989년 1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 총 55,970명,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1948년 12월 31일까지 소련군 점령지역에서 서방 연합군 점령지역으로 이주해 온 사람과 1949년 1월 1일부터 1961년 8월 베를린 장벽이 세워질 때까지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해 온 사람의 수가 340만 명 이상,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이후부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매년 이주해 온 주민이 616,000명이었다. 연방 수용소의 신청자(동독 이탈주민 및 이주자의 수)(문서번호 45).

상황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대한 비관적 평가가 그의 개혁이 실패할 경우 동구권 전체의 상황이 훨씬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서독 내에서 동구권의 다른 국가들을 통해 대량으로 탈출해 오고 있는 동독주민들을 서독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는 것을 보면서 동독주민들 사이에 언젠가는 서독이 국경을 폐쇄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즉각적인 이주를 결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³⁰

1989년 8월 초 131명의 동독주민이 동베를린의 서독 상주대표부에 들어가서 나가기를 거부하였다. 8월 8일에 서독 연방수상청의 독일정책 실무팀의 슈테른 국장은 동베를린의 서독 상주대표부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한 결정을 보고하면서 그 원인이 서독으로 이주를 원하는 130명의 동독주민이 상주대표부를 떠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독정부가 이들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이들의 이주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³¹ 이어서 14일에는 부다페스트, 22일에는 프라하의 서독대사관도 밀려드는 탈동독자들로 인해 공관의 문을 폐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사관 담장을 넘어서 계속 대사관에 진입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서독의 콜 수상이 8월 14일에 직접 호네커에게 서신을 보내 상주대표부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는 동독주민들로 인해 양국 간의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비밀회의를 제안하였다.³² 호네커는 8월 17일에 콜 수상에게 답신을 보내면서 동독주민의 이주문제는 동독만이 결정할 일이며, 동독주민이 동베를린, 프라하, 바르샤바, 부다페스트

³⁰ 동독의 이주정책-슈타프 국장이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보고서(문서번호 47).

³¹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에 일반인들의 출입 금지-슈테른 국장이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초안(문서번호 48).

³² 대사관 동독 이탈주민-서독 연방정부의 콜 수상이 동독 국가위원회 의장 호네커에게 보내는 서한(문서번호 49).

에 있는 서독대표부에 체류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뜻을 박았다. 서독정부가 동독국민의 문제를 관리하려 들지 말고 대사관에 들어가 있는 동독주민들을 조속히 내보내라고 요구하면서, 이런 문제의 책임을 동독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³³ 1989년 8월 21일에 루돌프 자이티스 서독 연방수상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동독의 외무차관은 소위 ‘대사관 난민(Botschaftsfluechtling)’으로 불리는 서독의 해외공관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는 탈동독자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를 그들이 대표부에 체류할 수 있도록 서독정부가 허용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다페스트의 서독대사관에서 동독주민들에게 서독 여권을 발행해 준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비난하였다.³⁴ 그리고 서독대표부에 있는 동독주민들이 동독으로 귀국할 경우 그들이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³⁵

동독 지도부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독 연방정부는 동독과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였다.³⁶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승 4개국과 다른 국제기구가 동참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89년 8월 24일 서독 연방정부의 외무부가 내린 결론은 동독 이탈주민이 서독대사관에 진입한 문제는 동독과 서독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국 간에 협의 하에 처리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만일 서독이 서방 측의 전승국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로 인해 서독이 내독관계를 관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고, 나아가 독일의 주권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는

³³ 대사관 동독 이탈주민-동독 국가위원회 의장 호네커가 서독의 콜 수상에게 보내는 서한(문서번호 50).

³⁴ 서독의 기본법에 따르면 동독주민도 독일연방공화국의 시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물론 탈동독자들에게 독일연방공화국의 시민권을 주는 것이 서독의 입장에서 위법이 될 수 없었다.

³⁵ 대사관 동독 이탈주민-수상청장 자이티스와 동독 외무차관 크롤리코프스키 간의 회의(문서번호 51).

³⁶ 동독 이탈주민의 서독대표부 체류 문제-베어틀레 대표가 자이티스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보고서(문서번호 54).

것이 그 이유였다.³⁷ 그에 따라 외무부는 연방수상청과 합의 하에 이 문제를 동서독 양자 간에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날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의 베어틀레 대표가 콜 수상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탈동독자 문제에 관한 동독 지도부의 입장이 조금 유연해진 것을 볼 수 있다.³⁸ 그는 동독도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으려 하며, 그것이 동서 양국 간의 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동독쪽에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동독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서독이 인정해 주기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그는 동독 지도부가 서독이 자국의 대표부에 있는 동독주민들을 내보내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동독 지도부는 서독이 동독 탈출자들에게 그들이 동독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면서 그들이 동독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함께 전해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동독과 서독이 모두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독이 콜 수상과 호네커 간의 회담을 개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탈동독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수상청의 뒤스베르크 국장은 상주대표부와 다른 대사관에 있는 동독 탈출주민들이 이주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표부와 대사관에서 나가려고 할지 의문이며, 이들에게 나가라고 강요할 수도 없기 때문에 동독 당국에게 이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³⁹ 이러한 서독 수상청의 요구에 대해 동독 외무부 서독 담당 국장이 8월 31일에 제시한 해결책은 서독의 대표부에 들어가

.....

³⁷ 동독 이탈주민 위기 해결 노력에 전승 4개국을 관련시키는 문제와 관련한 외무부의 구상(문서번호 53).

³⁸ 동독 이탈주민의 서독대표부 체류 문제-베어틀레 대표가 자이티스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보고서(문서번호 54).

³⁹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와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으로 진입한 동독 이탈주민 문제-수상실의 뒤스베르크 국장이 상주대표 베어텔레 차관에게 보낸 전문(문서번호 57).

있는 동독 탈출자들이 자진해서 대표부를 나와 고향으로 귀환할 경우 동독 당국이 그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주신청을 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신청서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그들이 기존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며, 동시에 이주신청을 위한 변호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만일 대표부에 있는 동독 탈출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경우 포겔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이 약속을 보증해 주겠다고 하였다.⁴⁰ 탈출자 문제는 양국 정상 간의 회의에서 다루어질 문제는 아니며 동독 외무부 서독담당 국장과 서독 연방정부 내독부의 프리스니츠 차관 그리고 동독의 포겔 변호사의 선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뜻을 박았다.

서독 연방정부는 이 제안을 수용하였고, 동베를린의 서독 상주대표부에 들어가 있던 동독시민들은 동독 당국의 약속을 받고 9월 8일 서독 상주대표부를 떠났다.⁴¹ 그러나 부다페스트와 바르샤바 그리고 프라하의 서독대표부에 진입한 동독주민들은 동독의 제안을 수용하기를 거부하였다. 동독은 서독대사관에 있는 모든 동독인들이 일단은 동독으로 돌아와서 이주신청서를 제출하고 합법적으로 이주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였기 때문이다.⁴² 당시 헝가리에 있던 5,000-10,000명의 동독 탈출자들은 동독으로 돌아갈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프라하와 바르샤바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좁은 대사관 공관에 수천명의 인원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위생시설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양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헝가리정부가 먼저 해결책을 발표하였다.

헝가리정부는 이미 1988년 말에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간의 350 킬로미

⁴⁰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와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으로 진입한 동독 이탈주민 문제-상주대표 베어텔레 차관이 수상실의 뒤스베르크 국장에게 보낸 전문(문서번호 58).

⁴¹ 프라하와 바르샤바의 서독대사관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들에 관하여-수상청 뒤스베르크 국장이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텔레 차관에게 보낸 전문(문서번호 61).

⁴² 부다페스트 주재 서독대사관의 동독 이탈주민에 관한 동독과 헝가리 간의 논의에 관한 정보-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텔레 차관이 수상청장에게 보낸 보고서(문서번호 59).



다는 동서 간의 현상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는 서방국가들이 개혁을 지지한다고 말만 할 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을 뿐더러, 프랑스와 같은 경우 오히려 헝가리의 개혁으로 인해 동서 간의 세력균형에 입각한 현상유지가 깨지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특히 프랑스는 헝가리의 개혁으로 인해 동-서 간의 세력균형에 입각한 현상유지가 깨지는 것과 독일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헝가리가 동독 탈출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지속할 경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고립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이 헝가리를 지원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하였다. 헝가리정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서독정부는 당연히 최대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서독의 연방주들도 나서서 헝가리에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에 대해 동독정부가 현상금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지만 서독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다시 확인하였다.

헝가리정부의 전격적인 국경 개방 이후 동독 내에서는 정부가 국경을 전면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동독을 이탈하는 주민의 수가 더욱 증가하였다. 그와 함께 프라하와 바르샤바의 서독대사관에 진입한 동독 이탈주민들이 동독으로 돌아가서 정식으로 이주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동독 당국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은 더욱 분명해졌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1989년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뉴욕에서 열린 44차 유엔정치총회에 참석한 겐서 서독 외무장관은 동독 대표단과 협상을 벌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동독인들이 동독으로 돌아가서 이주신청서를 제출하면 6개월 이내에 신청허가를 내어 주겠다고 고집하였던 동독 당국이 9월 30일 뉴욕에서 돌아온 겐서 장관에게 바르샤바와 프라하 서독대사관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들에게 동독의 공식적인 표현으로 ‘인도적 사유로 인한 이주’를 허가하겠다는 제안을 보내왔다. 그것은 즉각적인 이주를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절차는 이들

이 기차를 타고 동독영토를 거쳐서 서독으로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특별열차가 동독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형식적으로 동독주민들이 다시 동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동독 당국의 허락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서독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었다. 동독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은 겐서 장관은 즉시 자이더스 수상청장과 함께 프라하로 가서, 그날 저녁에 프라하의 서독대사관 발코니에서 발표하였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역사적인 장면의 하나로 기록된 그 순간에 대해 당시 겐서 외무장관을 보좌하였던 프랑크 엘베 국장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⁴⁶ 기차를 타고 바르샤바에서 서독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독을 통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지만, 프라하에서 서독으로 가는 길은 동독영토를 지나갈 필요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하의 서독대사관에 있는 동독주민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장담할 수 없었다. 프라하에 도착한 겐서 장관은 대사관의 발코니에 나가기 전에 잠시 생각에 잠겼었다. 그리곤 발코니에 나가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주가 허용됨을 알려주러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가 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대사관에 몰려 있던 4,000명이 넘는 동독 이탈주민들이 환호의 함성을 질렀고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신속하게 그 소식을 타전하기 위해 모두 자리를 떴다. 겐서 장관은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린 후에 서독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특별열차를 타고 동독영토를 거쳐서 가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의 설명에 대해 4,000여 명이 모두 그건 아니라고 소리쳤다. 그때부터 겐서 장관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특별열차의 안전을 보장할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좌관이 특별열차에 동승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서독으로 갈 수 있도록 책임질 것이라고 설득하였다. 겐서 장관이 이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모두 본사로 타전하기

.....

⁴⁶ 이 인터뷰는 2013년 8월 22일에 베를린에서 열렸다.

위해서 자리를 떴기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이 모든 장면을 옆에서 지켜본 보좌관이 켄서 장관에게 놀라움을 표시하자 그는 그런 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얻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마음을 먼저 얻은 후에 어려운 문제를 설득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것은 협상을 진행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역사적인 순간에 그런 상식적인 지혜를 동원할 줄 아는 정치인이 독일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독일이 가졌던 행운이었다.

그 후 10월 1일에 프라하와 바르샤바에서 특별열차가 출발하여 서독으로 갔다. 특별열차가 동독영토를 통과할 때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차가 지나가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손을 흔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⁴⁷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10월 1일 이후에도 동독을 이탈한 주민이 지속적으로 프라하로 몰려들었다는 사실이다. 프라하의 서독대사관에 진입한 동독 이탈주민의 수는 1989년 9월 말에 6,000명 정도였다. 그리고 대사관 주변에 약 2,000명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고, 프라하로 가기 위해 체코슬로바키아로 온 사람이 약 3,000에서 4,000명으로 추정되었다.⁴⁸ 그들 모두를 안전하게 서독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첫 번째 특별열차가 출발한 이후에 수송되어야 할 인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동독 지도부가 호네커에서 에곤 크렌츠로 교체된 10월 18일이 지난 후에도 아직 5,000명이 프라하에서 서독으로 이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1989년 11월 3일 에곤 크렌츠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모임에 참가한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의 대표 베어텔레는 이 자리에서 동독의 외무

⁴⁷ 폴란드에 있는 탈동독주민의 이주-베어텔레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가 수상청장에게 보낸 보고서(문서번호 76).

⁴⁸ 체코에 있는 탈동독주민의 이주-콜 수상과 아다멕 총리 간의 전화통화(문서번호 77), 프라하와 바르샤바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들-수상청장 자이티스와 뒤스베르크 국장의 보고서(문서번호 80).

차관 크롤코프스키와 나는 대화에 대해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⁴⁹ 그것을 통해 동독 외무차관이 그때까지도 서독쪽에서 프라하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들에게 먼저 동독 당국에 이주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이주허가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설명하여 귀가를 종용하기를 요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보다 서독대사관에 들어와 있는 탈동독자 전원을 서독으로 이동하도록 허용하고 동독이 그에 필요한 서류를 차후에 발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베어틀레의 제안을 크롤코프스키 외무차관은 탈동독주민들 중에 극소수만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프라하 주재 동독대사관의 인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400건 이상의 이주서류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그런 대화를 듣고 있던 동베를린 주재 체코 대사가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있는 탈동독자들이 동독대사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임시수용소와 같은 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베어틀레 대표는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1989년 가을 모든 것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돌아가던 상황에서도 동독 당국은 적어도 절차상으로는 동독의 체면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것이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 모든 정황상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서독이 자신의 힘의 우위를 과시하고 동독에 굴욕감을 준 것이 아니라 동독의 요구를 최대한 고려하면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심스런 외교적 접근방식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

⁴⁹ 프라하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 문제-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텔레가 수상청장에 보낸 보고(문서번호 86a).

통일외교의 가동

‘대사관 난민 위기’라고 불리는 사건, 즉 동독 이탈주민이 대거 동구권에 있는 서독대사관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위기가 원만하게 해결되었던 1989년 가을 ‘독일문제’는 다시 국제정치의 현안이 되었다. 그리고 동독과 서독이 두 개의 국가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독일통일로 가게 될 과정을 성공적으로 주도해야 하는 과제가 서독 연방정부에게 부여되었다. 당시 독일통일에 대한 주변국과 동맹국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서독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했다. 하나는 통일된 새로운 독일이 서방 진영에 계속 남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유럽과 화합될 수 있어야만 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과정이 실제로는 2+4회담의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일문제가 다시 국제정치의 중요한 화두가 되자 전승 4개국뿐만 아니라 폴란드를 비롯한 다른 주변 국가들은 유럽의 한 가운데에 정치, 경제, 금융의 중심이자 8,000만 인구를 가진 강대국이 등장하는 것을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았다. 서독 주재 미국 대사 나이즈가 1989년 9월 4일에 쾰른 장관을 만나서 말한 것처럼 독일통일에 대한 토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유럽연합을 위협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 섞인 시각으로 독일문제를 보는 사람도 적지 않았

다.⁵⁰ 그렇게 때문에 1989년 당시 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 독일통일 문제는 통일된 하나의 독일국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유럽의 평화구조 속으로 통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었다.

제1절 장벽의 붕괴와 통일로 가는 길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독일통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도 구체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전망 제시와 같은 성격이 강했다. 겐서 외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독일의 통일은 유럽통일의 결과일 뿐 그 시작일 수는 없다는 소련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고르바초프가 말하는 ‘하나의 집으로서의 유럽’ 개념이 그 해답일 수 있으리라고 발언한 것도⁵¹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1989년 가을 당시 독일통일 문제를 보는 전승 4개국의 시각도 많이 달랐을뿐만 아니라 독일 문제를 자국의 이해관계와 국내정치의 틀 속에서 주로 보았다. 그것이 독일문제의 해결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보수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영국의 정부는 독일의 통일을 선호하지 않았다. 특히 마가렛 대처 수상은 동독과 동구권 국가들이 민주화된다면 독일이 분단된 상태로 있는 것이 낫다고 보았다. 그녀는 통일된 독일이 주변국들을 압도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유럽통합의 틀 속에서 독일이 통일되는 방식으로 독일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할 정도로 독일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다.⁵² 대처 수상은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이 독일문제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기대했지만 유럽 내에서 독일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⁵⁰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미국 대사 나이즈(Nitze)의 본(Bonn) 회담(문서번호 65).

⁵¹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미국 대사 나이즈(Nitze)의 본(Bonn) 회담(문서번호 65).

⁵²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대처 영국 수상의 런던에서의 대화(문서번호 97).

여긴 미국과 프랑스는 각자의 입장에서 독일과 개별적으로 협상하였다.⁵³

프랑스의 미테랑 정부도 독일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미테랑 대통령 또한 통일된 독일이 유럽에서 지배적 지위를 형성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미테랑 대통령은 독일이 분단된 상태로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한편 당시 프랑스의 야당이었던 보수당은 기관지에서 사회당 정부를 공격하면서 전승 4개국 중에 소련을 제외하고 어느 국가도 ‘대사관 난민’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으며, 프랑스정부도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고 비난하였다. 그 원인이 뒤마 총리가 독일문제의 해결책으로 중립화를 통해 두 개의 독일국가가 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낡은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독일문제를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다. 그들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공산당이 소멸되고 민족자결권이 다시 적용되면 독일통일도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⁵⁴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경우 프랑스 보수당처럼 공산당의 붕괴를 언급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은 1989년 초에 부시 대통령의 서독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독일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였다.⁵⁵ 부시 대통령은 1989년 5월 서독 방문 중에 유럽 내의 단절 극복이라는 큰 틀 속에서 독일의 분단을 극복하는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미국이 생각하는 유럽과 독일의 장래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서방연합의 동맹의 유지·강화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었다. 1989년 10월 25일에도 부시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 보수당과 유사한 논지로 인터뷰를 하였다. 미국 행정부가 동맹 파트너로서 독일문제에 대한 서독정부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향

⁵³ 통일 관련 런던 및 파리회담에 대한 겐서 외무장관의 회상(문서번호 98).

⁵⁴ 동독 이탈주민과 독일통일에 대한 프랑스 보수파의 입장-파리 주재 서독 대사의 보고(문서번호 71).

⁵⁵ 기민당/기사당 연합 국방정책 실무단의 1989년 4월 10-14일 중의 워싱턴 방문. 미국 대통령의 독일문제 자문 로버트 블랙윌(Robert Blackwill)을 통한 독일통일 문제에 대한 미국정부 정책의 현황 파악-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보고(문서번호 30).

후 10년 후에 독일의 지위가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렇지만 프랑스 보수파와는 달리 부시 대통령은 그러한 변화를 ‘의도적으로 너무 재촉해서는 안되며’ 그것이 또한 ‘중립주의로 빠져드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으면서, 서독이 서방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그리고 베이커 국무장관은 독일문제와 관련한 10월 26일의 인터뷰에서 ‘통일’이라는 표현 대신에 ‘자결 원칙에 의거한 화해(reconciliation in self-determination)’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원상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를 애초에 제거하려고 하였다.⁵⁶ 미국이 이렇게 서독의 정책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이유는 물론 냉전의 종식 이후 유럽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이었다.

소련의 경우 독일이 급속히 통일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이 1989년 11월 28일에 외무부 본부로 보낸 보고서에서 고르바초프가 영국과 프랑스 등 다른 서방 국가들이 이미 독일통일에 유보적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독일통일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태도를 확실히 표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것처럼, 소련은 독일통일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이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고르바초프는 1989년 6월의 서독 공식방문에서 아주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고, 서독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큰 희망을 갖고 있었다.⁵⁷ 그러나 세바르드나 제 외무장관은 9월 27일 뉴욕 유엔 총회에서 만난 겐서 장관에게 고르바초프가 콜 수상이 9월 11일에 열린 서독 기민당 전당대회에서 히틀러와 소련 지도부에게 동일하게 제2차 세계대전의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산주의가 곧 붕괴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독일통일이 ‘손에 잡을 수 있을 정도

⁵⁶ 변화하는 바르샤바조약기구: 이념적 전투동맹으로부터 유럽 안보를 위한 새로운 기능-연방외무부 213과 분석(문서번호 87).

⁵⁷ 몰타 정상회담 이전의 소련의 서방정책-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의 보고(문서번호 95).



로 아주 가깝게 왔다’고 하면서 통일을 정치적 현안의 목표로 세운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고 전달하였다.⁵⁸ 그는 1989년 10월에 동독에서 호네커가 물러나고 에곤 크렌츠가 들어섰을 때에 동독에서도 폴란드나 헝가리에서와 같은 개혁정책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여전히 동독과 서독 두 개의 독일국가가 향후 몇십 년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가 1989년 여름에 이미 동독 주둔 소련군에게 당시 동독사회 내부의 변화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 결과적으로 1989년 가을 동독에서 평화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다. 만일 소련군이 10월 이후 동독의 대규모 시위 진압에 개입했다면 그 후 동독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서독의 겐서 외무장관이 소련의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소련 측의 ‘사려 깊고 책임감 있는 대처’에 감사인사를 전했던 것이다.⁵⁹ 당시 소련은 동독 내 대규모 대중운동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 특히 붓물처럼 터진 통일요구로 인해 유럽의 발전이 방해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다. 소련의 이러한 우려를 씻어 주기 위해 부시 대통령과 콜 수상이 직접 고르바초프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텔치이 회고록에서 쓰고 있다.

사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부터 11월 말까지 동독의 변화가 국제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아직 아무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서독의 콜 수상이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펼치기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적어도 11월에는 그것을 드러내 놓고 추진하지는 않았다. 11월 15일에 겐서 외무장관이 영국의 외무장관을 만났을 때에도 겐서 장관은 동독주민들이 내적 개혁과 자유총선거를 요구했지 서독과의 관계를 개혁하라고 외치

⁵⁸ 겐서 외무장관과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뉴욕 회담(문서번호 74).

⁵⁹ 서독 외무장관 겐서와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의 전화통화-외무부 외무장관실 보고(문서번호 88).

는 것이 아니며, 자유총선거가 실시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변화하리라고 기대하기 거의 어렵다고 설명하였다.⁶⁰

1989년 11월 17일에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가 동독과 서독이 ‘계약 공동체’를 구축하여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키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1989년 11년 28일 헬무트 콜 수상은 독일통일을 위한 10개항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와 함께 모드로우 총리가 이야기한 계약공동체 방안은 적어도 독일 내에서는 미래의 독일국가 형태에 대한 논의의 대상에서 곧바로 제외되었다. 그러나 콜 수상의 10개항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은 1989년 11월 18일의 파리 유럽공동체 국가 및 정부수반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콜 수상이 28일에 발표를 한 것에 의아함을 표시하였다. 11월 29일에 런던을 방문한 겐서 장관에게 대처 수상은 동유럽에서의 변화는 가능한 한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외의 문제들은 가능한 한 기존의 틀을 있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⁶¹ 11월 30일에 겐서 장관을 만난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콜 수상의 10개항 계획 발표와 관련하여 독일통일이 급속히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유럽통합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1913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8천만 명의 독일인을 아우르게 될 독일통일은 유럽통합의 틀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 여전히 그의 생각이었다.⁶²

콜 수상의 10개항 계획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반응은 대처 수상과 미테랑 대통령의 반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비판적이었다. 그는 12월 5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겐서 장관에게 무엇보다 콜 수상이 소련과 아무런

.....

⁶⁰ 서독-영국 외무장관 회의-연방외무부 장관실 보고(문서번호 90).

⁶¹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대처 영국 수상의 런던에서의 대화(문서번호 97).

⁶²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파리에서의 회담(문서번호 100).

의사교환이 없이 이 계획을 발표한 것을 항의하면서, 10개항 계획 중에서 특히 동독의 민주화를 전제조건으로 언급한 제3항은 마치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처럼 들리며 유럽통합의 틀 속에서 독일문제를 다룬다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⁶³ 모스크바 공항으로 배웅 나온 세바르드나제는 겐셔에게 고르바초프의 심각한 반응이 의도적인 것이었으며, 동독에 진주 중인 소련군들이 동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염려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독이 주의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콜 수상의 10개항 계획 발표 이후 모스크바에서는 겐셔 외무장관을 초청하는 것조차도 논란이 되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지만 겐셔 장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12월 5일의 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고르바초프의 의견을 콜 수상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기를 재차 부탁하였다.⁶⁴

이와 관련하여 헬무트 콜과 고르바초프은 한 차례 서신을 주고 받았다. 12월 14일에 작성된 서신에서 헬무트 콜 수상은 서독이 기존의 소련과의 조약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양국 간의 경제적인 협력도 진전시킬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현재의 변화가 유럽 내 불안정화를 가져와서는 안될 것이라는 소련 측의 견해에 동의하였다. 동독의 불안정한 상황은 동독 지도부가 개혁을 거부하기 때문으로, 이로부터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독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모르고, 그러한 변화에 반응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서 변화를 유도해 혼란스러운 상황을 방지하고 전 유럽적 구도 내에서 발전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10개항 조항을 발표하였다고 설명하였다.⁶⁵ 이 서신보다 먼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고르바초프가 콜

⁶³ 모스크바에서의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대화-연방 수상 헬무트 콜의 10개항 계획에 대한 소련 측의 비판(문서번호 106).

⁶⁴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모스크바 공항에서의 대화(문서번호 110).

⁶⁵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에 대한 연방 수상 헬무트 콜의 서신-독일정책의 목표(문서번호 125).

수상에게 보내는 서신은 12월 18일에 서독 연방정부 수상청에 전달되었다. 이 서신에서 고르바초프는 콜 수상의 10개항 계획이 ‘최후통첩’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헬싱키협정 최종문서나 1989년 6월 13일에 발표한 독소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것이 무엇보다 동독 내 변혁에 부채질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폭발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서독이 앞으로 신중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기를 기대하며, 서독이 전후 국경을 준수할 것이며 자신만의 이익보다는 동독의 내적 안정을 바란다는 겐서 외무부장관의 발언들을 중시한다고 적었다.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1989년 12월에 동독을 공식 방문하여 독일 문제에 대한 동독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표명하면서 독일문제를 유럽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만 한다는 자신의 관점을 다시 강조하였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1913년의 상황’이 유럽에서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⁶⁶

반면에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콜 수상이 10개항 계획을 발표한 것이 국제정치적으로 큰 모험이라는 것을 곧바로 인지하고 11월 29일에 콜 수상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⁶⁷ 미국은 1989년 12월 2일과 3일 말타에서 열린 미소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입장을 분명히 알렸다. 이 회의의 주요 논제는 미소 양국 간의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었고, 거기에는 당연히 독일문제가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 이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독일문제를 전승 4개국 간의 회의에서 다루는 것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유럽의 새로운 질서를 파트너 간의 협력을 통해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⁶⁶ 만프레드 게어라흐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동베를린 회담(문서번호 129), 사통당-민사당(SED-PDS) 당 대표 기지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동베를린 회담-동독 외무부 국제부 보고(문서번호 131), 외교문제에 대한 모드로우 동독 내각회의 의장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동베를린 회담(문서번호 132),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게어라흐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 및 모드로우 동독 총리의 동베를린 회담(문서번호 134).

⁶⁷ Philip D. Zelikow/Condoleezza Rice(1995), *Germany Unified and Europe Transformed: A Study in Statecraft*, Cambridge Mass.(Harvard University Press), pp.123-124.

반면에 고르바초프는 두 개의 독일국가는 역사의 산물이며 그것을 성급하게 인위적으로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독일문제를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회담에서 미국 대표단은 소련이 독일통일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10월 3일 브뤼셀에서 미국과 서독 양국의 정상이 만찬을 갖는 자리에서 전달해 주었다.⁶⁸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소련, 영국, 프랑스 등 전승 4개국이 독일의 통일에 대해 각자 상이한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독일문제’에 관해 논의가 시작되었다. 1989년 11월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서 독일문제와 관련하여 전승 4개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겐서 장관은 어떤 경우라도 독일이 홀대받는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었다.⁶⁹ 그러나 소련은 독일문제와 관련하여 전승 4개국의 권한이 여전히 유효함을 과시하기 위해 12월 8일에 서독 주재 전승 4개국 대사의 회의를 제안하였다. 이 회의는 12월 12일에 1945년에서 1948년까지 연합국 통제위원회 회의 회의가 열렸던 상징적인 장소에서 개최되었다.⁷⁰

서독 주재 전승 4개국 대사회의를 보는 서독의 여론은 아주 부정적이었고, 이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 모두 승자로 군림하려고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1971년에 전승 4개국이 베를린협정을 체결한 이래 18년 만에 다시 전승 4개국 대사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서독 연방정부가 막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회의를 계기로 서독은 다시는 독일이 배제된 채 독일문제에 관한 회의가 열리는 것을 수용할 수 없으며, 앞으로 독일문제에 관한 모든 협상에 독일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했다. 겐서 외

⁶⁸ Philip D. Zelikow/Condoleezza Rice(1995), pp.131-132.

⁶⁹ 워싱턴에서 열린 겐서 외무장관과 미국 안보자문 브렌트 스코우크로프트 간의 회의(문서번호 92).

⁷⁰ 베를린 연합국 통제위원회 건물에서 열린 독일 주재 전승 4개국 대사 회담-서독 외무부 정치국(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보고(문서번호 118).

무장관은 그것을 12월 13일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회의 중에 서방 진영의 전승 3개국 외무장관과 겐서 서독 외무장관의 회의에서 분명히 밝혔다.⁷¹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서독의 민주주의가 마치 히틀러의 후계자인 것처럼 다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콜 수상이 11월 28일에 10개항 계획을 발표하고 2주일이 지났을 때 이미 향후 독일문제와 관련된 외교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적 윤곽이 드러났다. 그것은 독일에 대해 전승 4개국이 갖는 권한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동시에 두 개의 독일을 협상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국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독일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서 서독은 서방 진영의 국가들과 동시에 소련과도 협력했어야만 했다. 물론 워싱턴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했지만 워싱턴 한쪽만의 지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제2절 2+4협상을 위한 결정

1989-1990년 겨울에는 독일통일이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 누군가 그것을 막으려면 엄청난 국제적 위기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승 4개국도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협상의 틀을 찾아야만 했다. 1989년 11월만 해도 독일통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10년 또는 적어도 4-5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서독의 헬무트 콜 수상은 이제 1년에서 2년 사이에 통일이 실현될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동독 내부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89년 12월 7일에 처음으로 동독의 저항개혁운동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정부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을 결정하는 데 동참할 권리를 주장

⁷¹ 서방 측 4개국 외무장관급 브뤼셀 정찬 회동-외무부 외무장관실 보고(문서번호 124).



하였다. 1990년 1월에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하는 사람의 수가 6만 명에 달했고, 라이프치히와 다른 동독 도시들에서는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이 시위를 주도하였다. 그것은 통일을 신속히 실현하기를 요구하는 목소리였다.

이 시기에 부시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미국이 원칙적으로 통일을 위한 서독정부의 노력과 독일의 자기 결정권을 지지한다는 점과 함께 통일된 독일은 나토 회원국으로, 서구동맹에 남아야 한다는 것을 서독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⁷² 반면에 1990년 초에 소련은 발트해 연안 민족들의 분리독립 운동과 아자바이잔과 조르지아지역에서의 민족갈등 그리고 더욱 열악해진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동독이 겪는 것만큼이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⁷³

고르바초프는 1990년 1월 26일에 소련정부의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독일 문제에 관한 소련의 입장을 정했다. 이때는 내적 붕괴로 인해 동독의 주권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 참가자들은 독일의 통일에 소련이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며, 독일통일에 대한 외교협상을 시작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협상을 통해서 독일통일 과정의 속도를 늦추고 소련이 동독이라는 동맹국을 포기하는 최대의 대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시각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소련이 통일된 독일이 나토에 잔류하는 것을 거부하며 그 대신 중립국화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소련군뿐만 아니라 핵무장한 모든 외국군대가 독일영토에서 철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요구하기로 하였다. 이 결정을 통해 소련도 독일문제에 대한

⁷² 독일문제와 관련한 미국 측의 이해관계-워싱턴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문서번호 139).

⁷³ 소련의 독일문제 관련 입장-연방 외무장관 겐서에 대한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의 보고안 (문서번호 138).

공식적인 입장이 세워졌다.⁷⁴ 이 회의 후에 고르바초프는 소련이 독일의 자결권을 인정하며 통일에 관한 것도 독일인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언론에 밝혔다. 그것은 1월 30일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가 모스크바를 방문하기 직전이었다.

1990년 2월 2일 고르바초프가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독일문제에 대한 외교적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하였을 때 미국은 이미 그런 논의에 대해 잘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외교사가들은 독일통일 과정에서 소련이 통일로 가는 길을 열었지만 그 가는 길을 외교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은 워싱턴에서 구상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고르바초프가 부시에게 독일문제에 관한 외교협상을 제안한 지 열흘 후인 2월 13일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 열린 회담에서 두 독일국가의 외무부장관들 그리고 나머지 4개 전승국의 외무부장관들은 독일통일의 대외적 측면 및 근린 국가들의 안전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4회담을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⁷⁵ 여기에서 2+4회담의 틀에서 개최될 정치국 국장들 간의 실무자급 회담은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고 인민회의 선거 이전에 시작하지만, 외무장관 회담은 동독에서 새로운 개혁정부가 구성된 이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1990년 초에 서독 연방정부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구성한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산하에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그룹이 만들어졌고, 2월 19일에 그 첫 회의가 열렸다. 실무그룹의 회의에서는 동독이 서독과 통일하는 방식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⁷⁶ 그것은 독일통일이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 독일통일은 이미 내적, 외적으로 기정사실이 되었던 것이다.

.....

⁷⁴ 이에 대한 서독 외무부의 분석은 ‘독일문제에 대한 소련의 입장-고르바초프 총서기장과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발언-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의 보고(문서번호 150)’ 참조.

⁷⁵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3개국 서방 측 외무장관들 및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의 오타와 공동 회담(문서번호 159).

⁷⁶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산하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본(Bonn) 설립 회의(문서번호 166) 및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산하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2차 회의(문서번호 167).

동독 외무부의 해체

독일통일이 가시화되면서 동독과 서독 정부기구와 조직의 통합에 관한 문제가 당연히 발생했다. 더욱이 외무부의 경우 각국에 파견되어 있는 해외공관의 인력과 재산 그리고 외국과 체결한 계약의 문제까지 함께 처리해야만 했다. 이러한 과제는 통일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던 수많은 국제회의와 병행해서 외무부의 행정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만 하는 과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외무부에 보관된 통일 관련 문서에는 이러한 행정절차에 관련된 조치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제1절 동독 외무부의 조직과 인력

독일통일이 가시화되던 1990년 2월 15일에 서독 주재 동독대표부가 작성한 동독 외무부의 인적상황에 따르면 당시 동독 외무부 본부에 2,000명에서 2,500명, 그리고 해외공관에 약 5,00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1990년 초에 이미 동독 외무부는 인원 감축을 시작하였고, 본에 주재한 동독 외교관의 인원도 감축하였다. 동독 외교관은 고위직 외교관만 포츠담-바벨스베르크에 소재한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았을 뿐 그 외의 대부분은 대학에서 외국어를 전공한 사람들로 충원되었다. 동독에는 국가공무원제도가 존재하

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평생고용을 보장받는 서독의 외교관과 달리 일반직으로 고용되었다.⁷⁷

1990년 3월 18일 선거를 통해 구성된 개혁정부의 외무장관 마쿠스 메켈은 외무부의 조직과 구조를 개편하고자 하였다. 먼저 동베를린의 외무부 본부 내의 조직과 구조를 개편하고 난 후에 해외공관을 개편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메켈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구체제의 외무부에서 근무했던 직원을 대규모 해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5월 당시 동독 외무부에 근무하는 총 인원이 3,000명이고, 그중에서 1,300명이 해외공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된 것을 보면 1990년 2월과 5월 사이에 이미 많은 인원이 동독 외무부를 떠난 것을 알 수 있다. 마쿠스 메켈 외무장관은 구체제의 외무부에서 고급 관료였던 국장급 인사들을 인사과정에서 모두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서독 외무부에서 동독 외무부에 자문을 위해 파견되었던 공무원은 메켈이 구체제의 외무부 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 같다고 서독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메켈 장관이 구체제에서 이미 고급 관료로 유명했던 두 사람을 국장으로 임명한 것을 보면 일단은 구체제의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동시에 메켈 장관과 차관들은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려는 의욕에 가득차 있으며, 서독 외무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독 외무부가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였다. 화폐통합에 관한 조약의 체결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서독 외무부로부터 파견된 공무원은 메켈 외무장관이 동독 외무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의아하게 보았다. 그는 그 이유가 동독 사민당 당수였던 메켈 장관이 서독 외무부의 자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서독의 정당과 정치재단

.....
⁷⁷ 동독 외무부 업무의 인적 상황-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담당) 210과 보고(문서번호 164).

그리고 학계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⁷⁸ 당시 동독의 개혁정부는 기민당과 사민당의 연립정부로 구성되어 있었고, 기민당의 드메지에르가 총리직을 그리고 사민당의 당수 메켈이 외무장관을 맡았고, 그들이 동독정부 대표로 2+4회담에 참여하게 되었다. 외무장관과 두 명의 외무차관들이 동독 외무부의 새로운 대표로서 자신들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의욕이 가득차 있기 때문에 서독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들이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불평이 묻어나는 서독 파견공무원의 보고서는 1990년 5월 당시 동독 외무부의 복잡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동독 개혁정부의 외무장관이 2+4회담에서 다른 5명의 외무장관과 함께 협상테이블에 앉은 것과 상관없이 동독과 서독 간의 제1차 국가조약, 즉 화폐와 경제통합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1990년 5월부터 양국 간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 외무부 차원에서도 연락위원회가 구성되어서 6월 1일에 그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군비 통제 및 군축; 유엔; 유럽공동체 및 경제문제; 남북문제; 외국 문화정책(공공 문화 외교); 법무 및 영사문제; 행정적 문제 등을 담당할 각각의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서독의 전문 및 정치·문화 업무 자료를 동독의 해외공관에 계도 개방하기로 했다. 또 동독의 해외공관들은 서독의 해외공관에 동독 공보서비스(PID)의 정보 및 ‘외교정책 통문(Außenpolitische Korrespondenz)’의 내용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⁷⁹ 그때부터 동독과 서독의 해외공관이 외형상으로는 협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독 해외공관을 정리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각국의 동독대사관 대표들이 동일한 지역의 서독의 대사관에 협력을 요청하였다는 보고를 보면 대부분 공관 건물을 비롯한 부동산과 관련된 문

⁷⁸ 서독 외무부와 (새로운 인원이 배치된) 동독 외무부 간의 인적 협력 및 자문-1990년 5월 11일 동베를린에서 열린 첫 대화-서독 외무부 101과 보고(문서번호 251).

⁷⁹ 통일 전까지 외교정책의 상호 보고, 자문 및 협의를 내용으로 동·서독 외국대표부에 전달된 지시-서독 외무부차관 주트호프(문서번호 262).

제와 인력문제 그리고 해당 국가들과 체결된 조약과 관련된 문제들이었다.⁸⁰

동독 외무부는 1990년 5월부터 대사급 외교관을 본부로 소환하고 대사관을 폐쇄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⁸¹ 8월 23일에 동독 외무부는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의 일원으로 공식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10월 3일까지 동독의 주유엔 대표부 및 파견단과 외국의 해외대표부들, 23개국 또는 35개국 간 협상 파견단 그리고 비엔나의 헬싱키협정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등의 활동을 중지하는 방식과 현지에 배치된 인력을 단계적으로 송환하는 방식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에 따르면 동독과 서독이 공동으로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동독영토에 10월 3일부터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이 적용되며 종전의 동·서독 양국의 회원국의 지위가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는 내용 및 그와 관련된 다른 사항들이 포함된 공동서한을 먼저 전달하고, 그것이 공식문서로 유엔 총회에서 회람될 것이라고 하였다. 1990년 9월 30일까지 동독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동독 대사나 동독 대표를 통해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에 대해 통지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베를린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와 대표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문서가 전달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1990년 8월 30일까지 6개 대사관과 3개 총영사관이 폐쇄되고, 다른 9개 대사관의 폐쇄 및 해당 대사 및 대사관 인력의 귀국조치가 9월 초까지 이루어지며, 이어 다른 10개국 대사가 귀국조치되고, 9월 초까지 모든 해외공관의 인력이 약 60% 정도로 감축되게 된다고 하였다. 그것은 1990년 8월 현재 약 880명에 해당하며, 그중 320명은 외교적 인원, 나머지 560명은 비외교적 인원이고, 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원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

⁸⁰ 예를 들어 파리 주재 동·서독대사관 간의 협력-파리 주재 서독대사관의 보고(문서번호 263), 워싱턴 주재 동독대사관의 지원 요청에 대한 워싱턴 주재 서독대사관의 보고(문서번호 270), 2+4조약 내 국제법적 규정들과 관련한 동독 측의 '쟁점 리스트'-서독 외무부 정치국에 대한 동독 외무부 기획실의 전문(문서번호 271), 폴란드 내 동독기관들의 미래-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의 지시 요청(문서번호 291).

⁸¹ 동독의 외교적 대표 업무의 중단 및 대사관 및 영사관의 폐쇄-동독 외무부 2국 현황 보고(문서번호 292).

동독 외무부가 이 문서를 작성한 것과 같은 날인 8월 23일에 서독 외무부에서도 독일통일과 함께 이루어질 동독 외무부의 해체 절차에 관한 지시를 위한 초안이 만들어졌다.⁸² 그에 따르면 동독은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더 이상 독립적인 국제법적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동독 외무부와 동독의 해외공관들은 늦어도 10월 3일까지 폐쇄된다. 통일된 독일의 외교적 대표권은 통일조약과 기본법에 따라 서독 외무부가 담당하게 되며, 동독 외무부의 해체작업을 총괄하게 될 행정관리 및 청산기구(Verwaltungs- und Abwicklungsstelle)가 설립되어 10월 3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동독 외교부 직원의 지위와 관련된 것은 통일조약에 따라 그들이 서독의 부서에 계속 고용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발령’하며, 해외 근무자들의 경우에는 더 긴 기간 동안 대기발령을 한다고 하였다. 현지 고용직원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고를 통지하기로 하였다. 서독 외무부는 나아가 독일연방공화국 가입과 함께 동독과 해당국 간에 존재했던 외교적·영사적 관계가 소멸하지만, 영사문제와 관련하여 동독이 발행한 여권 및 여행 신분증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것 또한 각국에 통지해야 하며⁸³, 이제까지 동·서독 양국과 외교적·영사적 관계를 유지했던 국가 중 자신의 동독 내 시설을 폐쇄하지 않기를 원하는 국가는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조약 12조에 따라 동베를린의 종전 대표부를 본(Bonn) 소재 대사관에 속한 사무소로 사용하거나 동베를린 대표부의 기능을 영사 대표부로 변경하는

⁸² 동독 외무부 해체 및 동독 해외대표부 및 다른 외국기관의 청산-서독 외무부 (조직 운영 담당) 110과 보고안(문서번호 293).

⁸³ 동독 외무부 해체 및 동독 해외대표부 및 다른 외국기관의 청산-서독 외무부 (조직 운영 담당) 110과 보고안(문서번호 293), 동독 및 서베를린 주재 외국 대사관들의 지위에 대한 독일통일의 영향-외교·영사 대표부들과 서독 외무부 내 각 부서에 보낸 서독 외무부 701과의 통문(문서번호 296). 영사문제는 특히 외국에 거주하는 동독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가 보낸 전문을 보면 1990년 당시 모스크바에 거주하던 동독인이 약 11,000명이었다. 통일 시점의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소련 내 외교적 대표권한의 이전 과정-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의 보고(문서번호 274).

것 중에 택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⁸⁴

겐서 서독 외무장관은 10월 2일에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에게 그때까지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의 대표였던 베어틀레 차관을 베를린 소재 행정관리 및 청산사무소의 소장으로 임명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나아가 통일조약에 근거하여 동독 외무부에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 적합한 사람은 통일된 외무부로 인수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당시 외무부의 고급 공무원 선발 과정에 100명이 넘는 동독 외무부 출신이 지원하였다고 하였다. 베어틀레 소장은 선발과정을 통과한 사람의 배치 및 직업전환교육도 담당하게 된다고 전하였다.⁸⁵ 그러나 겐서 장관의 설명과는 달리 실제로 통일된 독일의 외무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수된 동독 외교부 직원은 60명 정도였고, 그중에서 적어도 50명은 기사, 관리인, 비서 등 외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하위직 직원들이었다. 외교관 중에 인수된 것으로 알려진 수는 9명이었다. 그중에는 현재 독일 외무차관인 슈테판 슈타인라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1990년 7월에 마쿠스 메켈에 의해 파리 주재 동독대사로 임명되었다가, 통일 후에 정식 외교관으로 다시 선발되어 3년의 연수과정을 거쳐 독일 외무부의 정식 외교관이 된 경우이다. 그런 경우도 통일 이후 외무부로 인수된 동독 외무부 직원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동독 직업외교관연맹에서 통일 후에 동독 외교관 중에 인수된 사람은 실제로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완전히 허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동독 출신 직업외교관들이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 업무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 그리고 특히 동유럽에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살려서 통일된 독일의 외교와 국제관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⁸⁶ 그러나 동독의 외교관은 일반적으로

.....

⁸⁴ 동독 및 서베를린 주재 외국 대사관들의 지위에 대한 독일통일의 영향-외교·영사 대표부들과 서독 외무부 내 각 부서에 보낸 서독 외무부 701과의 통문(문서번호 296).

⁸⁵ (통독) 외무부에서 동독 외무부 직원들의 계속고용 문제-겐서 외무장관의 동독 드 메지에르 총리에 대한 서한(문서번호 301).

⁸⁶ 동독 외무부 인사에 대한 질의-동독 직업외교관연맹의 입장(문서번호 298).

지배조직의 일원으로 분류되었고, 그렇게 분류된 그룹의 사람들이 통일된 독일의 국가조직으로 인수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참고로 동독 직업외교관연맹이 작성한 리스트에는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인원이 11명, 그중에서 7명이 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고급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현재 독일 외무부 내에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교관의 수보다 많은 것이다. 그것은 당시 동독과 북한과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제2절 동독 외무부의 해외공관과 해외 재산의 처리

동독 직업외교관연맹은 통일 이후 독일 외무부가 동독 출신 직업외교관은 한 명도 인수하지 않았으면서 동독 외무부가 소유했던 재산은 마이쨌 도자기까지 모두 인수했다고 비난한다.⁸⁷ 동독 외무부가 보유했던 부동산과 동산의 인수 또는 채무와 관련된 문제는 통일 이후 동독의 해외공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전파되는 많은 정보들이 선입견과 편견에 기초한 것이 적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동독이 해외에 보유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90년 6월 22일과 7월 13일에 양국의 법률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주로 동독의 재정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위한 대책이 논의되었다. 동경의 동독대사관 건물 소유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문제, 재정문제로 인해 워싱턴의 동독대사관의 신축을 중지한 것 그리고 열악한 외교관 주택상황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헬싱키의 동독대사관과 같이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

⁸⁷ Pfeiffer, Otto: "Nur das Meißner Porzellan. Das Auswärtige Amt übernahm keine DDR-Diplomaten", in: "epd-Entwicklungspolitik", Heft 6/7-1997.

어서 통일 이후 독일대사관으로 사용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었다. 나아가 동독의 해외공관 건물 중에 통일 이후 대사관 건물이나 문화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지답사를 추진하고, 동독이 임대했던 건물은 임대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⁸⁸ 그리고 동독의 해외공관 중에서 통일독일의 공관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민스크, 단치히, 브레슬라우, 슈테틴, 호치민시(사이공시) 그리고 정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고려하는 경우 동독의 해외공관을 폐쇄하지 않았기로 했다.⁸⁹

동독의 해외 청구권과 관련하여 동독과 채무국 간의 조약에 정해진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에 대한 관리는 1990년 10월 3일 이후부터 독일 연방정부의 재무장관에게 위임되었다.⁹⁰ 모스크바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동독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경우 개별적으로 결정되었다. 동독에서 무역사업도 국가가 주관하였기 때문에 모스크바의 경우처럼 통일 이후에 동독국가에 담당하던 업무를 인수받은 민간단체가 동독이 해외에서 보유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에는 소련이 동독에 보유한 광대한 토지이용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해결하기도 했다.⁹¹

제3절 동독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

동독이 독립적인 국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서 동독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약의 처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서독 외무부에서는 1990년 4월 12일에 이미 독일통일 이후 국제법적 조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독일조약과 전환협

.....

⁸⁸ 동독의 해외 토지에 대한 동·서독 간 전문가 회담-서독 외무부 111과 보고(문서번호 268).

⁸⁹ 동독의 해외 기관 접수를 통한 새로운 서독 해외대표부 설립-서독 외무부 111과 보고(문서번호 279).

⁹⁰ 동독의 해외 청구권 청산-모든 서독 외국대표부에 보내는 서독 외무부 422과의 전문(문서번호 282).

⁹¹ 모스크바 소재 동독 토지의 인수 및 사용-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에 보내는 서독 외무부 (해외대표부 대지 및 시설 관리 담당) 111과의 전문(문서번호 283).



정을 포함하여 서독이 전승 3개국과 서명한 조약들과 함께 군사적 조약들도 논의하였다. 1954년에 체결된 외국군대의 서독 주둔에 대한 조약, 나토조약, 브뤼셀조약, 나토군 지위협정 및 나토군 지위 추가협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 외 런던채무협정과 유럽경제공동체조약 및 유럽원자력공동체조약 등이 논의되었다. 인권에 대한 조약들 중에서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및 그 추가 협약에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정도만 기술되었다. 동독이 체결한 조약의 경우 양자 간 협정과 다자간 협정 모두 독일통일과 함께 조약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기본 방침이 세워졌다. 그런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적었던 이유는 대부분의 조약에 독일이 통일되면 다시 협상한다는 유보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동구권 국가들 간의 다자간 협약인 경제상호원조회의, 즉 코메콘협약의 경우 통일과 함께 동독에 대한 구속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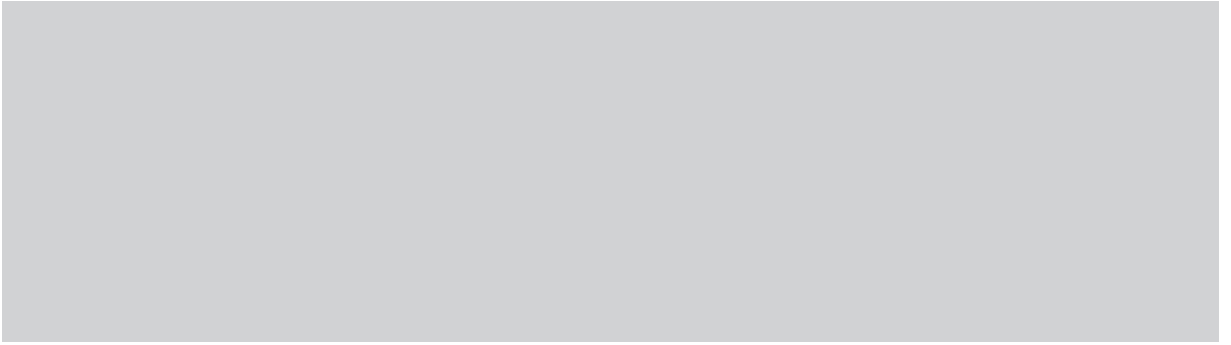
⁹² 독일통일 달성 시 국제법 조약들의 변경(문서번호 226), 독일통일 그리고 동독의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그룹 이탈의 영향-서독 외무부 (유럽공동체, 대외 관계, 유럽자유무역지대, 공동 무역정책, GATT 등 담당) 411과 중간보고(문서번호 183).

나가며

독일통일 과정에서 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외교가 단순히 파워 게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축된 신뢰관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자주 간과되고 있다. 독일통일 과정의 외교문서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수많은 민감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이미 구축된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와 함께 우리가 주목할 것은 1989년 여름 ‘대사관 난민 위기’로 불리는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드러나는 객관적인 힘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적어도 겉으로는 체면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힘의 우위를 보유한 상황에서 열세에 놓인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어떠한 강제적인 힘을 동원하지 않는 것이 고도로 발전된 외교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989년과 1990년 당시 서독의 외교는 바로 그런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1989년 11월 28일 헬무트 콜 수상이 발표한 10개항 계획의 3항에 ‘동독이 민주화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붙여서 소련 고르바초프의 분노를 샀던 것은 외교기술의 관점에서 실수였다고 하기보다는 정치에서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적인 ‘한 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통일로 가는 길에서 서독 연방정부는 외교에서 신뢰와 배려 그리고 적극적인 공격의 다양한 요소를 적절하게 배합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성취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통일은 성공적인 외교를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을 동원하면서 그것을 적재적소에 배

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외교관과 정치인의 존재가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였다고 할 것이다.

외교 분야 I
관련 정책문서



외교 분야 I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	베를린에서 열린 3개국 정상회의 보고서-포츠담협정	1945년 8월 2일	스틸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 트루만 미국 대통령, 처칠 영국 수상	Dokumentarchiv.de: http://www.documentarchiv.de/in/1945/potsdamer-abkommen.html (Stand 21.12.2015)
2	소련과 폴란드 간 국경조약	1945년 8월 16일	소련 최고지도자, 폴란드공화국 국민의회	Kraus, Herbert/Heinze, Kurt, Hrsg. 1953, Völkerrechtliche Urkunden zur europäischen Friedensordnung seit 1945, Bonn: Schimmelbusch & Co.
3	독일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소련 측 보고	1952년 3월 10일	소련정부, 미국정부, 영국정부, 프랑스정부	Prawda vom 11.03.1952(deutsche Übersetzung im Europa-Archiv, 1952, 7. Folge, S. 4832-4833)
4	서독과 서방 진승 3개국 간의 관계에 대한 조약(독일조약)	1952년 5월 26일	서독 연방정부 수상(1949-1963년 재임) 겸 연방 외무장관(1951-1955년 재임) 아데나워, 영국 외무장관 이든,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 프랑스 외무장관 슈만	Bundesgesetzblatt, Teil II, 1954, Nr. 3, 29.03.1954, S. 57-67
5	베를린에 대한 원조와 관련한 서독의 성명	1952년 5월 26일	서독 연방 수상(1949-1963년 재임) 겸 연방 외무장관 (1951-1955년 재임) 아데나워	Bundesgesetzblatt, Teil II, 1954, Nr. 3, 29.03.1954, S. 68-69
6	서독과 서방 진승 3개국 간의 중재법원 규약	1952년 5월 26일	서독정부, 영국정부, 미국정부, 프랑스정부	Bundesgesetzblatt, Teil II, 1954, Nr. 3, 29.03.1954, S. 69-77
7	서독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한 조약	1952년 5월 26일	서독 연방 수상(1949-1963년 재임) 겸 연방 외무장관(1951-1955년 재임) 아데나워, 영국 외무장관 이든,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 프랑스 외무장관 슈만	Bundesgesetzblatt, Teil II, 1954, Nr. 3, 29.03.1954, S. 78-127
8	서독과 서방 진승 3개국 간의 재무협정	1952년 5월 26일	서독 연방 수상(1949-1963년 재임) 겸 연방 외무장관(1951-1955년 재임) 아데나워, 영국 외무장관 이든,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 프랑스 외무장관 슈만	Bundesgesetzblatt, Teil II, 1954, Nr. 3, 29.03.1954, S. 135-153
9	전쟁과 점령에서 기인하는 문제들의 규율에 관한 협정(진화협정)	1952년 5월 26일	서독 연방 수상(1949-1963년 재임) 겸 연방 외무장관(1951-1955년 재임) 아데나워, 영국 외무장관 이든,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 프랑스 외무장관 슈만	Bundesgesetzblatt, Teil II, 1954, Nr. 3, 29.03.1954, S. 157-230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0	연방 수상 앞으로 보내는 진승국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3인의 베를린에 대한 서신	1952년 5월 26일	미국 주독일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맥클로이; 프랑스 주독일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프랑수아-퐁세; 영국 주독일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커크패트릭; 연방 수상 겸 연방 외무장관 아데나워	Bundesgesetzblatt, Teil II, 1954, Nr. 3, 29.03.1954, S. 242-243
11	자르지역과 관련한 연방 수상 아데나워의 서신	1952년 5월 26일	미국 주독일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맥클로이; 프랑스 주독일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프랑수아-퐁세; 영국 주독일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커크패트릭; 연방 수상 겸 연방 외무장관 아데나워	Bundesgesetzblatt, Teil II, 1954, Nr. 3, 29.03.1954, S. 307
12	연방 수상 앞으로 보내는 진승국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3인의 자르지역에 대한 서신	1952년 5월 26일	미국 주독일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맥클로이; 프랑스 주독일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프랑수아-퐁세; 영국 주독일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커크패트릭; 연방 수상 겸 연방 외무장관 아데나워	Bundesgesetzblatt, Teil II, 1954, Nr. 3, 29.03.1954, S. 308
13	동독의 주권에 대한 소련의 성명서	1954년 3월 25일	소련정부	Rauschnig, Dietrich, 1985, Rechtsstellung Deutschlands: völkerrechtliche Verträge und andere rechtsgestaltende Akte, München: Deutscher Taschenbuchverlag
14	런던 9개국 회담 최종문서	1954년 10월 3일	벨기에 외무장관 스팍; 연방 수상 겸 연방 외무장관 아데나워; 프랑스 총리 망데스-프랑스; 이탈리아 외무장관 마르티노; 캐나다 외무장관 피어슨; 룩셈부르크 정부 의장 베흐; 네델란드 외무장관 바이엔; 영국 외무장관 이든; 미국 국무장관 딜스	Bulletin des Presse- 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Nr. 188, 06.10.1954
15	서독에서 점령 통치를 종료하는 것에 대한 의정서	1954년 10월 23일	서독 연방 수상(1949-1963년 재임) 겸 연방 외무장관(1951-1955년 재임) 아데나워; 미국 국무장관 딜스; 영국 외무장관 이든; 프랑스 총리 망데스-프랑스	Bundesgesetzblatt, Teil II, 1955, Nr. 7, 25.03.1955, S. 213-217
16	평화협정에 대한 독일 연방의회 의장 인터뷰	1958년 3월 12일	기민당 소속 게이스텐마이어 독일 연방의회 의장	Der Spiegel, 1959, Heft 11, 12.03.1958, S. 16-25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7	접근을 통한 변화-에곤 바의 투쟁에서의 연설	1963년 7월 15일	에곤 바, 베를린 연방주 언론 · 매체청 청장 겸 베를린 연방주 정부 대변인	Archiv der sozialen Demokratie der Friedrich-Ebert-Stiftung, Depositem Egon Bahr; Deutschland Archiv, Heft 8/1973, S. 862-865
18	서베를린주민의 친척 방문 목적 통행증 발부에 대한 의정서	1963년 12월 17일	동독 문화부차관 에리히 벤트; 베를린 시정부 최고 위원(Senatsrat) 호어스트 코르버	Von Münch, Ingo. Hrsg. 1968. Dokumente des geteilten Deutschland. Stuttgart: Alfred Kröner Verlag
19	통행증 관련 질문들에 대한 성명서	1964년 9월 24일	(서)베를린 시정부	Stiftung Deutsches Historisches Museum, https://www.hdg.de/lemo/kapitel/geteiltes-deutschland-modernisierung/neue-ostpolitik/passierscheinabkommen.html
20	서독과 소련 간의 조약	1970년 8월 12일	독일 연방 수상 브란트; 독일 연방 부총리 겸 연방 외무장관 쉘; 소련 총리 알렉세이 코시긴; 소련 외무장관 그로미코	Bundesgesetzblatt, Teil II, 1972, Nr. 27, 24.05.1972, S. 353-355
21	서독과 폴란드 간의 국교정상화 조약	1970년 12월 7일	독일 연방 수상 브란트; 독일 연방 부총리 겸 연방 외무장관 쉘; 폴란드 취란키에비츠 총리; 폴란드 예드리쇼브스키 외무장관	Bundesgesetzblatt, Teil II, 1972, Nr. 27, 24.05.1972, S. 361-368
22	베를린에 대한 전승 4개국의 협정	1971년 9월 3일	서독 주재 프랑스 대사 소바나그; 동독 주재 소련 대사 아브라시보프; 서독 주재 영국 대사 재클링; 서독 주재 미국 대사 러쉬	http://www.verfassungen.de/de/de45-49/viermaechte71.htm
23	동서독 간 통행협정	1971년 12월 17일	동독 외무부 서독문제 담당 차관 콜 박사; 연방정부 특임 차관 에곤 바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I, 1972, Nr. 30, 03.06.1972, S. 349-354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4	‘베를린에 대한 전승 4개국의 협정을 둘러싼 독일 연방의회에서의 논쟁’	1972년 6월 7일	연방정부 수석 브란트; 기독교민주당 당 겸 기민당/기사당 연합 원내교섭단체 의장 겸 독일 연방의회 의원 바벨; 자민당 연방의장단 소속 독일 연방의회 의원 보름(동독 슈타지 비공식 요원); 사민당 연방의장단 소속 독일 연방의회 의원 외교위원회 의장 대리 마탁; 기민당 연방의장단 소속 독일 연방의회 의원 그라들	Deutscher Bundestag, 6. Wahlperiode, 188. Sitzung, Plenarprotokoll, S. 10966C-10975A
25	동독과 서독 간 관계의 기초에 대한 조약 (동·서독 기본조약)	1972년 12월 21일	동독 외무부 서독문제 담당 차관 클 박사; 연방 수상 직속 연방정부 특임 장관 에곤 바	Bundesgesetzblatt, Teil II, 1973, Nr. 25, 09.06.1973, S. 421-429
26	서독과 체코슬로바키아 간의 관계에 대한 조약	1973년 12월 11일	독일 연방 수상 브란트; 독일 연방 부총리 겸 연방 외무장관 쉘; 체코슬로바키아 총리 슈트로우갈; 체코슬로바키아 외무장관 호노우팩	Bundesgesetzblatt, Teil II, 1974, Nr. 40, 16.07.1974, S. 990-997
27	에리히 호네커의 서독 방문	1987년 9월 10일	연방 수상 콜; 독일 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 총 서기장 호네커	Bulletin des Presse- 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Nr. 83, S. 705-708
28	동·서독 외무장관 회담	1989년 1월 19일	한스 디트리히 겐서 서독 연방정부 외무장관, 오스카 피셔 동독 외무장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29	내독관계와 동독 내부의 상황-외무부 210과의 현황보고	1989년 3월 1일	서독 연방정부 외무부, 정치국, 210과(외교문제, 베를린과 독일문제 관련)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8 E
30	기민당/기사당 연합 국방정책 실무단의 1989년 4월 10-14일 중의 워싱턴 방문. 미국 대통령의 독일문제 자문 로버트 블랙윌(Robert Blackwill)을 통한 독일통일 문제에 대한 미군정부 정책의 현황 파악-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보고	1989년 4월 14일	외무부 소속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윌르겐 루푸스; 기민당/기사당 연합 국방정책 실무단; 미국 대통령의 독일통일 문제 자문위원 로버트 블랙윌(Robert Blackwill)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1 E
31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소련 외무장관 셰바르드나제 간의 본(Bonn) 회담(통역 기록)	1989년 6월 12일	연방 외무장관 겐서; 소련 외무장관 셰바르드나제; 외무부 105과(언어 담당)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2	서독과 소련의 공동 성명	1989년 6월 13일	연방 수상 헬무트 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독정부 및 소련정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7.130 E
33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소련 외무장관 셰바르드나제, 르드나제 간의 회담-본 근교 바흐트베르크-페히지역 개최(통역 기록)	1989년 6월 14일	연방 외무장관 겐서; 소련 외무장관 셰바르드나제; 외무부 105과(언어 담당); 통역관 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34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총서기장의 독일 공식방문 결과를 분석한 자료	1989년 6월 16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 외무부; 정치부 213(소련), 로이히스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7.130 E
35	자이더스 수상청장의 동베를린 방문-외무부 210과가 준비한 회담자료	1989년 6월 21일	외무부, 정책기획실, 연방수상청, 자이더스 수상청장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01 E
36	동독과의 준비통제회의-연방 외무부 223과의 보고서	1989년 6월 27일	연방 외무부, 정책기획실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01 E
37	베어틀레 상주대표가 수상청장에게 보낸 동독 내부 상황에 관한 보고서	1989년 6월 27일	수상청,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수상청장 자이더스	Bundesarchiv, BArch/B 288/124, 11 35005 Pa4 Band 11
38	폴란드 서부국경에 대한 폴란드 외무부 보고-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	1989년 6월 29일	폴란드 외무부, (소련 및 유럽 내 사회주의 국가 담당) 제1국장 마코사; 기민당 소속 독일 연방의회의원 블렌스; 바르샤바 주재 서독 대사 쉴러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6 E
39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총서기장의 독일 본(Bonn) 공식방문과 관련한 지문을 위한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 호네커의 소련 방문-겐서 외무장관 소속 외무부 210과 보고	1989년 6월 30일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 겸 독일 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호네커; 외무부 정책기획실 210과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담당); 과장 대리 헤를트; 겐서 외무장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13 E
40	겐서 외무장관과 게레메 교수 및 다른 폴란드 '연대' 자유노조 소속 대표들과의 대화-외무부 214과	1989년 7월 7일	겐서 외무장관; 폴란드 '연대' 자유노조(Solidarność) 및 지문 게레메 교수; 정부 파견단; 외무부; 외무부 214과(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담당) 과장 데릭스 박사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41	1989년 7월 7-8일 바르샤바조약의 가맹국 정당 대표 및 국가 수반들의 슈타 회담-최종 회담 선언문 기초 문안 (Punktation und Sprachregelung)	1989년 7월 8일	바르샤바조약의 가맹국 정당 대표 및 국가 수반들; (동-서 관계 일반 문제, 특히 헬싱키협정 관련 담당) 외무부 212과, (국제적 군축 및 군비 통제 특히 제네바 미-소 군축 협상 담당) 외무부 220과, (안전보장, 유럽 내 군축 및 군비 통제 특히 유럽 내 재래식 전력에 대한 협상 및 신뢰구축 및 군축을 위한 회담 담당) 외무부 221실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39, 798 E
42	소련과 관련한 미해결 베를린문제에 대한 외무부 정황 보고(파리 1989년 7월 14-16일 개최 세계경제정상회의 대화록)	1989년 7월 10일	외무부 정치국 210과(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담당)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 697 E
43	내독관계-수상청장 자이티스의 동베를린 공식방문	1989년 7월 10일	수상청장 자이티스, 동독 외무장관 피셔, 동독 사통 당 서기장	Bundesarchiv, BArch/B 136/ 21328, 221-35016 Ve 40 NA 1
44	연방 외무장관 겐셔가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르드나제에게 보내는 서신-더 강화된 협력을 위해	1989년 7월 27일	연방 외무장관 겐셔;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 459 E
45	연방 수용소의 신청자(동독 이탈주민 및 이주자의 수)	1989년 7월 31일	연방수상청	Bundesarchiv, BArch/B 136/20273, 221-35001 Flu 12 Band 1
46	이주자의 정착을 위한 비용-연방의회 의 질의	1989년 8월 2일	연방의회, 연방 내무부차관 한스 노이젤, 시민당소속 슈탈 의원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1/5037, S. 9-10
47	동독의 이주정책-슈탐 국장이 수상청장에 게 제출한 보고서	1989년 8월 7일	연방수상청,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티스	Bundesarchiv, BArch/B 137/ 15797
48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에 일반인들의 출입 금지-슈테른 국장이 자이티스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초안	1989년 8월 8일	연방수상청, 독일정책 실무팀장 에른스트 귄터 슈테른 국장, 자이티스 수상청장	Bundesarchiv, BArch/B 136/ 21859, 222-83105 Fa 3 NA 2 Band 4
49	대사관 동독 이탈주민-서독 연방정부의 클 수상이 동독 국가위원회 의장 호네커에게 보내는 서한	1989년 8월 14일	연방수상청, 클 수상, 에리히 호네커 동독 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겸 국가위원회 의장	Bundesarchiv, BArch/B 288/ 355, 11-35016 Ve 33 NA 4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50	대사관 동독 이탈주민-동독 국가위원회의 장 호네커가 서독의 콜 수상에게 보내는 서한	1989년 8월 17일	연방수상청, 콜 수상, 에리히 호네커 동독 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겸 국가위원회 의장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83105 Fa 3 NA 2, Bd. 5
51	대사관 동독 이탈주민-수상청장 자이티스와 동독 외무차관 크롤리코프스키 간의 회의	1989년 8월 21일	연방수상청, 루돌프 자이티스 수상청장, 베어틀레 차관, 두이스부르크 국장, 크롤리코프스키 동독 제1 외무차관, 니어 동독 외무차관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83105 Fa 3 NA 2, Band 5
52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에 진입한 동독 이탈주민 문제-베어틀레 상주대표부 대표가 자이티스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보고서	1989년 8월 23일	연방수상청, 베어틀레 상주대표부 대표, 자이티스 수상청장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83105 Fa 3 NA 2, Band 5
53	동독 이탈주민 위기 해결 노력에 전승 4개 국을 관련시키는 문제와 관련한 외무부의 구상	1989년 8월 24일	외무부 정치국 210과(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담당)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1 E
54	동독 이탈주민의 서독대표부 체류 문제-베어틀레 대표가 자이티스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보고서	1989년 8월 24일	연방 수상, 수상청장 자이티스,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83105 Fa 3 NA 2, Band 5
55	독일-폴란드 관계-김니치 성에서 열린 서독 수상 콜과 헝가리의 수상 네메트, 외무장관 호른 간의 실무회담	1989년 8월 28일	연방수상청, 겐서 외무장관, 콜 수상, 네메트 헝가리 수상, 호른 헝가리 외무장관	Bundesarchiv, BArch/BK, 213-30130 U1 Un 25 Band 1
56	김니치 성에서 열린 서독 수상 콜과 헝가리의 수상 네메트, 외무장관 호른 간의 실무회담	1989년 8월 28일	연방수상청, 겐서 외무장관, 콜 수상, 네메트 헝가리 수상, 호른 헝가리 외무장관	Bundesarchiv, BArch/BKIm 21-301100 (56) Ge 28 (VS) Band 78, Bl. 296/1-296/5
57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와 프러하 주재 서독대사관으로 진입한 동독 이탈주민 문제-수상실의 뉘스베르크 국장이 상주대표 베어틀레 차관에게 보낸 전문	1989년 8월 29일	수상청, 상주대표부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83105 Fa 3 NA 2, Band 5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58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와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으로 진임한 동독 이탈주민 문제-상주대표 베어텔레 차관이 수상실의 뒤스베르크 국장에게 보낸 전문	1989년 8월 31일	수상청, 상주대표부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83105 Fa 3 NA 2, Band 5
59	부다페스트 주재 서독대사관의 동독 이탈주민에 관한 동독과 헝가리 간의 논의에 관한 정보-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텔레 차관이 수상청장에게 보낸 보고서	1989년 9월 1일	수상청, 상주대표부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83105 Fa 3 NA 2, Band 5
60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미국 국무차관 이글 버거의 본 회담(통역 기록)	1989년 9월 6일	연방 외무장관 겐셔; 미국 국무차관 이글버거; 외부 부 105과(인어 담당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61	프라하와 바르샤바의 서독대사관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들에 관하여-수상청 뒤스베르크 국장이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텔레 차관에게 보낸 전문	1989년 9월 6일	수상청, 상주대표부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83105 Fa 3 NA 2, Band 5
62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폴란드의 연대 자유노조 위원장 레흐 바웬사의 본(Bonn) 회담	1989년 9월 8일	겐셔 외무장관; 폴란드 '연대' 자유노조(Solidarność) 및 지문, 게레베크 교수; 정부 파견단; 외무부; 외무부 214과(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담당)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63	동독의 내부문제에 서독의 불간섭-자이더스 수상청장과 노이바우어 본 주재 동독 상주대표부 대표 간의 회담	1989년 9월 8일	수상청, 본 주재 동독 상주대표부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83105 Fa 3 NA 2, Band 5
64	헝가리를 통해서 동독 이탈주민들의 이주-네메트 수상에게 보내는 헬무트 클 수상의 전문	1989년 9월 12일	수상청, 클 수상, 네메트 헝가리 수상	Bundesarchiv, BArch/B 136/ 30462, 21-30130 Band 3
65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미국 대사 나이즈(Nitze)의 본(Bonn) 회담	1989년 9월 14일	연방 외무장관 겐셔; 미국 대사 나이즈(Nitze); 외부 부 2과(군축 및 군비통제 담당 연방 특임부), 홀릭 박사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66	연방의회 발안: 동독 이탈주민	1989년 9월 14일	연방의회, 연방의회 의장 리타 쥬스무트, 연방 수상 청장 자이더스	Deutscher Bundestag, Plenarprotokoll 11/158, S. 12035-12047
67	헝가리 국경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자이더스 수상청장과 호르바트 주독 헝가리 대사 간의 회의	1989년 9월 19일	연방수상청, 주독 헝가리 대사	Bundesarchiv, BAArch/BK, 21-30100 (56) Ge 28 (VS) Band 79, Bl. 30-34
68	서독·영국 외무장관 지문회의-외무부 외무장관실 기록	1989년 9월 20일	영국 외무장관 메이저, 리처드 고즈니 담당관, 물리 비 대사; 연방 외무장관 겐서; 외무부 외무장관실 실장 대리 뢰펠부르크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8 E
69	연방 외무장관 겐서가 프랑스 외무장관 뒤마에게 보낸 서신-개혁 의지가 있는 중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을 위한 서방의 공동 노력	1989년 9월 20일	연방 외무장관 겐서; 프랑스 외무장관 뒤마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2 E
70	서독 외무장관 겐서와 동독 외무장관 피셔 간의 회의-연방 외무부 201과 작성 논의 방안에 대한 제안	1989년 9월 21일	겐서 서독 외무장관, 피셔 동독 외무장관, 외무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7 E
71	동독 이탈주민과 독일통일에 대한 프랑스 보수파의 입장-파리 주재 서독 대사의 보고	1989년 9월 22일	파리 주재 서독대사관 파이프 대사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39.798 E
72	동독의 위기-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텔레 차관이 수상청장에게 보낸 보고서	1989년 9월 22일	연방수상청,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Bundesarchiv, BAArch/B 288/ 116, 11
73	라인란트-팔츠 연방주 총리 바그너와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자문 담당 팔린의 대화-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의 보고	1989년 9월 23일	라인란트-팔츠 연방주 총리 바그너;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자문 담당 팔린;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대리 하이켄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13 E
74	겐서 외무장관과 세바르드니체 소련 외무장관의 뉴욕 회담	1989년 9월 27일	연방 외무장관 겐서-소련 외무부, 연방 외무부 정치국 카스트롭 국장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75	독일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파리 주재 서독대사관의 보고	1989년 10월 2일	파리 주재 독일대사관 공사 하이니켄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39.798 E
76	폴란드에 있는 탈동독주민의 이주-베어텔레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가 수상청장에게 보낸 보고서	1989년 10월 2일	수상청,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텔레, 수상청장 자이더스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83105 Fa 3 NA 2, Band 6
77	체코에 있는 탈동독주민의 이주-콜 수상과 아디막 총리 간의 전화통화	1989년 10월 4일	수상청, 콜 수상, 아디막 총리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83105 Fa 3 NA 2, Band 6
78	서독과 소련의 관계에 대한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관과 소련 외무부 기획실 장관 그벤다체 간의 회의	1989년 10월 5일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클라우스 블레히, 서독 연방 외무부 정치국 국장 요아힘 폰 아님, 소련 외무부 기획실장 그벤다체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01 E
79	독일정책에 대한 폴란드 노동당의 임장-바르샤바 주재 서독 대사의 보고서	1989년 10월 6일	폴란드 노동당, 바르샤바 주재 서독 대사 실러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6 E
80	프라하와 바르샤바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들-수상청장 자이더스와 뒤스베르크 국장의 보고서	1989년 10월 6일	수상청	Bundesarchiv, BArch/B 136/ 21329, 221-35016 Ve 40 NA 1
81	독일문제에 대한 프랑스 외무장관 툴랑 뒤마의 견해	1989년 10월 16일	프랑스 외무장관 툴랑 뒤마; 서독 외무부 법무국 (일 반 국제법 담당) 500과 과장 할겐베르크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40723E
82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겐서 외무장관과 동독 오토 외무차관과의 회담-장관실 기록	1989년 10월 19일	겐서 서독 외무장관, 오토 동독 외무차관, 서독 외무 장관실 엘베실장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83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뒤마 프랑스 외무장관의 회담-외무부의 보고	1989년 10월 26일	서독 외무장관 겐서; 뒤마 프랑스 외무장관; 서독 외무부 장관실 실장 엘베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84	1989년 10월 26일과 27일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바르샤바조약기구 외무장관회의-연방외무부 212과 보고	1989년 10월 27일	바르샤바조약기구, 연방외무부, 연방 외무장관 겐서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39.798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85	미 행정부의 독일문제에 대한 입장-외무부 204과 보고	1989년 10월 30일	미국정부; 서독 외무부; 외무부 (미국 및 부속 카리브해 부속지역, 독-미 간 사회·문화·정보정책협력 담당) 204과 과장 폰 몰트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30 E
86	본에서 열린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오스트리아 부총리 요제프 리글러의 회담-외무부 202과의 보고	1989년 11월 2일	연방 외무장관 겐셔; 오스트리아 부총리 요제프 리글러; 외무부 (프랑스, 안도라, 모나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담당) 202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8 E
86a	프라하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 문제-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가 수상청장에 보낸 보고	1989년 11월 3일	수상청,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수상청장 자이타스	Bundesarchiv, BArch/B 136/21861, 222-83105 Fa 3 NA 2, Band 7
87	변화하는 바르샤바조약기구: 이념적 전투 동맹으로부터 유럽 안보를 위한 새로운 기능-연방외무부 213과 분석	1989년 11월 8일	바르샤바조약기구, 연방외무부 213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39.798 E
88	서독 외무장관 겐셔와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에 대한 진화통화-외무부 외무장관실 보고	1989년 11월 9일	서독 외무장관 겐셔;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서독 외무부 장관실 실장 엘베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89	연방 수상 헬무트 콜이 1989년 11월 폴란드 공식방문	1990년 11월 10일	연방 수상 헬무트 콜; 폴란드 총리 타데우시 마조비에츠키; 한스-디트리히 겐셔 외무장관; 연방 청소년·가족·여성·보건부장관 우르줄라 레어; 연방 식량·농림부장관 아그나츠 키홀레;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장관 클라우스 퓌퍼; 연방 특임관 겸 연방 공보부장관 한스 클리인; 폴란드 연대자유노조 위원장 레흐 비웬사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vom 10.11.1989, Nr. 262/45 D, S. 1-2
90	서독-영국 외무장관 회의-연방외무부 장관실 보고	1989년 11월 15일	겐셔 서독 외무장관, 허드 영국 외무장관, 연방 외무 장관실 부실장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2 E
91	워싱턴에서 열린 서독 외무장관과 부시 미국 대통령 간의 회담-워싱턴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서	1989년 11월 21일	연방 외무장관, 미국 대통령,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7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92	워싱턴에서 열린 겐서 외무장관과 미국 안보자문 브렌트 스코우크로프트 간의 회의	1989년 11월 21일	겐서 서독 외무장관, 미국 안보자문 스코우크로프트, 연방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롤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30 E
93	워싱턴에서 열린 겐서 서독 외무장관과 미국 상원 민주당 대표 미셸 간의 회의	1989년 11월 21일	미국 민주당 상원 대표, 연방 외무장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30 E
94	10개항 계획-본(Bonn)에서의 예산 논의 중 헬무트 콜 수상의 독일정책에 대한 연설	1989년 11월 28일	연방 수상 콜	Bulletin des Presse- 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Nr. 134, 29.11.1989
95	몰타 정상회담 이전의 소련의 서방정책-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의 보고	1989년 11월 28일	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 정치국장 요아힘 폰 아르 님; 서독 외무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01 E
96	폴란드의 독일정책에 대한 상원 외교위원회 자문 지에바노프스키의 임장-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	1989년 11월 29일	폴란드 상원 외교위원회 자문 지에바노프스키; 바르샤바 주재 서독 대사 질버베르크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6 E
97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대처 영국 수상의 런던에서의 대화	1989년 11월 29일	연방 외무장관 겐서 및 대표단; 대처 영국 수상; 런던 주재 서독 대사 폰 리히트호펜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98	통일 관련 런던 및 파리회담에 대한 겐서 외무장관의 회상	1989년 11월 30일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 닐 킨녹 영국 노동당 당수; 톨랑 뒤마 프랑 스 외무장관; 발레리 지스키르 데스랭진 프랑스대 통령; 알랭 포에르 프랑스 상원 의장; 프랑수와 미테 랑 프랑스 대통령	Genscher, Hans-Dietrich. 1995. Erinnerungen. Berlin: Siedler. S. 675-680.
99	10개항 계획에 대한 외국의 반응-텔레차 관보의 콜 수상에 대한 보고서 초안	1989년 11월 30일	수상청; 수상청 (외교 및 내국 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국장 겸 수상청 차관보 텔릭; 연방 수상 콜	Bundesarchiv, BArch/BK, 212-34500 De 39 Band 1
100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파리에서의 회담	1989년 11월 30일	연방 외무장관 겐서;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및 대표단; 파리 주재 서독 대사 페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101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뒤마 프랑스 외무장관의 회담	1989년 11월 30일	연방 외무장관 겐서; 프랑스 외무장관 뒤마 및 대표단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02	독일문제에 대한 소련의 입장-일간지 '이즈베스티야'의 1989년 11월 26일자 기사	1989년 12월 1일	소련 국영 일간지 '이즈베스티야'(당시 발행인: 소련 최고 소비에트);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및 외무부 (언어 담당) 105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7 E
103	폴란드 통일 노동자당(PVAP)의 독일정책 관련 입장 표명-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	1989년 12월 1일	폴란드 통일 노동자당(PVAP); 바르샤바 서독 특사 요하네스 바우흐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6 E
104	연방 수상 헬무트 콜의 10개항 계획에 대한 체코슬로바키아 외무부 대변인의 성명-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	1989년 12월 1일	체코슬로바키아 외무부 대변인 마르시; 프라하 주재 서독 대사 헤르만 후버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9 E
105	1989년 11월 29일에서 30일까지의 니더작센주 총리 알프레히트의 니더작센주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	1989년 12월 2일	니더작센주 총리 알프레히트 및 니더작센주 각 부 장관; 마조비에츠키 폴란드 총리; 스쿠비셰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 및 각 부 장관; 폴란드 '연대' 자유노조(Solidarność) 자문 게레멕 교수; 바르샤바 서독 특사 요하네스 바우흐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6 E
106	모스크바에서의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대화-연방 수상 헬무트 콜의 10개항 계획에 대한 소련측의 비판	1989년 12월 5일	연방 외무장관 겐셔;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개인 자문역 시글라딘; 세바르드니제 소련 외무장관;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블레히;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를 구장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107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세바르드니제 소련 외무장관의 모스크바 회담	1989년 12월 5일	(서독) 연방 외무장관 겐셔; 세바르드니제 소련 외무장관;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겸 회담 통역 담당 하르트만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08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및 양국 파견단 간의 모스크바 회담	1989년 12월 5일	연방 외무장관 겐셔; 예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소련정부 대표단[소련 외무부차관 카르포프, 기획실장 타라센코, 특임대사 본다렌코 등]; 서독정부 대표단[서독 외무부 장관 디터 카스트롬, 국장 정치국 국장 대리 회의, 외무부 연방장관실 실장 엘베, 외무부(소련 담당) 213과 과장 노이베르트,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블레히 등]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7.138 E
109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및 양국 파견단 간의 모스크바 회담(경제 분야)	1989년 12월 5일	연방 외무장관 겐셔; 예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소련정부 대표단[소련 외무부차관 오브민스키, 소련 외무부차관 카르포프, 기획실장 타라센코, 특임대사 본다렌코 등]; 서독정부 대표단[서독 외무부 장관 디터 카스트롬, 국장 정치국 국장 대리 회의, 외무부 연방장관실 실장 엘베, 외무부(소련 담당) 213과 과장 노이베르트,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블레히 등]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7.138 E
110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모스크바 공항에서의 대화	1989년 12월 5일	(서독) 연방 외무장관 겐셔;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겸 회담 통역 담당 하르트만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111	소련의 독일문제에 대한 고려사항들-텔레차관보의 콜 수상에 대한 보고서 초안	1989년 12월 6일	수상청; 수상청 (외교 및 내독 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국장 겸 수상청 차관보 텔치; 연방 수상청	Bundesarchiv, BArch/BK,21-3500 (28) De 26 Band 1, Bl. 1/0 und 2-5
112	오테르-나이세 강 경계에 대한 폴란드 대통령 대변인의 성명-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	1989년 12월 6일	폴란드 대통령 대변인 로진스키; 바르샤바 서독 특사 오테르-나이세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6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반	출처
113	독일통일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 관한 프랑스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회고	1989년 12월 7일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 외무장관 롤랑 뒤마;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네덜란드 외무장관 한스 반 덴 부룩; 스페인 총리 펠리페 곤잘레스; 이탈리아 총리 솔리오 안드레오티;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마하일 고르바초프; 마기렛 대처 영국 수상;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유럽사회(EU 정상회의)	Mitterrand, François, 1996. De l'Allemagne. De la France. Paris: Odile Jacob. S. 79-99.
114	독일-폴란드 간 관계에 대한 스킴비체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의 폴란드 하원에서의 설명-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	1989년 12월 8일	스쿠비체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 폴란드 하원; 바르샤바 주재 서독 대사 크낙슈테트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6 E
115	동독을 포함한 동유럽에서의 변화에 대한 영국측의 입장-런던 주재 서독 대사의 보고	1989년 12월 8일	런던 주재 서독 대사 폰 리히트호펜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0 E
116	동유럽에 대한 결론-스트라스부르 주재 유럽이사회 의장단	1989년 12월 9일	스트라스부르에서의 유럽이사회; 중·동유럽 제 국가들; 유럽재건개발은행; 유럽공동체	Mitterrand, François, 1996. De l'Allemagne. De la France. Paris: Odile Jacob. S. 97-99.
117	스트라스부르 주재 유럽이사회: 그 성공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1990년 9월 12일	스트라스부르에서의 유럽이사회; 소련; 연방 수상 헬무트 콜; 유럽공동체; 유럽공동체 회원국들; 연방 정부; 마기렛 대처 영국 수상; 동유럽 국가들	L'Europe en formation. Winter 1989. Nr. 276. S. 3-8.
118	베를린 연합국 통제위원회 건물에서 열린 독일 주재 전승 4개국 대사 회담-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보고	1989년 12월 11일	본 주재 프랑스 대사 부이드보; 본 주재 미국 대사 윌터스; 동베를린 주재 소련 대사 코체마소프; 본 주재 영국 대사 몰러비; 서독 외무부차관 주트호프;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 담당) 국제정치과(210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2 E
119	겐서 외무장관의 모스크바 방문 및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고르바초프 총서기장과의 키에프 회동에 대한 나토 지문단(NAC)의 보고 내용 정리-서독정부 부화첼 상주 나토 대표의 보고	1989년 12월 11일	나토 지문단(NAC); 연방 외무장관 겐서;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고르바초프; 서독정부 나토 상주 대표 클리츠 박사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7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20	본에서 열린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를 국장과 소련 대사 크위진스키의 회담	1989년 12월 12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를 국장; 본 주재 소련 대사 크위진스키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7 E
121	베를린에서 발표된 독일문제 및 부시 미국 대통령의 4개항 원칙 관련 기본 입장에 대한 미국 국무장관 베이커의 연설-워싱턴 주재 서독대사관 코멘트	1989년 12월 12일	미국 국무장관 베이커; 미국 대통령 부시;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위르겐 루푸스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9.532 E
122	콜 수상과 미국 국무장관 베이커의 서베를린 회담	1989년 12월 13일	수상청;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미국 국무장관 베이커	Bundesarchiv, BArch/BK, 212-30105 A5 Am 7
123	연방장관 자이티스와 서방 전승 3개국 대사들의 본(Bonn) 회담	1989년 12월 13일	수상청; 수상청장 겸 연방장관 루돌프 자이티스; 미국 대사 윌티스; 프랑스 대사 부이드보; 영국 대사 몰러비; 외무부차관 주트호프	Bundesarchiv, BArch/B 136/20241, 221-34900 Spr 2 Band 1
124	서방 측 4개국 외무장관급 브뤼셀 정찬 회동-외무부 외무장관실 보고	1989년 12월 13일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서독 외무부 연방장관실 실장 프랑크 엘베; 프랑스 외무장관 톨랑 뒤마; 미국 국무장관 제임스 A. 베이커; 영국 외무장관 더클라스 허드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2 E
125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에 대한 연방 수상 헬무트 콜의 서신-독일정책의 목표	1989년 12월 14일	수상청; 연방 수상 헬무트 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고르바초프	Bundesarchiv, BArch/BK, 212-35400 De 39 NA 2 Band 1
126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콜 수상에 대한 서신-콜 수상에 대한 하르트만 국장의 보고안	1989년 12월 18일	수상청; 수상청 (외무부, 경제협력부 담당) 21국 국장 하르트만; 연방 수상 헬무트 콜	Bundesarchiv, BArch/BK, 212-35400 De 39 NA 2 Band 1
127	독일문제에 대한 프랑수아스 임장-파리 주재 서독대사관의 보고	1989년 12월 18일	파리 주재 서독 대사 페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39.798 E
128	1989년 12월 19일 셰버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독일문제에 대한 7개항 원칙에 관한 연설에 대한 서독 외무부의 입장 표명	1989년 12월 19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셰버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3 E
129	만프레드 게어라흐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동베를린 회담	1989년 12월 20일	만프레드 게어라흐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프랑스 대표단; 동독 외무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R 29/09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30	사통당-민사당(SED-PDS) 당 대표 기지와 프랑스 대통령실 실장 비앙코의 동베를린 회담	1989년 12월 20일	사통당-민사당(SED-PDS) 당 대표 게오르크 기지; 프랑스 대통령실 실장 장-루이 비앙코; 동독 외무부 국제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R 29/09 E
131	사통당-민사당(SED-PDS) 당 대표 기지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동베를린 회담-동독 외무부 국제부 보고	1989년 12월 21일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사통당-민사당(SED-PDS) 당 대표 게오르크 기지; 동독 외무부 국제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R 29/09 E
132	외교문제에 대한 모드로우 동독 내각회의 의장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동베를린 회담	1989년 12월 21일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한스 모드로우 동독 내각회의 의장; 동독 외무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R 29/09 E
133	베를린 장벽 붕괴 및 독일통일에 관한 이스라엘 총리 사미르의 연방 수상 헬무트 콜에 대한 답신-텔 아비브 주재 독일대사관 보고	1989년 12월 21일	이스라엘 총리 이츠하크 사미르; 연방 수상 헬무트 콜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7 E
134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게어리호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 및 모드로우 동독 총리의 동베를린 회담	1989년 12월 22일	만프레드 게어리호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 한스 모드로우 동독내각회의 의장;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프랑스 대표단; 동독 외무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R 29/09 E
135	서독 외무부차관 주트호프와 미국 상원·재래식 무기 및 연합 방위(Conventional Forces and Alliance Defense) 산하위원회 위원장 레빈 상원위원; 서독 외무부 (미합중국 및 부속 카리브해 부속지역, 독-미 간 사회·문화·정보정책적 협력 담당) 204과	1989년 12월 28일	서독 외무부차관 주트호프; 미국 상원 '재래식 무기 및 연합 방위(Conventional Forces and Alliance Defense)' 산하위원회 위원장 레빈 상원위원; 서독 외무부 (미합중국 및 부속 카리브해 부속지역, 독-미 간 사회·문화·정보정책적 협력 담당) 204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30 E
136	서독과 동독 간의 협력과 신뢰관계를 위한 조약·수상청의 설명-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 정치과(210과) 보고	1990년 1월 4일	서독 수상청 (독일 정책 담당) 20국 국장 뒤이스베르그; 서독 연방 외무부 21 국실 회의 실장; 내무부 국장 슈퍼; 내독부 소속 만게; 법무부 국장 하이데; 동베를린 주재 서독 대표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0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37	바르샤바 주재 서독 대사 크낙슈테트와 폴란드 '연대' 자유노조 원내교섭단체 대표 게레메의 동유럽에서의 변화 및 독일문제에 대한 대화	1990년 1월 11일	바르샤바 주재 서독 대사 크낙슈테트; 폴란드 '연대' 자유노조 원내교섭단체 대표 게레메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6 E
138	소련의 독일문제 관련 입장-연방 외무장관 겐서에 대한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의 보고안	1990년 1월 12일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과장 클라우스 노이베르트; 연방 외무장관 겐서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7 E
139	독일문제와 관련한 미국 측의 이해관계-워싱턴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	1990년 1월 13일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대리 파슈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140	1990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동베를린에서 개최된 독일과 유럽정책 콜로키엄-외무부 기획실 보고	1990년 1월 16일	서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 치트론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1 E
141	독일문제와 유럽의 책임-콜 수상의 파리 연설	1990년 1월 17일	연방 수상 헬무트 콜; 서독; 동독; 중·동유럽 국가들; 유럽공동체; 바르샤바조약기구; 경제상호협력회의(COMECON);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수 대통령; 헬싱키회의;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마하일 고르바초프; 유럽위원회 의장 자끄 들로로	Kohl, Helmut. 1990. Reden und Erklärungen zur Deutschlandpolitik. Bonn: Presse-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S. 167-184.
142	영국과 독일문제-1990년 1월 17일 영국 상원에서의 토론-런던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	1990년 1월 17일	런던 주재 서독대사관; 영국 상원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4 E
143	양측 간 영사업무를 개시할 경우의 국적법적 측면-수상청에 제출한 서독 외무부의 보고	1990년 1월 17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210과(베를린 및 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담당) 소속 브란덴부르크; 수상청; 내독부; 동베를린 주재 서독 대표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9 E
144	1990년 1월 19일 본에서 열린 독-영 기획실 간 회담-서독 외무부 기획실 보고	1990년 1월 25일	서독 외무부 기획실 튀커; 영국 기획실 실장 쿠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4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45	유럽공동체의 13번째 회원국으로서의 동독	1990년 1월 26일	유럽위원회 의장 자코 들로르; 유럽공동체; 더블린 유럽이사회; 네덜란드 외무장관 한스 반 덴 부룩; 헬 싱키회의;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마하일 고르바초프; 연방 수상 헬무트 콜	Louyot, Alain, Delors, La RDA troisième à table. In: Les Cahiers de l'Express. Februar 1995. Nr. 31. S. 47-48. Übersetzt vom Centre Virtuel de la Connaissance sur l'Europe.
146	소련과 동독의 관계-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와의 동독 대사의 대화	1990년 1월 26일	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 모스크바 주재 동독대사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2 E
147	독-소 간 관계의 현황 및 전망-텔레차관 회의 콜 수상에 대한 보고서 초안	1990년 1월 29일	수상청; 수상청 (외교 및 내무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국장 겸 수상청 차관보 텔릭; 연방 수상 콜	Bundesarchiv, BArch/BK, 213-30130 S 25 So 28 Band 4
148	전 유럽적 틀에서 본 독일정책-하르트만 국장의 기록	1990년 1월 29일	수상청; 수상청 (외무부, 경제협력부 담당) 21국 국장 하르트만; 연방 수상 헬무트 콜	Hanns Jürgen Küsters,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51(aus digitaler Edition)
149	마조비에츠키 총리의 연방 수상 헬무트 콜에 대한 서신	1990년 1월 30일	연방 수상 헬무트 콜; 폴란드 마조비에츠키 총리	Hanns Jürgen Küsters,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54, S. 754f(aus digitaler Edition)
150	독일문제에 대한 소련의 입장-고르바초프 총서기장과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발인-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의 보고	1990년 1월 31일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과장 클라우스 노이베르트; 연방 외무장관 겐서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7 E
151	영국과 독일문제-런던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	1990년 2월 3일	서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 클라우스-페터 클라이버; 런던 주재 서독대사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4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52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스크비체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 및 양국 파견단 간의 본 회담	1990년 2월 6일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 외무장관; 스크비체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 양국 파견단; 서독 외무부 214 본 과 과장 대리 쉬틸브겐스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6 E
153	본에서 열린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영국 외무장관 하드의 회담-외무부 연방장관실 의 보고	1990년 2월 6일	연방 외무장관 한스-디트리히 겐셔; 영국 외무장관 더글라스 허드; 본 주재 영국 대사 크리스토퍼 폴러 비; 런던 주재 서독 대사 포 리히트호펜; 서독 외무 부 장관실 실장 대리 뢰켈부르크; 서독 외무부 공보 실 대리 한스-하인리히 슈마허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054 E
154	1990년 2월 7일 내각위원회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독일통일' 실무단 설립-그 를 위한 준비회의상의 의제 목록	1990년 2월 6일	내각위원회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독일통일' 실무단;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정 카스트롤; 서독 외 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 제정치과(210과) 과장 람바흐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0 E
155	독일통일에 대한 미국과 소련 간의 의견 교환-미국 국무장관 베이커의 연방 수상 헬무트 콜에 대한 서신	1990년 2월 10일	미국 국무장관 베이커; 수상청; 연방 수상 헬무트 콜	Bundesarchiv, BArch/BK, 212-35400 De 39 NA 1 Band 2
156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세버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모스크바 크레믈린 회담	1990년 2월 10일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 외무장관; 예두아르트 세 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양국 대표단; 서독 외무 부 211실 실장 회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157	1944-1989년 간의 독일-폴란드 간 국경 관련 문서들	1990년 2월 12일	서독 연방의회 한술처 (외무부, 국방, 국제법, 유럽통 합, 경제 협력, 독-독 관계 담당) 제2국 부국장 하인 리히스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39E; Wissenschaftliche Dienste des Deutschen Bundestags, WF II-296/89
158	연방 수상 헬무트 콜과 미국 대통령 부시 의 전화 통화	1990년 2월 13일	수상청;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	Bundesarchiv, BArch/BK, 21-30100 (56) Ge 28 (VS) Band 80, Bl. 56-59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59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3개국 서방 측 외무 장관들 및 소련 외무장관 셰버르드나제의 오타와 공동 회담	1990년 2월 13일	서독 연방 외무장관 겐셔; 영국 외무장관 허드; 소련 외무장관 셰버르드나제; 미국 국무장관 베이커; 프랑 스 외무장관 뒤마;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2 E
160	오타와에서 열린 나토 소속국 외무장관 회의-6자 성명	1990년 2월 13일	나토 소속국 외무장관 회의(Caucus der NATO-Auß enminister); 서독 외무부 (안전보장, 유럽 내 군축 및 군축 통제 특히 유럽 내 재래식 전력에 대한 협상 및 신뢰구축 및 군축을 위한 회담 담당) 221실 과장 부어슈테데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2 E
161	독일통일을 유럽 안전보장체제에 통합시키는 문제에 관한 서독 외무부 기획실의 보고	1990년 2월 14일	서독 외무부 기획실 소속 바이스 박사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439 E
162	독일통일 과정과 그 인보 정책적 문제들- 워싱턴 주재 서독대사관과 미국 국무부 기획실 실장 대리 간의 대화	1990년 2월 14일	워싱턴 주재 서독대사관; 미국 국무부 기획실 실장 대리 짐 홀츠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1 E
163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산하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1차 회의-서독 외무 부 정치국 국제정치과(210과) 보고	1990년 2월 14일	서독 겐셔 외무장관; 수상청장 자이티스; 그 외 연방 장관들 및 정부관료;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164	동독 외무부 업무의 인적 상황-서독 외무 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 하는) 국제정치 담당) 210과 보고	1990년 2월 15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 하는) 국제정치 담당) 210과 소속 브란덴부르크; 동 독 외무부 본 주재 동독 대표부 제1비서 그라메스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01 E
165	미국측의 2+4회담 방식에 대한 고려 사항-워싱턴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	1990년 2월 16일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대리 파쉬케; 미국 국무부 기획실 실장 대리 홀츠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1 E
166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산하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본(Bonn) 설립 회의	1990년 2월 19일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수상청; 내무부; 법무부; 재무부; 내독부; 국방부; 경제부; 환경부	Bundesarchiv, BArch/B 136/ 20244, 221-34900 Wi 14 Band 1
167	독일통일’ 내각 위원회 산하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2차 회의	1990년 2월 21일	수상청;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Bundesarchiv, BArch/B 136/ 20244, 221-34900 Wi 14 Band 1
168	‘독일과 동맹’ 문제에 대한 외무부의 개관	1990년 2월 21일	서독 외무부 (니토 및 방위 담당) 201과 과장 드레어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39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69	소련의 독일문제에 대한 언급 내용-텔레차관보의 콜 수상에 대한 보고서 초안	1990년 2월 22일	수상청; 수상청 (외교 및 내국 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국장 겸 수상청 차관보 텔치; 연방 수상 콜	Bundesarchiv, BArch/BK, 212-35400 We 35, Band 1
170	평화조약 규정에 대한 외무부의 고려사항	1990년 2월 23일	외무부 기획실 '독일통일' 프로젝트 그룹 에라트 계장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98439E
171	독일통일 과정이 헬싱키협정 정상회담 안 에 통합되는 문제-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차관(210과) 보고	1990년 2월 23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담당) 210과 소속 브란덴부르크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zeichen ZA 198.439 E
172	폴란드 서부 국경 그리고 다른 중·동유럽 내 국경들-서독 외무부 '독일통일' 실무단 회의 내용	1990년 2월 23일	서독 외무부 '독일통일' 실무단; 외무부 법무국 (일반 국제법 담당) 500과 과장 대리 라쉬너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zeichen ZA 198.439 E
173	서독 외무부 '독일통일' 실무단-외무부 업무 분야에 있어서 동·서독 간의 공동회에 대한 동독측과의 논의-군축 및 군비 통제 담당 연방 부서(외무부 2A 분과)의 제안	1990년 2월 23일	서독 외무부 2A 분과(군축 및 군비 통제 담당 연방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zeichen ZA 198.439 E
174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연방 수상 헬무트 콜과 미국 대통령 부시의 회담	1990년 2월 24일	연방 수상 헬무트 콜; 수상청 (외교 및 내국 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국장 겸 수상청 차관보 텔치; 수상청;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 미국 국무장관 베이커	Bundesarchiv, BArch/BK, 21-30100 (56) Ge 28 (VS) Band 80, Bl. 113-138
175	독일통일에 대한 세바르드니제 소련 외무장관과 초췌 모스크바 주재 폴란드 대사;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모스크바 회담-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의 보고	1990년 2월 24일	세바르드니제 소련 외무장관; 초췌 모스크바 주재 폴란드 대사; 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 정치국장 요아힘 폰 아르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zeichen ZA 198.443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76	마기렛 대처 영국 수상에 독일통일 관련 입장에 대한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회고	1990년 2월 25일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마기렛 대처 영국 수상; 니토; 유럽평의회;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마하일 고르바초프; 연방 수상 헬무트 콜;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 이탈리아 총리 줄리오 안드레오티;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	Mitterrand, François, 1996. De l'Allemagne. De la France. Paris: Odile Jacob. S. 39-44.
177	영국과 독일문제-런던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	1990년 2월 26일	런던 주재 서독 대사 폰 리히트호펜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051 E
178	통일과정에 대한 동독의 1990년 2월 23일자 비망록-서독 외무부 21일의 분석	1990년 2월 27일	동독 외무부; 서독 연방 외무부 21일 회의 실장; 연방 외무장관 겐서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1 E
179	소련대사관과 동독 시민당 간의 접촉	1990년 초	동독의 시민당 소속 출거 자피어 의원; 주 동베를린 소련대사관 소속 제2비서 포포로프스키	Archiv Bundess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2
180	유럽 경제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독일의 영향	1990년 3월 1일	유럽 경제공동체; 서독; 동독; 중·동유럽 국가들	Da Silva Lopes, José, 1990. Alemães condicionam futuro da CEE. In: Cadernos de Economia, Januar/März 1990, Nr. 10. 3. Jahrgang, S. 25-26.
181	유럽공동체, 동유럽 그리고 통일	1990년 3월 1일	연방 수상 헬무트 콜; 유럽위원회 의장 자크 들로르; 프랑수아 외무장관 롤랑 뒤마;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연방 대통령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Le rendez-vous de Dublin. In: L'Europe en formation. Frühjahr 1990, Nr. 277, S. 3-5.
182	통일과 전후배상 문제	1990년 3월 1일	서독 외무부 법무국 (전후 문제-군대 주둔, 외국자 산, 외채, 보상, 서독영토 범위 등의 전쟁 및 점령으로 비롯된 문제 담당) 503과 과장 괴츠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98439E
183	독일통일 그리고 동독의 경제심화원조회의 (COMECON) 그룹 이탈의 영향-서독 외무부 (유럽공동체, 대외 관계, 유럽자유무역 지대, 공동 무역정책, GATT 등 담당) 411과 중간보고	1990년 3월 1일	서독 외무부 (유럽공동체, 대외 관계, 유럽자유무역 지대, 공동 무역정책, GATT 등 담당) 411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39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84	'6개국' 협상에 있어 소련 측 입장 및 그 입장의 배경-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와의 보고	1990년 3월 1일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클라우스 블레히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7 E
185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동독·폴란드 실무단 단장과의 대화-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의 보고	1990년 3월 5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동독·폴란드 실무단 단장 코프텔제프;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클라우스 블레히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3 E
186	서독정부 '독일통일' 내각위원회-독일통일이 달성될 경우 대외적·안보 정책적 측면 등에 대한 외무부의 중간 보고	1990년 3월 5일	서독정부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겐서 서독 외무장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를 구성; 수상청; 슈텐베르크 서독 국방부장관; 그 외 연방장관 및 정부관료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39 E
187	영국 대사의 2+4회담에 대한 서신-텔릭 국장의 연방 수상 헬무트 콜에 대한 보고서 초안	1990년 3월 6일	수상청; 수상청 (외교 및 내각 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국장 겸 수상청 차관보 텔릭; 연방 수상 콜	Bundesarchiv, BArch/BK, 222-35400 De 7 Band 2
188	독일 연방의회 외교위원회 64차 회의-독일문제-서독 외무부 214분과 보고	1990년 3월 7일	서독 외무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담당) 214분과 과장 대리 쉬림브겐스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189	1990년 3월 7일 (서독) 연방의회 군축 및 군비 통제위원회에서의 동독 외무부와 국방부의 발언-서독 외무부 201과의 보고	1990년 3월 8일	(서독) 연방의회 군축 및 군비 통제위원회; 동독 외무부 대사 빌란트; 동독 국방부 한스 베르너 다임 소장; 서독 외무부 (나토 및 방위 담당) 201과 과장 대리 그뢰닝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2 E
190	2+4회담의 일환으로 개최된 연방정부 및 동독정부 대표자 간 동베를린 회담	1990년 3월 9일	수상청; (독일정책 담당) 20국 국장 뒤이스베르크; 연방정부 및 동독정부 대표자	Bundesarchiv, BArch/B 136/20244, 221-34900 Wi 14 Band 1
191	2+4회담 준비를 위한 동독과 서독 간의 회담-동독 외무부의 보고	1990년 3월 9일	동독 외무부 외무차관 크라바츨;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를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92	서독 연방 외무부에 대한 연방 재무부의 서신-1990년 3월 13일 예정 베를린 개최 독-독 간 경제·통화공동체 준비 전문가 위원회를 위한 연방장관들 간 기본법 23조 관련 합의문	1990년 3월 10일	서독 연방 재무부장관 슈미트-블리이프로토로이; 연방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 연방 내무부; 연방 법무부; 연방 경제부; 연방 노동·사회질서부; 연방 내독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 E
193	폴란드 서부 국경-콜 수상에 대한 히르트만 국장의 보고서 초안	1990년 3월 13일	수상청; 수상청 (외무부, 경제협력부 담당) 21국 국장 히르트만; 연방 수상 헬무트 콜	Bundesarchiv, BArch/BK, 212-35400 De 39 NA 2 Band 2
194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산하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회의	1990년 3월 13일	수상청; 국내정치 기본문제 실무단; 연방 내무부장관 쇼이블레	Bundesarchiv, BArch/BMI, GE-020 052-2/1 Band 1-Aktenzeichen G1-0020 008-AA/1
195	독일통일' 내각위원회-'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산하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회의-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제정치과 (210과) 보고	1990년 3월 13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과장 람바흐; 외무부 21실 회의 실장; 연방 외무장관 겐서; 서독 총리청 (외교 및 내독 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텔치 국장; 서독 총리청 (독일정책 담당) 20국 국장 뒤이스베르크; 연방 국방부장관 슈테페베르크; 연방 법무부장관 앙겔하르트; 연방 내독부장관 빌름스; 연방 재무부; 연방 경제부; 연방 내무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196	본에서 열린 2+4회담(최초의 실무자급 회담)-동독 외무부 보고	1990년 3월 14일	동독 외무부 외무차관 크라바츨;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롭; 미국 참사관 조엘락; 미국 국장 라이스; 소련 외무부차관 아다미츨; 소련 대사 크위진스키; 영국 정치국장 웨스턴; 프랑스 정치국장 뒤푸크 등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197	독일문제의 맥락과 소련의 인보 이익-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의 보고	1990년 3월 14일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과장 노이베르트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8 E
198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헬싱키협정 수립안보제 안으로의 포섭-서독 외무부 (나토 및 방위 담당) 201과의 보고	1990년 3월 15일	서독 외무부 (나토 및 방위 담당) 201과 과장 드레어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39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99	동독을 서독의 일부로서 유럽공동체에 포 함시키는 데 필요한 유럽공동체법의 변경	1990년 3월 16일	서독 연방경제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98439E
200	프라하에서 열린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 외무장관 회담-프라하 주재 서독 대사 의 보고	1990년 3월 17일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 외무장관들; 프라하 주재 서독 대사 헤르만 후버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201	서독 외무부와 동독 외무부 공동 외교위원 회의 선임-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제정치과 (210과) 보고	1990년 3월 18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진 독일문제를 포괄 하는) 국제정치과(210과); 동독 외무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39 E
202	구동독지역을 포함하는 나토조약 적용 영 역의 확대	1990년 3월 19일	서독 외무부 법무국 (일반 국제법 담당) 500과 과장 힐겐베르크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98439E
203	겐서 연방 외무장관과 세바르드나체 소련 외무장관의 1990년 3월 22일 빈트후크회 담 논의안	1990년 3월 19일	서독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에두아르 트 세바르드나체 소련 외무장관; 서독 외무부 정치 국 (베를린 및 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 (210과) 과장 람바흐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0 E
204	세바르드나체 소련 외무장관의 국내 정치적 입장-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의 보고	1990년 3월 19일	세바르드나체 소련 외무장관; 서독 외무부 (소련 담 당) 213과 과장 노이베르트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1.641 E
205	통일독일과 소련의 동독지역에서의 소련군 의 철수에 대한 협정-워킹페이퍼	1990년 3월 20일	외무부 법무국 신하 '국제법적 문제' 담당 실무단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79532E
206	독일통일의 나토에 대한 영향과 관련한 정 점 리스트-서독정부 나토 상주 대표와 나 토 사무총장 베르너의 대화	1990년 3월 20일	서독정부 나토 상주 대표 플리츠 박사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0 E
207	동독 최고인민회의 선거에 대한 헝가리측의 입장-부다페스트 주재 동독대사관의 보고	1990년 9월 24일	부다페스트 주재 동독 대사 페레스; 헝가리정부 대 표 및 정치인들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R 334/09 E
208	독일통일 관련 안보 문제-나토 지문단 (NAC)과 폴란드 외무장관 간의 비공식 대 화-서독정부 브뤼셀 상주 나토 대표의 보고	1990년 3월 21일	스쿠비체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 나토 지문단 (NAC); 서독정부 나토 상주 대표 플리츠 박사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09	독일문제의 해결 과정-미국 국무부 기획실 검토 사항-워싱턴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	1990년 3월 21일	미국 국무부 기획실 독일 전문가 로저 조지;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대리 파슈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1 E
210	빈트후크에서 열린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미국 국무장관 베이커의 회담-외무부 연방 장관실의 보고	1990년 3월 21일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 외무장관;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 서독 외무부 연방장관실 실장 프랑크 엘베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211	서독 외무장관 겐셔와 소련 외무장관 셰바르드나제에의 빈트후크회담-외무부 외무장관실 보고	1990년 3월 22일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 외무장관; 에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양국 대표단; 서독 외무부 연방장관실 실장 프랑크 엘베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212	동독 선거 및 독일통일 과정에 대한 프랑크 스투크 임장-파리 주재 서독대사관의 보고	1990년 3월 23일	파리 주재 서독대사관 정치국 지문역 헬무트 엘펜캄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3 E
213	1990년 3월 14일 본에서 열린 실무자급 2+4회담 전개 및 결과에 대한 외무부의 보고	1990년 3월 27일	서독 실무자급 2+4회담 대표단;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담당) 210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214	독일통일' 내각위원회-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신하'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회의-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제정치과 (210과) 보고	1990년 3월 27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과장 람버흐; 연방 외무장관 겐셔; 서독 총리청 (외교 및 내독 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철폐 국장; 연방 국방부 장관 슈톨텐베르크; 연방 법무부장관 잉겔하르트; 연방 내독부장관 빌름스; 연방 재무부; 연방 경제부; 연방 내무부장관 쇼이블레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215	연방 외무장관 겐셔의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에 대한 서신-경제적 협력에 대한 전문가 회의	1990년 3월 28일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 외무장관; 에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 외무장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216	유럽의 궁극 문제에 대한 소련측 임장-최근의 변화-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의 분석	1990년 3월 29일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과장 노이베르트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8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24	독-영 관계와 통일	1990년 4월 6일	미기렛 대저 영국 수상; 연방 수상 헬무트 콜; 헬싱 키회의; 나토; 서유럽 연합	Sommer, Theo. 1990. Die Lady läßt sich nicht erreichen. In: Die Zeit. 06.04.1990. Nr. 15. S. 3.
225	서독 연방 수상실정에 대한 외무부의 국회 및 내각 담당과의 전문-내각 내 논의를 문서 기록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통지	1990년 4월 6일	서독 외무부 (국회 및 내각 담당) 011과 과장 이형 아; 수상청 (연방-연방주 관계, 연방회의, 연방 수상 과 연방주 총리들의 회담 담당) 122과 퀴스터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226	독일통일 달성 시 국제법 조약들의 변경	1990년 4월 12일	서독 외독부 법무국 산하 '국제법적 문제' 담당 실무 단 및 실무단 단장 아이텔 국장; 외무부 법무국 (일반 국제법 담당) 500과 과장 뒤쉬너; 외무부 법무국 (국제조약 담당) 501과; 외무부 법무국 (진후 문제-군대 주둔, 외국자산, 외채, 보상, 서독영토 범위 등 의 전쟁 및 점령으로 비롯된 문제 담당) 503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98439E
227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의 서독 가입 이후 서독의 국제 조약 관련 규율	1990년 4월 12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 하는) 국제정치과(210과) 과장 람버흐; 서독 내무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56313E
228	본에서 열린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소련 외무차관 카르포프의 회담-외무부 21실의 보고	1990년 4월 13일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 외무장관; 소련 외무차관 빅토르 카르포프; 서독 외무부 21실 회의 실장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229	진 유럽적 총체적 인보체계-서독 외무부 (나토 및 방위 담당) 201과의 보고안	1990년 4월 17일	서독 외무부 (나토 및 방위 담당) 201과 과장 대리 그뢰닝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8 E
230	동독의 유럽공동체 가입(Beitritt)에 대한 유럽 파트너들의 반응	1990년 4월 23일	유럽위원회 의장 자코 들로르; 연내 시장 유럽공동체 특임관 마르틴 방에만; 동독; 서독; 유럽공동체	Durch die Hintertür. In: Der Spiegel. 23.04.1990. Nr. 17. 44. Jahrgang. S. 35-39.
231	새 동독정부에 대한 소련측의 구두 항의 (Demarche)-서독 외무부 정치국 210과의 보고	1990년 4월 23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 하는) 국제정치과(210과) 과장 람버흐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13 E
232	본에서 열린 겐셔 서독 외무장관과 메켈 동독 외무장관의 회담	1990년 4월 24일	한스-디트리히 겐셔 서독 외무장관; 마르쿠스 메켈 동독 외무장관; 양국 정부 대표단; 동독 외무부; 서독 연방 외무부 21실 회의 실장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7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33	1990년 4월 26-27일 워싱턴에서 열린 독 일과 미국 간 기획실 회담-서독 외무부 기 획실 보고	1990년 4월 26일	미국 국무부 기획실 실장 로스; 미국 국무부 소속 바 톨로뮤 및 로빈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 속 블레이크 및 캔터; 미국 국방부 소속 웨인로드; 서 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 치트론 및 기획실 헤르만 에 라트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1 E
234	2+4회담 진행에 대한 영국의 입장-인보정 책적 문제들-런던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	1990년 4월 27일	영국 외무 · 영연방부(FCO) 정치국장 웨스턴; 영국 외무 · 영연방부 인보문제 담당 콜먼; 런던 주재 서 독 대사 폰 리히트호펜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0 E
235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특별 회의-콜 수 상의 묘사	1990년 4월 28일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유 럽위원회 의장 자코 들로르; 유럽이사회	http://www.kas.de/wf/de/71.4565
236	1989년도 스트라스부르 정상회담 및 1990년도 더블린 정상회담-볼프강 쇼이 블레의 묘사	1990년 4월 28일	연방 수상 헬무트 콜	http://www.kas.de/wf/de/71.4563
237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특별 회의-통일 의 지지	1990년 4월 28일	유럽공동체 회원국들; 유럽위원회	http://www.kas.de/wf/de/71.4568
238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특별 회의-동독 의 유럽공동체 귀속 관련 조치들	1990년 4월 28일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유럽위원회	Bulleti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April 1990, Nr. 4, S. 8.
239	서독과 동독의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대한 소련측 비공식 문서(Aide-Memoire)-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의 보고	1990년 4월 28일	소련 외무차관 코발조프;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클라우스 블레히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4 E
240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특별 회의-호르 스트 텔칙의 묘사	1990년 4월 30일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덴마크 총리 폴 슬뤼터; 이탈리아 총리 줄리오 안드레오티; 유럽이사회 의장 찰스 제임스 호히; 소 련 외무부 서유럽 담당 국장 겸 특별 대사 알렉산더 본다렌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 예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http://www.kas.de/wf/de/71.4564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41	1990년 4월 29일 메켈 외무장관과 셰버르 드나체 외무장관의 회담	1990년 4월 30일	동독 외무장관 메켈; 소련 외무장관 셰버르드나체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2
242	독일 및 전승 4개국에 대한 최종 규정을 논의할 2+4 외무장관급 회담을 위한 외부부의 초안	1990년 4월 30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98448E
243	동·서독 간 통일에 대한 소련측 입장-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의 현황 보고	1990년 4월 30일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3 E
244	통일이 유럽공동체의 수입 및 지출에 주는 영향	1990년 5월 1일	유럽공동체; 동독; 유럽위원회; 더블린 유럽이사회; 서독; 연방은행	Generaldirektion Wissenschaftlicher Dienst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Hrsg. 1990. The impact of the German unification on revenue and expenditure under the Community budget, Luxembourg: Office des publications officielles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S. 146-151.
245	두 독일국가의 경제·화폐통합의 유럽통합에 대한 영향	1990년 5월 1일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동독; 서독; 유럽공동체;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유럽경제공동체	Clerc, Denis. Une chance ou un handicap pour l'Europe? In: Le Monde diplomatique, Mai 1990, Nr. 434, S. 6.
246	통일이 유럽공동체에 주는 영향	1990년 5월 1일	동독; 서독;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유럽위원회; 유럽공동체	Generaldirektion Wissenschaftlicher Dienst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Hrsg. 1990. The impact of the German unification on the European Community, Luxembourg: Office des publications officielles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S. 4-10.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47	독일통일과 유럽의회-서독정부의 연락 및 동독의 유럽의회 회의 참석-서독 외무부 410과 회의 준비문서	1990년 5월 3일	유럽의회; 동독 외무장관 메켈; 서독 외무부 (유럽 공동체, 유럽공동체 관련 기본 원칙 및 법적 문제, 제도, 가입, 유럽공동체 예산 담당) 410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248	본에서 열린 겐서 서독 외무장관과 메켈 동독 외무장관의 회담	1990년 5월 7일	한스-디트리히 겐서 서독 외무장관; 마르쿠스 메켈 동독 외무장관; 양국 정부 대표단; 서독 연방 외무부 21실 회의 실장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249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특별 회의에 대한 연방정부 성명	1990년 5월 11일	연방정부;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연방 수상 헬무트 콜; 유럽위원회; 유럽위원회 의장 자코 들로르; 유럽공동체; 서독	Bulletin des Presse- 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11.05.1990, Nr. 58, S. 453-456.
250	전승 4개국의 권한 및 책임의 소멸에 대한 보고	1990년 5월 14일	서독 외무부 정치과 (베를린 및 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올리우스 게오르크 루이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48E
251	서독 외무부와 (새로운 인원이 배치된) 동독 외무부 간의 인적 협력 및 자문-1990년 5월 11일 동베를린에서 열린 첫 대화-서독 외무부 101과 보고	1990년 5월 14일	서독 외무부 정부 대표단; 동독 외무부 정부 대표단; 서독 외무부 (고위직, 명예영사 담당) 101과 베버-로르취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252	동독의 유럽공동체 귀속에 대한 유럽이사회 의장 연설	1990년 5월 16일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의장 찰스 제임스 호히; 동독; 유럽공동체; 서독; 중·동유럽 국가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헬싱키회의;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 아프리카 국가들, 카리브해 및 태평양 지역국가들 그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유엔	http://www.ena.lu
253	통일에 대한 유럽의회의 결의	1990년 5월 17일	유럽의회; 더블린 유럽이사회; 동독 최고인민회의; 동독; 서독; 유럽공동체; 중·동유럽 국가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헬싱키회의; 유럽위원회	Bulleti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18.06.1990, Nr. C 149, S. 172-174.
254	동독대사관과의 연락 및 협력에 대한 벨그라드 주재 서독 대사관의 보고	1990년 5월 23일	벨그라드 주재 서독 대사 한스외르크 아이프; 벨그라드 주재 동독대사관; 서독 외무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55	동독과 이스라엘 간의 외교 관계 수립-동독측 임시 대리 대사(charge d'affaires)의 서독대사관으로의 인계 등과 관련한 서독외무부 건물에서의 이스라엘 외무부차관 메르하브와의 대화-서독 외무부 (근동 담당) 310과	1990년 5월 23일	이스라엘 외무부차관 메르하브; 서독 외무부 (근동 담당) 310과 카울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256	1990년 6월 1일 겐서 서독 외무장관과 메켈 동독 외무장관의 회담-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대화안	1990년 5월 30일	겐서 서독 외무장관; 메켈 동독 외무장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257	동독 외무부/서독 외무부 공동위원회 개최 회의에서의 겐서 서독 외무장관의 모두 성명	1990년 6월 1일	겐서 서독 외무장관; 서독 외무부; 동독 외무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258	동독과 이스라엘 및 대한민국과의 국교 수립-서독 외무부차관 주트호프와 동독 외무부차관 돔케의 대화-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제정치과(210과) 보고	1990년 6월 1일	서독 외무부차관 주트호프;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 담당) 국제정치과(210과) 브란덴부르크; 동독 외무부차관 돔케 박사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259	서독 외무부와 동독 외무부 간 연락위원회 의 첫 번째 회의-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제정치과(210과) 보고	1990년 6월 1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 (210과) 과장 림바흐; 동독 외무부; 서독 외무부와 동독 외무부 간 연락위원회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260	동베를린에서 열린 겐서 서독 외무장관과 메켈 동독 외무장관의 회담-서독 연방 외무부 21실 보고	1990년 6월 1일	한스-디트리히 겐서 서독 외무장관; 마르크스 메켈 동독 외무장관; 서독 연방 외무부 21실 회의 실장; 동독 외무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7 E
261	동독 외무부 1990년도 하반기 수입 및 지출 개관	1990년 6월경	동독 외무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262	통일 전까지 외교정책의 상호 보고, 자문 및 협의를 내용으로 동·서독 외국 대표부에 전달된 지시-서독 외무부차관 주트호프	1990년 6월 3일	서독 외무부차관 주트호프; 동독 외무부; 동·서독 외국대표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63	파리 주재 동·서독대사관 간의 협력-파리 주재 서독대사관의 보고	1990년 6월 12일	파리 주재 서독 대사 페퍼; 서독 외무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264	외무부 본부 내 독일정책 관련 조직운영 조차-서독 외무부 (조직 운영 담당) 110과	1990년 6월 12일	서독 외무부 (조직 운영 담당) 110과; 서독 외무부 산하 각 조직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0 E
265	베를린 문제 실무단(AGB) 회의-각 연방부에 대한 외무부의 전문	1990년 6월 14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과장 람버흐; 서독 연방 수 상실; 각 연방부; 서베를린 시정부(Senat) 연방과; 베를린문제 실무단 프랑스 정치전문역 그라생; 영국 정치전문역 대리 찰턴; 미국 정치전문역 대리 거스;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단장 루이; 서베를린 시정부 시장실 실장 대리 브루흐; 그 외 각 대표자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2 E
266	1990년 6월 18일에 열린 동·서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 간의 대화-서독 외무부 기획실 보고	1990년 6월 18일	서독 외무부 기획실 소속 바이스 박사; 동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 알브레히트 교수; 폰 뎀 하겐 대령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2 E
267	독일 외교정책 관련 연방의회 의원 엠케의 1990년 6월 15일자 서신에 대한 입장-연방 외무장관 겐서에 대한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보고안	1990년 6월 21일	사민당 연방의회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대리 연방 의회 의원 엠케; 연방 외무장관 겐서; 서독 외무부 (나토 및 방위 담당) 201과 과장 대리 그뢰닝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2 E
268	동독의 해외 토지에 대한 동·서독 간 전 문가 회담-서독 외무부 111과 보고	1990년 6월 21일 및 7월 13일	서독 외무부 (해외대표부 대리 및 시설 관리 담당) 111과; 동독 외무부; 간실 부문 전문가들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269	동독정부의 더블린 유럽이사회 특별 회의 참석	1990년 6월 27일	동독 총리 로타 드 메지에르; 유럽이사회 의장 찰스 제임스 호히;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예두 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Frankenberger, Klaus-Dieter. De Maizière baut Brücken über alle Gräben.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7.06.1990.
270	워싱턴 주재 동독대사관의 지원 요청에 대한 워싱턴 주재 서독대사관의 보고	1990년 6월 28일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위르겐 루프스; 워싱턴 주재 동독대사관; 서독 외무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71	2+4조약 내 국제법적 규정들과 관련한 동독 측의 '앵점 리스트'-서독 외무부 정치국에 대한 동독 외무부 기획실의 전문	1990년 7월 1일	동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 알브레히트 교수;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3 E
272	본에서 열린 독-독 간 유엔 실무단 2차 회의-서독 외무부 전문	1990년 7월 5일	동독, 서독 유엔 실무단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273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내 동독의 지위 및 국제법적 합정-서독대사관 보고; 경제상호원조회의의 동독 대표부 보고	1990년 7월 10일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동독대표부;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방켈만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1.668 E
274	통일 시점의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소련 내 외교적 대표권함의 이전 과정-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의 보고	1990년 7월 13일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클라우스 블레히; 서독 외무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275	2+4조약과 통일조약의 관계에 있어 동·서독 외무부들 간의 관할권에 대한 자문-서독 외무부 21분과의 보고	1990년 7월 16일	동독 외무부; 서독 외무부 21분과 과장 폰 슈투드니츠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4 E
276	통일조약에 대한 1990년 7월 18일 '독일 통일' 내각위원회 회의-서독 연방 외무부 21실 보고	1990년 7월 18일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서독 외무부 21분과 과장 폰 슈투드니츠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277	'독일통일' 내각위원회에 보내는 1990년 7월 17일 파리에서 개최된 2+4회담에 대한 서독 외무부의 보고-서독 연방 외무부 2국 의 보고	1990년 7월 18일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서독 연방 외무부 2국 국장 대리 회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278	통일조약에 대한 서독 외무부의 발표 보고-서독 외무부 21분과를 통한 서독 연방 내무부의 보고	1990년 7월 20일	서독 연방내무부 소속 뒤스부르크; 서독 외무부 21실 폰 슈투드니츠 실장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279	동독의 해외 기관 접수를 통한 새로운 서독 해외대표부 설립-서독 외무부 111과 보고	1990년 7월 24일	서독 외무부 (해외대표부 대리 및 시설 관리 담당) 111과 바인텔; 서독 외무부 (조직 운영 담당) 110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80	통일조약과 관련한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회의-서독 외무부 21실 보고	1990년 7월 24일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서독 외무부 21분과 과장 폰 슈투드니츠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281	'독일통일' 내각위원회-동독에서의 사태 변화 및 동·서독 간의 협상-서독 외무부 21실 보고	1990년 7월 31일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서독 외무부 21분과 과장 폰 슈투드니츠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282	동독의 해외 청구권 청산-모든 서독 외국 대표부에 보내는 서독 외무부 422과의 전문	1990년 8월 1일	서독 외무부 (해외무역정책 원칙적 문제, 국제경제지 원, 수출 및 해외투자 서비스, 대외 채무 관련 원칙적 문제, 국가 보험 무역 청구권의 차환(Umschuldung), 박람회 등 담당) 422과 소속 용애; 각 서독 외국 대 표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1.668 E
283	모스크바 소재 동독 토지의 인수 및 사용-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에 보내는 서독 외무부 (해외대표부 대리 및 시설 관리 담 당) 111과의 전문	1990년 8월 1일	서독 외무부 (해외대표부 대리 및 시설 관리 담당) 111과 우르모나이트; 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1.668 E
284	독일의 미래/내독부의 동독 연구-서독 외 무부 기확실 보고	1990년 8월 1일	서독 연방 내독부장관 빌름스; 연방 외무장관 겐서; 서독 외무부 기확실 실장 치트론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285	서독과 동독 해양정책 간의 조정-외무부에 서 열린 관련기관 회의-외무부 504과 보고	1990년 8월 6일	솔레스비히-홀슈타인주 내무부; 본(Bonn) 주재 브 레멘, 니더작센주, 솔레스비히-홀슈타인주 등 각 연 방주 대표부; 서독 외무부 법무부 (남극회의 및 해상 법, 항공법, 우주법, 국제환경법, 국제해양법 등 국제 법적 특수부분 담당) 504과 과장 대리 킨더렌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286	연방 하원 독일통일위원회의 지문-서독 외 무부 정치국 국제정치과(210과) 보고	1990년 8월 9일	서독 연방 하원 독일통일위원회; 서독 외무부 정치 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 (210과) 과장 람바흐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5 E
287	올란-바토르 주재 동독대사관의 미래-동 독 대사의 지원 호소문-모스크바 주재 서 독 대사의 보고	1990년 8월 20일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대리 하이젠; 올란-바토르 주재 동독 대사 쉘너; 서독 외무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88	독일통일 이후 동독 외무부 및 동독 해외대표부 청산 관련 과제들-서독 외무부 회의-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보고	1990년 8월 20일	서독 외무부; 동독 외무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289	서독 외무부 직원들의 동독 외무부 소유 대지 시찰-서독 외무부 115과 보고	1990년 8월 20일	서독 외무부 (내부 업무 담당) 15과 소속 아우어; 동독 외무부 소속 비스만 등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290	메켈 동독 외무장관의 동독 외무부 직원 개별 연설	1990년 8월 20일	동독 외무부; 메켈 동독 외무장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7 E
291	폴란드 내 동독기관들의 미래-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의 지시 요청	1990년 8월 21일	바르샤바 주재 서독 대사 관터 크닉슈테트; 서독 외무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292	동독의 외교적 대표 업무의 중단 및 대사관 및 영사관의 폐쇄-동독 외무부 2국 현황 보고	1990년 8월 23일	동독 외무부 2국 인사 · 교육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293	동독 외무부 해체 및 동독 해외대표부 및 다른 외교기관의 청산-서독 외무부 (조직 운영 담당) 110과 보고안	1990년 8월 23일	서독 외무부 (조직 운영 담당) 110과 소속 크리스티안 마티아스 술라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294	독일통일로 인한 외무부 업무의 증가-서독 외무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담당) 214 분과의 의견	1990년 8월 23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롬 국장; 서독 외무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담당) 214 분과 소속 엘펜캠퍼와 하악; 외무부 중앙행정실장 안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295	동 · 서독 외무부의 연락그룹-독일통일의 통지에 관한 유엔의 지문-서독 외무부 정치국 230과 보고	1990년 8월 24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유엔-원칙적 문제, 총회, 안전 보장이사회 담당) 230과; 동 · 서독 외무부의 연락그룹; 유엔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296	동독 및 서베를린 주재 외국 대사관들의 지위에 대한 독일통일의 영향-외교 · 영사 대표부들과 서독 외무부 내 각 부서에 보낸 서독 외무부 701과의 통문	1990년 8월 28일	서독 외무부 (독일 내 외국 대사관 및 영사부 및 관련 외교 행사, 의전 및 훈장 담당) 701과; 모든 외교 · 영사 대표부들; 서독 외무부 내 각 부서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9.532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97	독일통일과 관련한 기술적인 절차에 대한 해당 소재국 정부 통지용 서독 외교 대표부 서한-모든 독일연방공화국 외교 대표부에 전달한 외무부 5국의 통지문 건본 문서	1990년 8월 29일	서독 외무부; 독일연방공화국 외교 대표부; 각 해당 소재국 정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298	동독 외무부 인사에 대한 질의-동독 직업 외교관연맹의 입장	1990년 9월 1일	동독 직업외교관연맹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0 E
299	서독 외무부 직원들에 대한 겐셔 외무장관의 답화-2+4조약 서명 이후의 답화 내용 요약	1990년 9월 중순 추정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 외무장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300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회의-신연방주 가입으로 인한 연방·연방주 공동 조정사무소(Bund-Länder-Clearingstelle)의 확대	1990년 9월 19일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서독 외무부 정치국(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국(210과) 과장 람바흐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8 E
301	(통독) 외무부에서 동독 외무부 직원들의 계속고용 문제-겐셔 외무장관의 동독 드 메지예르 총리에 대한 서한	1990년 10월 1일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 외무장관; 동독 총리 겸 외무장관 드 메지예르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257.754 E
302	레닌그라드와 민스크 소재 동독 보유 토지의 사용 가능성 검토-서독 외무부(해외대표부 대지 및 시설 관리 담당) 111과의 출장 보고	1990년 10월 2일	서독 외무부(해외대표부 대지 및 시설 관리 담당) 111과 소속 브라운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1.668 E
303	모스크바와 키예프 소재 동독 보유 토지의 사용 가능성 검토-독일 외무부(해외대표부 대지 및 시설 관리 담당) 111과의 출장 보고	1990년 10월 29일	독일 외무부(해외대표부 대지 및 시설 관리 담당) 111과 소속 브라운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1.668 E
304	구동독의 유럽공동체로의 통합	1993년 5월 1일	동독지역 연방주들; 유럽공동체; 유럽위원회 의장 자크 들로르; 연방 수상 헬무트 콜; 폴란드; 헝가리; 독일 연방의회	Eppe, Franz. Les difficultés de l'intégration de l'ex-RDA dans la Communauté. In: Revue du Marché commun et de l'Union européenne. Mai 1993. Nr. 368. S. 405-409.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05	유럽정책에 대한 독일 연방의회 내 논쟁	1994년 5월 27일	독일 연방의회;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라인란트-팔츠 주총리 루돌프 샤프핑; 독일 연방의회 기민당/기사당 연합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 외무장관 클라우스 킨켈; 민주사회당/좌파당 원내교섭단체 소속 한스 모드로우; 동맹 90/녹색당 원내교섭단체 소속 볼프강 울만; 재무부장관 티오 바이겔; 사민당 원내교섭단체 유럽정책 대변인 하이데마리 비쇼렉-조일; 자민당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데리 우타 뷔르펠; 독일 연방의회 의원 루돌프 카를 크라우제(무소속/공화주의자); 독일 연방의회 의원 올리히 브리프스(무소속); 독일 연방의회 의원 오르트빈 로백(무소속)	Deutscher Bundestag, 12. Wahlperiode, 231. Sitzung, Plenarprotokoll 12/231
306	동독의 유럽공동체 귀속(Eingliederung) 형태	1995년	유럽공동체; 서독; 유럽 원자력공동체(EURATOM); 유럽 경제공동체; 동독;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 예곤 크렌츠; 동독 동독내각회의 의장 한스 모드로우;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Genscher, Hans-Dietrich. 1995. Erinnerungen. Berlin: Siedler. S. 391-393.

문서 요약

문서 요약(문서번호 1~306)

담당자 / 기관_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 트루만 미국 대통령, 처칠 영국 수상

내용_

이 문서는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한 후 베를린 근교 포츠담시에 있는 시실리엔궁전에서 미국, 소련, 영국의 국가수반들이 모여서 독일의 장래에 관해 논의한 내용을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조약이 아닌,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공동성명서로 발표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외무장관협의회 구성: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 외에 프랑스와 중국의 외무장관도 포함하는 외무장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본부를 런던에 설치한다. 본 외무장관협의회는 전쟁 시에 적국이었던 이태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핀란드와 평화협정을 준비하여 국제연합에 제출하며, 차후 독일과의 평화규정을 작성하도록 한다.

독일의 통치권: 독일은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의 승전연합군에 의해 점령된다. 4대 승전국은 독일의 통치권을 인수하며, 점령지역의 점령군 사령관이 통치권을 행사한다. 점령군 사령관은 본국 정부의 명령만 받는다. 독일 전역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점령군 사령관 연합회의 감독위원회가 결정권을 행사한다.

점령통치의 기본원칙: 전후 독일의 탈무장화, 탈나치화, 민주화, 분권화가 점령통치의 기본 원칙이다. 독일의 단일정부는 일단 구성하지 않되 재정, 교통, 운송, 무역, 산업 분야에서는 '중앙 행정기구'를 구성하여 연합군 감독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영토변경: 폴란드 국경이 서쪽으로 이동된 것을 승인한다. 동부지역의 영토를 소련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폴란드는 서쪽에 영토를 받아야만 한다. 서방연합국은 독일과 평화협정을 통해 최종적인 규정에 합의할 때까지 오데르-나이세 강을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으로 수용하기로 하였다.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에서의 독일인 추방: 이들 국가에 잔류해 있는 독일인을 추방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독일인의 '추방'도 인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전쟁피해의 배상: 전승국은 포츠담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 배상액의 한도뿐만 아니라 절차도 확정되지 않았다. 소련은 전후 자국 경제의 복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많은 배상금을 받기를 원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유럽경제의 복구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련에게 소련군 점령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배상금을 받으라고 하였다.

출처_ Dokumentarchiv.de: <http://www.documentarchiv.de/in/1945/potsdamer-abkommen.html>(Stand 21.12.2015)



문서 번호 2 소련과 폴란드 간 국경조약
1945년 8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소련 최고인민회의, 폴란드공화국 국민의회

내용_

소련과 폴란드공화국 양국 간 국경에 대한 조약은 1945년 8월 16일부로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서는 얄타회담의 결정과 동일하게 소련과 폴란드 공화국 간의 국경을 커즌 선(Curzon Line)을 따라 확정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몇 개 지역은 폴란드에 귀속되게 되었다. 이 조약의 제2조에서는 소련과 폴란드 공동위원회가 현지에서 깃발을 꽂아 표시하게 될 새로운 국경선을 명시했다. 평화조약이 체결되어 영토문제에 대한 최종적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발트해에 연한 소련-폴란드 간 국경 부분은 베를린회담의 결정에 따라, 브라운스베르크-골담의 동북쪽 방향으로 발트해 단치히만의 기점에서 시작되는 선이 새로운 국경선과 만나는 지점을 이은 선에 따라 확정하기로 하였다.

출처_ Kraus, Herbert/Heinze, Kurt. Hrsg. 1953. Völkerrechtliche Urkunden zur europäischen Friedensordnung seit 1945. Bonn: Schimmelbusch & Co.

담당자 / 기관_ 소련정부, 미국정부, 영국정부, 프랑스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소련 당국이 미국 및 영국과 프랑스의 대독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1952년 3월 11일에 프라우다지에서 발표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련정부는 미국이 독일과 평화협정을 아직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소련은 지체 없이 독일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고려할 것과, 앞으로 빠른 시기에 협의를 통해 평화조약의 초안을 준비하여, 모든 이해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그에 상응하는 국제 회담에 이를 검토에 부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한 평화협정의 초안은 전 영토를 포괄하는 단일한 독일정부(eine gesamtdeutsche Regierung)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화협정은 유럽평화에 큰 의미를 지닐뿐만 아니라, 독일 군사주의의 부활 및 독일의 군사적 위협을 저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소련은 독일과의 평화협정의 기초가 될 초안을 작성, 서방 강국들의 검토를 위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 문서에 포함된 초안에는 정치적 지도원칙들 및 영토, 그리고 경제적·군사적 지도원칙들이 나열되어 있다.

출처_ Prawda vom 11.03.1952(deutsche Übersetzung im Europa-Archiv, 1952, 7. Folge, S. 4832-4833)

문서
번호 4

서독과 서방 전승 3개국 간의 관계에 대한 조약(독일조약)
1952년 5월 26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연방정부 수상(1949-1963년 재임) 겸 연방 외무장관(1951-1955년 재임)
아데나워, 영국 외무장관 이든,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 프랑스 외무장관 슈만

내용_

이 문서는 2차 세계대전의 종결 후 서방연합국에 점령된 서부 독일지역에 독일연방공화국이 1949년 4월 10일에 건국되고 난 후에 여전히 프랑스령으로 남아 있던 자르지방을 제외한 서독지역에 대한 서방연합군의 점령규약이 해지된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 일명 독일조약으로 불린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승국에게 서독의 국내문제에 간섭할 권한을 보장해주는 점령조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서독을 유럽공동체 내로 통합하기로 한 서명국들의 의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공동의 목표는 통일된 독일과의 평화협정의 체결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독일의 국경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독일조약을 통해 서독은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와 함께 연합군 통치위원회(Die Alliierte Hohe Kommission) 및 주특임관청(Dienststellen der Landeskommissare)들은 해체되며, 서방전승국은 서독과 대사급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서독정부가 아직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들과 협상을 할 때, 서방 전승국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독에 자문을 준다. 서독정부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서방 전승 3개국은 다른 국가들에 대해 또 국제기구들에서 서독의 이해를 대변해 준다. 자신들의 전투 병력의 서독 내 배치와 관련해서 서방 전승 3개국은 서독에 자문을 준다. 서독은 유럽 방위 공동체에 참여한다[주: 하지만 이것은 실현되지 않았다] 서방 전승 3개국은 연방 정부와의 자문을 거쳐 서독 전역에 혹은 그 일부에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54, Nr. 3, 29.03.1954, S. 57-67

문서
번호 5

베를린에 대한 원조와 관련한 서독의 성명
1952년 5월 26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연방 수상(1949-1963년 재임) 겸 연방 외무장관(1951-1955년 재임) 아테나위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가 동독영토 속에 고립된 섬으로 남은 서베를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특별한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독은 서베를린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및 고용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동시에 서베를린 시정부도 예산균형을 위해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서독이 해외로부터 받은 원조는 적절한 비율로 서베를린에도 제공되도록 하며, 서베를린의 해외무역을 장려하고, 이 지역이 독일 마르크의 통화권 내에 남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 적절한 현금 공급 및 도시의 긴급상황에 대비한 물자도 비축할 것이다. 서독은 서독의 여타 지역과 서베를린 간의 상업 및 교통을 통한 연결을 정상적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 밖에도 서독이 체결한 국제 협약에 서베를린을 포함시키는 일도 더 용이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54, Nr. 3, 29.03.1954, S. 68-69

문서
번호 6

서독과 서방 전승 3개국 간의 중재법원 규약
1952년 5월 26일

담당자 / 기관_ 서독정부, 영국정부, 미국정부, 프랑스정부

내용_

서독과 서방 전승 3개국 간에 독일조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다룰 권한을 지닌 중재법원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중재법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3인은 연방정부가, 전승 3개국이 각각 1인씩 총 3인을, 그리고 기타 국가들이 3인의 '중립적 구성원'을 지명한다. 구성원의 지명에 있어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국제법원의 원장에게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의 구성원은 임기 및 그 이후에 면책권을 누린다. 독일 국적이 아닌 법원의 판사들은 서독영토 내에서 외교사절단장에 상당하는 특권을 부여받는다. 이 법원에서의 협상은 공개로 하나, 자문은 비공개로 한다. 법원의 판결은 해당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지닌다. 이 법원은 그 판결의 집행 만기일을 규정할 수 있다. 법원의 공용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및 영어로 한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54, Nr. 3, 29.03.1954, S. 69-77

문서
번호 7

서독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한 조약
1952년 5월 26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연방 수상(1949-1963년 재임) 겸 연방 외무장관(1951-1955년 재임) 아데나워, 영국 외무장관 이든,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 프랑스 외무장관 슈만

내용

외국 군대는 원칙적으로 서독의 법을 준수하며 그 곳에서 어떠한 종류의 정치활동도 하지 않는다. 외국 군대는 외국인의 등록 및 통제에 대한 독일연방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형사 처벌 사건에 있어서는 외국 군대 자체의 기관만이 그 구성원에 대한 사법적 관할권을 갖는다. 주둔 외국 군대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개인 신분증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독일 관청에 의한 체포나 수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주둔 외국 군대의 구성원들의 업무상 거처도 원칙적으로 독일 관청에 의해 수색되어서는 안된다. 주둔 외국 군대 구성원들의 독일 법원에서의 법적 분쟁 시 그를 대리할 위임을 받은 독일 변호사 외에도 관련된 전승국들에 의해 허가받은 변호사가 변호를 수행할 수 있다. 서독은 외국 군대에 모든 독일의 공공 교통망과 수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연방 영토를 넘어 비행하고 또 외국 군대에 제공된 공항설비를 사용할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 서독은 외국 군대에 필요한 수요들, 특히 토지 및 공공 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서비스 그리고 교통, 체신 및 장거리연락 서비스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서독은 외국 군대에 적절한 민간 노동력을 증개한다. 외국 군대는 서독영토 내에서 기동연습을 할 권리가 있다. 외국 군대의 기록물, 문서 및 우편물은 독일 관청에 의한 접근, 검색, 압수 및 검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외국 군대는 원칙적으로 독일연방의 세관 검색을 받지 않는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I, 1954, Nr. 3, 29.03.1954, S. 78-127

담당자 / 기관_ 서독 연방 수상(1949-1963년 재임) 겸 연방 외무장관(1951-1955년 재임) 아데나워, 영국 외무장관 이든,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 프랑스 외무장관 슈만

내용_

서독은 서방 전승 3개국 군대의 연방 내 연간 주둔 비용에 기여할 의무를 지낸다. 그 기여액은 (1949년 4월 4일 출범한) 나토 회원국의 지출에 준해 정해져야 한다. 서독의 월간 기여액은 평균 8억 5,000만 서독 마르크에 달한다. 이 서독의 기여액에는 유럽방위공동체 기여금이 포함되어 있다. 서방 전승 3개국 각각은 재원의 용처에 대한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다음의 기관들 및 서비스들은 서방 전승 3개국에 무료로 제공된다: 독일 공공 서비스 기관의 행정 서비스 및 행정적 도움; 보도, 도로 및 교량; 항해가 가능한 수역; 서독의 경찰, 공공 보건의료 및 소방 서비스; 기상학 및 도지학 관련 기관들; 민간 공항. 서독과 서방 전승 3개국의 대표자들로서 상설 협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유럽방위공동체위원회의 대표자들은 유럽방위공동체의 이해가 결부되는 경우 위 상설 협의위원회의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54, Nr. 3, 29.03.1954, S. 135-153

문서
번호 9

전쟁과 점령에서 기인하는 문제들의 규율을 위한 협정(전환협정) 1952년 5월 26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연방 수상(1949-1963년 재임) 겸 연방 외무장관(1951-1955년 재임) 아데나워, 영국 외무장관 이든,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 프랑스 외무장관 슈만

내용

이 협정을 통해 서독의 사법부가 나치 전쟁범죄를 형사처벌하게 되었다. 전환협정에 포함된 상세한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로 된 72 페이지의) 규율들은 원래 평화협정의 일부가 되어야 할 사안들이었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1990년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체결되지 않았다. 전환협정을 통해 전승국의 점령법에서 독일연방법으로의 이행이 실현되었다. 이 협정의 첫 부분에는 연합국 감독위원회가 선포한 어떠한 법률규정도 폐지되거나 변경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점령 관청들의 법률규정들은 독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하는데, 이 점은 심지어 전자가 다른 법률규정들과 충돌할 경우에도 그러하다. 또한 서방 전승 3개국이 자국의 법원에서 서독에서 이제까지 내렸거나 앞으로 내릴 모든 판결 및 결정들은 독일연방의 법에 따를 때에도 법적 효력을 지닌다. 서독의 관청들은 연합군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았거나 앞으로 유죄선고를 받게 될 사람을 그 형사처벌의 종료 시까지 구금한다. 서방 전승 3개국은 이 구금 중인 사람에 대한 접근권을 지닌다. 구금의 비용은 독일연방 관청들이 부담한다. 서방 전승 3개국은 자국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모든 사람들과 관련해 최종적인 사면조치를 결정할 배제적 권리를 지닌다. 서독은 그 밖에도 정치적 신념이나 인종, 신앙 및 세계관 때문에 고통받은 이들에 보상할 의무를 인정한다. 서독은 모든 요구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소요될 충분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I, 1954, Nr. 3, 29.03.1954, S. 157-230

문서
번호 10

연방 수상 앞으로 보내는 전승국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3인의 베를린에 대한 서신
1952년 5월 26일

담당자 / 기관 미국 주독일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맥클로이; 프랑스 주독일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프랑수와-퐁세; 영국 주독일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커크페트릭; 연방 수상 겸 연방 외무장관 아테나워

내용

이 문서는 서방연합국 3개국으로 구성된 통치위원회 3인의 특임관들이 1952년 5월 26일에 서독 수상에게 보낸 서신으로, 서베를린에 대한 서방연합국 점령권 행사에 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베를린에 대한 서방연합국의 점령권 행사는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형식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서베를린에 대한 점령권의 행사는 독일연방공화국, 즉 서독 연방 정부가 서베를린과 서베를린시민을 대표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서방연합국은 서베를린이 서독의 법률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견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특히 통화, 신용 및 여신, 국적, 여권 부문, 입출국 및 수송, 관세 및 무역지역의 단위, 상품교역과 국제무역 그리고 지불협정의 자유 등에 대한 법률에 적용될 것이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I, 1954, Nr. 3, 29.03.1954, S. 242-243



문서 번호 11 자르지역과 관련한 연방 수상 아테나위의 서신
1952년 5월 26일

담당자 / 기관 미국 주독일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맥클로이; 프랑스 주독일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프랑수와-퐁세; 영국 주독일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커크페트릭; 연방 수상 겸 연방 외무장관 아테나위

내용
이 문서는 당시 서독 수상이었던 아테나위가 점령군 통치위원회 특임관들이 보낸 서신에 대답하기 위해 보낸 것으로 프랑스로 남아 있던 자르지역과 관련된 협정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으로 보이고 있다. 이 편지에서 아테나위는 자르지역과 관련한 특정조약과 협정을 인용하는 것이 프랑스로 남아 있던 자르지역의 법적 지위를 서독이 승인하는 것이 아님을 반복해서 언급하였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I, 1954, Nr. 3, 29.03.1954, S. 307

문서 번호 12 연방 수상 앞으로 보내는 전승국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3인의 자르지역에 대한 서신
1952년 5월 26일

담당자 / 기관 미국 주독일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맥클로이; 프랑스 주독일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프랑수와-퐁세; 영국 주독일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커크페트릭; 연방 수상 겸 연방 외무장관 아테나위

내용
이 서신은 1952년 5월 26일에 점령군 통치위원회 특임관 3인이 서독 연방정부 수상 아테나위의 서신에 대해 답변하면서, 자르지역과 관련한 특정 조약 및 협정들을 인용하는 것이 현재의 자르지역의 법적 지위를 서독이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I, 1954, Nr. 3, 29.03.1954, S. 308

담당자 / 기관_ 소련정부

내용_

이 문서는 1954년 3월 25일에 소련정부가 동독의 주권에 대해 발표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련정부는 독일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주주의적 토대에 근거하여 독일의 국가적 통일을 확보하도록 기여하는 데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동·서독 간의 접근이나 전 독일 자유선거의 시행, 그리고 전승국과 독일 간의 평화협정의 체결 등과 같은 실천적 조치가 도움을 줄 것이다. 소련정부는 독일의 통일 이전에 이미 다음과 같이 독일국민의 이해에 상응하는 독일과의 평화협정의 체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1) 소련과 동독과의 관계는 전자와 다른 모든 주권 국가들과의 관계와 동일하다. 2) 소련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승 4개국 협정에서 소련에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동독에서 계속 수행할 것이다. 3) 이제까지 주독일 소련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이 수행한 동독 국가기관들의 활동에 대한 감찰(Überwachung)은 중지될 것이다. 소련정부는 미국, 프랑스 및 영국이 서독에 대해 견지하고 있는 점령규약의 존속은 단지 민주주의적 원리들과 독일국민의 민족적 권리와 일치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동·서독 간의 접근을 어렵게 한다는 점 때문에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 주된 장애물이라고 본다.

출처_ Rauschnig, Dietrich. 1985. Rechtsstellung Deutschlands: völkerrechtliche Verträge und andere rechtsgestaltende Akte. München: Deutscher Taschenbuchverlag

문서
번호 14

런던 9개국 회담 최종문서 1954년 10월 3일

담당자 / 기관 벨기에 외무장관 스팍; 연방 수상 겸 연방 외무장관 아데나워; 프랑스 총리 망데스-프랑스; 이탈리아 외무장관 마르티노; 캐나다 외무장관 피어슨; 룩셈부르크 정부 의장 베흐; 네덜란드 외무장관 바이엔; 영국 외무장관 이든; 미국 국무장관 덜스

내용

이 문서는 1954년 런던에서 열린 유럽 9개국 외무장관 회의를 통해 작성된 최종문서로 일명 런던협약으로 불린다. 이 협약을 통해 서독의 나토 가입이 가능해졌다. 그와 함께 독일에 대해 서방연합국이 갖고 있던 점령규약이 해제되었으며, 서독이 국제사회에서 독일 전체를 대변한다는 점도 인정되게 되었다. 동시에 서독은 유엔규약을 승인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서독은 통일이나 국경 변경 시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서독이 앞으로 총 50만 명의 전력을 재건하도록 허용된 반면, 서독은 원자력 및 생화학 무기를 독일영토에서 생산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원자력 무기를 서독영토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영국, 미국 및 캐나다는 서독에 군대를 주둔시키기로 약속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앞으로도 전 독일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독일의 국경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서베를린의 안전보장문제는 서방연합국의 주요한 관심사였다. 당시 야당이던 사민당은 이 조약 및 특히 그에 따른 서독의 재무장을 크게 비판하였다.

출처 Bulletin des Presse-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Nr. 188, 06.10.1954

담당자 / 기관_ 서독 연방 수상(1949-1963년 재임) 겸 연방 외무장관(1951-1955년 재임) 아데나워; 미국 국무장관 덜스; 영국 외무장관 이든; 프랑스 총리 망테스-프랑스

내용_

이 문서는 서독에서 점령 통치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의정서로, 1954년 10월 23일 파리에서 프랑스, 영국 및 미국의 서방 전승 3개국에 의해 서명되었고, 3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의정서로서 서독과 서방 전승 3개국 간의 관계에 대한 조약(독일조약), 서독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 및 그 구성원들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조약, 서독과 서방 전승 3개국 간의 재무협정, 전쟁과 점령에서 기인하는 문제들의 규율을 위한 협정, 상기한 조약들에 있어 문서상 불일치하는 부분의 교정에 대한 의정서 및 주둔 외국 군대 및 그 구성원들의 세법적 처우에 대한 협정 등이 변경될 것이다. 이제까지 미국, 영국 및 프랑스에 있었던 무장해제 및 비군사화의 권리는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며 그들에 의해 행사될 것이다. 본 의정서의 발효에 맞추어 보안사가(das Militärische Sicherheitsamt) 해체되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55, Nr. 7, 25.03.1955, S. 213-217

문서
번호 16

평화협정에 대한 독일 연방의회 의장 인터뷰 1958년 3월 12일

담당자 / 기관_ 기민당 소속 게어스텐마이어 독일 연방의회 의장

내용_

이 문서는 1958년 당시 여당이었던 기민당 소속 의원으로 연방의회 의장이었던 오이겐 게어스텐마이어가 독일의 저명한 주간 정치매거진 슈피겔지와 인터뷰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평화협정을 통해 소련을 독일문제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이 제안을 연방정부의 하인리히 폰 브렌타노 외무장관이나 아테나워 수상과 협의한 것은 아직 아니다. 그렇지만 독일문제는 이미 세계정치적인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계사는 확정된 기본원칙으로 멈추게 할 수 없는 흐르는 과정이다. 1950년대 초반에 서독은 지금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서독은 여러 신뢰할 만한 동맹국들을 갖고 있다. 서독의 재무장은 방어적 조치이며 그것은 소련의 더 큰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며, 연방정부가 독일 전역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하기를 요구함으로써 동·서독 간에 긴장 완화의 여지를 없앴다고 비난하는 사민당의 구스타프 하이네만 의원의 시각이 잘못된 것이다. 나아가 폴란드와 동서독을 동시에 비핵화지역으로 만들자는 아담 라파츠키 폴란드 외무장관의 계획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게어스텐마이어 의장에 따르면 단지 핵무기만이 아니라 비핵무기들에 대한 군축도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만일 동독에서 동독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실제 보호된다면 동독과의 국가연합을 구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연방정부의 전독일문제부(내독부) 장관 에른스트 램머의 말을 인용하였다. “연합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것들 간에만 가능하다.”

출처_ Der Spiegel, 1959, Heft 11, 12.03.1958, S. 16-25

담당자 / 기관_ 에곤 바, 베를린 연방주 언론·매체청 청장 겸 베를린 연방주 정부 대변인

내용_

이 문서는 신동방정책의 책사로 불리는 에곤 바가 서베를린 시정부에서 빌리 브란트 시장의 대변인으로 일하던 1963년 7월 15일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에 있는 투칭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서 발표한 강연이다. 독일 외교사에서 '투칭연설'로 불리는 이 발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에곤 바는 먼저 그때까지 연방정부가 취해 온 통일정책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소위 '베를린문제' 혹은 '독일문제'는 동-서 양 진영 간의 갈등의 한 부분이다. 동독정부는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련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의 전제 조건은 오직 후자와의 관계 속에서 조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외교적 문제이고, 그것은 연방정부 내에서 전독일문제부가 아니라 외무부가 관할해야만 할 문제이다.

미국의 전략에 따르면 공산주의는 제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변화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상태를 수용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전부 아니면 제로' 식의 정책, 즉 예를 들어 '동독에서 자유선거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정책은 독일에게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통일은 일시에 이루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발걸음과 정착역들로 이루어진 과정이다. 동독을 직접 전복시키려는 시도들은 기약이 없는 일이다. 동독이라는 '소련군 점령지역(Zone)'은 소련의 동의 하에 변화되어야만 한다.

서방이 동독에 경제제재 같은 조치를 취해서 동독이 안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욱 강화시켜서 동독정권의 붕괴를 유도할 수 있다는 믿음은 환상이다. 그러한 긴장의 고조는 오히려 독일의 분열만을 심화시킬 뿐이다. 협상과 대화를 하는 것이 동독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동서독 간 무역의 강화는 미국의 정책에도 상응할뿐만 아니라 독일의 이해에도 부합한다. 동독에서 소비욕구가 증가하고 삶의 질이 향상하는 것을 통해 동독체제가 유연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독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와, 국경 및 베를린 장벽의 완화 유도를 병행할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환상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독이 충분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출처_ Archiv der sozialen Demokratie der Friedrich-Ebert-Stiftung, Depositum Egon Bahr; Deutschland Archiv, Heft 8/1973, S. 862-865



문서 번호 18 서베를린주민의 친척 방문 목적 통행증 발부에 대한 의정서
1963년 12월 17일

담당자 / 기관 동독 문화부차관 에리히 벤트; 베를린 시정부 최고위원(Senatsrat) 호어스트 코르버

내용

이 문서는 동독이 서베를린과의 경계에 장벽을 건설하고 난 후 2년 만에 서베를린의 주민이 동쪽에 있는 친척을 방문할 수 있도록 통행을 허용하기로 협의한 의정서로 1963년 12월 17일에 작성되었다. 이 문서에는 의정서와 함께 부록이 수록되었다. 의정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동독 문화부차관 에리히 벤트와 서베를린시의 호어스트 코르버 국장은 1963년 12월 18일과 1964년 1월 5일 사이의 기간 동안 서베를린주민들이 동베를린에 거주하는 친척들을 방문할 수 있는 친척 방문 목적 통행증을 발부해주는 것에 합의했다. 양 측은 상이한 정치적이자 법적 입장과는 무관하게 이와 같은 인도주의적 조치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와 같은 합의사항은 의정서의 부록으로 첨부되었다. 이로써 1963년 12월 19일과 1964년 1월 5일 사이의 기간 동안 친척 방문 목적 통행증을 지닌 서베를린주민들이 동베를린에 거주하는 친척들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친척 방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모, 조부모, 손자, 손녀, 형제, 자매, 고모, 삼촌, 조카 등의 3촌 친척 및 배우자의 상호 방문 등이다. 이를 위해 신청 서류 및 통행증을 처리할 담당 행정처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출처 Von Münch, Ingo. Hrsg. 1968. Dokumente des geteilten Deutschland. Stuttgart: Alfred Kröner Verlag

문서
번호 19

통행증 관련 질문들에 대한 성명서
1964년 9월 24일

담당자 / 기관_ (서)베를린 시정부

내용_

이 문서는 빌리 브란트 시장이 이끄는 서베를린 시정부가 1964년에 발표한 성명서로 동독과 서베를린 시정부 간에 체결된 통행증 발급에 관한 합의의 비난에 대한 답변의 성격을 갖는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년 동안 서베를린의 주민이 동베를린의 친척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동베를린을 지배하는 현재의 '권력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통행증 발급소는 서베를린 시정부에서 관할한다. 그러나 통행증 발급소에서는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에서 파견된 동일한 인원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게 된다. 성명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서베를린 시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진행되더라도 서베를린 시정부의 근본적인 목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천명하였다. 거주·이전의 자유, 자결권원칙 그리고 통일이 바로 그것이다.

출처_ Stiftung Deutsches Historisches Museum, <https://www.hdg.de/lemo/kapitel/geteiltes-deutschland-modernisierung/neue-ostpolitik/passierscheinabkommen.html>



문서
번호 20

서독과 소련 간의 조약

1970년 8월 12일

담당자 / 기관 독일 연방 수상 브란트; 독일 연방 부총리 겸 연방 외무장관 쉘; 소련 총리 알렉세이 코시긴; 소련 외무장관 그로미코

내용

이 문서는 1970년에 빌리 브란트 수상이 이끄는 사민당 정부가 소련과 체결한 조약문이다. 이 조약을 통해 서독과 소련은 분쟁 문제가 있을 시 이를 전적으로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며 군사적 위협을 자제할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양자는 현재의 국경이 지켜질 때에만 유럽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양자는 유럽 내 현재 국경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서독과 소련은 서로 현재의 영토를 변경하기 위한 어떤 행위나 주장을 하지 않으며 미래에도 그것을 지킬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폴란드의 서부 국경을 규정하는 오데르-나이세 강 경계와 서독과 동독 간의 국경이 침범 불가능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 조약은 앞서 서독과 소련 간에 체결되었던 양자 간 혹은 다자간 합의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조약을 체결할 서독 연방정부는 소련 외무부에 서신 한 부를 전달하였다. 이 서신에서 서독 연방정부는 이 조약이 독일통일의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서독의 목표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I, 1972, Nr. 27, 24.05.1972, S. 353-355

담당자 / 기관_ 독일 연방 수상 브란트; 독일 연방 부총리 겸 연방 외무장관 쉘; 폴란드 취란 키에비츠 총리 ; 폴란드 예드리쇼브스키 외무장관

내용_

이 문서는 빌린 브란트 정부가 폴란드와 체결한 국교정상화 조약이다. 폴란드정부는 이미 1950년대 후반에 서독과 외교수립을 위한 제스처를 취했다. 당시 기민당이 이끌던 서독의 연방정부는 그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63년에 서독 연방정부의 제의에 따라 무역대표부의 교환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1967년 서독 연방정부가 외교관계 수립할 것을 제의하였지만, 폴란드정부는 경제관계 이상의 합의를 위해서는 영토문제를 우선 해결해야만 한다면, 서독의 제의를 거부했었다. 서독에서 사민당과 자민당이 연립 정부를 구성한 후 폴란드와 소련과 비폭력선언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1970년 2월부터 바르샤바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회담이 열렸고 1970년 11월에 조약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1970년 12월에 체결된 조약에서 서독과 폴란드는 두 국가 사이에 정해진 국경은 폴란드의 서부 국경이며, 두 나라는 기존의 국경이 현재와 미래 언제든 침해될 수 없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양국은 현재 서로의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미래에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독과 폴란드는 분쟁이 있을 시 이를 전적으로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며 군사적 위협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국교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경제, 학술 부문 및 문화 분야 등에서 광범위한 상호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조약은 앞서 서독과 폴란드 간에 체결되었던 양자 간 혹은 다자간 합의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72, Nr. 27, 24.05.1972, S. 361-368

문서
번호 22

베를린에 대한 전승 4개국의 협정 1971년 9월 3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주재 프랑스 대사 소바냐그; 동독 주재 소련 대사 아브라시보프; 서독 주재 영국 대사 재클랑; 서독 주재 미국 대사 러쉬

내용_

이 문서는 1971년 9월 3일에 미국, 소련, 영국 그리고 프랑스 전승 4개국이 베를린문제와 관련하여 체결한 것이다. 이러한 조약은 국제법적으로 전후에 체결된 전승 4개국의 권리 및 의무에 기반하며, 당시 주어진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은 일반적 규정 (1), 서베를린지역에 적용되는 규정 (2) 및 최종 규정 (3)을 포함한다. 본 협정은 이 외에도 부록 4부, 2개의 협상 의사록 및 최종 의사록을 담고 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위 4개국 정부는 긴장의 해소 및 복잡한 상황에 대한 미연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군사력의 사용이나 그를 통한 위협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 외에도 4개국 정부는 각자의 개별적이지 공동의 권리 및 의무를 상호 존중하기로 하였다. 2항 이하 규정들은 무엇보다 서독과 동독 간의 통행 및 통신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_ <http://www.verfassungen.de/de/de45-49/viermaechte71.htm>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부 서독문제 담당 차관 콜 박사; 연방정부 특임 차관 에곤 바

내용_

이 문서는 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민간인 통행 및 물자의 교통을 규율하는 통행협정이다. 이 협정은 동독과 서독 간에 정부 수준에서 체결된 최초의 협정이다. 그에 따르면 통행에는 어떠한 장애도 있어서는 안되며, 통행은 단순하고도 빠른 길을 따라 이루어져야만 한다. 통과하려는 여행자는 동독 측 국경통과소에서 비자를 발급받는다. 버스로 통과하려는 여행자에게는 단체 비자가 교부된다. 여행자와 그의 이동 교통수단 및 짐은 원칙적으로 수색되거나 체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또 그에 대해 통행 경로의 이용을 금지하지 못한다. 통행 경로가 장거리인 경우 동독은 휴게소를 설치하고 그 내용을 서독에 전달한다. 통과 중의 승객 열차는 동독의 영토에 정차하지 않는다. 화물 운송용 교통수단은 출발 전에 자물쇠로 잠겨진 후 서독 관청에 의해 자물쇠에 손상이 없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서독은 동독에 대해 매년 통행로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총괄 지불한다. 그 요금은 1972년에서 1975년까지는 연 2억 3,490만 독일 마르크로 정해졌다. 서독과 동독은 이 협정의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부장관이 주재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I, 1972, Nr. 30, 03.06.1972, S. 349-354

담당자 / 기관 연방정부 수상 브란트; 기독교민주당 당 겸 기민당/기사당 연합 원내교섭단체 의장 겸 독일 연방의회 의원 바젤; 자민당 연방의장단 소속 독일 연방의회 의원 보름(동독 슈타지 비공식 요원); 사민당 연방의장단 소속 독일 연방의회 의원 외교위원회 의장 대리 마탁; 기민당 연방의장단 소속 독일 연방의회 의원 그라들

내용

이 문서는 전승 4개국들이 체결한 베를린협정에 대해 연방의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이 회의에서 빌리 브란트 수상은 전승 4개국의 협정에 따라 서베를린주민들이 동베를린 및 동독을 방문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본 협정은 서베를린이 서독의 법적, 경제적, 재정 체계에 안정적으로 포함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독을 통해 서베를린이 대표된다는 점은 이제 모든 국가들이 인정하고 있다. 기민당 소속 바젤 의원은 이 협정에 대한 협상은 키싱어 연방 수상 재임기(1966-1969년)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기민당/기사당 연합 원내교섭단체는 익년에는 동 교섭단체 외에도 다른 교섭단체들도 서베를린의 제국의회 건물에서 업무를 보길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자민당 소속 빌리암 보름 의원은 베를린문제에 대해 연방의회에서 의견의 일치가 된 점을 환영하였다. 이러한 의견 일치를 기반으로 서베를린이 생존할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하였다. 베를린에서 결국 독일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며, 베를린은 유럽에게도 일종의 시험대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소련이 서베를린과 서독 간의 연관성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는 데 만족을 표시했다. 사민당 소속 의원 마탁은 얼마 전까지는 기대할 수도 없었던 변화가 이 협정과 더불어 생길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기민당/기사당 연합 또한 그 사이에 소련 및 폴란드와의 조약 비준이 이러한 진전이 성사되는 데 전제가 되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25년 간의 고립 이후 처음으로 서독과 동독의 주민들이 큰 규모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젊은 세대에 있어서 베를린에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독일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과 만날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기민당 소속 그라들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요한 과제는 아직 남아있다고 발언하였다.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아직 실현될 과제로 남은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긴장완화 상황 때문에 서베를린에 대한 지원이 점차 약화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베를린이 1차적으로 동독의 수도나 독일 공산주의의 중심지역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Deutscher Bundestag, 6. Wahlperiode, 188. Sitzung, Plenarprotokoll, S. 10966C-10975A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부 서독문제 담당 차관 콜 박사; 연방 수상 직속 연방정부 특임 장관 에곤 바

내용_

이 문서는 분단시기 동서독 관계에 가장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동서독 간의 기본합의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과 서독은 민족문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상이한 입장과는 무관하게 다음에 합의하였다. 서독과 동독은 동등한 권리에 기초하여 상호 정상적 관계를 발전시킨다. 양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적으로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다. 양자는 군사적 위협 및 군사력의 사용을 자제한다. 서독과 동독은 현존 국경이 현재 및 미래에 있어 침해받을 수 없음을 천명한다. 동서독은 유럽에서의 군축노력을 지지한다. 서독과 동독 간에 실질적이지아 인도주의적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 경제, 학술, 기술, 교통, 우측통행, 체신, 보건, 문화, 스포츠 및 환경 부문에 대한 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 서독과 동독에는 상시 대표부가 설치된다. 서독은 동독에 대해 이 조약이 독일통일의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서독의 목표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독과 동독은 양국 간의 기존 국경 표시를 검토하고, 개선하거나 혹은 보완할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기한 위원회는 수상 경제 및 에너지 공급 그리고 해충구제 등의 문제를 규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상이한 법적 입장 때문에 재산권 문제는 이 조약을 통해 규율될 수 없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국적 문제 역시 이 조약을 통해 규율되지 않았다. 양국 간 국경지역에 인적 교통을 위한 4개의 추가적인 국경통과소가 열렸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73, Nr. 25, 09.06.1973, S. 421-429

문서
번호 26

서독과 체코슬로바키아 간의 관계에 대한 조약
1973년 12월 11일

담당자 / 기관_ 독일 연방 수상 브란트; 독일 연방 부총리 겸 연방 외무장관 쉘; 체코슬로바키아 총리 쉬트로우갈; 체코슬로바키아 외무장관 흐노우펙

내용_

이 문서는 서독과 체코슬로바키아 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이 조약을 통해 양측은 1938년 9월 29일 나치체제 하에서 체결되었던 뮌헨협정의 무효를 선언하였다. 나아가 양국 간 정해진 기존의 국경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침해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양국은 서로 현재 영토 변경을 요구하지 않으며 미래에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서로 간에 경제, 학술, 문화, 환경, 스포츠, 교통 등과 같은 부문에서 협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양국의 이해에 부합한다. 서독 연방정부의 외무장관 쉘은 체코슬로바키아 외무장관 흐노우펙으로부터 새로 체결된 조약이 서베를린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받았다. 쉘 장관은 조상이 독일인인 체코슬로바키아 국민들이 서독으로 이주를 신청할 경우 체코슬로바키아 당국이 우호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임을 확인받았다. 조상이 체코인 혹은 슬로바키아인인 서독국민들이 체코슬로바키아로 이주를 신청할 경우 이를 승인할 것도 확인했다. 이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독 및 체코슬로바키아의 적십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밖에도 양국 간의 여행 통행도 계속 발전시키고, 이를 위해 국경에서의 신속한 통관 처리 및 추가적인 국경통과소 설치 등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의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외무장관 흐노우펙도 이 점을 확인하였다. 그는 1938년에서 1945년까지 행해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들 중에서 체코슬로바키아 법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행위와 전범 행위 그리고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만을 형사소추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른 모든 형사범죄 행위는 늦어도 1965년 이후에는 시효가 소멸되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74, Nr. 40, 16.07.1974, S. 990-997

문서
번호 27

에리히 호네커의 서독 방문
1987년 9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 수상 콜: 독일 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호네커

내용_

이 문서는 1987년에 동독 사통당의 총서기장 에리히 호네커가 서독의 수도 본을 방문한 것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헬무트 콜 수상이 에리히 호네커 총서기의 서독 방문을 환영하였다. 콜 수상은 먼저 양국의 공동의 언어와 문화적 유산 그리고 역사를 언급했다. 그는 나아가 양국 국민의 안녕을 위해 실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지만 아직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을 전면에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독일인이 하나의 민족이며, 통일을 위한 노력이 1972년에 체결된 기본조약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전쟁과 폭력이 또 다시 독일 정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서독은 현존하는 국경을 준수하는 동시에 분단의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4대 전승연합국이 전 독일과 베를린에 대해 갖고 있는 권리와 의무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존속한다는 점도 다시 확인되었다. 콜 수상은 그 사이에 전보다 더 많은 동독 젊은이들이 서독을 방문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더 많은 도시 간 자매결연 및 미디어, 학술 부문 및 예술 분야의 교류가 생기기를 희망하였다. 콜 수상은 미국과 소련이 동서진영 간의 대화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그는 나아가 군축을 지지하며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고, 동서독 간의 국경에서는 앞으로 장기 간에 걸쳐 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특히 호소하였다. 그는 독일의 역사가 많은 변동을 겪었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콜 수상의 환영사에 에리히 호네커는 평화란 인류의 가장 중요한 선이라고 답했다. 이데올로기적이지자 사회적 대립이 양국 간 관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동독은 과감한 군축을 지지한다. 총서기장은 국경의 불가침성 및 양국이 주권을 지닌 독립국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출처_ Bulletin des Presse-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Nr. 83, S. 705-708

문서
번호 28

동-서독 외무장관 회담
1989년 1월 19일

담당자 / 기관_ 한스 디트리히 겐서 서독 연방정부 외무장관, 오스카 피셔 동독 외무장관

내용

이 문서는 1989년 1월 19일에 열린 동독 외무장관 피셔와 서독 연방정부의 외무장관 겐서 사이의 회담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 회담에서 동독의 피셔 장관은 동서관계와 군축이 1989년도 정치의 핵심주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동서독 간의 관계 발전이 유럽 전체의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서독은 여전히 동독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보는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겐서 장관은 '세 개의 중요한 역동성'에 관해 설명하였다. 그것은 유럽공동체,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들의 개혁운동 그리고 동서관계 등이다. 동독이 유럽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것을 좋은 기회로 인지하고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서독은 이미 군축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

동독의 피셔 장관은 브뤼셀에 대사를 파견했으며, 동독정부도 독립정책을 취할 생각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서독이 군축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쇼이블레 내무장관과 양자회담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두 주권국가의 협력관계가 앞으로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겐서 장관은 동독의 내부문제에는 간섭할 의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정부가 몇 가지 사안은 좀 더 여유로운 태도를 취하기를 추천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담당자 / 기관_ 서독 연방정부 외무부, 정치국, 210과(외교문제, 베를린과 독일문제 관련)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의 외무부 정책기획국에서 작성한 동독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88년에 내독관계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발전하였다. 1987년에 시작된 인도적 영역에서의 개방정책이 지속되었다. 동독은 1988년에 670만 회 개별방문을 신청했다. 여러 차례 장관 차원에서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양쪽 정부의 협력이 크게 다원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발전이 동독 내부에 정치적인 긴장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있었다.

1988년에는 동서독정부의 장관 차원에서 양자회담이 11차례 열렸고, 실무 담당 공무원 차원에서, 특히 군축문제와 관련된 교류가 아주 많았다. 서독의 연방의회와 동독의 최고 인민회의の間에도 공식적인 협력관계가 존재한다. 전문가 차원에서 협력은 특히 엘베강의 정화작업과 하노버-베를린 간의 고속전철 노선 건설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들 수 있다. 동서독 간에 방문단과 사절단을 교환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이 문서에는 여행자, 내독무역, 동독에 지급된 금액 등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동독의 에리히 호네커 총서기는 기존의 노선을 계속 유지하였다. 소련과 동구유럽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혁은 그에게 아무런 기준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것이 동독주민들에게 오히려 전망이 없다는 감정을 갖게 만들고 그로 인해 이주신청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250,000명에서 900,000명 사이로 추정). 그러나 잘 알려진 대변자를 갖고 있는 조직적인 저항운동은 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당 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동독 내에서 주민들은 적어도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느끼고 있다. 가격보조정책의 경우 동독 국가예산의 20%를 차지하며, 현재 동독 지도부를 위해서는 원칙적이고 사회정책적인 의미를 갖는 문제이다. 외교적으로 호네커는 지난 해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8 E

기민당/기사당 연합 국방정책 실무단의 1989년 4월 10-14일 중의 워싱턴 방문. 미국 대통령의 독일문제 자문 로버트 블랙윌(Robert Blackwill)을 통한 독일통일 문제에 대한 미국정부 정책의 현황 파악-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보고

1989년 4월 14일

담당자 / 기관 외무부 소속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위르겐 루푸스; 기민당/기사당 연합 국방정책 실무단; 미국 대통령의 독일통일 문제 자문위원 로버트 블랙윌(Robert Blackwill)

내용

이 문서는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가 연방의회 의원들이 미국 대통령의 독일통일 문제 자문인 로버트 블랙윌과 만난 것에 대한 보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블랙윌 자문의 업무영역에는 서유럽, 동유럽, 소련에 대한 조사 외에 국방, 전략 및 군비 통제에 관한 연구도 포함된다. 이런 과제는 세기 말까지의 전망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은 부분적으로 현재 유럽의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블랙윌 자문은 동유럽지역에 관한 연구는 현재 아주 복잡적이고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평가단계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동유럽 국가들의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소련과 협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현재 연구는 폴란드와 헝가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언론에 보도되는 이야기에 너무 많이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이 독일의 분단극복과 통일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민당 의원의 질문에 블랙윌은 독일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언제나 미국의 목표였으며 그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나아가 부시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 중에 베를린 장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동·서 간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을 더욱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동의 유럽의 집 개념은 두 개의 오류를 안고 있다는 것이 블랙윌의 견해였다. 하나는 동유럽 국가들이 그럴 자유만 있다면 소련을 유럽에서 내쫓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런 유럽의 공동의 집에 미국의 위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독일이 함께 그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것은 특히 미국과 유럽의 공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유럽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분단의 책임이 있는지도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그는 미국에게는 특히 서독과의 독특한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 또한 이 회의에서 강조하였다.

재래식 무기의 감축 규모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많은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고르바초프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무엇보다 동독에 여전히 커다란 군사적 위협이 존재한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1 E

담당자 / 기관_ 연방 외무장관 겐서;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외무부 105과(언어 담당)

내용_

1989년 6월 12일에서 15일 간의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총서기장의 독일 공식방문 일정의 일환으로 겐서 외무장관과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의 회담이 열렸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 서독과 소련의 공동 성명이라는 중요한 문서의 서명을 앞두고 있는데, 그 준비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어려운 문제에 해결책을 찾는 데 겐서 외무장관과의 좋은 개인적 친분 관계가 도움을 주었다. 오늘날의 새로운 세대는 특히 군사적 감축과 관련해서 대결 구도의 극복을 위해 대담하고도 광범위한 결단을 내릴 만큼 성숙했다.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제안들을 지금 논의해야 한다.

겐서 외무장관은 최근의 나토 및 미국 부시 대통령의 연설이 자신들의 입장에 관한 더 나은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간주하였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비엔나 군축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 간 회의도 가능한 한 자주 개최되어야 한다.

[다음 내용_ 군축협상의 상세 내용에 대한 논의]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이 성명의 실현은 즉각적이고도 실용적인 측면에서 개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실현은 전 유럽뿐만 아니라 서독과 동독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군사 분야에 있어서 합의에 도달하게 될 경우, 정치적 문제들도 점점 더 많이 전면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렇게 시간이 성숙되기만 하면, 베를린 장벽도 붕괴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신뢰와 상호 존중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겐서 외무장관: 베를린 장벽은 이미 큰 골칫거리이다. 소련의 개혁 때문에 동독주민들도 큰 기대를 갖게 되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담당자 / 기관_ 연방 수상 헬무트 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독정부 및 소련정부

내용_

소련 공산당 총서기장 고르바초프의 독일 공식방문(1989년 6월 12-15일) 중에 서독과 소련 간의 공동 성명이 조인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I. 3번째 밀레니엄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치적 사고를 요구한다. 인간의 존엄성이 그 중심에 놓여야 한다. 전쟁은 방지해야만 하고, 민족자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현존하는 가치 체계 및 정치·사회적 질서에 있어서의 차이가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
- II. 서독과 소련은 유럽 분단의 극복을 우선적인 정치적 과제로 간주한다. 헬싱키협정이 그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국가들 간의 무제한적 통합 및 그 안전보장; 확실한 군축 및 군비 통제; 양자 간 및 다자간 밀도 있는 대화 그리고 최고위급 정치 지도자들 간의 정기적 회담; 인권 보장의 실현; 광범위한 경제적 협력 및 유럽공동체와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간 관계의 정상화; 예를 들어 교통, 에너지, 보건·의료 및 정보 분야에 있어서 전 유럽적 협력의 구축.
- III. 서독과 소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위협의 감정을 상호신뢰를 통해 점차적으로 해소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 군사적 위협성은 구속력 있는 합의를 통해 그 위험성을 낮은 수준으로 맞추어 상호공격을 허용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양자는 다음의 사안에 합의하였다: 미국과 소련의 전략적 핵 공격무기의 50 퍼센트 감축; 핵협상 및 우주공간 관련 협상에 있어 해결책 모색; 재래식 전력에 있어 낮은 수준의 균형 달성; 유럽 내 신뢰와 안전보장을 형성하기 위한 조치.
- IV. 양국은 신뢰할 수 있는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데 노력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틀은 1972년 8월 12일의 모스크바조약이 마련하였으며, 그 위에 추가적인 사항들을 조약을 통해 첨부하기로 한다. 1971년 9월 3일자 전승 4개국 협정에 따라 베를린도 이 조약을 적용하기로 한다.
- V. 서독과 소련 간의 관계 개선은 각 동맹 간의 의무를 고려하며 어떠한 타국에도 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7.130 E

문서
번호 33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간의 회담-본 근교 바흐트베르크-페히지역 개최(통역 기록)

1989년 6월 14일

담당자 / 기관 연방 외무장관 겐셔;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외무부 105과(언어 담당); 통역관 쉘

내용

통역관 쉘은 겐셔 외무장관과의 대화 중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 발언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독일인들의 고르바초프 및 소련정부 파견단에 대한 ‘눈물 날 정도로 감동적인’ 환대를 통해 앞의 공동 성명의 정당성이 확인되었다. 소련 내의 인사들이 이러한 점을 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

소련의 내부 상황은 소요와 다양한 사건들 때문에 현재 어려운 상태이다. 동유럽 및 중유럽의 몇 개 국가들은 매우 심각한 경제적 상황을 겪고 있다. 변화는 언제나 어려움을 수반한다.

비엔나 군축협상과 관련하여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며 여름 휴가 이후의 시기에는 전문가 간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미국인들은 큰 폭의 진전을 두려워했기에, 협상 중에 대부분 같은 논의를 반복하였다. 하지만 나토 성명에서는 긍정적인 징후들이 보인다.

동독에서의 개혁 노력을 강제할 수는 없고, 그 개혁 노력은 안정 속에서 성숙된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예를 들어 헝가리나 폴란드의 안정성은 이를 위해 중요한 결정적 요소이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문서
번호 34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총서기장의 독일 공식방문 결과를 분석한 자료
1989년 6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 외무부; 정치부 213실 (소련), 로이히스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와 정치부 213실(소련)이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총서기장의 독일 공식방문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로 서독 외무부의 각 해외공관에 전달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총 7시간에 걸쳐 콜 수상 및 대표단의 다른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대화 참가자 리스트 및 방문 프로그램 관련 내용 첨부).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에 있어 동 방문의 의미는 '전후 시기의 종언'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과거와의 결별을 위한 마침표를 찍는 일이었다.

공동 성명은 서독과 소련 간 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조약에서 마련된 기반을 상당 부분 더욱 확대하고자 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소련에서의 현대화 및 개혁 조치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독일경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문화 부문에 있어 5개의 정부 간 협정이 서명되었다. 군축과 관련해서 차별화된 대화들이 있었다.

독일문제와 관련해서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한 후, 하지만 그 사이에 '충분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이해'에 도달했음을 강조했다. 동-서 간 관계의 진전을 위해 동 방문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이러한 방향을 위해 꾸준하고도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서독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7.130 E

담당자 / 기관_ 외무부, 정책기획실, 연방수상청, 자이티스 수상청장

내용_

이 문서는 자이티스 연방수상청장의 동베를린 방문을 앞두고 서독 외무부 정책기획실의 독일문제 담당과에서 작성한 회답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에 대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는 당시 동서독 간에 논의되어야 시급한 현안이 정리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서관계의 현황과 전망
-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절차
-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방문 평가
- 동독과 소련 간의 관계
- 중국의 현황과 중국의 천안문 사태에 대한 동독의 입장
- 나토-계획
-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통제
- 유럽 재래식무기협상과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에 관한 협상
- 화학무기에 대한 제네바 협상-동독의 이니셔티브
- 비핵화지역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01 E



문서 번호 36 동독과의 군비통제회의-연방 외무부 223과의 보고서
1989년 6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 외무부, 정책기획실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 외무부가 동독과 진행하고 있는 군비통제회담의 현황에 관해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과는 1981년부터 양측의 군비통제 담당관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약 10개월에 한 차례씩 회의를 하고 있다. 현재 동독측에서 군비통제회의의 실무를 담당하는 최고위 전문 관료 차원에서 정치적 차원의 회의로 승격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독측에서 자이티스 수상청장의 방문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동독이 이 회의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되 이 회의를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담당관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도록 제안한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01 E

담당자 / 기관_ 수상청,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수상청장 자이티스

내용_

이 문서는 동베를린의 서독 상주대표부의 책임자가 연방정부 수상청장에게 보낸 동독의 상황에 관해 보고이다. 이 문서에서 베어틀레는 다음과 같이 동독의 상황을 설명한다.

동독의 지도부가 세 가지 요인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 그 하나는 동유럽의 다른 사회주의 진영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이며, 그 외에 동독주민들과 사회주의통합당(사통당) 일부 당원들의 개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서방으로부터의, 특히 인권개선과 같은 변화에 대한 요구가 바로 그 세 요인이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동독 지도부는 지금까지 방어적으로만 대처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동독이 주민들에게 가장 높은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그 근거로 완전고용, 충분한 주거 공간 그리고 교육기회의 보장과 같은 혜택을 모든 국민이 받고 있지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선전한다. 그리고 동독정부는 인권개선에 대한 서방의 요구를 용납될 수 없는 내정간섭이라고 간주한다. 호네커의 통치가 칭송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통당 내에 개혁의 여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국민의 여론은 그와 정반대이다. '일시적인 부족으로 인한 문제'라고 치부되었던 서비스, 생필품 그리고 오랜 시간 사용되는 소비물자 공급의 어려움과 국가와 계획경제에 의한 감시와 억압은 일반적인 불만을 불러일으킨다. 나아가 당 지도부의 정체적 성향으로 인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게 된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불만이 나오고 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288/124, 11 35005 Pa4 Band 11



문서
번호 38

폴란드 서부국경에 대한 폴란드 외무부 보고-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
1989년 6월 29일

담당자 / 기관_ 폴란드 외무부, (소련 및 유럽 내 사회주의 국가 담당) 제1국장 마코샤; 기민당 소속 독일 연방의회 의원 블렌스; 바르샤바 주재 서독 대사 쉴러

내용_

이 문서는 바르샤바 주재 서독 대사가 보낸 보고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독 연방의회의 기민당 소속 블렌스 하원 의원 사절단과의 대화에서 폴란드 외무부의 마코샤 국장은 폴란드의 서부국경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폴란드에게는 바르샤바조약 동맹만이 서부국경을 보장해 주는 유일한 장치라고 하였다. 1970년 12월 7일자 서독과 폴란드 간의 바르샤바조약은 단지 서독에 대해 현상유지를 위한 잠정협정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서독이 계속 통일을 추구하였을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이들이 1937년 당시의 국경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의 단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특별정치선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폴란드는 그러한 선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6 E

문서
번호 39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총서기장의 독일 본(Bonn) 공식방문과 관련한 자문을 위한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 호네커의 소련 방문-겐서 외무장관 소속 외무부 210과 보고

1989년 6월 30일

담당자 / 기관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 겸 독일 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호네커; 외무부 정책기획실 210과(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담당); 과장 대리 헤롤트; 겐서 외무장관

내용

이 문서는 연방 외무부의 정책기획실 210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동독의 호네커가 1989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소련을 방문하는 문제에 관해서 겐서 외무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호네커의 소련 방문은 호네커 자신이 스스로 초청한 것 같은 양상이다. 호네커가 소련을 방문하겠다고 전하고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이 이를 거절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두 국가 수반 간에 나는 '상세한 대화'에 대한 커뮤니케가 동독 방송국인 ADN을 통해 보도되었다. 하지만 공식적 수사 외에 특별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련 내에서의 변화에 대해 호네커는 '어렵지만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표현하였다. 동독과 관련하여 그는 '경제 및 사회정책의 통일'의 일환으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활동력'을 언급하였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이와는 반대로 '평화적 혁명'을 논하면서, 정치·경제적 삶의 전반에 걸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단지 동독에 주둔하는 소련군의 명칭을 '소련 서부 전투병력'으로 개명하는 것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법적 지위는 동독과 소련 간의 1955년 9월 20일 조약의 내용에서 변화되지 않았다.

(이하: 동 커뮤니케 상세 내용에 대한 분석 수록)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13 E

겐서 외무장관과 게레멕 교수 및 다른 폴란드 '연대' 자유노조 소속 대표들과
의 대화-외무부 214과

1989년 7월 7일

담당자 / 기관 겐서 외무장관; 폴란드 '연대' 자유노조(Solidarność) 및 자문 게레멕 교수;
정부 파견단; 외무부; 외무부 214과(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담당) 과장 데릭스 박사

내용

이 문서는 폴란드의 자유노조 대표자들로 구성된 사절단이 서독을 방문하여 겐서 외무장관을 방문하고 담화를 나눈 것에 대해서 연방외무부가 작성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번 방문을 통해 폴란드의 민주화가 재삼 확인되었다, 겐서 외무장관은 폴란드의 개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폴란드의 게레멕 교수는 이번 방문이 상징적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개혁과정은 경제적 위기를 심화시키지 않으면서 발전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나아가 폴란드가 소련에 대해 지고 있는 채무가 (약 200억 동독 발루타 마르크에 상당하는) 65억 외환루블(Transferrubel)에 달하며, 서방세계에 대한 채무는 약 390억 미국 달러에 달한다고 하였다. 1989년도의 인플레이션률은 100 퍼센트에 달했으며 1990년도에 이는 300 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폴란드로서는 현재 폴란드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조건으로 차관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 외에도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하며, 그것은 공산주의 국가의 특권 계급(노멘클라투라)을 해체하고, 소유권 관계를 점진적으로 변환하고 투자의 증대 및 수출 활성화를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겐서 외무장관은 이에 대해 개혁추진에 확실성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폴란드의 자유연대노조가 직접 정부를 구성해야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자유노조가 스스로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될 경우 구체제가 파괴되고, 집권당인 폴란드 통일노동자당이 붕괴될 것이기에 이를 스스로 추진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폴란드 통일 노동자당의 약 30 퍼센트가 연대 자유노조의 구성원이었다).

이에 대해 게레멕 교수는 다음 단계의 개혁 조치들을 설명하였다. 그것은 야당의 합법화, 경제 자문단의 구성, G7의 지원, 채무 관리, 대통령 선거, 새 정부의 구성, 독립적 사법부, 지방자치 등을 포함하였다.

겐서 외무장관은 '점보(Jumbo)-차관(Jumbo-Kredit)의 유동적인 사용 및 그를 즐로티 통화로 환전하는 것에 대한 기존 제안을 언급하였다. 그 외에도 채무국과 채권국 간의 비공식 협상 기구인 '파리클럽' 가입과 관련해 문호를 더 개방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신규 투자를 위해 국가가 보증해 주는 헤르메스 보증(Hermes-Bürgschaften)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1989년 7월 7-8일 바르샤바조약의 가맹국 정당 대표 및 국가 수반들의 부카레슈티 회담-최종 회담 선언문 기초 문안(Punktuation und Sprachregelung)

1989년 7월 8일

담당자 / 기관 바르샤바조약의 가맹국 정당 대표 및 국가 수반들; (동-서 관계 일반 문제, 특히 헬싱키협정 관련 담당) 외무부 212과, (국제적 군축 및 군비 통제 특히 제네바 미-소 군축 협상 담당) 외무부 220국, (안전보장, 유럽 내 군축 및 군비 통제 특히 유럽 내 재래식 전력에 대한 협상 및 신뢰구축 및 군축을 위한 회담 담당) 외무부 221실

내용

이 문서는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가맹국 정당 대표 및 국가 수반들 간의 회담의 커뮤니케이션 및 “안정적이고 안전한 유럽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의 초안이다. 여기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강조되었다.

- I. 일반적인 동-서 관계 문제: 다음의 이중의 과제가 제기된다. a) 1989년 5월 3일자 나토 성명에 어떻게 답변할지의 문제. b) 바르샤바조약 가맹국들이 국내 및 국제정치적으로 서로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 어떻게 더 단합할 수 있을지의 문제.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유럽이라는 공동의 집’이라는 모토의 정책이 바르샤바조약 가맹국들의 목표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서방 세계의 개입 혹은 그들이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식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 II. 군비 통제: 군비 통제는 군축과 함께 이 성명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군축 노력의 현황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나, 근본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이어 나토의 강대국 위주 정책을 비판하면서, 예를 들어 핵무기와 관련하여 그 현대화가 아니라 단계적인 감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호소하였다. 재래식 전력의 감축은 유럽 내 안정을 위한 열쇠에 해당한다. (정보 및 자문기능을 지닌) 전쟁 위험 감소 센터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반복되었다.
- III. 문안 초고: 바르샤바조약의 가맹국들은 최근의 나토 성명에 대해 답을 주었다. 초기 단계의 합의는 1990년이면 이미 도달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예를 들어 핵무기에 대한 협상은 더 이른 시점에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문서에서는 전 세계적 문제들과 인권에 대해서 바르샤바조약의 가맹국들 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논의가 되었고 또 그 문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39.798 E



문서
번호 42

소련과 관련한 미해결 베를린문제에 대한 외무부 정황 보고(파리 1989년 7월 14-16일 개최 세계경제정상회의 대화록)

1989년 7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외무부 정치국 210과(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담당)

내용_

파리 세계경제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서독 연방 외무부 정책기획실은 본 소련과 관련한 미해결 베를린문제에 대한 정황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 서독 측이 적극적으로 언급을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소련은 일반적으로 1971년 9월 3일의 전승 4개국 협정을 인용하면서 베를린은 서독을 이루는 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를 배제하고 베를린과 직접 교류를 권하였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1989년 6월 13일 서독방문 중에 서명된 서독-소련 간 협정으로 이러한 문제는 개선되었는데, 즉 이 협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베를린을 형식적으로 문서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선박통행 협정, 의회 의원 상호방문 프로그램, 베를린 시장의 모스크바 방문 등에서는 그러한 진전이 없었다.

(부록: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서독방문 중에 서명된 서독-소련 간 협정 중 베를린이 포함된 내용)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7 E

담당자 / 기관_ 수상청장 자이터스, 동독 외무장관 피셔, 동독 사통당 서기장

내용_

1989년 7월 4일에 서독 연방정부 수상청장인 자이터스가 동베를린을 공식방문하여 동독의 외무장관 피셔 그리고 당서기장 호네커를 비롯한 사통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원 그리고 동독 내각과 만났다. 이 방문에서 자이터스는 서독정부가 동독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정책을 지속할 의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서독이 동독을 지원할 것이지만 동시에 동독이 비엔나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의의 결과를 실천에 옮기기를 기대한다는 것도 분명히 하였다. 동서 간의 국경에서 이탈주민에게 충격을 가하는 것 또는 언론인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과 같이 양국 간의 관계에 부담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만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의 직원이 서베를린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호네커와 피셔 외무장관은 서방국가들이 군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동시에 동독의 주권과 현재의 국경선을 승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자이터스 청장은 나토의 군축노력을 강조하면서 콜 수상과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이 발표한 공동성명을 언급하였다. 그는 나아가 서독이 동유럽의 개혁과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가 자주 이주를 희망하는 동독인의 탈출장소가 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찾아 오는 사람들을 쫓아낼 생각은 없다는 것 또한 분명히 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1328, 221-35016 Ve 40 NA 1



문서
번호 44

연방 외무장관 겐서가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에게 보내는 서신-더 강화된
협력을 위해

1989년 7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 외무장관 겐서;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내용_

서독의 겐서 외무장관은 소련의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에게 개인적인 서신을 보냈다. 그는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의 소련에서의 '정치, 경제 및 사회적 개혁을 위한 노력'에 공감하며 서독과 소련 간에 체결된 여러 조약들, 특히 1989년 6월 13일의 공동성명을 기초하는 데 근간이 된 양자의 개인적 차원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당시 자신과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이 두 나라 민족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짚어진 책무가 가볍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 결정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었으며 또 그 가운데 친구와 동지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점에 감사를 표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9 E

문서
번호 45

연방 수용소의 신청자(동독 이탈주민 및 이주자의 수)
1989년 7월 3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내용_

이 문서는 이주자에 관한 통계자료로 '이주자', '이탈주민' 그리고 '기타' 등의 용어로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해 온 주민들을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 제시된 표를 보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해 온 사람의 수가 1989년 1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 총 55,970명,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1948년 12월 31일까지 소련군 점령지역에서 서방 연합군 점령지역으로 이주해 온 사람과 1949년 1월 1일부터 1961년 8월 베를린 장벽이 세워질 때까지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해 온 사람의 수가 340만 명 이상,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이후부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매년 이주해 온 주민이 616,000명이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20273, 221-35001 Flu 12 Band 1

문서
번호 46

이주자의 정착을 위한 비용-연방의회의 질의
1989년 8월 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 내무부차관 한스 노이젤, 사민당소속 슈탈 의원

내용_

사민당 소속 어윈 슈탈 의원이 서면으로 제출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내무차관 한스 노이젤은 1989년에 연방예산에서 동독의 이주자를 위한 비용으로 약 26억 마르크가 지출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금액은 해당 부처에 따라 그리고 사용목적에 따른 예산항목에 편성된 금액을 합한 총액이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1/5037, S. 9-10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티스

내용_

이 보고서는 동독의 이주정책에 관한 동독언론의 보도를 분석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보도들로 인해 이주를 원하는 동독주민들이 이주의사를 철회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적어도 동독 당국의 체면치레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이주신청서는 1988년 11월 30일자로 시행된 여행규정에 따라 처리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규정에 따라 탈출 시도에 관한 판결에서 인도적인 이유에서 영구이주를 허용하는 10조를 관대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보고서는 동독주민들이 이주를 원하는 주요 원인이 지속적인 공급부족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 심리적 위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사회주의통합당(사통당) 중앙위원회의 7차 회의를 통해 동독에서는 장래에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그의 개혁이 실패할 경우 동구권 전체의 상황이 훨씬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하였다.
- 동구권의 다른 국가들을 통해 대량으로 탈출해 오고 있는 동독주민들을 서독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보면서 동독주민들 사이에 언젠가는 서독이 국경을 폐쇄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즉각적인 이주를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7/ 15797

문서
번호 48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에 일반인들의 출입 금지-슈테른 국장이 자이티스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초안

1989년 8월 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독일정책 실무팀장 에른스트 귄터 슈테른 국장, 자이티스 수상청장

내용_

이 문서는 수상청의 독일정책 실무팀 책임자인 에른스트 귄터 슈테른 국장이 1989년 8월 8일자로 동베를린의 서독 상주대표부에 일반시민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것을 연방정부 내각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초안이다.

동베를린의 서독 상주대표부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한 원인은 서독으로 이주를 원하는 130명의 동독주민이 상주대표부를 떠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독정부가 이들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이들의 이주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양국 간의 관계가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각에 동서독 양국 간에는 문화, 항공교통 영역과 같이 다른 분야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1859, 222-83105 Fa 3 NA 2 Band 4



문서
번호 49

대사관 동독 이탈주민-서독 연방정부의 콜 수상이 동독 국가위원회 의장 호네커에게 보내는 서한

1989년 8월 1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콜 수상, 에리히 호네커 동독 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겸 국가위원회 의장

내용_

이 문서는 대사관 난민과 관련하여 서독의 콜 수상이 동독의 호네커 당 총비서 겸 국가위원회 의장에게 보낸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수많은 동독주민이 서독으로의 이주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동베를린에 있는 서독대사관, 즉 서독 상주대표부에 왔다. 그들에게 동독 당국만이 이주신청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들은 상주대표부를 떠나기를 거부하였다.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의 수가 아주 많다는 것이 유감이다. 그러나 동독 내의 상황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지역에 머물도록 만들지 못한 동독 당국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으며 양국 간의 관계를 더 이상 어렵게 만들지 않기 위한 비공개 비밀회의를 제안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288/ 355, 11-35016 Ve 33 NA 4

문서
번호 50

대사관 동독 이탈주민-동독 국가위원회 의장 호네커가 서독의 콜 수상에게 보내는 서한
1989년 8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콜 수상, 에리히 호네커 동독 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겸 국가위원회 의장

내용_

이 서신을 통해 호네커는 동독주민의 이주문제는 동독이 결정할 일이며 동독정부는 이 문제를 관대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동독주민이 동베를린, 프라하, 바르샤바, 부다페스트에 있는 서독대표부에 체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서독정부가 동독국민의 문제를 관리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정부가 서독대사관에 들어가 있는 동독주민들을 조속히 내보내기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작금의 상황에 대해 동독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83105 Fa 3 NA 2, Bd. 5

1989년 8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루돌프 자이티스 수상청장, 베어틀레 차관, 두이스부르크 국장,
크롤리코프스키 동독 제1 외무차관, 니어 동독 외무차관

내용_

이 문서는 동유럽 국가에 있는 서독대사관으로 들어가서 서독으로 이주하기를 요구하는 동독 이탈주민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독 연방정부 수상청의 대표가 동독 외무차관과 만나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논의한 회의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 회의에서 자이티스 수상청장은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와 다른 동유럽 국가에 있는 서독대사관들이 직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동독에 있으며 그 해결책도 동독에서만 찾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에 대해 크롤리코프스키 동독 대표는 오히려 동독주민들이 서독대표부에 체류하도록 허용하고 그를 지원한 서독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하였다. 특히 부다페스트의 서독대사관에서 동독주민들에게 서독 여권을 발행해 준 것은 위법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서독대표부에 있는 동독주민들이 동독으로 귀국할 경우 그들이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래서 자이티스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까지 현재의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이 동독과 지속적으로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83105 Fa 3 NA 2, Band 5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에 진입한 동독 이탈주민 문제-베어틀레 상주대표부 대표가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보고서

1989년 8월 2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베어틀레 상주대표부 대표, 자이터스 수상청장

내용_

동베를린의 서독 상주대표부에 일반인 출입이 허용되지 않게 된 이후에도 상주대표부 내에 서독으로의 이주를 원하는 동독주민이 남아 있었다. 이 문서는 상주대표부의 베어틀레 대표가 이들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동독 지도부의 입장에 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동독의 입장: 동독 당국의 입장은 강경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호네커와 콜간의 정상회의가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 동베를린의 서독 상주대표부에 남아 있는 동독 이탈주민들의 태도: 이들은 대표부 건물 내에서 텔레비전과 신문을 볼 수 있다. 이들 언론 매체가 동독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을 전해 주고 있다.
- 3.1. 동독의 변호사 포겔과 내독성차관 프리스니츠 그리고 베어틀레 대표 간의 회의: 포겔 변호사가 호네커에게 동독 이탈주민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고 전달하였다. 그에 대해 베어틀레는 상주대표부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들이 대표부를 떠나 동독에 남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서독대표부에 알릴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 3.2. 위의 사항이 해결된 후에 상주대표부 내에 남아 있는 동독 이탈주민들과 다시 협의하도록 한다.

프라하와 부다페스트의 상황: 프라하와 부다페스트의 상황도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의 상황과 유사하다. 프라하와 부다페스트에서도 포겔 변호사, 프리스니츠 차관 그리고 베어틀레 대표가 동독 이탈주민들과 협의해야 할 것이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83105 Fa 3 NA 2, Band 5

1989년 8월 24일

담당자 / 기관_ 외무부 정치국 210과(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담당)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정치국에서 있었던 동독 이탈주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전승 4개국 또는 다른 국제기구를 동참시킬 수 있는 방안의 논의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조약 및 1972년에 체결된 기본조약을 법적 근거로 하여 서독은 '대내외적으로 주권 국가로서의 전적인 권한'을 누린다. 그 결과 서방 측 전승 3개국을 동독과 서독 간의 문제에 참여시킬 의무는 없으며, 단지 이들에게 진행되는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소련은 최근까지 거의 항상 '동독의 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동독 이탈주민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입장이 예상된다.

만일 서독이 서방 측 전승 3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주문할 경우, 독-독 관계의 핵심 부분에 대한 제어권을 놓치게 될 수 있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주권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어떠한 목표를 위해 3개 혹은 4개 전승국이 개입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즉, 완전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달성을 위해서?, 정치적 개혁을 위해?, 혹은 통일을 위해? 아니면 대사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인가? 이 모든 경우들은 크고 작건 간에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을뿐만 아니라 국내문제에 대한 혹은 동독과 서독 간의 양자 간 문제에 대한 개입에 해당한다.

그런데 유럽정치협력기구(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EPC)나 헬싱키협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동독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면서도 주권에 대한 논쟁을 야기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들을 검토하고 만일의 경우를 위해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물론 외무부는 수상청장과의 합의 하에 이제까지 양자 간 문제 해결 방식이 기존에 존재하는 경우 이를 다자간 방식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자 하는 정책 노선을 견지해 온 바 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1 E

문서
번호 54

동독 이탈주민의 서독대표부 체류 문제-베어틀레 대표가 자이티스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보고서

1989년 8월 2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 수상, 수상청장 자이티스,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내용_

이 문서는 동베를린의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인 베어틀레 대표가 연방수상 헬무트 콜에게 제출한 것으로, 동베를린과 동유럽지역의 서독대표부에 들어와 있는 동독 이탈주민 문제와 관련하여 동독 지도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서독정부가 취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동독은 탈출·이탈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으려 하고 이 문제가 동서 양국 간의 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동서독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동독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라는 것에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동독은 서독이 이 점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동독은 서독이 자국의 대표부에 있는 동독주민들을 내보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그를 위해 서독이 동독 이탈주민들에게 그들이 동독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들이 동독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것도 전해주라고 한다. 동독 당국은 문제 해결과 관련한 이러한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서독쪽에서 반응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양 측이 서로에게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동독은 콜 수상과 호네커 간의 회담을 개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그 방안은 위에서 언급된 것과 동일하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83105 Fa 3 NA 2, Band 5

1989년 8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겐서 외무장관, 콜 수상, 네메트 헝가리 수상, 호른 헝가리 외무장관

내용_

이 문서는 1989년 8월 25일에 열린 헬무트 콜 서독 수장과 네메트 헝가리 수상 간의 실무 회담 중에서 독일과 폴란드의 관계에 관해 논의된 사항에 포커스를 맞추어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8월 25일 오찬을 겸한 실무회담에서 네메트 헝가리 수장은 바르샤바조약기구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네메트 수장은 소련과 폴란드 지도부의 전화통화를 통해 폴란드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탈퇴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전했다. 폴란드의 상황이 고르바초프의 입장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헝가리는 고르바초프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한편 콜 수장은 폴란드에서 발생한 일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자유노조가 정당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분파로 갈라진 상황이다. 독일과 폴란드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 그러나 독일과 폴란드의 관계는 유럽의 안정을 위해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서독은 유럽에 어떠한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헝가리, 체코 그리고 동독의 발전이 아주 중요한데 동독의 경우 어떠한 개혁이나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호네커가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도 언제 개혁을 실현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불가리아는 소련연방의 일부가 되도록 해달라고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네메트 수장이 전하였다. 헬무트 콜 수장은 독일이 헝가리를 오스트리아와 같이 유럽의 일원으로 간주하며 양국 간의 관계가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심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213-30130 U1 Un 25 Band 1

문서
번호 56

김니치 성에서 열린 서독 수상 콜과 헝가리의 수상 네메트, 외무장관 호른 간의
실무회담

1989년 8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겐서 외무장관, 콜 수상, 네메트 헝가리 수상, 호른 헝가리 외무장관

내용_

이 문서는 1989년 8월 25일에 열린 헬무트 콜 서독수상과 네메트 헝가리 수상 간의 실무 회담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네메트 헝가리 수상은 헝가리의 경제위기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현재 헝가리가 고르바초프 나 코메콘에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방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헬무트 콜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이야기하여 헝가리를 돕겠다고 약속하였다. 나아가 유럽연합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겐서 외무장관이 확인해 볼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헝가리가 독일, 미국 그리고 유럽 연합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군축문제와 관련하여 네메트 수상은 1992년까지 헝가리에 주둔한 소련군을 철수해 달라고 고르바초프에게 요청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덧붙여서 호른 외무장관은 소련과 미국이 군축에 관해 정치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이 헝가리에 주둔한 소련군을 철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동독을 제외한 헝가리, 체코, 폴란드에 주둔한 소련군을 철수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서독의 외무장관 겐서는 그것이 군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독에 주둔하는 소련군이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m 21-30100 (56) Ge 28 (VS) Band 78, Bl. 296/1-296/5

문서
번호 57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와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으로 진입한 동독 이탈
주민 문제-수상실의 뒤스베르크 국장이 상주대표 베어텔레 차관에게 보낸 전문

1989년 8월 29일

담당자 / 기관_ 수상청, 상주대표부

내용_

이 문서는 수상청의 뒤스베르크 국장이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의 대표 베어텔레 차관에게 보낸 전문이다. 이 전문에서 뒤스베르크 국장은 상주대표부와 다른 서독대사관에 들어와 있는 동독 탈출주민 문제와 이주규정에 관해 논의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동독 당국이 이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우리와 논의할 의사가 있다는 점은 환영한다. 그러나 서독 연방정부는 동독이 큰 폭으로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동독은 현재 대사관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들이 동독의 자기 지역으로 귀향할 경우 이들을 기존의 이주신청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주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상주대표부와 다른 대사관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들이 이주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표부와 대사관에서 나가려고 할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나가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Arch/B 136/ 21860, 222-83105 Fa 3 NA 2, Band 5

문서
번호 58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와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으로 진입한 동독 이탈
주민 문제-상주대표 베어텔레 차관이 수상실의 뒤스베르크 국장에게 보낸 전문

1989년 8월 31일

담당자 / 기관_ 수상청, 상주대표부

내용_

이 문서는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의 대표 베어텔레 차관이 수상청장 루돌프 자
이터스에게 보낸 보고서로 상주대표부와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들어와 있는 동독 이
탈주민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동독의 입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외무부 서독담당국의 부국장 한스 슨들러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동독의 입장을 자
세히 전해 들었다. 그에 따르면 서독의 대표부에 들어가 있는 동독 이탈주민들이 자진해
서 대표부를 나와 고향으로 귀환할 경우 동독 당국은 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주신청
을 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신청서를 처리해 주기로 하겠다고 한다. 그것은 일반적
인 이주신청에 비해 아주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들이 기존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며 동일한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실업자가 되지 않도
록 해주겠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주신청을 위한 변호사를 찾지 못할 경우 그들이 변호사
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만일 대표부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경우 포겔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이 약속을 보증해 주겠다고 하
였다. 이러한 절차는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
용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동독 이탈주민 문제가 양국 정상 간의 회의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동독의 이런 입장을 고려하여 나와 프리스니츠 차관이 동
독의 포겔 변호사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요청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83105 Fa 3 NA 2, Band 5

문서
번호 59

부다페스트 주재 서독대사관의 동독 이탈주민에 관한 동독과 헝가리 간의 논의에
관한 정보-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텔레 차관이 수상청장에게
보낸 보고서

1989년 9월 1일

담당자 / 기관_ 수상청, 상주대표부

내용_

이 문서는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의 대표 베어텔레 차관이 수상청장 루돌프 자
이티스에게 보내는 전문으로 부다페스트 주재 서독대사관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 문제와
관련하여 동독 외무장관과 헝가리의 외무장관 호른 간의 회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상황
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찾아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제 헝가리 외무장관 호른이 동베를린을 방문하여서 부다페스트의 서독대사관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 문제에 관해서 동독 외무장관과 논의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
였다. 동독은 서독대사관에 있는 동독인들이 일단은 동독으로 돌아와서 이주신청서를 제
출하고 합법적으로 이주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고집한다. 그러나 호른 외무장관은 현재 헝
가리에 있는 5,000에서 10,000명의 동독 이탈주민이 동독으로 돌아올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는 질적으로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만 해서 이들을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에 있는 이탈주민들과 동일하게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호른 외무장
관과의 회의를 통해 내가 헝가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
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수일 내에 동베를린의 상황도 아주 긴급해질 것 같기 때문에 앞으
로는 나에게 헝가리의 상황을 수시로 전해 주기를 요청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83105 Fa 3 NA 2, Band 5

담당자 / 기관_ 연방 외무장관 겐서; 미국 국무차관 이글버거; 외무부 105과(언어 담당부)

내용_

이 회담에서는 특히 독-미 관계 및 군축 부문에서의 진전 그리고 소련, 폴란드 및 헝가리의 현재 상황 등이 논의되었다.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외무차관 이글버거에 따르면 소련이나 유럽과 관련해서 특기할 만한 문제는 없다. 겐서 외무장관은 이 부문에 있어 미국의 탁월한 외교정책 및 브뤼셀에서의 나토 정상회담의 성공을 평가하였다. 독일에서는 이미 이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외무차관 이글버거는 서독 내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역할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보였다. 겐서 외무장관은 그러한 점을 문제 삼는 것은 선거 중 단지 일부 그룹에 불과하다고 답변하였다.

외무차관 이글버거는 스타트 I(START I, 전략무기감축조약)와 관련한 미국 의회 내 동향을 설명하였다. 그는 유럽 내 재래식 안전보장 협상에 있어 독일의 기여를 강조하였다. 겐서 외무장관은 회담에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소련의 관심을 강조하였다.

폴란드와 관련해서 겐서 외무장관은 연대 자유노조의 성공을 강조했다. 서독은 폴란드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특히 파리클럽에서 후자에 대한 채무상환 요구에 여지를 주는 방안을 지지하였다. 겐서 외무장관은 연대 자유노조에 대해,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 공산주의자들이 직접 책임을 지게끔 하라는 조언을 해주었다고 발언했다.

헝가리의 상황과 관련한 언급 후에, 겐서 외무장관은 그 다음에 문제가 불거지는 나라가 동독이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동독정부가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동독주민들은 더 이상 기대를 갖지 않고 있다. 6,000명이 넘는 동독주민이 헝가리를 경유하여 탈주하였으며, 소련의 군대 소속 일부 군인들도 여기에 동참하였다. 헝가리의 대통령 네메트 및 외무장관 호른은 겐서 외무장관에게 강력한 개혁 추진 의지를 비친 바 있다.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바르샤바조약에서의 탈퇴를 암시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문서
번호 61

프라하와 바르샤바의 서독대사관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들에 관하여-수상청
뒤스베르크 국장이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텔레 차관에게 보낸 전문

1989년 9월 6일

담당자 / 기관_ 수상청, 상주대표부

내용_

이 문서는 수상청의 뒤스베르크 국장이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의 대표 베어텔레 차관에게 보낸 전문으로, 베어텔레 차관이 대표부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 문제에 대해 동독 당국과 협의할 때 전달할 서독 연방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는 동독 당국이 이탈주민들이 자기 주거지로 돌아가서 이주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처리절차를 간소화해 주겠다는 방안을 수용한다. 이러한 해결책을 동독 이탈주민들에게 설명해 주는 자리에 동독의 변호사 포겔이 동석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현재 상주대표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상주대표부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들이 그런 제안을 듣고 자율적으로 상주대표부에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 심리적 압력과 억압이 가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83105 Fa 3 NA 2, Band 5

문서
번호 62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폴란드 연대 자유노조 위원장 레흐 바웬사의 본(Bonn) 회담
1989년 9월 8일

담당자 / 기관 겐서 외무장관; 폴란드 ‘연대’ 자유노조(Solidarność) 및 자문 게레멕 교수;
정부 파견단; 외무부; 외무부 214과(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담당)

내용

폴란드 연대 자유노조 위원장 바웬사는 유럽통합을 지지하였다. 제도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지만 동-서 간의 경제적 격차가 장애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폴란드 연대 자유노조 위원장 바웬사는 서방의 폴란드 개혁에 대한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겐서 외무장관은 유럽공동체가 동유럽의 근린 국가들과의 협력에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그는 폴란드와 관련하여 채무 유예를 고려할 것을 프랑스 외무장관 뒤마 및 미국 외무차관 이글버거에 요청했음을 언급하였다. 독일은 1975년에 이루어진 ‘점보(Jumbo)-차관(Jumbo-Kredit)의 문제를 국가보증, 즉 헤르메스 보증(Hermes-Bürgschaften)제도 및 전문가의 투입을 통해 돕고, 또 직접적 식료품의 제공을 통해 지원할 용의를 피력하였다.

폴란드 연대 자유노조 위원장 바웬사는 다음과 같이 ‘염치없이 직접적인(fresh)’ 표현으로 발언하고자 양해를 구했다. 서방 측이 더 일찍 금전적 이득을 보고 싶다면, 그만큼 빨리 폴란드의 구조 전환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사업체들에 대한 투자보다는 ‘다수의 중소 사업체가 예금 및 대출을 할 수 있는 다수의 소규모 은행 지점’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많은 이득이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많은 독일인들이 단치히와 같은 자신들의 옛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데, 이들은 예를 들어 그곳에 호텔을 건축할 수 있을 것이다. “폴란드에 대해서는 세수가 늘고, 독일에 있어서는 이익이 늘 것이다.”

겐서 외무장관은 유럽을 하나의 집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신의 구상을 강조하며, 동유럽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문서
번호 63

동독의 내부문제에 서독의 불간섭-자이티스 수상청장과 노이바우어 본 주재
동독 상주대표부 대표 간의 회담

1989년 9월 8일

담당자 / 기관_ 수상청, 본 주재 동독 상주대표부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티스와 본에 있는 동독 상주대표부의 대표 호스트 노이바우어가 대사관 난민에 관해 논의한 회의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이 회의에서 자이티스 청장은 동독의 신문인 노이에스 도이칠란트가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다고 항의하였다. 근본적인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보도하였다. 서독은 대사관 난민들이 동독 내의 자기 지역으로 복귀할 경우 어떤 억압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동독 당국의 약속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다. 그래서 포겔 변호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중재하기를 요구한다.

이에 대해 노이바우어는 동독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는 서독 측이 국제법에 위배되는 일을 중지하기를 요구하였다. 동독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연방의회에서 이 문제를 공개 토론하는 것은 동독의 내정에 서독이 간섭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83105 Fa 3 NA 2, Band 5

문서
번호 64

헝가리를 통해서 동독 이탈주민들의 이주-네메트 수상에게 보내는 헬무트 콜
수상의 전문

1989년 9월 12일

담당자 / 기관_ 수상청, 콜 수상, 네메트 헝가리 수상

내용_

이 문서는 서독의 헬무트 콜 수상이 헝가리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과 관련한 규정을 발표한 헝가리의 네메트 수상에게 보낸 전보이다. 1989년 9월 10일 헝가리정부는 헝가리에 있는 동독주민들이 본인이 가고 싶은 국가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콜 수상은 이 전문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의 현장에 뿌리를 둔 위대한 인도적 행위를 하였다고 네메트 수상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30462, 21-30130 Band 3

문서
번호 65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미국 대사 나이즈(Nitze)의 본(Bonn) 회담
1989년 9월 1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 외무장관 겐셔; 미국 대사 나이즈(Nitze); 외무부 2A과(군축 및 군비통제 담당 연방 특임부), 홀릭 박사

내용_

이 문서는 서독의 겐셔 외무장관과 서독 주재 미국 대사 간에 이루어진 논의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겐셔 외무장관: 중유럽 및 동유럽에서 벌어지는 논의는 민주주의의 불안정화가 아니라 그 진전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열친도 외국에서 독일이나 미국에 있는 야당 지도자들과 바가 없는 것이다. 소련에서 민족성의 문제가 대두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소련 공산당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과거의 구조들을 제거하기 위해 이런 새로운 논의가 갖고 있는 추진력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발칸반도와 같은 지역에서 자기 결정권의 진전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겐셔 외무장관은 시장경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제안한 바 있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에 저항하는 지도부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동독에서의 상황이다. 겐셔 외무장관은 앞서 미국 대사 나이즈 발언에 동의하면서, 폴란드와는 달리 동독에서 민족적 정체성이 의제로 되지 않는 점이 양국 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하였다.

미국 대사 나이즈는 독일의 통일에 대한 토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유럽연합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겐셔 외무장관은 독일의 통일이 유럽통일의 결과일 뿐 그 시작일 수는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는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하나의 집으로서의 유럽’ 개념이 그 해답일 수 있으리라고 발언하였다. 당연히 유럽의 평화적 질서는 오직 미국 및 캐나다의 협조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동유럽의 개혁적 정부들에 대해 바로 지금 식량이나 개인 투자 및 공동 투자 사업들을 통해 실효성 있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발언의 요점이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문서
번호 66

연방의회 발언: 동독 이탈주민
1989년 9월 1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의회 의장 리타 쥬스무트, 연방 수상청장 자이터스

내용_

이 문서는 1989년 9월 14일에 열린 연방의회의 회의에서 리타 쥬스무트 의장과 루돌프 자이터스 수상청장 그리고 다른 연방의회 의원들이 헝가리, 폴란드, 오스트리아 그리고 동독 이탈주민들을 도와준 서독의 여러 기관에 감사하는 발언을 녹취한 것이다. 특히 자이터스 수상청장은 긍정적인 동독 이탈주민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규정과 조직에 소요될 비용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Plenarprotokoll 11/158, S. 12035-12047

문서
번호 67

헝가리 국경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자이티스 수상청장과 호르바트 주독 헝가리 대사 간의 회의

1989년 9월 1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주독 헝가리 대사

내용_

이 문서는 연방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티스와 주독 헝가리 대사 이스트반 호르바트 간의 회의에 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호르바트 대사는 헝가리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였다: 헝가리는 자국의 국경을 폐쇄할 의사가 없다. 지금까지 약 6,000명의 동독 이탈주민들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간의 국경을 넘어 갔다. 이 문제 때문에 헝가리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서방 국가들 또한 아주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헝가리가 개혁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입장에 있으며 동-서 간의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헝가리는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개혁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서독을 제외한 다른 서방국가들의 태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실제 서방국가들은 우리의 개혁에 대처할 어떤 전략도 없는 것 같다. 입으로는 개혁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는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우리의 개혁으로 인해 동-서 간의 세력균형에 입각한 현상유지가 깨지는 것과 독일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독 이탈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지속할 경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서독이 헝가리를 지원해 주기를 부탁한다.

이에 대해 자이티스 청장은 서독정부와 의회가 헝가리정부의 정책을 환영하며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바이에른과 바덴-뷔르템베르크 그리고 연방정부가 헝가리에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자 동독정부가 그것은 일종의 현상금이라고 비난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관은 앞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21-30100 (56) Ge 28 (VS) Band 79, Bl. 30-34

담당자 / 기관_ 영국 외무장관 메이저, 리차드 고즈니 담당관, 몰러비 대사; 연방 외무장관 겐서; 외무부 외무장관실 실장 대리 뢰펠부르크

내용_

두 장관 간의 첫 번째 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진 주제는 동-서 관계의 진전이었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겐서 외무장관: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독일의 조약체결 정책이 헬싱키 최종문서 및 개혁의 진전의 전제가 되었다. 그 외 1967년의 하르멜 보고서,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유럽이라는 하나의 집' 개념 및 비엔나 군축협상도 그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었다. 유럽공동체의 통합은 바르샤바조약 가맹국들에게도 큰 매력을 지닐 수 있다. 유럽의 분단을 극복하려는 폴란드 및 헝가리 등지에서 노력은 독일의 이해에도 매우 부합한다.

영국 외무장관 메이저: 헝가리 대사와의 대화를 통해 동유럽에서의 매우 급격한 개혁 속도를 실감할 수 있었다. 개혁이 경제적 발전보다 더 빨리 진전되는 것이 종종 문제가 되곤 한다. 대처 수상이 소련 공산당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겐서 외무장관은 서방 측이 폴란드를 지원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파리클럽에서 채무 유예 고려; 직접 자금원조를 하는 것보다는 민간 투자자본의 이동을 장려할 것; 경영 기법의 전수와 교육; 단기간 내의 생필품 공급; 농업 현대화 지원, 이를 위한 유럽 차원의 조정 계획이 필수적이다.

메이저 영국 외무장관이 동독 이탈주민 위기 관련하여 던진 질문에 대해 겐서 외무장관은 현재 약 18,000명이 헝가리를 경유해 탈주하였고, 동독에는 약 1백만 명의 출국 희망자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동기는 동독 자체에 대해 더 전망이 없다는 인식이 있고, 또한 서독 미디어 등에 비쳐진 이미지를 통해 이들이 서독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음 내용_ 유럽 정치 문제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8 E



문서
번호 69

연방 외무장관 겐서가 프랑스 외무장관 뒤마에게 보낸 서신-개혁 의지가 있는 중
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을 위한 서방의 공동 노력

1989년 9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 외무장관 겐서; 프랑스 외무장관 뒤마

내용_

이 문서는 겐서 장관이 프랑스의 뒤마 외무장관에게 보낸 서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한 서방 측의 결단력이 있는 본질적인 지원은 그 개혁 노력의 성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989년 9월 25일 유엔총회에서 모든 12개국 외무장관들이 모일 때를 빌어 유럽공동체의 포괄적 지원 체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유럽 계획’은 자구 노력을 돕는 형태로서 다음 조치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채무 유예; 경제, 무역 및 재무 분야 전문가 제공; 투자 이니셔티브; 경우에 따라 필수품 제공; 유럽공동체와 헝가리 및 폴란드 간의 더 빠른 자유화 조치.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진전에 있어 독-불 간 긴밀한 협력이 요망된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2 E

1989년 9월 21일

담당자 / 기관_ 겐셔 서독 외무장관, 피셔 동독 외무장관, 외무부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외무부가 동서독의 외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이 회의에서 논의될 사안을 정리한 자료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회의의 목적은 서독이 동독과 건설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며 내륙관계가 유럽의 통합이라는 거대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서독이 너무 서두른다거나 체제를 불안정화하려고 한다는 비난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밝혀야만 한다.

런던과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안보협력기구의 회의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분명해질 것이다. 참가국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 다국적인 포럼에서 논의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다. 유럽과 동독 간의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이 완료된 것을 환영하며, 양국 간의 무역이 지속될 것을 강조한다. 군축회의와 관련된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동독을 탈출하는 인구가 급증하는 이유는 동독 내에서 찾아야만 한다. 동독주민이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는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국적과 관련된 문제가 동서독 간의 기본협정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의 주민이 외국에서 서독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국제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7 E

문서
번호 71

동독 이탈주민과 독일통일에 대한 프랑스 보수파의 입장-파리 주재 서독 대사의 보고

1989년 9월 22일

담당자 / 기관_ 파리 주재 서독대사관 파이퍼 대사

내용_

이 문서는 파리 주재 서독 대사가 프랑스의 보수당 RPR의 기관지의 특집호에서 독일통일과 동독 이탈주민 문제를 다룬 것에 대해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89년 9월 19일자 '민족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루어진 독일문제의 핵심은 동독으로부터 대량탈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정부는 이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그것도 아주 늦게 반응하였다. 프랑스 외무장관 뒤마는 빌리 브란트 수상이 이야기한 것처럼 독일문제는 항상 주변국가들과의 합의 하에 처리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독일의 주변국가들은 통일이 아니라 동독의 민주화를 지지한다. 그것은 동독 공산정권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독의 절대 다수가 통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그것을 반대할 수는 없다. 소련과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독일을 경제적인 파트너로 간주한다. 전승 4개국 중에서 소련을 제외하고 어느 국가도 동독 이탈주민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과 뒤마 총리가 원하는 것처럼 중립화를 통해 두 개의 독일국가가 서로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낡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공산당이 소멸되고 민족자결권이 다시 적용되면서 독일통일은 완성될 것이다. 프랑스의 보수파는 이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다.

파이퍼 대사는 프랑스 보수파의 이러한 불분명한 입장표명이 궁극적으로는 내부에서 사회주의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39.798 E

1989년 9월 2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내용_

이 문서는 동베를린의 서독 상주대표부의 대표 베어텔레 차관이 연방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에게 동독의 상황을 전달해 주는 보고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현재 동독의 위기가 발발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사회주의통합당(사통당) 지도부가 개혁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소련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르바초프식의 개혁이 동독에서는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은 높은 편이지만 지도부는 그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지도부 내에 문화부차관, 자유청소년연합의 기관지인 청년세계의 편집장 그리고 독일자유민주당 당수와 같이 개별적으로 개혁에 관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호네커가 지도자로 남아 있는 한 동독에서 개혁의 전망은 밝지 못하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스탈린주의자들이 현재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다. 1989년 6월 중국 천안문사건에 대한 동독 지도부의 반응은 만일 동독의 반동주의자들이 우위를 점하게 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현재 동독의 교회나 반체제 세력에 의해 동독체제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동독정부는 소비물자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분노하여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동독은 여전히 서독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이 동독의 내부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아주 적다. 단 동독에게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 특히 인권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288/ 116, 11



문서
번호 73

라인란트-팔츠 연방주 총리 바그너와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자문 담당 팔린의 대
화-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의 보고

1989년 9월 23일

담당자 / 기관_ 라인란트-팔츠 연방주 총리 바그너;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자문 담당 팔린; 모
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대리 하이켄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기민당 소속 라인란트-팔츠주의 총리가 모스크바에서 고르바초프의 자문
팔린과 만나서 논의한 것에 대한 보고서이다. 이 만남에서도 특히 팔린은 동서유럽의 접근
을 환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그로 인해 새로운 균열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우려
를 표명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럽이 추구해야만 하는 것은 공동의 법률 또는 환경문제에 관한 협력 등이다. 이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에 열렸던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고르바초프의 입지가 더 강화되었
다. 그것은 물론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의 구조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정책의 궁극적인 성공여부는 결정된 사안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달려
있다. 더욱이 이 정책은 다양한 집단의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권리를 모든 사업체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00% 외국기업의 투자를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동독과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동독의 여행
자들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를 거쳐 서독으로 가면 그것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동독은 경제적인 효율성 면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올렸다. 서독이
현재 성취한 많은 것들이 1950년대 이념경쟁과 같이 동독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
었다. 동독과 서독은 다른 유럽의 어떤 나라들보다 함께 건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13 E

담당자 / 기관_ 연방 외무장관 겐서-소련 외무부, 연방 외무부 정치국 카스트롭 국장

내용_

이 문서는 유엔 총회 기간 중 뉴욕에서 열린 서독 외무장관 겐서와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간의 회기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 만남에서 겐서와 세바르드나제는 서로 좋은 의견을 나누었음을 강조했다. 겐서는 그래서 자신이 유엔 총회의 연설에서 세바르드나제가 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이 회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세바르드나제: 서독의 북부 도시 브레멘에서 열린 기민당 전당대회에서 헬무트 콜 수상이 행한 연설 중에 몇 가지가 우려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가 특정한 그룹을 고려해야만 했고 전당대회라는 특수한 분위기 때문에 1986년과 유사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히틀러와 소련 지도부에게 모두 동일하게 2차 세계대전의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특히 우려되는 것이다. 그것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경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

겐서 외무장관: 자신의 연설이 독일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며 상호접근을 통해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콜 수상의 연설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련의 개혁과정이 서독과 유럽 전체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확인하였다.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모든 인사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동독의 변화는 현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수만 명의 동독국민이 폴란드, 헝가리 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국경을 넘어 서독으로 오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진행되는 개혁이 동독에서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세바르드나제: 동독의 삶의 조건이 비교적 좋은 편이다. 특히 소련에 비하면 훨씬 좋다. 그러나 동독 지도부가 정치적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소련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겐서 외무장관: 동독주민들은 자신의 생활을 사회주의 주변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독과 비교한다. 소련이 대사관의 동독 이탈주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요청한다.

세바르드나제는 이 문제의 시급함을 이해했지만, 동독의 불안정화가 유럽 전체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산가족의 결합을 원하는 것은 인간적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문서
번호 75

독일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파리 주재 서독대사관의 보고
1989년 10월 2일

담당자 / 기관_ 파리 주재 독일대사관 공사 하이너헨

내용_

파리 주재 서독대사관은 독일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프랑스의 정치가, 전문가들과 논의하였다. 정치학자 그로서 교수와의 논의도 그런 논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프랑스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경우가 드문 것도 독일대사관이 비공식적인 만남을 갖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프랑스정부가 독일이 통일을 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정당한 요구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로서 교수와의 대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유럽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의 정책에 대한 질문에 그로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에는 독일과의 협력을 원하는 그룹과 일정한 정도로 독일을 통제하려는 세력이 항상 경쟁해 왔다. 프랑스의 입장을 하나의 정관으로 명문화하거나 고정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 양국 간의 소통문제도 있다. 서독은 현대적인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하고, 자유를 원하는 동독인의 의지도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민당의 드레거 원내총무처럼 오데르-나이세 강의 국경선을 문제 삼는 사람도 있다. 본질적인 문제는 동서독과 유럽공동체 간의 새로운 관계이다. 서독과 유럽공동체의 관계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동독을 유럽공동체로 통합시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서독으로 오는 동독의 이탈주민들이 자동적으로 모든 유럽공동체 성원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프랑스가 서독과 함께 공동으로 동유럽정책을 취하려는 의지는 아주 제한적이며, 그 이유는 무엇보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39.798 E

문서
번호 76

폴란드에 있는 탈동독주민의 이주-베어텔레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가 수상청장에게 보낸 보고서

1989년 10월 2일

담당자 / 기관_ 수상청,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텔레, 수상청장 자이티스

내용_

이 문서는 동베를린의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텔레 차관이 폴란드에 있는 동독 이탈 주민들을 특별열차로 서독의 헬름슈테트까지 이동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서 연방 수상청의 자이티스 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동독 당국이 폴란드 내에 있는 이탈주민들이 특별열차를 타고 동독영토를 지나서 합법적으로 서독으로 이주하도록 해주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동독에 남은 그들의 가족들 또한 정상적인 이주절차를 거쳐서 서독으로 간 가족에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였다.

1989년 10월 1일에 809명이 특별열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이 열차가 동독영토를 통과할 때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차가 지나갈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손을 흔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헬름슈테트에서는 연방의회 의장 리타 쥬스므트와 니더작센 주총리 알브레히트 그리고 약 천여 명의 시민들이 탈동독주민들을 맞이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 것은 동독 당국이 약속한 이주서류를 전달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어쩌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83105 Fa 3 NA 2, Band 6



문서 번호 77 체코에 있는 탈동독주민의 이주-콜 수상과 아다멕 총리 간의 전화통화
1989년 10월 4일

담당자 / 기관_ 수상청, 콜 수상, 아다멕 총리

내용_

이 문서는 콜 수상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아다멕 총리와 체코에 있는 탈동독주민 문제에 관해 전화로 논의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 전화통화에서 콜 수상은 프라하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에 대해 아다멕 총리는 현재 서독대사관 부지에 약 6,000명 그리고 대사관 주변에 있는 약 2,000명, 그 외에 약 3,000에서 4,000명의 동독 이탈주민들이 프라하로 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오늘 밤에 이들 10,000여 명의 동독 이탈주민들이 특별열차를 타고 동독영토를 거쳐서 서독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83105 Fa 3 NA 2, Band 6

1989년 10월 5일

담당자 / 기관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클라우스 블레히, 서독 연방 외무부 정치국 국장 요
아힘 폰 아님, 소련 외무부 기획실장 그벤다체

내용

이 문서는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가 소련 외무부 정책기획실 실장과 서독 외무부 정치
국장 간의 회의에 대해 외무부로 보낸 보고전문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벤다체는 미국과 소련 간에 진행되는 군축협상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 같으며
1990년에는 협정서에 조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군축협상에서는 공군과
해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다. 소련은 유럽안보협력회의가 안보정책에 더 많이 관여하도
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다음 해 정상회담에서 제의할 생각이라고 한다.

유럽 전역에 번지고 있는 신사고의 발전과 관련하여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이 뉴욕에서
발언한 것처럼 가능하면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벤다체
는 독일과 관련해 소련은 두 개의 독일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에 대해 서독의 입장은 조금 복잡한 것 같다고 했다.

아님 실장은 독일문제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라고 답하였다. 예를 들어 기본조약
에서 국적문제의 경우 독일쪽에서 선택한 문제가 아니었고 그에 대한 분명한 합의점이 아
직 도출되지 않았다. 서독은 이미 체결된 조약과 성명서의 합의사항을 준수하겠지만 동독
의 상황에 대해 서독이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벤다체는 동독에게 압력이 가해지고 있고 무절제하게 분출되는 감정을 조정하는 책임
을 찾아보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아님 국장은 외무부에 소련이 유럽안보협력기구의 틀을 서구의 기존의 방어적인 자세에 반
하는 형태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소련이 기존의 동맹의 틀을
벗어나 유럽차원의 틀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01 E

문서
번호 79

독일정책에 대한 폴란드 노동당의 입장-바르샤바 주재 서독 대사의 보고서
1989년 10월 6일

담당자 / 기관_ 폴란드 노동당, 바르샤바 주재 서독 대사 쉴러

내용_

이 문서는 바르샤바 주재 서독 대사가 보낸 전문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폴란드 하원의원이며 자유노조의 자문인 게레멕 의원이 1989년 9월 3일에 서독의 '빌트 암 존탁'지와 한 인터뷰에서 통일된 독일이 다른 국가에 위협을 가하지만 않는다면 독일도 통일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폴란드에서 특히 노동당 내에서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레스쎬 비서는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세력균형을 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난했다. 노동당 제비서인 라코프스키는 노동당이 현재 폴란드의 지리적 영토를 유지하며 민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표현했다. 양대 세계대전 사이에 폴란드에게는 노동당과 같은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독일이 통일되면 폴란드 서부지역에 사는 700만 명의 주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자유노조의 입장이 그것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한다. 이런 자세는 폴란드 노동당의 인사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폴란드 노동당의 기관지는 알타협정을 통해 형성된 유럽의 전후질서를 위협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폴란드 노동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1980년대 이후 지속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6 E

문서
번호 80

프라하와 바르샤바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들-수상청장 자이티스와 뒤스베르크
국장의 보고서

1989년 10월 6일

담당자 / 기관_ 수상청

내용_

이 문서는 자이티스 수상청장과 뒤스베르크 국장이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의 서독대사
관에 있는 탈동독주민들의 이주 문제에 관한 협상 경과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다. 이 문서
를 통해 1989년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3일 동안에 걸쳐 본에 있는 동독 상주대표부
대표 호스트 노이바우어와 연방수상청이 어떻게 협상하였는지 자세히 볼 수 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1329, 221-35016 Ve 40 NA 1

문서
번호 81

독일문제에 대한 프랑스 외무장관 롤랑 뒤마의 견해
1989년 10월 16일

담당자 / 기관_ 프랑스 외무장관 롤랑 뒤마; 서독 외무부 법무국 (일반 국제법 담당) 500과
과장 힐겐베르크

내용_

이 문서는 연방 외무부 국제조약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독일문제에 관한 프랑스 외무장관 뒤마의 입장에 관한 분석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외무부차관 주트호프는 프랑스 외무장관 뒤마의 발언에 대해 조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었던 바 있다. 프랑스 외무장관 뒤마는 한 인터뷰에서 2차 세계대전의 결과 당시 국제적 관계 속에서 독일의 분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발언하였다. 뒤마 외무장관은 독일인의 통일을 위한 노력은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 상황이 공고해진 점도 지적하였다.

뒤마 외무장관의 발언 중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해 국제법적 조약이 분단의 공고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논한 것이 독일분단이 서독이 그간 동독과 체결한 조약들 때문에 확고해졌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통일이라는 목표가 1972년의 동·서독 기본조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뒤마 외무장관이 말한 조약이 전승 4개국의 조약들을 의미할 경우, 전승 4개국은 독일을 합병한 것도, 분할한 것도 아니며, 단지 이를 공동으로 점령하고 정부기관을 인수받았을 뿐이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뒤마 외무장관이 만일 독일분단의 역사적 상황 및 독일에 대한 전승국들의 당시 권한에서 의무도 나온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 것이라면 그 발언은 적절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의 발언에는 프랑스가 서독에 대해 현 상태를 최종적 상태로 보지 않는다고 조약상 확인했었던 점을 언급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40723E

1989년 10월 19일

담당자 / 기관_ 겐서 서독 외무장관, 오토 동독 외무차관, 서독 외무장관실 엘베 실장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 외무장관실 실장이 겐서 외무장관과 동독의 외무차관 간의 회담에 관해 보고한 전문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겐서 장관은 내독문제는 원래 외무장관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비엔나와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협상에 관해 설명했다. 그리고 동독으로부터 탈출해서 대사관으로 진입하는 동독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의 상황에 관해 설명하면서 동독 당국이 서독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출한 이주신청서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오토 차관은 동독의 지도부에 교체가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협력관계를 맺기를 원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렇다고 동독이 서독으로부터 조인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적문제와 관련하여 서독의 입장은 동독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지도부는 진지하게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동독으로부터의 이주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효과적인 경제개혁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여행규제조항도 개혁될 것이라고 전했다. 겐서 장관은 서독은 국적문제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지만 현재의 문제를 최대한 잡음 없이 해결할 방안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를 위해서는 서독대사관으로 진입하는 동독인의 수가 더 이상 증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장관 겐서; 뒤마 프랑스 외무장관; 서독 외무부 장관실 실장 엘베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장관과 프랑스 외무장관 간의 회의에 대한 기록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 외무장관 뒤마는 1989년 10월 24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헬무트 콜 서독 수상 간의 회담에서 의견 교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겐서 외무장관에게 전하였다. 두 정상 간의 관계가 다소 냉각되었다고 한다. 미테랑 대통령이 '유럽통화동맹(Europäischen Währungsunion)'을 구성하기 위해 정부 간 회의의 일정을 정하고 1993년 1월 1일부터 이 동맹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지만 콜 수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기를 주저하다가 마지막에 동의하였다고 뒤마 장관이 설명하였다. 겐서 장관은 그 이유가 아마도 서독 내부 국내 정치적인 것이었을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겐서 외무장관은 서독정부가 독일통일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뒤마장관이 프랑스에서 이 문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이를 제안하였다. 겐서 외무장관은 나아가 독일문제는 유럽문제임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유럽공동체가 나토를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뒤마 장관의 평화조약 관련 질문에 대해 겐서 장관은 평화조약이 유럽의 국제 정치적 지형에 잘 맞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뒤마 장관은 소련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이 미테랑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소련이 지금은 독일통일을 위해 시기가 무르익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발언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이 소련과 비슷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전달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1989년 10월 26일과 27일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바르샤바조약기구 외무 장관회의와 연방외무부 212과 보고

1989년 10월 27일

담당자 / 기관_ 바르샤바조약기구, 연방 외무부, 연방 외무장관 겐서

내용_

이 문서는 연방 외무부 212과의 과장이 겐서 장관을 위해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성명서를 정리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회의에서는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새로운 구조와 과제를 찾고자 노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유럽안보협력기구가 동서관계의 중심적인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 I. 동서관계: 소련, 폴란드 헝가리 개혁의 가속화로 인해 이 회의가 열렸다. 폴란드의 마 조비에프스키 총리는 군사적 연맹이었던 바르샤바조약기구를 정치적인 연맹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소련의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도 이와 유사하게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민족자결권’, ‘유럽 분단의 점진적인 극복’ 그리고 ‘냉전의 잔재 제거’ 등이 새로이 등장한 슬로건이었고, ‘종전 이후의 현실’을 지적하는 것은 뒤로 밀려났다. 독일의 국경문제와 국적문제를 염두에 두고 국경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지 않고 주권국의 권리를 존중하기로 했다. 이 회담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은 바르샤바조약기구를 정치적으로 확대하고 코메콘 회원국가들 간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도구를 만들어서 조약 회원국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광범위한 경제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 II. 군비통제와 군축: 성명서의 삼분의 일은 이 문제에 할애되었다. 여기에서는 재래식병력에 관한 협상, 신뢰구축과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에 대한 협상, 전략적 핵무기, 전략무기의 감축, 화학무기, 해군력 등이 포함되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39.798 E



문서
번호 85

미 행정부의 독일문제에 대한 입장-외무부 204과 보고

1989년 10월 30일

담당자 / 기관 미국정부; 서독 외무부; 외무부 (미국 및 부속 카리브해 부속지역, 독-미 간 사회·문화·정보정책적 협력 담당) 204과 과장 폰 몰트케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에서 미국 행정부의 독일정책을 분석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시 대통령의 행정부는 동맹 파트너로서 독일문제에 대한 서독정부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1989년 10월 25일의 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은 ‘향후 10년 후의 독일의 지위 변화’를 예상하였다. 이 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 변화를 의도적으로 너무 재촉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중립주의로 빠져드는 것”도 피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그에 있어 서독의 파트너 국가들과 서방 연합국들과의 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1989년 5월 15일에 부시 대통령은 유럽 내 단절의 극복이라는 큰 틀 속에서 독일분단의 극복에 대해 언급하였다.

1989년 10월 16일에 미국 국무장관 베이커는 ‘통일’이라는 표현 대신에 ‘자결 원칙에 의거한 화해(reconciliation in self-determination)’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독일통일이 원상회복적 성격을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문서의 다음 내용에는 각 인터뷰의 인용문들이 포함됨]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30 E

1989년 11월 2일

담당자 / 기관 연방 외무장관 겐서; 오스트리아 부총리 요제프 리글러; 외무부 (프랑스, 안도라, 모나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담당) 202과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에서 겐서 외무장관과 오스트리아 부총리 간의 회담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독 연방 외무장관 겐서는 오스트리아 부총리 요제프 리글러에 대해 오스트리아가 독일 민주주의공화국(동독) 출신 동독 이탈주민들을 수용하고 보호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오스트리아 부총리 요제프 리글러는 유럽공동체의 발전과 개혁은 오스트리아의 주요 관심사라고 말하면서, 유럽공동체의 발전과 개혁 양 측면은 분리 불가능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유럽공동체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부총리 리글러는 유럽공동체가 앞으로 신규 회원국들(오스트리아는 1995년 EU에 가입하게 됨) 및 타 국가들과 협력하는 데 새로운 방식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오스트리아 부총리 리글러는 오스트리아의 유럽공동체 가입 의사에 대해 서독이 지지해준 데 감사를 표했다.

호네커 후임으로 7주 간 권좌에 있었던 에곤 크렌츠의 모스크바 방문에 대해서 겐서 외무장관은 실망감을 표시하였다. 에곤 크렌츠가 동독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겐서 외무장관은 폴란드 그리고 헝가리에서의 저항운동에 국경을 느슨하게 만들 정도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오스트리아 부총리 리글러는 폴란드에 신속한 식량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겐서 외무장관은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의 유럽공동체 가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8 E

문서
번호 86a

프라하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 문제-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텔레가
수상청장에 보낸 보고

1989년 11월 3일

담당자 / 기관_ 수상청,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텔레, 수상청장 자이티스

내용_

이 문서는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의 대표 베어텔레 차관이 에곤 크렌츠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모임에서 크렌츠와 나눈 대화와 외무장관 피셔와 외무차관 크롤로프스키와 나눈 대화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에곤 크렌츠와의 만남에서 당서기로 추대된 것에 대한 서독 연방정부 축하인사와 함께 프라하에 있는 서독대사관의 심각한 상황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연방정부의 대표와 만나는 문제를 언급하였다. 5,000여 명의 동독 이탈주민 문제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프라하 주재 동독대사관이 이주증명서를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 자리에 함께 동석하였던 동독 외무장관 피셔가 동독대사관의 인원을 늘리겠다고 하였다. 나아가 베어텔레는 크렌츠에게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의 수리를 마치고 곧 다시 문을 열 예정이며 동독 당국이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고 하였다.

연이어 크롤리코프키 외무차관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가 베어텔레 본인에게 탈동독주민들에게 먼저 동독 당국에 이주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이주허가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설명하여 귀가를 종용하기를 요구하였다. 그렇지만 베어텔레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먼저 대사관에 들어와 있는 동독 이탈주민 전원을 서독으로 이동하도록 허용하고 동독이 그에 필요한 서류를 차후에 발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크롤리코프스키는 동독 이탈주민들 중에 극소수만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방안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프라하 주재 동독대사관의 인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400건 이상의 이주서류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리에 체코 대사가 와서 베어텔레 차관은 그에게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들이 동독대사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임시수용소와 같은 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1861, 222-83105 Fa 3 NA 2, Band 7

1989년 11월 8일

담당자 / 기관_ 바르샤바조약기구, 연방외무부 213과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외무부 소련과에서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다. 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해 소련이 여전히 지도권을 장악하고 있고 회원국들을 외교협력의 강화와 같은 형태로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제 태도가 전환되고 있는 것이 보인다. 나아가 동서관계의 전체적인 변화 속에서 내부의 발전을 이룩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소련 외의 다른 회원국들은 개방과 불확실성 속에서 근본적인 구조전환을 겪고 있다. 심지어 헝가리의 경우 조약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1989년 10월 26일과 27일에 열린 외무장관회의에서 개혁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그것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지금까지 담당했던 역할을 보면 이 기구는 1954년에 독일을 중립화하려는 소련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후에 집단안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것은 동유럽의 현상유지를 위한 도구였다.

현재 동서 진영 간의 복잡한 관계는 1년 반 전에 소련연방의 구조를 재조직화하는 작업이 완전히 열려 있었던 상황과 유사하다. 그에 따르면 서방 진영과의 대결구조가 공동의 통합된 구조를 갖는 공동의 정치적 틀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고르바초프에 따르면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필요성 자체가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유럽에서 양 진영의 동맹이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소 강대국 대화채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는 장기적으로 재래식 무기를 축소하는 데 대체할 수 없는 도구이다. 현재의 추세는 협력적 안보관리이며 서로 간의 관계도 그에 상응하게 새로 형성되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39.798 E

문서
번호 88

서독 외무장관 겐셔와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의 전화통화-외무부 외무장관실 보고

1989년 11월 9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장관 겐셔;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서독 외무부 장관실 실장 엘베

내용_

겐셔 외무장관은 (베를린 장벽 개방과 관련한) 소련 측의 '사려 깊고도 책임감 있는 대처'에 대해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를 표했다. 겐셔 외무장관은 최근 몇 년 간의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과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독일은 앞으로도 계속 모든 조약들과 의무들을 준수할 것임을 밝혔다. 중·동유럽에서의 개혁 움직임이 안정성의 희생 없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다.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는 이러한 전화통화 형태의 의견 교환이 자주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동독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동독 상황은 그 내정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하였다. 동독 지도부는 용감하고도 옳은 결정들을 내리고 있지만 동독 내 대규모 대중 운동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였다. 하루 전에 있었던 연방 수상 헬무트 콜이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에 대한 전언에서도 이러한 우려 사항이 피력되었던 바 있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문서
번호 89

연방 수상 헬무트 콜의 1989년 11월 폴란드 공식방문
1990년 11월 10일

담당자 / 기관 연방 수상 헬무트 콜; 폴란드 총리 타데우시 마조비에츠키;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연방 청소년·가족·여성·보건부장관 우르줄라 레어; 연방 식량·농림부장관 아그나츠 키홀레;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장관 클라우스 퓌퍼; 연방 특임관 겸 연방 공보부장관 한스 클라인; 폴란드 '연대' 자유노조 위원장 레흐 바웬사

내용

콜 수상은 연방정부의 많은 요인들과 함께 폴란드의 문화 및 경제 부문의 대표자 70인과 회동을 가졌다. 그곳에서 콜 수상은 마조비에츠키 총리 및 폴란드 연대 자유노조 위원장 바웬사와 회담을 하였다. 방문 기간 중 아우슈비츠 및 비르케나우 집단수용소 방문 및 크라이스아우 박람회 참관이 계획되었다. 또한 방문 기간 중 9개의 협정이 서명될 예정이고 그 외 특히 폴란드공화국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포함한 더 긴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동 성명이 준비될 것이다. 양측의 쟁점 사항은 폴란드의 서부 국경을 획정하는 오데르-나이세 강 경계선 문제 및 나치 집권기 중 폴란드 강제노역자의 보상청구권 문제이다.

출처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vom 10.11.1989, Nr. 262/45 D, S. 1-2

문서
번호 90

서독-영국 외무장관 회의-연방외무부 장관실 보고
1989년 11월 15일

담당자 / 기관_ 겐서 서독 외무장관, 허드 영국 외무장관, 연방 외무장관실 부실장

내용_

이 문서는 새로 취임한 영국의 허드 외무장관이 취임 인사차 서독을 방문하여 겐서 외무장관과 회담한 내용에 대한 보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허드 영국 외무장관과는 동서관계와 동독의 변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유럽의 개혁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동유럽에 대한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의 공동보조가 필요하며 개혁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한 모델을 잘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겐서 장관은 유럽통합 과정이 지체되는 것은 동유럽 국가들의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1989년 11월 15일에 개최된 독일문제에 대한 서독 연방정부의 장관 회의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 회의에서 환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동독에서 서독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방문객에게 환영금을 주는 것이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폴란드의 경제상황이 최악이어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의 통화지원과 생산력이 있는 분야에 서구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서독은 10억불의 미국-기금에 2억 5,000만 달러의 규모로 참여할 것이다.

허드 외무장관은 동독의 발전에서 서독의 기업들이 처음부터 유리한 위치에 서서 경쟁한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무엇보다 동독의 안정성과 국경 불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무시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겐서 장관: 동독주민은 내적 개혁과 정당의 다원성, 자유총선거를 요구하지 서독과의 관계를 개혁하라고 외치지는 않는다. 자유총선거가 실시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변화하리라고 기대하기 거의 어렵다. 나아가 동서 진영의 경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소련의 안전의 필요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소련의 내적 상황은 발틱 연안 국가들의 분리를 위한 움직임으로 인해 지금 아주 복잡하다. 군축협상의 경우 고르바초프는 구체적인 제안으로 주도권을 다시 잡으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2 E

1989년 11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 외무장관, 미국 대통령,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내용_

이 문서는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가 작성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젠서 외무장관은 부시 대통령을 만나 그간의 지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제 남은 것은 개혁과 자결권을 실현하고 유럽안보협력회의를 통해 유럽에서 평화질서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그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견해를 표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조심스러운 접근을 통해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젠서 장관: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미소관계의 개선을 통해 동구유럽에서 더 많은 이동의 자유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인들이 독일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서독은 동맹과 유럽공동체에 충실한 회원국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동유럽 국가들에게는 유럽공동체가 아주 매력적인 기구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는 동구권이 안고 있는 문제와 위기를 이용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부시 대통령은 고르바초프가 동구의 개혁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과 독일통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젠서장관: 동독에서의 운동은 개혁과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선거 세 가지로 압축된다. 이것은 이웃 국가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드로우 수상은 서독과의 계약 공동체의 구성에 관해 언급하면서 동시에 프랑스에 협력에 관한 조약서를 보냈다.

부시 대통령은 말타에서 고르바초프와 만나면 그의 목표가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보기에 당시 소련에게는 자신이 안고 있는 경제적, 지역적 문제가 독일통일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프카니스탄과 중남미에 파병한 것은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다.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은 경제영역에서 그렇게 엄청난 요구가 포함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7 E

문서
번호 92

워싱턴에서 열린 겐서 외무장관과 미국 안보자문 브렌트 스코우크로프트 간의
회의

1989년 11월 21일

담당자 / 기관 겐서 서독 외무장관, 미국 안보자문 스코우크로프트, 연방외무부, 정치국 국
장 카스트롭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장관 겐서와 스코우크로프트 미국 안보자문 간의 회의에 대한 보고
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겐서 장관은 독일민족에게도 민족자결권이 주어져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동독도 민주화
된다면 서구사회에서 그 어느 누구도 독일로부터 오는 위협이 우려된다고 하지 않을 것이
다. 그는 이런 발전이 유럽의 틀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그를 위해서는 동독과 화폐문제를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근본적으로는 동독경제를
모두 팔아넘기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구로부터의 투자를 위한 좋
은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을 다른 개혁국가들이 있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스코우크로프트는 4대 전승국과 평화조약의 최종적인 체결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였다.
겐서 장관은 빌리 브란트를 언급하면서 독일이 홀대를 받는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만일 이 회담을 4대 강국의 조건 대로만 따라 한다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아
주 커다란 후퇴를 의미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30 E

담당자 / 기관_ 미국 민주당 상원 대표, 연방 외무장관

내용_

미셸 상원의원 민주당 대표는 베를린과 동독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겐서가 이런 모든 상황을 예측한 것이 아니냐고 농담을 건넸다. 겐서 장관은 동맹 내부에 지속적인 정책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면서 미국의 지원에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이제는 안보문제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인식하고 동유럽에서 진행되는 개혁을 위한 안정적인 틀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것이 서구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일반적으로 자신의 잇속만 챙기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국경문제도 더 이상 거론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셸은 동독에서도 언젠가는 통일에 대해 묻는 주민투표가 시행될 것이라고 보았다.

겐서 장관은 통일논의는 현재 주로 동독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동독에서는 자유선거,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만일 동독정부가 이런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통일논의가 더욱 강력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동독을 이탈하는 주민들이 대거 밀려오는 문제는 서독의 국내정치판을 새로 짜게 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는 나아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이 모든 문제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30 E

문서
번호 94

10개항 계획-본(Bonn)에서의 예산 논의 중 헬무트 콜 수상에 독일정책에 대한 연설
1989년 11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 수상 콜

내용_

1. 서독은 이행기간 동안 여신 펀드의 일부를 지급할 용의가 있다. 동독이 (자국 내 여행객 최소 제한 정책 포기, 동독으로의 입국 간소화 및 상기 펀드에 대해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것 등을 포함한) 상응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그 전제이다.
2. 서독과 동독 간 특히 환경, 인프라 설비 및 장거리 통행 부문에 있어서의 협력의 지속 및 강화
3. 서독은 동독에서 정치적이자 경제적인 변화가 계속된다는 전제에 원조와 협력을 확대한다.
4. 모드로우 동독 총리가 언급했던 계약 공동체(Vertragsgemeinschaft)와 관련한 추가적인 제도적 조치
5. 서독은 동독에서 자유선거가 시행된 이후 함께 국가연합(Föderation)을 형성할 용의가 있다.
6. 지속적이고 정의로운 유럽 내 평화적 질서의 구축을 목표로 양독 간 관계를 전 유럽적 문제로 간주
7. 연방정부는 유럽 공동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시킬 무역 및 협력협정의 체결을 지지한다. 독일통일의 달성 과정은 유럽통합의 일환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유럽공동체는 민주화된 동독 및 다른 민주주의적 중·동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문호를 열어야 한다.
8. 헬싱키회의는 이러한 전 유럽적 구상에 있어 핵심이며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
9. 광범위한 군축 및 군비 통제
10. 통일은 앞으로도 계속 연방정부의 정치적 목표이다.

출처_ Bulletin des Presse-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Nr. 134,
29.11.1989

담당자 / 기관_ 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 정치국장 요아힘 폰 아르남; 서독 외무부

내용_

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 정치국장 요아힘 폰 아르남은 보고에서 몰타 정상회담 이전의 소련의 서방정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련은 동유럽에서의 변화를 헬싱키 2차 협정의 틀 안에서 이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현 상태의 유지 혹은 전후정치 구조의 유지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유럽의 분단을 뜻하는 '역사의 유물'을 극복한다는 의미에서 '안정성'과 '평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소련 측의 전략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소련이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보여준 노력에서 소련이 유럽 내 안전보장체제를 진전시키고자 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나토의 위협이 더 이상 현실적인 위협으로는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들이 자국에 주둔하는 소련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것이다.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소련 내 제 민족들의 문제이다. 소련은 자국의 군사적 영향력의 감소와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탈피하려는 노력에 대처해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이는 결국은 서방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것이 현재 소련 외교정책의 주된 동력이기도 하다.

소련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지원이다. 소련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마샬플랜'이 미디어 및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서방국가의 정부가 보증해 주는 차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 공급부족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소련의 상황이 악화될 경우 그 개혁 노력도 멈추게 될 것이라는 점을 서방국가들이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란다. 서독의 수도 본을 공식방문하였을 때(1989년 6월 12-15일) 고르바초프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그로 인해 그가 서독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큰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련은 다른 일부 서방국가들이 이미 독일통일에 유보적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련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다른 국가들이 그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확실히 표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련은 독일통일에 가속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 점이 소련이 특히 서독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01 E



문서
번호 96

폴란드의 독일정책에 대한 상원 외교위원회 자문 지에바노프스키의 입장-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

1989년 11월 29일

담당자 / 기관_ 폴란드 상원 외교위원회 자문 지에바노프스키; 바르샤바 주재 서독 대사 질버
베르크

내용_

이 문서는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에서 폴란드 자유노조의 독일정책에 대한 기본입장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폴란드 상원 외교위원회 자문 지에바노프스키가 ‘Tygodnik Powszechny’지에 기고한 글은 폴란드 자유연대노조의 독일정책에 대한 원칙적 문서로 간주된다. 지에바노프스키 자문은 크라이스라우에서 개최된 1989년 11월 12일의 연방 수상 헬무트 콜과 마조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의 평화 선언이 상호화해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알타회담 이후 독일문제가 다시 가장 중요한 유럽문제로 부각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독일의 완전한 통일이 반드시 그 힘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에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았다. 서독은 통일을 위한 경로를 유럽공동체나 다른 열강들의 이해와 반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폴란드는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현재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 ‘안정성이 존재하는 섬’과 같은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독일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창조적인 힘으로 바꾸어 전 유럽적 체제를 새로 만들고 이를 통해 모든 유럽국가들이 더 큰 안정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서의 다음 내용에는 동 기고문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6 E

담당자 / 기관_ 연방 외무장관 겐셔 및 대표단; 대처 영국 수상; 런던 주재 서독 대사 폰 리히트호펜

내용_

이 문서는 겐셔 외무장관이 영국을 방문하여 대처 수장과 가진 회의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처 영국 수상은 1989년 11월 18일의 파리 유럽공동체 국가 및 정부수반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유럽의 동유럽정책에서 다른 움직임이 보이는 점에 의아함을 표시하였다. 대처 영국 수상은 동유럽에서의 변화는 가능한 한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외의 문제들은 있던 대로 놓아두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영토적 현 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곳에서의 다당제로의 변화는 실제로는 공산주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허울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고도 하였다. 대처 영국 수상은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개혁도 이에 해당한다고 발언하였다. 소련의 경제적 문제가 심각하기에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그 외에 다른 방편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자유주의도 정치적인 자유가 없는 오래갈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겐셔 외무장관은 동유럽 각국의 개혁들 간에도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이 사회주의를 포기한다는 말은 소련에서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 ‘인간적인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개혁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는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이 다른 바르샤바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락한 점도 지적하였다.

대처 영국 수상은 그럴 경우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독재자가 더 많은 자유를 허락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겐셔 외무장관은 유럽공동체와 나토의 중·동유럽 개혁에 대한 공동 지원 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점에는 의심할 바가 없다고 답하였다. 동독주민들도 자유선거 이후 자유시장경제를 선택할 것이다. 유럽공동체도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국가들과 조약적 관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처 영국 수상은 자유사회도 그 속이 비어 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심지어 자신의 영국 보수당 내부에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아직도 사회주의의 몇 가지 측면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한편 그녀는 미국이 소련군 감축을 빌미로 미군을 철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문서
번호 98

통일 관련 런던 및 파리회담에 대한 겐서 외무장관의 회상

1989년 11월 30일

담당자 / 기관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 닐 킨녹 영국 노동당 당수; 롤랑 뒤마 프랑스 외무장관;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 알랭 포에르 프랑스 상원 의장;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내용

겐서 외무장관은 영국 및 프랑스정부 요인들과 독일통일의 중요성을 설득시키기 위해 회동을 가졌다. 독일통일 외에 겐서 외무장관은 대처 영국 수장과 (특히 헬싱키협정 및 나토와 관련해서) 서방의 동방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회담 후에 겐서 외무장관은 대처 영국 수상이 독일통일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파리에서 겐서 외무장관은, 특히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대화하였는데, 양자는 독일통일이 계속될 유럽통합과 동구권 국가들과의 협력이라는 방향과 부합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 점이 앞으로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릴 나토회의 및 유럽공동체회의에서 분명하게 표명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출처 Genscher, Hans-Dietrich. 1995. Erinnerungen. Berlin: Siedler. S. 675-680.

담당자 / 기관_ 수상청; 수상청 (외교 및 내독 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국장 겸 수상청 차관보 텔릭; 연방 수상 콜

내용_

텔릭 차관보는 콜 수상에 대한 보고서 초안에서 10개항 계획에 대한 외국의 반응을 정리하였다.

미국 국무장관 베이커는 독일통일에 있어 미국에 중요한 4가지 기본원칙을 강조하였다. 자기 결정권, 나토에의 잔류 및 유럽통합, 그리고 국경문제 해결이 그것이다.

대체 영국 수상은 곤혹스러움을 표출하면서 과거의 기본 조건들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통일에 대한 완전한 공감대를 표시하면서 독일통일 추구 노력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통일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유럽통합이라는 맥락 속에서 성취되어야 한다. 스트라스부르에서는 사회 부문 및 경제·화폐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구체적 결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소련 외교부 대변인인 게라시모프는 유럽 내 상황의 불안정화를 우려하였다. 독일이 1937년의 국경 형태로 다시 성립될 경우 콜 수상의 계획에 대한 의구심이 늘어날 것이다. 연방 국가로의 통일에는 반대하지만, 국가연합적 구조는 고려해 볼 만하다.

이탈리아 측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외무장관 데 마켈리스는 일부분 소련 측의 입장을 공유하였다. 독일의 문제는 상상력과 혁신의 정신을 가지고 다루어져야 한다.

네덜란드 총리 뤼버르스는 10개항 계획을 환영하면서도, 독일이 독자 행보를 취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였다.

스페인인은 “독일인의 상황에 깊은 공감을 보낸다”고 반응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212-34500 De 39 Band 1

문서
번호 100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파리에서의 회담
1989년 11월 3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 외무장관 겐서;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및 대표단; 파리 주재 서독 대사
폐퍼

내용_

이 문서는 겐서와 미테랑 간의 회담에 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겐서 외무장관: 서유럽에서는 유럽통합이 동유럽에서는 개혁이 동시에 전개되는 '변화들
간의 경쟁시대'이다. 동독시민들은 민주주의로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연방 수상 헬무트
콜은 독일민족의 운명을 유럽공동체와 헬싱키협정 프로세스의 틀과 결부시키려고 한다.
유럽 각국이 서로 거리를 좁히는 것과 더불어, 두 독일도 서로 거리를 좁히고 있다. 독일이
이러한 유럽 내 변화와 무관하게 남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폴란드 서부 국경에 대한
콜 수상의 분명한 입장은 독일 연방의회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다. 동유럽에서 안정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989년 12월 13일의 채권국 회의에서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었다. 계획 중인 유럽은행도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실제 사실의 힘'이 외교적 자문의 수사보다 중요할 수 있다. 서유
럽에서 유럽통합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1913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8천만 명
의 독일인을 아우르게 될, 결국은 멈출 수 없을 독일통일은 완성된 유럽통합의 틀 안으로
합쳐져야 한다. 하지만 독일은 현재 유럽연합 경제통화동맹으로 향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것처럼 보인다. 그보다 필요한 것은 유럽공동체를 거부하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
을 보이는 것이다. "만일 독일인들이 통합된 유럽을 함께 건설한다면, 서독과 유럽에 접근
하고자 하는 동독 내의 움직임들도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통일에는 소
련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유럽과 무관한 고립적 통일에는 맞서 싸울 것
이다.

겐서 외무장관은 1989년 12월 8일과 9일의 스트라스부르 유럽이사회에서 역사가 쓰여질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곳에서 경제·화폐통합을 위한 정부 간 회의 관련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라고 답하
였다.

겐서 외무장관은 비록 독일문제에 대해 일정을 확정할 수는 없다고 해도, 유럽통합에 대
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겐서 외무장관은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담당자 / 기관_ 연방 외무장관 겐셔; 프랑스 외무장관 뒤마 및 대표단

내용_

이 문서는 파리를 방문한 겐셔 외무장관과 뒤마 프랑스 외무장관 간의 회의기록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 외무장관 뒤마: 유럽공동체와 소련 간 협력에 대한 협정은 1989년 12월 18일에 체결될 준비를 마쳤다. 겐셔 외무장관의 1989년 12월 4일부터 5일까지의 모스크바 방문과 관련해서 긴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겐셔 외무장관: 동독에서의 혁명은 역사적인 중요성을 지닐 수 있지만,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1990년 말에는 동독에서도 서독에서처럼 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이러한 상호 의존적 관계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다. 서독정부는 모드로우 동독 총리의 '계약공동체' 제안을 자세히 살펴볼 의향이 있다.

서독 연방의회에서는 독일문제를 유럽 내 변화에 맞춘다는 서독정부의 노선을 재확인하였다. 유럽공동체와 동독 간의 협력 조약의 준비도 추진되어야 한다. 동·서 간 접근의 진전에 있어 국경문제가 문제 시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이 강조한 바와 같다.

[이어 그 외 각국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어짐]

프랑스 외무장관 뒤마는 라이프치히 대규모 시위에서 독일통일에 대한 분명한 요구를 들을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겐셔 외무장관은 1989년 12월 8일과 9일의 스트라스부르 유럽이사회에서 유럽통합 및 개혁을 추진 중인 동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문서
번호 102독일문제에 대한 소련의 입장-일간지 '이즈베스티야'의 1989년 11월 26일자 기사
1989년 12월 1일

담당자 / 기관 소련 국영 일간지 '이즈베스티야'(당시 발행인: 소련 최고 소비에트);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및 외무부 (언어 담당) 105과

내용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는 연방 수상 헬무트 콜의 10개항 계획을 다룬 소련 국영 일간지 '이즈베스티야'의 기사에 대한 본 내부용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소련은 기본적으로 실무자 수준에서도 독일통일의 방식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측면들이 발견된다:

- 소련에서 1960년대 이래 독일문제와 독일의 통일문제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함;-독일문제의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기초가 독일에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음;
- 독일 국적 및 동독 국적과 관련한 문제 지형의 설명;
- 독일문제와 관련하여 본 서독의 유럽통합 문제

[부록: 해당 소련 국영 일간지 '이즈베스티야' 기사의 독일어 번역본]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7 E

1989년 12월 1일

담당자 / 기관_ 폴란드 통일 노동자당(PVAP); 바르샤바 서독 특사 요하네스 바우흐

내용_

이 문서는 1989년 11월 9일의 베를린 장벽 붕괴 및 1989년 11월 9일에서 14일까지의 헬무트 콜 수상의 폴란드 방문 이후 폴란드 노동당에서 독일통일 문제에 관해 논의된 것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폴란드 통일 노동자당 제1서기 라코프스키는 폴란드 서부 국경의 보장은 소련과의 동맹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폴란드 내부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폴란드 통일 노동자당이라고 하였다. 정부 대변인 우르반은 크라이스라우에서 히틀러에 대한 저항운동과 관련해서 1989년 11월 12일의 연방 수상 헬무트 콜과 마조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보여준 평화적 제스처에서 '독일 민족주의의 강조'가 엿보였으며 이는 독일-폴란드 간 화해에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라고 발언하였다. 그는 동-서독의 상호 접근을 언급하며 국가연합도 가능하리라고 전망하였다. 이와 관련해 폴란드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동독과 서독 그리고 전승 4개국에 대해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나중에 '(통일 이후의) 대국이 된 독일'과 별도로 협상하는 것보다 쉬운 일일 것이다.

바르샤바 서독 특사 요하네스 바우흐는 이러한 폴란드 통일 노동자당(PVAP)의 독일정책 관련 입장을 설명하면서 여기에 냉전적 수사가 강하게 연상된다고 언급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6 E



문서
번호 104

연방 수상 헬무트 콜의 10개항 계획에 대한 체코슬로바키아 외무부 대변인의 성명-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

1989년 12월 1일

담당자 / 기관_ 체코슬로바키아 외무부 대변인 마르식; 프라하 주재 서독 대사 헤르만 후버

내용_

프라하 주재 서독 대사 헤르만 후버는 연방 수상 헬무트 콜의 10개항 계획에 대한 체코슬로바키아 외무부 대변인의 성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연방 수상 헬무트 콜의 연설에 대해 의아함과 불안함이 엇보임;-체코슬로바키아는 전후 질서를 문제시하고 유럽의 안전보장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체코슬로바키아는 헬싱키협정 프로세스에 있어 다른 국가들과 계속 협력하면서 유럽이라는 공동의 집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상의 성명은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총서기장 우르바넥의 연설과 대부분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후자의 연설에서는 동·서독의 상호접근에 대해 거의 '타협없는 거부'로 축약되는 강한 입장이 표명되었던 바 있다.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성찰이 이에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9 E

1989년 11월 29일에서 30일까지의 니더작센주 총리 알프레히트의 폴란드 방문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

1989년 12월 2일

담당자 / 기관 니더작센주 총리 알프레히트 및 니더작센주 각 부 장관; 마조비에츠키 폴란드 총리; 스쿠비셰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 및 각 부 장관; 폴란드 '연대' 자유노조 (Solidarność) 자문 게레멕 교수; 바르샤바 서독 특사 요하네스 바우흐

내용

기민당 소속 니더작센주 총리 알프레히트 및 니더작센주 주정부 요인들은 1989년 11월 29일에서 30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하였다. 특히 경제, 농업 및 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이 그 목표였다. 바르샤바 서독 특사 요하네스 바우흐는 방문 중 정치문제가 논의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마조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의 대화: 다른 연방주들처럼 니더작센주도 폴란드와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니더작센주는 무엇보다 약 2억 5,000만 마르크의 투자 보증을 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다. 니더작센주는 생필품 및 에너지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 협력할 것이다. 마조비에츠키 총리는 모든 분야와 대화 수준에서 연락망을 확충할 것을 약속하였다. [문서의 다음 내용에는 그 협력 방안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었다.]

게레멕 교수와의 대화: 니더작센주 총리 알프레히트는 유럽 내 개혁 움직임에 있어서의 폴란드의 기여를 치하하였다. 폴란드 협력을 위한 니더작센주의 노력은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다. 동독과의 협력 때문에 니더작센주의 폴란드 내 기여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는 않을 것이다. 독일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자기 이해 속에 살고 있다. 자유선거로 구성된 동독정부와 이 유대는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서유럽에 확립된 평화적 질서가 다른 유럽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폴란드와 헝가리와 같은 민주국가는 유럽공동체와 앞으로 다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폴란드를 위해 유럽 시장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스쿠비셰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과의 대화: 스쿠비셰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콜 수상의 10개항 계획에 대한 니더작센주 총리 알프레히트의 의견을 물었다. 니더작센주 총리 알프레히트는 독-독 간 관계는 유럽의 통합과 함께 가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르샤바조약기구와 나토가 동시에 병존할 것이냐의 질문이다. 폴란드의 유럽공동체 가입은 독일통일 시 그 균형을 잡아주는 일이 될 것이다.

스쿠비셰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콜 수상이 국경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여러가지로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보다 더 분명한 설명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니더작센주 총리 알프레히트는 미래에 만약 통일이 달성될 경우 그 후 몇 달 이내에 국경조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문서의 다음 내용에는 국경 문제 및 소련 측 입장 등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6 E

문서
번호 106

모스크바에서의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대화-연방 수상 헬무트 콜의 10개항 계획에 대한 소련 측의 비판

1989년 12월 5일

담당자 / 기관 연방 외무장관 겐셔;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개인 자문역 사글라딘;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블레히;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

내용

서독 겐셔 외무장관은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개혁정책을 평가하면서 서독이 그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그가 말하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 예로 연방 수상 헬무트 콜의 10개항 계획에 대한 정부 성명은 소련과의 의사 교환 없이 발표되었다고 비판하였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콜 수상은 이로써 동독에 지시를 내리고자 하는 것인가? 모든 정치인들은 정치적 결정을 주의 깊고도 책임감을 갖고 내려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정치적 핵심적 문제를 다룰 때는 더욱 그러하다. 오늘날 동독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내일은 폴란드와 오스트리아를 그렇게 다룰 것인가? 또 나토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겐셔 외무장관의 답변: 서독 연방정부의 정책은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계획된다. 콜 수상의 계획은 통일과정의 장기적이며 또 유럽이라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제안일 뿐 최후 통첩도 일방적 지시도 아니다. 그보다 이는 하나의 관점의 제시로서 동독 측은 이에 가부 의사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동독이 현재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과도 구별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들은 서독정부가 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10개항 계획 중 특히 동·서독 간 협력을 위한 동독의 민주화라는 전제 조건이 제시된 제3항은 ‘신하한테 내리는 명령조’이자 ‘말 그대로의 복수주의’의 표현이며 ‘유럽적 과정을 무덤에 묻어버리는’ 식의 문제를 보인다.

겐셔 외무장관: 서독 연방정부의 입장에 대한 그러한 반응은 정당하지 않다. 유럽 발전을 위한 서독의 기여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 서독은 동독에서 시민들이 내리는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콜 수상의 성명에는 다수의 위험 요소들이 상존한다. 그로 인해 동독 내 사건들의 전개가 인위적으로 가속될 위험이 있다. 이 성명 때문에 상태의 발전 문제가 단지 하나의 선거전으로 변질될 수 있다. 신뢰에 기초해야 할 협력이 이로써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겐셔 외무장관은 콜 수상의 10개항 계획을 계속 변호하였으나, 실은 그도 이에 대해 콜 수상의 하원연설에서 처음 접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의 견해들이 아직 공론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소련과 서독이 현재 ‘정치권에 매우 큰 책임감이 요구되는 시기’라는 점에서는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담당자 / 기관_ (서독) 연방 외무장관 겐셔;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겸 회담 통역 담당 하르트만

내용_

이 문서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겐셔와 세바르드나제 간의 회담을 통역이 기록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1989년 12월 2-3일에 열린 몰타 미-소 정상회담은 동-서 간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동유럽의 변혁과정은 각국에 있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들 나라들 내부에도 개혁을 바라지 않거나, 혹은 민주화를 불안정화로
받아들이면서 ‘강권 통치’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이 점은 소련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세력들이 독재자나 상층 군부를 내세워 우위를 점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
다. 이 때문에 안정을 확보하는 일을 중심적인 문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동독에서의 상황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그는 소련군이 동독에서 어떠한 명령을 받게
될지에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비엔나 군축회담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기에, 소련은 아직 동
독에 ‘아주 상당한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방 수상 헬무트 콜의 10개항 계획에
대한 성명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였
다. 다른 어떤 나라도 이제껏 그런 식의 동독 내정 개입을 감행하지 않았다. 콜 수상은 마
치 앞으로의 동독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구조를 모두 다 정해놓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
에 자기 결정권이라는 표현은 언어적 유희인 것에 불과하게 들린다. 이는 다수 서방 언론에
서 그러한 것처럼 불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선전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러한 동독의 불안
정화는 소련 사회의 불안정화로 이어질 것이다. 동독의 상황은 ‘모든 문제들과 함께 얽힌
문제’이다.

겐셔 서독 연방 외무장관: 서독정부는 불안정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진전을 원하고 있다.
그의 장기간에 걸친 동방정책이나, 동구권 국가들과의 조약체결 그리고 오늘날의 헬싱키협
정 등은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독일인들은 “자신의 운명을 유럽공동체의 운명과
결부시키고자 한다.” 동독에서 동독주민들은 자신의 정부가 충분히 개혁을 수행하지 못
하는 데 실망하고 있다. 동독정부는 서독정부의 지시가 아닌 10개항 계획 제안에 대해 얼
마든지 입장을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문서
번호 108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및 양국 파견단 간의 모스크바 회담

1989년 12월 5일

담당자 / 기관 연방 외무장관 겐셔; 예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소련 정부 대표단[소련 외무부차관 카르포프, 기획실장 타라센코, 특임대사 본다렌코 등]; 서독정부 대표단[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 정치국 국장 대리 회익, 외무부 연방장관실 실장 엘베,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과장 노이베르트,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블레히 등]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소련과에서 모스크바에서 열린 겐셔와 세바르드나제 간의 회담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을 각 단장으로 하는 양국 파견단은 실무단의 보고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군축 통제 실무단: 비엔나 군축협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문서의 다음 내용에는 군축 관련 상세 내용이 포함되었다.]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 유럽 내 재래식 전력 조약(유럽통상전력조약, VKSE)과 관련하여 해결을 요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1990년도 말에 이를 위한 외무장관급 회담을 개최할 것을 기자회견에서 발표해야 한다.

지역문제 실무단: 모든 현존하는 지역적 분쟁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 긴급히 요구된다.

경제 실무단: 소련에서의 개혁정책, 서독과 소련 및 유럽공동체와 소련 간의 협력, 소련의 GATT, OECD, IMF, 세계은행 가입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더 구체적인 서독과 소련 간의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는 경제개혁에 대한 소련 측 결정 및 조치 등이 미진한 상태이기에 더 진전되지 못했다. [문서의 다음 내용에는 차관정책 및 루블화 환전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 유럽공동체와 소련 간의 협정은 오는 1989년 12월 19일 유럽공동체-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브뤼셀 외무장관급 회담에서 체결될 예정이다.

인도주의 문제 실무단: 주로 독일인을 조상으로 둔 소련 국적자 문제가 논의되었다. [상세 내용]

양자 간 문제 실무단: 서독과 소련 간의 협력에 대한 논의에는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1989년도 6월 본 방문 이후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수준으로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하 상세 내용]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유럽 내 역동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그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겐셔 외무장관과 회동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하였다.

겐셔 서독 연방 외무장관: "우리는 이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7.138 E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및 양국 파견단 간의 모스크바 회담(경제 분야)

1989년 12월 5일

담당자 / 기관 연방 외무장관 겐셔; 에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소련정부 대표단[소련 외무차관 오브민스키, 소련 외무부차관 카르포프, 기획실장 타라센코, 특임대사 본다렌코 등]; 서독정부 대표단[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 정치국 국장 대리 회익, 외무부 연방장관실 실장 엘베, 외무부 (서독과 동독 및 동남유럽의 국영무역국가, 유고슬라비아 담당) 421실,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블레히 등]

내용

소련 외무차관 오브민스키는 경제 분야 실무단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해당 자료는 이 문서의 부록에 포함됨] 이제까지 서독과 소련 간에 비행기 공동조립 프로젝트를 포함한 총 152개의 공동 벤처가 활동 중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외환으로 획득한 수익을 다시 자국으로 송금하는 문제 및 (소련 내에) 은행과 신용 부문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외무부 (경제담당) 4국 국장 엘론벡: 양측은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한 공통의 언어를 어렵지 않게 곧 찾을 수 있었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1989년 12월 19일 유럽공동체-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브뤼셀 외무장관급 회담에서 체결될 예정인 유럽공동체와 소련 간의 협정을 언급하였다.

또한 1990년 본에서 개최될 유럽 경제협력회의(KWZE)에서도 해당 논의의 진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7.138 E

문서
번호 110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모스크바 공항에서의 대화
1989년 12월 5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연방 외무장관 겐서;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겸 회담 통역 담당 하르트만

내용

이 문서는 모스크바를 방문한 겐서 외무장관과 그를 배웅하러 나온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이 공항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역이 정리·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겐서는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이 1989년 12월 5일 회담 중에 콜 수상의 10개항 계획에 대해 예상 외로 심각하게 반응해서 놀랐다고 말했다.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소련 측이 '최고위급에서 우선 그에 대해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자' 하였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동독에 주둔 중인 소련군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거듭 밝혔다. 동독에 주둔 중인 소련군들의 공격적 태도가 나올 수 있다는 단서도 있음을 밝혔다. 이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겐서와 고르바초프 회담이 열리기 직전에도 이미 콜 수상이 고르바초프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던 경우가 있었고 겐서 외무장관이 직접 나서야만 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하였다. 그 일은 이제 지나간 것으로 잊어버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 깊이 못한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소련 지도부 내에서는 과연 겐서 외무장관을 이번엔 초청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겐서 외무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존경과 그의 올곧음에 대한 신뢰에 기초해서 이번 회담이 성사된 것이라고 하였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에게 전화로 재차 부탁하기를, 겐서 외무장관이 콜 수상에게 들은 내용을 구두로 직접 전할 것을 요청하였다.

겐서 외무장관은 소련과 서독은 유럽의 안정에 큰 책임을 지었다고 지적하면서, 어떠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될지에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요청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담당자 / 기관_ 수상청; 수상청 (외교 및 내독 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국장 겸 수상청 차관보 텔릭; 연방 수상 콜

내용_

텔릭 차관보는 연방 수상 콜에게 소련의 10개항 계획과 관련한 ‘공식적인’ 그리고 ‘비공식적인’ 고려사항들 및 그 배경이 되는 정보들을 보고하였다. ‘공식적인’ 고려사항들은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을 통해 표현된다. ‘비공식적인’ 고려사항들은 소련 중앙위원회의 국제부의 견해를 말한다. 소련 지도부가 통일문제를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음이 명백해 보인다.

(본 문서의 부록에서 소련은 독일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동독 내 상황 전개에 대한 소련의 긍정적인 태도와 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동독 내 상황 변화 과정에 대해 소련 내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기에, 동독에서도 더 시간을 두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많은 것은 서독정책에도 달려 있다. 소련은 독-독 간 관계가 바람직하지 않은 위험한 방향으로 진전되어 유럽통합이 헛된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였다. 유럽 내 평화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독일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최우선 과제이다. 그때까지는 서독과 동구권 국가들과의 조약들(Ostverträge)을 엄격하고도 무제한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모드로우 동독 총리의 ‘계약공동체’ 제안은 실용주의적이라고 받아들여졌다.

‘비공식적인’ 고려사항들에 있어, 동서독 간 관계를 과거의 유물로서 해방시킬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전제가 되고 있다. 동독은 서독의 계속되는 경제적인 지원에 의지하고 있다. 동독과 서독은 ‘추가적으로 더 많은 군축을 실행할’ 수 있다. 독일문제를 순간적인 정치 문제나 선거용 문제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두 독일국가의 종전까지의 동맹조약 소속 문제를 공식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소련은 서독이 평화협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독일 국가연합의 유럽공동체로의 통합은 소련의 전 유럽적 통합이라는 구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소련이 독일 국가연합 구상에 대해 거는 조건이라면, 동 독일 국가연합이 타국의 핵시설을 자국영토 내에서 포기하는 것이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21-3500 (28) De 26 Band 1, Bl. 1/0 und 2-5

문서
번호 112

오데르-나이세 강 경계에 대한 폴란드 대통령 대변인의 성명-바르샤바 주재 서독
대사관 보고

1989년 12월 6일

담당자 / 기관_ 폴란드 대통령 대변인 로진스카; 바르샤바 서독 특사 요하네스 바우흐

내용_

이 문서는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이 폴란드 대통령 대변인 모쉬메르츠 로진스키가 발표한 '독일문제'에 대한 폴란드의 입장 5개항 성명에 대해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2차 세계대전의 결과 전승국들의 결정으로 동독과 서독이라는 두 개의 독일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 2) 독일은 2회에 걸쳐 범게르만주의와 팽창주의의 영향 하에 유럽 내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심각한 결과를 유럽대륙에 초래하였다.
- 3) 전승국들은 독일문제에 대한 공동 책임 하에 여타 세계의 민족들을 위해 공동으로 유럽 평화와 안정을 꾀해야 했다.
- 4) 독일문제는 모든 유럽국가들의 문제이다. 그에 대한 서독 유력 정치인들의 불분명한 입장 등은 유럽 다수의 국가 내에 불신과 불안을 야기할 뿐이다. 이 점은 폴란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5) 유럽 내 안정과 안전을 위해 군사적 균형은 필수적이다. 폴란드는 두 독일국가의 상호 선린관계의 진전에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이는 1950년 동독과 체결된 쾰리츠 우호조약에서도 표현되었었다. 여기에서는 오데르-나이세 강 경계의 불가침성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었던 바 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6 E

독일통일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 관한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회고

1989년 12월 7일

담당자 / 기관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 외무장관 롤랑 뒤마;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네덜란드 외무장관 한스 반 덴 부룩; 스페인 총리 펠리페 곤잘레스; 이탈리아 총리 줄리오 안드레오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마하일 고르바초프;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유럽이사회(EU 정상회의)

내용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외무장관의 보고서에서 독일통일에 대해 서유럽 및 동유럽의 여러 국가수반들이 피력했던 다양한 종류의 우려들을 언급했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서유럽 국가 대표들에게 곧 개최되는 유럽공동체 정상회담의 일일 일정 및 최종 성명안을 송부하였다. 정상회담 이전과 회담 기간 중에는 독일통일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입장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서독은 유럽공동체 측의 명시적인 지지를 요구하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했던 반면, 영국과 프랑스 대표들은 독일통일의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출처 Mitterrand, François. 1996. De l'Allemagne. De la France. Paris: Odile Jacob. S. 79-99.



문서
번호 114

독일-폴란드 간 관계에 대한 스쿠비셰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의 폴란드 하원에서의
성명-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

1989년 12월 8일

담당자 / 기관_ 스쿠비셰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 폴란드 하원; 바르샤바 주재 서독 대사 크
낙슈테트

내용_

바르샤바 주재 서독 대사 크낙슈테트는 외무부에 연방 수상 헬무트 콜의 10개항 계획에
대한 폴란드 측의 반응을 보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폴란드에는 특히 폴란드 서부 국경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스
쿠비셰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자신의 성명에서 10개항 계획의 문제제기 방식을 비판하
였다. 그 밖에도 그는 국경문제가 이미 쾰리츠 및 바르샤바조약을 통해 규정된 상태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해결책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져야 할 것이다. 독일민족의
자기 결정권은 단지 현존하는 국경 내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6 E

문서
번호 115

동독을 포함한 동유럽에서의 변화에 대한 영국 측의 입장-런던 주재 서독 대사의 보고

1989년 12월 8일

담당자 / 기관_ 런던 주재 서독 대사 폰 리히트호펜

내용_

런던 주재 서독 대사 폰 리히트호펜은 외무부에 동독을 포함한 동유럽에서의 변화에 대
한 영국 측의 입장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정부는 소련연방 소속 국가들의 민주화 과정을 환영하면서,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
에게 서방이 지원을 계속해야만 이 움직임이 성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유럽 내 국경 침범 상황은 헬싱키 최종협정에 상응하여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독일문제와
관련해서 영국은 전승 4개국들의 책임을 의식하는 가운데 민족의 자기 결정권을 지지한다
고 밝혔다. 하지만 소련은 중기적으로는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 바 있다. 영
국 측 시각으로는 독일 및 유럽 내 단절의 극복을 위한 자문과정에 소련이 광범위하게 결
부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0 E

문서
번호 116

동유럽에 대한 결론-스트라스부르 주재 유럽이사회 의장단
1989년 12월 9일

담당자 / 기관_ 스트라스부르에서의 유럽이사회; 중·동유럽 제 국가들; 유럽재건개발은행; 유럽공동체

내용_

스트라스부르 주재 유럽이사회 의장단은 1989년 12월 8일과 9일의 결론 성명에서 동구권 국가들의 개혁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점을 밝혔다. 유럽이사회는 무역 및 협력 협정 그리고 투자펀드 등의 조치들을 통해 이들 국가들을 '유럽 내 단절의 극복'이라는 목표 하에 지원한다. 그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확립을 향한 노력을 장려한다. 마찬가지로 유럽 재건개발은행이 설립되어 동구권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가능하게끔 한다.

출처_ Mitterrand, François. 1996. De l'Allemagne. De la France. Paris: Odile Jacob. S. 97-99.

문서
번호 117

스트라스부르 주재 유럽이사회: 그 성공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1990년 9월 12일

담당자 / 기관_ 스트라스부르에서의 유럽이사회; 소련; 연방 수상 헬무트 콜; 유럽공동체; 유럽공동체 회원국들; 연방정부;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 동유럽 국가들

내용_

뢰로프 영 포마시옹(L'Europe en formation)지는 1989년 12월 8일과 9일에 개최된 유럽이사회 회담에 대해 보도하였다. 자본이동의 자유화; 거주 및 이동의 자유, 유럽사회현장, 경제 및 화폐통합 및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전체적으로 이러한 결의 내용들에 대해 환영하는 반응들이었지만, 예고된 내용들의 구체적인 실행 조치들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다. 이 잡지에 따르면, 독일통일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며, 유럽 내 민족주의적이지자 중립적인 독일이 생길 경우에 문제가 된다.

출처_ L'Europe en formation. Winter 1989. Nr. 276. S. 3-8.

문서
번호 118

베를린 연합국 통제위원회 건물에서 열린 독일 주재 전승 4개국 대사 회담-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보고

1989년 12월 11일

담당자 / 기관 본 주재 프랑스 대사 부아드보; 본 주재 미국 대사 월터스; 동베를린 주재 소
련 대사 코첸마소프; 본 주재 영국 대사 몰러바; 서독 외무부차관 주트호프;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 담당) 국제정치과(210과)

내용

본 주재 프랑스 대사 부아드보는 서독 외무부차관 주트호프에게 베를린 연합국 통제위원
회 건물에서 열린 독일 주재 전승 4개국 대사 회담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 회담의 의장을 맡은 본 주재 미국 대사 월터스는 ‘논의될 주제’를 서두에 정리하였다.
유럽 내 변화와 관련하여 베를린의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월터스 대사는 다음 사항들을 열거하였
다: 항공교통의 개선; 청소년 교류의 확대; 베를린 내 국제회의 및 교류의 증대; 대형 스포
츠 행사의 베를린 개최 허가 등이 그것이다. (소련 측에 대한 답변에서) 3개 서방 전승국은
전승 4개국 협정에 근거한 베를린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동베를린 주재 소련 대사 코첸마소프는 다음의 내용으로 길게 발언하였다. 1971년의 전승
4개국 협정은 유럽 내 협력이 가능하다는 첫 번째 신호에 해당하였다. 그 협정에서도 베를
린이 다루어졌다. 그런데 전후시기의 현실과 2개 독일국가의 존재라는 상황을 인정할 필요
도 있다. 동독에 대한 내정 간섭은 유럽평화를 위협할 것이다. 전승 4개국의 책임은 단지
전승 4개국 협정의 틀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참석한 대사들은 공식 성명에 합의할 수 있었다. 3개 서방 전승국은 소련 측의 의견을 감
안해 전승 4개국 협정에 근거하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중립적인 문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2 E

겐서 외무장관의 모스크바 방문 및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고르바초프 총서기장과의 키에프 회동에 대한 나토 자문단(NAC)의 보고 내용 정리-서독정부 브뤼셀 상주 나토 대표의 보고

1989년 12월 11일

담당자 / 기관_ 나토 자문단(NAC); 연방 외무장관 겐서;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고르바초프; 서독정부 나토 상주 대표 플뢰츠 박사

내용_

서독정부 나토 상주 대표 플뢰츠 박사는 겐서 외무장관의 모스크바 방문 및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고르바초프 총서기장과의 키에프에서의 비공식 회동에 대한 나토 자문단(NAC)의 보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주로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간의 군축협상 논의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프랑스 대사 로맹은 서독정부 나토 상주 대표 플뢰츠에게 동유럽을 대상으로 한 유럽은행을 요구한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발언 부분을 특히 강조하였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고르바초프 총서기장과의 키에프에서의 비공식 회동과 병행해서 개최된 프랑스 외무장관 뒤마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간의 대화에서 소련 측은 독일통일을 위한 7가지 전제사항을 열거하였다. 여기에는 헬싱키 프로세스의 완성을 통한 군사적 균형 달성, 유럽국 간 관계의 비군사화 및 유럽법적 공간의 창설 등이 포함되었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이 회담에서 연방 수상 헬무트 콜의 10개항 계획은 그 일부 내용은 받아들일만 하다고 평가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그에 반해 많은 비판들이 제기되었다.

한편, 서독정부 나토 상주 대표 플뢰츠는 나토 자문단(NAC)에 대해 서독은 중·동유럽 국가들에 대해 접근하는 가운데에도 서유럽의 통합에 계속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7 E

문서
번호 120

본에서 열린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과 소련 대사 크위진스키의
회담

1989년 12월 12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 본 주재 소련 대사 크위진스키

내용_

이 문서는 서독의 수도 본에서 열린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과 소련 대사 크위진스키의 회기에 대한 보고서이다. 이 회의에서는 소련의 독일통일에 대한 입장이 논의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카스트롭 국장은 크위진스키 대사에게 유럽이사회의 동유럽에 대한 성명을 전달하면서, 독일문제가 유럽통합에 결부되어야 한다는 점과 그에 대한 규정은 오로지 헬싱키 최종협정에 상응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유럽이사회의 동유럽에 대한 성명은 서독의 정책이 예상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도 발언하였다.

크위진스키 대사는 소련이 동독에서의 변화를 환영하며 또 그의 동맹으로 남아있으리라는 점을 밝혔다. 그는 독일통일 과정에 있어 전승 4개국의 역할 및 그의 일반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유보권한에 대해 언급하였다. 4개국이 그 권한을 행사할 경우 동·서독은 이를 주시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이는 서독과 동독에서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카스트롭 국장의 경고에 대해, 크위진스키 대사는 그것이 반드시 불안정화로 귀결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는 나아가 극좌 및 극우 진영의 극단적인 움직임에는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동독주민들은 스스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동독이 나토에 대한 쉬운 먹이감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7 E

베를린에서 발표된 독일문제 및 부시 미국 대통령의 4개항 원칙 관련 기본 입장에 대한 미국 국무장관 베이커의 연설-워싱턴 주재 서독대사관 코멘트

1989년 12월 12일

담당자 / 기관_ 미국 국무장관 베이커; 미국 대통령 부시;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위르겐 루푸스

내용_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위르겐 루푸스는 베를린에서 발표된 독일문제 및 부시 미국 대통령의 4개항 원칙 관련 기본 입장에 대한 미국 국무장관 베이커의 연설에 대한 미국 현지의 반응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시 미국 대통령의 4개항 원칙은 이제 막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된 독일문제의 해결을 위한 서방 측의 입장에서 핵심적인 비중을 지닌 원칙이다. 미국은 소련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이전에 서방 내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측의 핵심적인 관심은 독일이 계속 나토와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으로 남는 것, 그리고 안정성과 안전보장 문제이다.

미국이 독일통일을 위한 서독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 아니다. 미국은 통일로 인해 강해지고 서방의 가치를 공유하는 독일과 협력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 점을 서독은 앞으로 제3국이 간섭하거나 방해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기 위한 근거로 잘 활용해야 한다. 미국은 입장 표명 중에 서방으로의 통합을 설명하면서 '독일(Deutschland)'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위르겐 루푸스는 전승 4개국의 권한이야말로 미국 측이 독일통일 과정에서 원치 않는 진전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9.532 E

담당자 / 기관_ 수상청;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미국 국무장관 베이커

내용_

헬무트 콜 수상과 미국 국무장관 베이커는 서베를린에서 동독의 상황과 양독 간의 관계 진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콜 수상은 먼저 동독주민들의 불만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지적하였다.

베이커 국무장관은 통일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강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영국 및 프랑스 측에는 어느 정도 불안함도 존재한다. 베이커 국무장관은 이날 모드로우 동독 총리도 만나게 될 예정이다.

콜 수상은 현 상황은 매우 주의하지 않을 경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는 시기라고 발언하였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하였다. 단지 시기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독일 상황의 진전은 유럽의 전체 계획과 함께 가야하며, 소련을 포함한 각국의 안전보장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콜 수상은 가능한 한 빨리 고르바초프 총서기장과 회동을 갖기를 희망하였다. 설령 오는 겨울에 소련에 위기가 닥칠지라도,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이 소련에서 실패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서독과 미국이 소련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폴란드와 헝가리의 상황을 무조건 안정화시켜야 한다. 여기에서도 서독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동독에서는 1990년 초여름에 자유선거가 열릴 것으로 콜 수상은 예상하였다. 동독지역에서 미래에 정당들이 어떠한 구조를 형성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동서독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면서 계약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동독경제는 민간경제로의 전환과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진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공동의 체제를 만드는 것은 그때 가능할 것이다.

오데르-나이세 강 국경선과 관련해서는 이미 분명한 조약들이 존재한다. 국경문제가 실제 문제로 대두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베이커 국무장관은 미국은 유럽이 원하는 한 유럽에서의 힘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나토에는 이제 정치적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 콜 총리는 폴란드와 헝가리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가 미래에 유럽공동체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212-30105 A5 Am 7

문서
번호 123

연방장관 자이티스와 서방 전승 3개국 대사들의 본(Bonn) 회담
1989년 12월 13일

담당자 / 기관_ 수상청; 수상청장 겸 연방장관 루돌프 자이티스; 미국 대사 월터스; 프랑스 대
사 부아드보; 영국 대사 몰러비; 외무부차관 주트호프

내용

프랑스 대사 부아드보와 영국 대사 몰러비 및 미국 대사 월터스는 수상청장 겸 연방장관 루돌프 자이티스와의 회동에서 1989년 12월 11일 베를린에서 열린 전승 4개국의 회담 결과를 연방정부에 전달하였다.

그 회담에서 소련 대사 코첸마소프는 소련의 정책에 대해 매우 긴 설명을 하였다. 베를린 상황에 관련한 연합군 측 제안들과 관련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항공 통행은 여기에서 제외하고자 하였다.

코첸마소프 대사는 동독의 안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명시적이지는 않았지만 은연 중에 10개항 계획에 대해 언급을 했다. 전제 조건이 붙은 식으로 서독이 동독에 주는 원조는 내정 개입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몰러비 영국 대사는 항공 통행에 대한 더 자세한 제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었다. 참석자들은 이에 관해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0241, 221-34900 Spr 2 Band 1

문서
번호 124

서방 측 4개국 외무장관급 브뤼셀 정찬 회동-외무부 외무장관실 보고
1989년 12월 13일

담당자 / 기관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서독 외무부 연방장관실 실장 프랑크 엘 베; 프랑스 외무장관 롤랑 뒤마; 미국 국무장관 제임스 A. 베이커; 영국 외무장관 더글라스 허드

내용

브뤼셀에서 열릴 1989년 12월 13일의 소련연방국들에 대한 원조가 논의될 예정이었던 G24 외무장관급 회담 이전에 서독, 프랑스, 영국 및 미국의 외무장관들은 동독에서의 사태 변화 및 독일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다.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가 작성한 이 회동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뒤마 프랑스 외무장관과 겐서 서독 외무장관은 서로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및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과의 회담 내용을 전달하였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및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두 사람 모두 헬무트 콜 수상의 10개항 계획 및 동독에 대한 내정 개입을 강하게 비판하였다는 것과 소련의 군부가 특히 동독에 주둔하는 소련군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외무장관의 소련 방문은 매우 건설적이었으며 상호 관계의 진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방문 중 콜 수상의 10개항 계획 중 경제적 지원에 해당하는 제3항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1989년 12월 2-3일에 열린 몰타 미-소 정상회담에서 독일 통일을 위한 10개항에 대해 논의되었다고 전달하였다.

1990년도 말에 헬싱키협정 정상회담을 갖자는 소련 측 제안에 대해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 그에 반해 미국과 영국은 그 제안이 소련이 '연극적 행위'에 불과하며 통일 논의의 추진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보았다. 겐서 서독 외무장관은 서독 정부가 이를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 서방 측의 적극적인 자세가 더욱 요청된다고 발언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2 E

담당자 / 기관_ 수상청; 연방 수상 헬무트 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고르바초프

내용_

연방 수상 헬무트 콜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고르바초프에 대한 다음 서신에서 소련이 수차례에 걸쳐 국제적으로 비판했었던 연방정부의 독일정책에 대해 해명하였다. 콜 수상은 기존의 소련과의 조약들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양국 간의 경제적인 협력을 진전시킬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현재의 변화가 유럽 내 불안정화를 가져와서는 안될 것이라는 소련 측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나토 측의 입장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동독의 불안정한 상황은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제안과는 달리 동독이 개혁을 거부하기 때문으로, 이로부터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뒤에서 쫓아갈 것이 아니라, 10개항 계획처럼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해야만 했다는 것이 콜 수상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정책 역시도 정해진 시나리오로 제시된 것이 아닌데, 여기에 종종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 정책의 목적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방지하고 전 유럽적 틀에서 발전적인 변화를 꾀하면서 동독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전망을 제공하고 또 서독 내에서는 논의의 중심이 될 주제들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보면 동-서 관계, 특히 소련과 미국 간 관계가 개선되어야 하며, 유럽통합이 진전되어야 하고, 군축 과정이 촉진되어야 하며, 나토의 정치적 역할이 강화되고 또 헬싱키회의 역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그는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정책이 성공하여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계속된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서독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동독의 자결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콜 수상은 어떠한 형태로도 강제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212-35400 De 39 NA 2 Band 1



문서
번호 126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콜 수상에 대한 서신-콜 수상에 대한 하르트만 국장의 보고안

1989년 12월 18일

담당자 / 기관 수상청: 수상청 (외무부, 경제협력부 담당) 21국 국장 하르트만: 연방 수상 헬
무트 콜

내용

수상청 국장 하르트만은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서신 및 그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콜 연
방 총리에게 제출하였다.

서신의 주된 목적은 콜 수상이 드레스덴을 방문하기 직전에 소련의 입장을 최대한 명확하
게 전달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콜 수상의 10개항 계획이 ‘최후통첩식’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러
한 접근 방식은 헬싱키협정 최종문서나 콜 수상과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간에 성립되었던
1989년 6월 13일의 본(Bonn) 공동성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동독 내 사태에 부채
질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폭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신
중하고 이성적인 대처를 주문하였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서독이 전후 국경을 준수할
것이며 자신만의 이익보다는 동독의 내적 안정을 바란다는 겐서 외무장관의 발언들을 중
시한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1989년 12월 9일의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연설에서 소련은 동
독에 대한 내정간섭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미래는 역사와 전유럽적 변화의 과정 속에서 결정될 것이다.

하르트만 국장은 10개항 계획을 거론하는 이 서신의 논조가 강경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소련은 동독 내 변화의 속도 및 동서독 간 통일과정의 지향점과 관련하여 우려하고 있다.

출처 Bundesarchiv, BArch/BK, 212-35400 De 39 NA 2 Band 1

담당자 / 기관_ 파리 주재 서독 대사 페퍼

내용_

파리 주재 서독 대사 페퍼는 독일통일 문제에 대한 프랑스 측 입장에 대해 서독대사관 정치국이 정리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의 일반 국민들은 베를린 장벽의 개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독일인들에 연대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욱 그러한 모습이다. 그에 반해 프랑스의 정치인들 사이에는 의심 혹은 회의적 반응이 퍼져있다. 여기에는 독일이 유럽에서 지나친 경제적 장악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부터 비스마르크 시대의 독일제국의 부활에 대한 우려까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독-불 간 관계에 장기적으로 부담이 가는 경우도 배제될 수 없다. 하지만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통일의 개연성을 인지하면서 그 과정을 '일정한 경로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통일독일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을 자신의 지지를 위한 전제로 삼고 있다. 프랑스의 미디어에서는 장벽 붕괴 직후 초기의 열광적인 긍정적 반응에서 심지어는 어떨 때에는 '악의에 차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우려하는 분위기로 바뀐 상태이다.

이 때문에 독일통일 과정이 진척되기 위해서는 서독정부는 자제력을 보이면서 협상에 임하고, 또한 독일통일을 유럽통합 과정에 결부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39.798 E

문서
번호 128

1989년 12월 19일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독일문제에 대한 7개항 원칙에
관한 연설에 대한 서독 외무부의 입장 표명

1989년 12월 19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정치국;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내용_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1989년 12월 19일 독일문제에 대한 7개항 원칙에 관해 연
설하였는데, 이에 대해 서독 외무부는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1. 독일통일이 다시 위협적인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 보장이 있는가?
2. 통일독일은 현존 국경을 인정할 것인가?
3. 통일된 독일은 어떻게 유럽 내 구조 안에 통합될 것인가?
4. 통일된 독일의 중립화 혹은 비군사화 문제는 받아들여질 것인가?
5. 전승 4개국의 독일 주둔 군대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6. 독일의 통일과 헬싱키협정 프로세스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7. 동·서독은 이미 국제적인 틀 내에서 통일과정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3 E

만프레드 게어라흐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동베를린 회담
1989년 12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만프레드 게어라흐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프
랑스 대표단; 동독 외무부

내용_

이 문서에서는 만프레드 게어라흐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동베
를린 회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공동체가 동독과의 협력 및 무역협정 협상을 하며 이를 앞
으로 6개월 안에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전달하였다. 그 외에 동독은 미테랑 프랑스 대
통령이 제안한 ‘동독재건 및 발전을 위한 유럽공동체 은행(EG-Bank für Wiederaufbau
und Entwicklung der DDR)’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도 이러한 은
행의 설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외에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와 동
독 간의 양자 간 관계 성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현존하는 조약들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면
서도, 서독과 동독의 통일을 위한 노력에도 이해를 표시했다. 그는 동독 지도부가 이 문제
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에 큰 관심을 보였다. 게어라흐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은 빠른 통일
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특히 시위 참
가자들인데, 한편 원탁회의에 참가한 대표자들은 아직까지는 빠른 통일에 반대하고 있다.
동독 지도부는 독일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긴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는 그 문제
가 모든 유럽인들의 이해관계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즉 독일통일보다 더 상위의 문제는 유
럽통합이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이 입장에 동의를 표시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R 29/09 E

문서
번호 130

사통당-민사당(SED-PDS) 당 대표 기지와 프랑스 대통령실 실장 비앙코의
동베를린 회담

1989년 12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사통당-민사당(SED-PDS) 당 대표 게오르크 기지; 프랑스 대통령실 실장 장-루이 비앙코; 동독 외무부 국제부

내용_

사통당-민사당(SED-PDS) 당 대표 기지는 동베를린에서 열린 프랑스 대통령실 사무총장 비앙코와의 회담에서 동독 내 상황과 그에 대한 자신의 사통당-민사당(SED-PDS)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기지 당 대표는 동독주민들은 통일문제를 놓고 갈라졌다고 하였다. 그는 통일이 1990년도에 벌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서독 정치인들의 발언은 사회를 의견이 다른 두 그룹으로 양극화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라고 발언하였다. 서독과의 협력이 증대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동독은 민주사회주의적 기초 위에서 주권국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기지 당 대표는 독일인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독일이 유럽에서 다시금 분쟁의 시발점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프랑스가 이 점을 서독 대표들에 대해 더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

동독주민들에 대해서는 유럽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대해 더 전달하여 '민족주의적 도취'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고도 발언하였다. 한편 그는 프랑스와 동독 간에 관광을 진흥시키는 것도 유럽사람들 간의 거리를 좁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기지 당 대표는 동독경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프랑스 대통령실 실장 비앙코는 동독경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서방의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연방 수상 헬무트 콜의 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는 프랑스에 있어 독일통일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하지만 “독일민족이 통일을 하겠다고 결심한다면, 프랑스가 그에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R 29/09 E

1989년 1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사통당-민사당(SED-PDS) 당 대표 게오르크 기지; 동독 외무부 국제부

내용_

동독의 국가당에 해당하는 사통당-민사당(SED-PDS) 당 대표 기지는 동독을 방문 중인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다. 이 문서는 동독 외무부가 작성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이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부시 미국 대통령 그리고 ‘유럽공동체의 정치인들’과 나눈 ‘독일 혹은 두 개의 독일 그리고 독일민족에 대한’ 대화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프랑스는 동독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과도기’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일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하였다.

기지 당 대표는 동독주민의 다수는 통일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2개의 국가를 강조하였고, 동독이 유럽공동체에 통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하였다. 그는 동독 내의 민족주의적인 분위기와 서독 내의 그에 상응하는 ‘환상’에 대해 유감을 표하였다. 그는 서독이 아닌 다른 서방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은 동독이 서독에 일방적인 경제적 의존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그는 선거 등을 포함한 부분에서 프랑스 사회당의 경험에서 배우고자 한다고 발언하였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문제를 유럽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을 강조하였다. 그렇지 못할 경우 1차 세계대전 이전인 ‘1913년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자는 모두 동독이 1985년 이후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개혁에 능동적으로 보조를 맞추지 못한 것을 ‘역사의 흐름에 대한 오해’였다고 보았다. 양자는 지금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을 특히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R 29/09 E



문서
번호 132

외교문제에 대한 모드로우 동독 내각회의 의장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동베를린 회담

1989년 1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한스 모드로우 동독 내각회의 의장; 동독 외
무부

내용

모드로우 동독 내각회의 의장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동독에서는 공식적으로 ‘반히틀러 동맹국들’이라고 부르는 전승 4개국인 유럽의 안정과 안전보장을 중시하는 데에 감사를 표했다. 동독 내 변화는 단지 독일인의 문제만이 아니기에, 동독 지도부는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모드로우 동독 내각회의 의장은 동독의 현 개혁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개혁정부의 동독은 급격한 변화가 아닌 ‘지속적인 정치적 현실’을 하나의 국가로서 제공할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너무 급격한 통일은 동·서독과 유럽공동체 간의 관계 진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전승 4개국의 앞으로의 유럽 내 역할은 독일문제가 아니라 동맹의 균형 차원에서 파악될 문제이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모드로우 동독 내각회의 의장 모두 독일에 주둔하는 연합군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독일 상황이 변화한다고 해도 연합군 나름의 권한이 존재한다는 점에 이해를 보였다.

전승 4개국 권한에 대한 협상에 동·서독이 모두 참여하는 모드로우 동독 내각회의 의장과 콜 수상이 선호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 독일인에 달렸다고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답변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R 29/09 E

문서
번호 133

베를린 장벽 붕괴 및 독일통일에 관한 이스라엘 총리 샤미르의 연방 수상 헬무트 콜에
대한 답신-텔 아비브 주재 독일대사관 보고

1989년 1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이스라엘 총리 이츠하크 샤미르;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내용_

이 문서는 이스라엘 주재 서독대사관에서 작성한 문서로 베를린 장벽 붕괴 및 독일통일에
관한 이스라엘 총리 샤미르의 연방 수상 헬무트 콜에 대한 답신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 답신에서 샤미르 총리는 최근 동유럽과 독일에서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였다. 샤미르 총
리는 베를린 장벽 붕괴를 환영하면서, 그 이후의 변화가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방향으
로 이어지길 희망하였다. 그러나 그는 1930년대와 1940년대에서의 경험에서 우려난 우려도
숨기지 않았다. 즉, 현재 독일을 가득 채운 통일을 향한 걱정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독일에서 환호하는 군중의 모습에서 1930년대의 군중 그리
고 홀로코스트를 떠올렸음을 적었다.

그는 하지만 이러한 우려 때문에 장기간 쌓아온 이스라엘과 서독 간의 협력에 문제가 있어
서는 안될 것이라고 적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7 E



문서
번호 134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게어라흐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 및 모드로우 동독 총리의
동베를린 회담

1989년 12월 22일

담당자 / 기관_ 만프레드 게어라흐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 한스 모드로우 동독내각회의 의장;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프랑스 대표단; 동독 외무부

내용_

이 문서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게어라흐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 및 모드로우 동독 총리의 동베를린 회담의 마지막 회의 내용이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의 베를린 방문 기간 중 동독정부의 지지자 및 반대자 모두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발언하였다. 오는 동독의 선거에서 일부의 즉각적인 통일이라는 요구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선거 전까지는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여 침체한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동·서독의 내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유럽에도 문제가 될 경우, 이는 곧 프랑스의 문제이기도 하다.”

모드로우 동독 총리는 프랑스 경제 대표단과의 생산적인 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동독의 미래와 관련하여 콜 수상과 함께 계약공동체로 이행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동독에는 1937년의 국경을 강조하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특별히 강조되었다. 이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전승연합국들의 지지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그는 설명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R 29/09 E

1989년 12월 28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차관 주트호프; 미국 상원 '재래식 무기 및 연합 방위(Conventional Forces and Alliance Defense)' 산하위원회 위원장 레빈 상원위원; 서독 외무부 (미합중국 및 부속 카리브해 부속지역, 독-미 간 사회·문화·정보정책적 협력 담당) 204과

내용

이 문서는 미국 상원 '재래식 무기 및 연합 방위(Conventional Forces and Alliance Defense)' 산하위원회 위원장 레빈 상원위원과 서독 외무부차관 주트호프와의 대화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레빈 의원은 독일통일에 있어 자신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였다. 동시에 그가 제시한 질문들은 미국이 동독의 민주화 과정을 안정화시키는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레빈 상원위원은 연방 수상 헬무트 콜의 10개항 계획의 표현이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하면서 독일통일을 위한 그 다음 단계의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구체적인 조치는 "서방이 단지 제스처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그는 유럽 내 변화가 유럽 내 재래식 전력 조약(유럽통상전력조약, VKSE)과 관련해서도 유의미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30 E

서독과 동독 간의 ‘협력과 선린관계를 위한 조약’-수상청의 설명-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보고

1990년 1월 4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수상청 (독일 정책 담당) 20국 국장 뒤이스베르크; 서독 연방 외무부 21국실 회의 실장; 내무부 국장 쉬퍼; 내독부 소속 만케; 법무부 국장 하이데; 동베를린 주재 서독대표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내용

이 문서는 콜 수상이 1989년 12월 19일과 20일 드레스덴 방문 중에 약속된 동독과의 조약이 가질 형식과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수상청에서 열린 내부회의에 대한 외무부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과 체결할 조약의 초안은 내독부가 준비하였다. 수상청에서 독일정책을 담당하는 20국의 뒤이스베르크 국장은 동독과 서독이 서로 상이한 이유에서 이 조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서독은 그것을 국가연합을 향한 진전으로 보고, 동독은 그것이 ‘독립적으로 병존하는 두 나라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이 조약이 동독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을 방지해야만 할 것이다. 이 조약을 통해 1972년에 동독과 서독 간에 체결된 기본조약 및 그에 의거한 협정들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 조약은 내용적으로는 중립적이고 형식적으로는 기존의 제도들에 맞추어져야만 한다.

서독 연방정부의 내독부가 제안한 전문 속에 포함된 ‘자유통행’, ‘거주·이전의 자유’나 ‘모든 독일인’, ‘독일의 두 국가’와 같은 표현 등에 동독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위원회(Kommission für regionale und kommunale Zusammenarbeit)’를 넘어서는 국가연합 구조에 대한 다른 규정을 조약 내용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외무부는 현재 동독의 최고인민회의가 이 조약을 비준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0 E

1990년 1월 11일

담당자 / 기관 바르샤바 주재 서독 대사 크낙슈테트; 폴란드 '연대' 자유노조 원내교섭단체 대표 게레멕

내용

바르샤바 주재 서독 대사 크낙슈테트는 폴란드 '연대' 자유노조 원내교섭단체 대표 게레멕과의 동유럽에서의 변화 및 독일문제에 대한 대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폴란드 '연대' 자유노조 원내교섭단체 대표 게레멕은 먼저 폴란드의 대내외적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폴란드의 민주화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훨씬 많이 진전된 편이다. 야루젤스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는 평가하였다. 나아가 이 과정이 내적, 외적으로 큰 갈등이나 충격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때까지 진행된 경제개혁은 사회변화를 가속화하였고 군대도 더 이상 당의 꼭두각시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외교적으로 보면 폴란드의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소련연방이 해체될 위험과 고르바초프가 실각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동독과 관련하여 폴란드의 '연대' 자유노조는 동독의 반체제세력을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관용과 다원주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게레멕 대표는 자유노조가 독일통일을 향한 서독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동독 내에서 수년 간에 걸쳐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과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를 위해 동독과 폴란드 간에 자문위원회가 1990년 5월 6일 선거 이후에 설립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문서의 마지막에는 스쿠비셰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르면 폴란드는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 이후에도 소련과의 동맹이 유지될 것이라는 그의 입장이 보도되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6 E



문서
번호 138

소련의 독일문제 관련 입장-연방 외무장관 겐서에 대한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의 보고안

1990년 1월 12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과장 클라우스 노이베르트; 연방 외무장관 겐서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에서 독일문제를 보는 소련의 입장을 분석·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문제는 현재 소련의 유럽정책에서 핵심적인 현안이다. 소련은 독일통일 과정이 되돌릴 수 없는 경로에 진입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 경로를 자신의 의향에 맞게 조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수단으로서 소련은 헬싱키협정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이 때문에 소련은 1990년도 말에 헬싱키협정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소련은 독일통일에 대해 확정적인 안을 내놓거나, '금지문'을 제시하기보다는 '길잡이'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련은 협상에 있어 넓은 영역을 확보하고자 한다. 소련이 2개의 독일국가를 가능한 한 장기간 고수할 것이며, 전승 4개국 권한 강조 혹은 실질적인 사용을 통해 언제라도 통일과정의 속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과장 클라우스 노이베르트는 이제까지의 소련 측 입장을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1989년도 6월의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서독 방문 / 베를린 장벽 개방 / 연방 수상 헬무트 콜의 10개항 계획 발표가 그 각각의 시기이다. 그리고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1989년 12월 19일 유럽의회에서의 '7개 질문'에 대한 연설과 함께 소련이 독일인의 '정당한 이익'에 맞서지 않고자 한다는 새로운 시기가 개시되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7 E

담당자 / 기관_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대리 파쉬케

내용_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대리 파쉬케는 독일문제와 관련한 미국 측의 이해관계 및 입장에 대해 서독 외무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부시 대통령 및 베이커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 따르자면 미국은 원칙적으로 독일의 통일을 위한 노력과 모든 독일인의 자기 결정권을 지지한다. 하지만 독일은 (나토와 유럽공동체와 같은) 서방의 가치 공동체 내에 남아야 한다. 유럽 내에서 미국은 그 영향력과 존재감을 확고히 유지하고자 한다. 그 외에 동유럽, 특히 소련에서의 계속된 개혁이 이루어지는 동안 유럽의 안정이 유지되는 것은 미국의 핵심 이익에 부응한다.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대리 파쉬케는 이 핵심 이익들이 서로 배치되거나 서로 조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파쉬케 대사 대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독일에 있어 '독일의 국가 통일에 대한 노력 및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정책을 단지 이해할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짊어지고 나갈 자세가 되어 있는 동맹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문서
번호 140

1990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동베를린에서 개최된 독일과 유럽정책 콜로키엄
-외무부 기획실 보고

1990년 1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 치트론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의 치트론 실장이 1990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동독의 정치경제연
구소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 대해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회의에는 동독과 서독의 학자들 및 동독 정치인들이 참여하여 동베를린에서 독일과 유
럽정책에 관해 토론하였다. 나아가 앞으로의 안전보장정책 및 동독과 동유럽에서의 변화
가 유럽정치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동독 측 참가자들은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역할이 군사적인 것에서 더욱 정치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동독 측 참가자들은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간에 우선
안전보장 정책적 협력이 이루어지리라는 예상을 하였다. 우선 필요한 것은 두 동맹기구 간
의 안보정책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2단계로 서유럽과 동유럽의 신생 민주국가 간에
공동의 안보동맹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소련과 미국이 참여하는 집단안전보
장체제가 만들어져야만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제조건
은 동독과 서독이 상호방위를 합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 장치를 통해 나중에 나토
와 바르샤바조약기구를 제약하고 유럽의 모든 민주국가를 포함하는 상호방위의무를 구
축할 수 있는 씨가 뿌려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문서의 2부에서 치트론 실장은 겐서 외무장관의 연설과 발언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제
들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동독주민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며 5월에 치러질 선거에서
정치적 변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아가 폴란드의 서부국경선과
관련하여 그리고 독일과 폴란드 간의 화해와 관련하여 동독과 서독이 공동보조를 취한
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독과 동유럽의 민족주의
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서 앞으로는 유럽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
이라고 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1 E

담당자 / 기관 연방 수상 헬무트 콜; 서독; 동독; 중·동유럽 국가들; 유럽공동체; 바르샤바조약기구;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헬싱키회의;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마하일 고르바초프; 유럽위원회 의장 자끄 들로르

내용

1990년 1월에 헬무트 콜 수상은 파리에서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독일문제'와 그것이 유럽 전체에 주는 영향에 대해 연설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유럽 국가들의 변화 덕분에 독일과 유럽의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동구권 국가들의 개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 및 유럽공동체와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유럽공동체의 통합은 계속되어야 한다. 동시에 유럽공동체는 동유럽 국가들의 개혁 노력을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콜 수상은 나아가 연방정부의 독일통일에 대한 10개항 계획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통일을 준비하게 될 공동의 국가연합적 기관들을 설립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또한 콜 수상은, 특히 폴란드의 서부 국경선과 관련하여 그것이 앞으로 침해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출처 Kohl, Helmut. 1990. Reden und Erklärungen zur Deutschlandpolitik. Bonn: Presse-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S. 167-184.



문서
번호 142

영국과 독일문제-1990년 1월 17일 영국 상원에서의 토론-런던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

1990년 1월 17일

담당자 / 기관_ 런던 주재 서독대사관: 영국 상원

내용_

이 문서는 런던 주재 서독대사관이 1990년 1월 17일 영국 상원에서 있었던 독일통일에 대한 토론에 대해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 영국 수상 제임스 캘러헌 경은 통일된 독일은 유럽 내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새로운 유럽에서 안정과 안보는 유럽공동체의 실질적인 과제에 해당하게 되었다. 연합국가로서의 독일이 2개의 상이한 군사동맹에 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통일독일이 중립국이거나 혹은 비동맹국일 수도 없다.

브라바존 경은 유럽공동체는 과거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들에게 보장한 것과 같은 개방성을 향후 동구권 국가들에 대해서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서독이 나토에 대한 의무를 강조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영국이 지닌 전승 4개국의 권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두 독일의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발언하였다.

보넘-카터 경은 영국은 독일의 통일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더 강하게 통합된 유럽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동구권 국가들이 소련의 영향력을 벗어나자마자 독일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도 유럽공동체는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카버 경은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를 대체할 새로운 안전보장체제를 성찰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블랙스톤 경은 독일의 중립화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4 E

문서
번호 143

양독 간 영사업무를 개시할 경우의 국적법적 측면-수상청에 제출한 서독 외무부의
보고

1990년 1월 17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210과(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담당)
소속 브란덴부르크; 수상청; 내독부; 동베를린 주재 서독 대표부

내용

서독 수상청은 동독의 요청에 따라 양독 간 대표부를 설치하여 영사업무를 개시할 경우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조약'을 고려한 국적법적 측면을 검토하였다. 서독 외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에 따르면 '주재국의 시민'이라는 표현은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조약 5항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동베를린 주재 서독대표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서독 외무부는 '서독의 공식적 인적증명의 소지자'라고 바꿔 표현하는 것이 서베를린 시민을 지칭하는 데 더 적절할 것이라고 하였다.

서독의 법적 견해는 이제까지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에서 인정되었는데, 지금 서독과 동독 간에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조약의 일부에 대한 별도의 협의를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외무부의 입장이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9 E

문서
번호 144

1990년 1월 19일 본에서 열린 독-영 기획실 간 회담-서독 외무부 기획실 보고
1990년 1월 25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기획실 퀵커; 영국 기획실 실장 쿠퍼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1월 19일 본에서 열린 서독과 영국 외무부 기획실 간의 회의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회의에서는 다음의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소련 내 상황의 향후 변화, 독일문제, 유럽 내 정치 지형, 특히 유럽공동체의 역할, 헬싱키협정 프로세스 및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미래 등이다.

영국 외무부 기획실은 소련이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해체의 수준에 들었다고 보았다. 단지 붉은 군대만이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영국 측의 분석이었다. 소련이 동유럽 국가들 내 변화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어느 정도 관찰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영국은 공식적으로는 이 상황을 이용하지 않고,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을 지원할 것이다. 물론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협상에 있어서 그런 “감정이 개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영국 외무부의 기획실 실장 쿠퍼는 앞으로 유럽경제의 경계는 폴란드의 동쪽 국경과 일치하게 되고, 이 경계 너머에 ‘개발도상국 소련’이 남을 것이라고 보았다.

독일의 변화에 대한 소련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유럽공동체의 틀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영국쪽에서는 만일 동독선거에서 통일 찬성론자들이 승리할 경우 서독 측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알기를 원했다. 그런 경우 서독이 서방 전승 3개국, 유럽공동체 및 나토에 자문을 구할 것인가? 통일 전에 화폐통합을 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동독이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이 지역이 유럽공동체에 포함되더라도 필수적으로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밖의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공동체에 가입하는 문제는 현재의 영국이 갖고 있는 유럽공동체의 구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존속은 서방에 있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새로운 안전보장체제를 만드는 데, 경쟁할 수 있는 상대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4 E

문서
번호 145

유럽공동체의 13번째 회원국으로서의 동독
1990년 1월 26일

담당자 / 기관_ 유럽위원회 의장 자끄 들로르; 유럽공동체; 더블린 유럽이사회; 네덜란드 외무장관 한스 반 덴 부룩; 헬싱키회의;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마하일 고르바초프;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내용_

이 문서는 프랑스 전문지 렉스프레스(L' Express)지의 기사로 동독을 유럽공동체의 13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자는 유럽위원회 의장 자끄 들로르의 제안을 다루고 있다. 그에 따르면 더블린에서 열린 유럽 경제공동체 외무장관 회의에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이 제안을 거부하였다. 들로르 의장은 이에 실망감을 표시하였고, 유럽통합 및 자기가 구상한 연방주의적 유럽은 단지 모든 독일인들이 함께 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는 서독에는 자신의 이러한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출처_ Louyot, Alain. Delors. La RDA treizième à table. In: Les Cahiers de l'Express. Februar 1995. Nr. 31. S. 47-48. Übersetzt vom Centre Virtuel de la Connaissance sur l'Europe.

문서
번호 146

소련과 동독의 관계-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와 동독 대사의 대화
1990년 1월 26일

담당자 / 기관_ 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 모스크바 주재 동독대사관

내용_

이 문서는 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에서 작성한 것으로 동독 대사 쾨니히와 서독 대사가 나눈 대화에 대한 보고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독 대사의 설명에 따르면 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수는 지금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 동독의 정치적 상황은 극도로 불안정하기에 2만 명의 병력이 주둔하는 대신 제대로 된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동독 대사 쾨니히는 소련이 동독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점은 소련의 독일전문가(Germanisten)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나아가 동독의 사통당은 이제 어떠한 정치적 힘도 갖고 있지 못하며,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전하였다. 남아 있는 당원들도 불안해하거나 혹은 좌절감에 빠져있는 것이다. 지금도 주민의 80퍼센트는 여전히 현실을 외면하거나 비정치적이다. 마찬가지로 10만 명에 달하는 슈타지 요원들이 현재 어떤 전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폭력을 행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동독주민들 사이에 신나치적 정서가 살아나는 상황이 소련의 독일전문가들에게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한다.

소련은 바르샤바조약기구가 계속 존재하면서 회원국 간의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본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소련 내부의 불안정한 상황은 외교정책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2 E

담당자 / 기관_ 수상청: 수상청 (외교 및 내독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국장
겸 수상청 차관보 텔릭; 연방 수상 콜

내용_

텔릭 국장은 콜 수상에게 서독과 소련 관계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최근 콜 수상의 1988년 10월 모스크바 방문 및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1989년도 6월 본 방문 등의 상호 방문 덕에 양국 간 관계는 소폭 개선되었다. 협정 체결 및 기업 간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다. 서독에 대한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기대가 모두 충족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렸다.

동독 및 소련 내 국내정치의 변화 때문에 민감한 정치심리학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안정 및 안전에 대한 요구가 상승하였고, 페레스트로이카에 있어 난점이 노출되었으며, 신속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서독의 입장에서는 독일문제와 인도적 문제에 대한 정책, 10개항 계획 및 독일계 러시아 국민 문제와 관련하여, 또한 그 외에도 유럽 내 안전보장 및 군축정책과 관련해서 소련과 대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최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내수 및 역내 해상통행 및 1990년도 베를린 시의원 직접 선거와 같이 실행가능한 베를린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1989년도에 서독과 소련 간의 무역량은 상당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300억 마르크 규모의 여신을 집행하는 것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소련 행정의 관료주의 및 능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양국 간 군사적 관계는 동맹국이 아닌 국가 간에 가능한 최대의 수준으로 광범위한 협력이 구축된 상태이다. 이것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가서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상호이해를 위해 문화교류가 중요하지만, 특히 서독 연방주들의 동의가 모두 확보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협의는 아직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서독의 문화원조와 관련된 주된 주제는 주로 독일계 러시아 국민과 관련된 것이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213-30130 S 25 So 28 Band 4

전 유럽적 틀에서 본 독일정책-하르트만 국장의 기록 1990년 1월 29일

담당자 / 기관_ 수상청: 수상청 (외무부, 경제협력부 담당) 21국 국장 하르트만;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동독 내 1990년도 3월 선거 이후 전 유럽적 틀에서 본 독일정책과 관련한 고려사항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3가지 중점사항이 논의되었다.

1. 원칙적 고려사항: 동독의 1990년 3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선거 이후 동독에서 서독과 국가연합을 형성해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서독이 정책 방향을 공표하는 것이 동독 내 상황의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2. 동서독 관계: 서독과 동독 내에 점점 더 민족적 통일이라는 목표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그 경우 연방주의적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공동체는 경우에 따라 불필요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약체결이 필요하다. 전문에는 통일에 대한 의지,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법치주의적 질서 등이 규정되고, 공동정부 구성, 의회 측 자문회의 및 각 분야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제도적 규정들 및 경제·화폐통합 및 사회체제의 변화에 대한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법령의 균등화 및 교통·통신체계 간의 조화 및 폴란드 서부 국경 문제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동독이 유럽공동체에 소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약 내에 두 독일국가의 독일연방 소속 여부나 전승 4개국의 권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1990년 12월 2일로 예정된 다음 독일 연방의회 선거일 이전에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독일 유권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는 데 좋을 것이다.

3. 유럽 및 국제 분야: 서독은 계속 유럽공동체의 정치·경제적 통합에 공헌하겠다는 점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1990년에 이미 유럽공동체와 동독 간의 무역 및 협력 협정이 체결될 수도 있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헬싱키협정 정상회담이 같은 년도 중인 1990년 말까지 개최되어 독일문제를 전 유럽적 틀 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소련은 1990년 1월에 전승 4개국 회담을 미국 측에 제안하였다. 연방정부는 관계국 6자 회담을 지지하며, 여기에 헬싱키협정 대표자가 독일문제의 논의를 위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

전 유럽에 있어 소련에 대응하는 무게 중심으로서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통일독일에 대해 모든 외국 주둔 군대를 철수시키라는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데, 이는 현명하지 못한 방향이다. 독일은 나토 회원국으로 남아야 한다.

출처_ Hanns Jürgen Küsters.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51(aus digitaler Edition)

문서
번호 149

마조비에츠키 총리의 연방 수상 헬무트 콜에 대한 서신
1990년 1월 3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 수상 헬무트 콜; 폴란드 마조비에츠키 총리

내용_

이 문서는 폴란드의 마조비에츠키 총리가 서독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폴란드의 개혁 과정과 체제 변화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준 데 대해 콜 수상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보낸 서신이다. 이 서신에서 마조비에츠키 총리는 서독도 미국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해 이미 시행되었던 것처럼 5억 서독 마르크 분의 신용대출을 더 나은 이자 조건의 서독 국채로 변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출처_ Hanns Jürgen Küsters.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54, S. 754f(aus digitaler Edition)

독일문제에 대한 소련의 입장-고르바초프 총서기장과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발언-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의 보고

1990년 1월 31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과장 클라우스 노이베르트; 연방 외무장관 겐서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과장 클라우스 노이베르트가 고르바초프 총서기장과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발언을 통해 독일문제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정리해 연방 외무장관 겐서 및 외무부 내 고위 공무원들에게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이제 독일통일에 대해 분명하고도 무제한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모드로우 동독 총리와 '형제 정당'으로서의 사통당-민사당(SED-PDS)에 대한 그의 공식적인 긍정적 평가 발언은 소련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목적으로만 나오고 있다. 두 개의 독일국가 원칙, 서독이 동독을 합병하거나 불안정화시키지 않을 것, 그리고 현존 국경의 인정 등이 그의 다른 주요 입장이다.

한편, 오직 헬싱키협정 체제만이 독일 내 변화를 소련의 이해에 부응할 수 있게 만드는 유효한 틀로 그는 간주한다. 이는 서독에게도 중요한 것으로, 독일통일 과정과 헬싱키협정 프로세스가 시간적으로 서로 연계되어서는 안된다.

동-서 관계의 진전은 동서독 간의 상호접근과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반대로 독일통일은 소련의 발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새로운 입장은 독일이 '유럽의 안보를 위한 핵심'에 해당한다는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발언과도 궤를 같이 한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7 E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 클라우스-페터 클라이버; 런던 주재 서독대사관

내용_

서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 클라우스-페터 클라이버는 영국 외무장관 허드가 1990년 2월 6일 서독의 수도 본을 방문한 계기로 독일문제에 대한 영국 측의 입장을 요약·보고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체 영국 수상에 따르면 독일통일은 너무 빨리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나토, 바르샤바협정, 헬싱키협정 등의 국제적 의무사항을 고려하며 진행되어야 한다. 대체 영국 수상은 콜 수상과 겐서 외무장관이 자신들의 ‘민족주의적’ 목표를 유럽적 필요의 차순위로 낮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반해 대체 수상은 1984년에 유럽 내 안정은 독일의 분단 상황 때문에 달성이 어렵다고 스스로 발언한 적이 있었다.

한편, 영국 수상청의 분위기를 보면 독일의 통일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를 가능한 한 빨리 완성시켜 동독의 혼란 및 경제적인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서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 클라우스-페터 클라이버에 따르면, 무엇보다 실무진 수준에서는 독일 측의 입장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한 상태였다. 그에 따르면 영국 외무장관 허드는 자신의 본 방문에서 영국이 독일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대체 영국 수상 및 다른 영국 정치가들은 독일을 안전보장 정책상 어떠한 식으로 결부시킬지를 가장 어려운 문제로 파악하고 있었다. 결국은 독일이 나토에 남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동독 관련 문제들, 예를 들어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잔류나 소련군의 철군 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주저하는 모습이 보였다. 연방 외무장관 겐서의 ‘빌트지’ 인터뷰에서의 나토 탈퇴에 대한 언급도 오해되고 있었다.

특히 논쟁거리가 된 것은 베를린 및 전체 독일에 대한 전승 4개국의 권한 문제였다. 영국 외무장관 허드는 1989년 3월부터 베를린의 새로운 시장이 될 발터 모퍼가 베를린에 대한 전승 4개국 권한을 전 동독에 확대시킨다는 제안을 관심있게 들었다.

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 통일된 독일이 유럽 내 영국의 정치적 역할 및 의미를 축소시킬 것으로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은 영국 속담처럼, “이길 수 없으면 차라리 그와 한편이 되어라”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4 E



문서
번호 152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스쿠비쉐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 및 양국 파견단 간의
본 회담

1990년 2월 6일

담당자 / 기관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스쿠비쉐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 양국
파견단; 서독 외무부 214 분과 과장 대리 쉬렘브젠스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가 겐서 장관과 스쿠비쉐프스키 장관 간의 회담에 대해 작성한 보
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스쿠비쉐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었다: 독일과 유
럽 내의 상황, 본 회담 이후 독일-폴란드 외무장관 공동 성명 발표 여부 및 새로운 양자
간 협력 가능성 등이 그 의제였다.

본 회담 이후 발표할 수 있을 서독-폴란드 외무장관 공동 성명과 관련해서 의료·보건, 청
소년, 환경, 농업 및 문화 부문에 있어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양자 간 조약상의 진척이 있
었음이 언급되었다. 겐서 서독 외무장관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전문가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는 그 외에 1990년 2월 5일의 유럽공동체 외무장관들의 결정 및 자신의 베이커 미국 국
무장관과의 회담 내용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독일이 근린 국가들에 대해 어떠한 영토 변경에 대한 주장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는 또한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성명을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독일통일
은 다른 국가들에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유럽 내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문서의 다음 내용에는 전문가 대표 회의와 관련한 상세 내용이 포함되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6 E

1990년 2월 6일

담당자 / 기관 연방 외무장관 한스-디트리히 겐서; 영국 외무장관 더글라스 허드; 본 주재 영국 대사 크리스토퍼 몰러바; 런던 주재 서독 대사 폰 리히트호펜; 서독 외무부 장관실 실장 대리 뢰켈부르크; 서독 외무부 공보실 대리 한스-하인리히 슈마허

내용

겐서 서독 외무장관은 영국 외무장관 허드에게 현재 동독에서의 사태 변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동독에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였다. 그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동독 선거를 1990년 3월 18일로 앞당긴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 선거 이후에 동독이 국가의 통일과 서독으로부터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 더욱 분명한 관점을 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화폐통합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영국 외무장관 허드는 나토, 유럽공동체 및 헬싱키협정 프로세스 그리고 전승 4개국의 책임 등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질문하였다.

겐서 서독 외무장관은 다른 국가들의 권리 및 책임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는 어떠한 경우라도 독일이 유럽 및 나토 동맹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헬싱키협정 체제의 확충이 특히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 국면에서 소련 측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동독에 주둔하는 소련군 문제는 우선은 동독의 새 정부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는 나토가 향후 그 영역을 동유럽으로 확장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054 E



문서
번호 154

1990년 2월 7일 내각위원회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독일통일’ 실무단 설립-
그를 위한 준비회의상의 의제 목록

1990년 2월 6일

담당자 / 기관 내각위원회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독일통일’ 실무단;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롭;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과장 람바흐

내용

1990년 2월 7일의 내각위원회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독일통일’ 실무단 설립 준비회의 참가자들에 대해 토론될 의제가 담긴 서한이 발송되었다. 1990년 2월 5일의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롭과 각 소관 부처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 유럽 정책
- 안전보장 정책-전승 4개국의 권한 및 책임
- 협의 프로세스
- 헬싱키 협정
- 2개의 독일이라는 상황의 해소 이전까지 동독과의 향후 국제정치 및 안전보장 정책적 협의 방안

[이하 문서에는 각각의 세부 사항이 포함됨]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0 E

1990년 2월 10일

담당자 / 기관_ 미국 국무장관 베이커; 수상청;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내용_

미국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은 연방 수상 헬무트 콜에 대한 서신에서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모스크바회담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회의에서는 일반적인 미-소 간 주제들 외에도 독일통일이 논의되었으며 소련 측에는 유럽이 불안정해지고 독일 국경에 분쟁이 발생하며 독일이 유럽 내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였다. 이 때문에 소련은 단지 관망자적 자세만을 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베이커 국무장관은 일차적으로 독일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통일은 아마도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독일인들이 내적 문제들을 스스로 규율해야 한다는 점과 별개로, 1990년 3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제적 문제와 관련된 틀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베이커 국무장관은 제안하였다. 이를 단지 전승 4개국 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2+4회담의 형식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열려있는 자세를 보였다.

베이커 국무장관은 독일이 나토에 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소련 지도부 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소련을 포함시킬 정도로 나토를 확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212-35400 De 39 NA 1 Band 2

문서
번호 156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모스크바 크레믈린 회담
1990년 2월 10일

담당자 / 기관_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에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양국 대표단; 서독 외무부 21실 실장 회의

내용_

이 문서는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이 겐서 서독 외무장관에게 자신의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과의 대화에 대해 설명한 것에 대한 보고서이다. 겐서 서독 외무장관은 미국 측이 헬싱키협정 정상회담이 연내에 개최되는 것을 지지한 것을 환영하면서, 동시에 동독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1989년도에 38만 명, 그것도 주로 젊은이들과 좋은 교육을 받은 이들이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왔다고 설명하였다. 1990년 1월에만 5만 5,000명에 달하는 주민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하는 상황에서 동독 측에 경제·화폐 통합을 제안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통해 동독에 남아도 더 나은 미래가 가능하다는 신뢰를 동독주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현재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물론 동서독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승 4개국 및 전 유럽 내에서의 협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폴란드의 서부 국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동독에서의 상황과 관련하여 동의하였다. 그는 동·서독 간의 계약공동체 구상안을 따를 경우 서독정부가 동독에서의 불안정성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에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동독의 상황은 통일 문제가 선거의 쟁점이 되는 등 서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실현할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소련은 헬싱키협정이 독일문제에 대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하였다. 소련에게는 통일된 독일이 나토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였다.

겐서 서독 외무장관은 그에 동의하면서도 통일된 독일의 중립화 안에는 반대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선거 후 새로 구성된 동독정부가 이 문제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그는 나토 영역의 동구권 확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해 소련과의 긴밀한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담당자 / 기관_ 서독 연방의회 학술처 (외무부, 국방, 국제법, 유럽통합, 경제 협력, 독-독 관계 담당) 제2국 부국장 하인리히스

내용_

서독 연방의회 학술처는 1944-1989년 간의 독일-폴란드 간 국경 관련 문서들을 취합 정리하였다. 여기에는 연합국들의 전후 협의들, 서독 기본법, 1950년의 동독-폴란드 간 쾰리츠조약, 서독과 서방 전승 3개국 간의 독일조약, 1967년의 나토 커뮤니케에 포함된 하르멜보고서, 모스크바 및 바르샤바조약을 포함한 서독정부와 동구권과의 조약들(Ostverträge), 헬싱키협정 및 1989년 11월 8일의 연방의회 결의가 포함되어 있다. 국경 규정에 있어 이들 문서들은 대부분 서로 연결되어 보완하는 관계이다.

1989년 11월 8일에 서독 연방의회는 현존하는 국경의 불가침성과 상호 영토 변경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 바르샤바조약이 서독과 폴란드 간 관계의 초석임을 강조하였다. 국경의 불가침성을 인정하는 것은 유럽 내 평화적 상생을 위한 기초이다. 연방 수상 헬무트 콜은 1990년 1월 17일 파리에서 통일과 현존 국경의 확대를 서로 연관짓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39E; Wissenschaftliche Dienste des Deutschen Bundestags, WF II-296/89

문서
번호 158

연방 수상 헬무트 콜과 미국 대통령 부시의 전화 통화 1990년 2월 13일

담당자 / 기관_ 수상장;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

내용_

연방 수상 헬무트 콜은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로 자신의 모드로우 동독 총리와와의 1990년 2월 13일자 회동에 대해 설명하였다.

콜 수상은 동독 내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이주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한 후, 자신이 화폐 및 경제통합을 제안하였음을 전달하였다.

그는 나아가 모스크바 회동에서 부시 대통령이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콜 수상은 비록 소련 내 물자보급 상황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이 소련 공산당 당원 총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였다. 그는 독일문제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매우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 회의에서 겐서 외무장관이 1990년 2월 12일 오타와회담에서 2+4회담을 제안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콜 수상의 1990년 2월 말 캠프 데이비드 방문 중에 나토와 바르샤바조약의 미래에 대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무엇보다 소련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 통화에서 부시 대통령은 외무장관들의 2+4회담과 관련한 합의에 대해 유보적 자세를 표명하였다. 콜 수상은 약 4주 후인 1990년 3월의 동독선거 이후 새 정부가 구성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때 서독은 동독과 대화를 할 것이다. 그동안 부시 대통령과 협의할 시간이 존재한다. 빠른 결단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타 국가들이 발언권을 가지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부시 대통령도 헬싱키협정의 35개국들이 모두 관여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콜 수상이 제안한 일정에 동의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21-30100 (56) Ge 28 (VS) Band 80, Bl. 56-59

1990년 2월 13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연방 외무장관 겐셔; 영국 외무장관 허드;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미국 국무장관 베이커; 프랑스 외무장관 뒤마;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룹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룹이 1990년 2월 13일에 오타와에서 열린 서독 연방 외무장관 겐셔, 영국 외무장관 허드,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미국 국무장관 베이커 그리고 프랑스 외무장관 뒤마의 회담에 대해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타와회담을 통해 동서독의 외무장관과 나머지 전승 4개국의 외무장관들은 독일통일의 대외적 측면 및 근린 국가들의 안전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4회담을 개시할 것을 성명서로 발표하였다. 그 준비를 위한 실무자급 회담이 곧 개시될 것이다.

서방 측의 전승 3개국은 2+4회담 내 정치국 국장들 간의 실무자급 회담이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선거 이전에 이미 개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외무장관급 회담은 동독정부 구성 이후 개최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 모든 회담의 개최 장소는 독일로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는 특히 '독일의 통일'이라는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그보다는 좀 더 긴 과정을 언어적으로 전달하는 표현을 선호하였다. 그는 모스크바와의 긴 협의 끝에 '독일통일의 성립'이라는 표현을 받아들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2 E

문서
번호 160

오타와에서 열린 나토 소속국 외무장관 회의-6자 성명
1990년 2월 13일

담당자 / 기관 나토 소속국 외무장관 회의(Caucus der NATO-Außenminister); 서독 외무부 (안전보장, 유럽 내 군축 및 군축 통제 특히 유럽 내 재래식 전력에 대한 협상 및 신뢰 구축 및 군축을 위한 회담 담당) 221실 과장 부어슈테데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221실 과장 부어슈테데가 나토 소속국 외무장관 회의(Caucus der NATO-Außenminister)에서 6자 성명, 독일문제를 2+4협상을 통해 다루는 방식에 대해 이루어진 논의를 정리·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인근 국가의 안전보장’이 독일문제의 ‘대외적 측면’으로서 논의되어야 된다는 말은 오해를 불러오기 쉽다고 발언하였다. 실제로는 단지 폴란드와 독일의 국경 문제만이 그에 해당하는 문제이라고 하였다. 다수의 나토 소속국 외무장관들은 오타와 성명이 ‘선심을 베푸는 척하는 발언(patronizing statement)’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이탈리아 외무장관에 따르면 독일문제는 전 유럽적 문제에 해당하기에, 나토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외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그리고 노르웨이는 자신들의 유보적 자세를 더 강하게 표현하거나 위 성명상의 표현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프랑스 측 대표는 이 성명이 ‘중요한 진척’을 의미한다고 이를 변호하였다. 미국 국무장관도 ‘현실적인’ 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음을 강조하면서, 나토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하였다.

독일 측 대표는 동 성명의 탄생 배경에 주의를 환기시킨 후, 이렇게 빠른 대처가 필요했던 것은 동독의 급박한 상황 때문이었음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앞으로 계획된 2+4회담에는 비나토회원국들(소련 및 예외적인 경우로 폴란드)도 참가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2 E

1990년 2월 14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기획실 소속 바이스 박사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기획실에서 나토의 군사적 영역을 동독으로 확대시키지 않는다는 연방 외무장관 겐서의 구상에 기반하여, 독일통일을 유럽 안전보장체제에 통합시키는 문제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럽의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적 목표에 대해 우선적으로는 2+4회담 참가국들 간에, 그 이후에는 35개 헬싱키협정 참가국들 간에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협상의 초기 및 과도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 목표란 미래의 민주적인 유럽에 어울리는 유럽 공동의 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고 독일통일의 안보 정책적 틀을 더 큰 중유럽이라는 공간에서 최적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 과도기에는 당사자들 간의 상호협력이 정치적으로 조율되어야 할 것이다. 서독의 입장에서 보면 통일독일이 법치국가와 헌법국가가 되는 것과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원칙과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단계는 초기에 독일영토에 소련군이 여전히 주둔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유럽통합과 독일통일을 추진하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소련 측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독일에 주둔한 소련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 이후에도 구동독지역에서 적극적인 군사적 행보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동독이 통일과 함께 일반적으로 바르샤바조약기구로부터 탈퇴를 선언하면서 동독이 소련과 체결한 주둔군 관련 조약의 이행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것이다.

나아가 독일이 자신의 국방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 역시 전 유럽의 군비통제 및 군축협상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독일이 나토 및 서유럽연합(WEU)에 소속될 경우 독일은 확연하게 방어적인 거시구조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439 E



문서
번호 162

독일통일 과정과 그 안보 정책적 문제들-워싱턴 주재 서독대사관과 미국 국무부
기획실 실장 대리 간의 대화

1990년 2월 14일

담당자 / 기관_ 워싱턴 주재 서독대사관; 미국 국무부 기획실 실장 대리 짐 홈즈

내용_

이 문서는 워싱턴 주재 서독대사관 소속 외교관들과 미국 국무부 기획실 실장 대리 짐 홈즈 간의 대화에 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대화에서는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안보 정책적 문제들과 그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되었다. 홈즈 실장 대리에 따르면 곧 시작될 2+4회담은 무엇보다도 독일통일로 이르는 길을 여는데 주안점이 있다. 국내 정치적이자 사회적, 법적 동등화와 관련된 문제들은 오로지 서독과 동독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2+4회담에서 다루어질 '대외적' 문제들에는 특히 현존 국경의 보장, 통일 후 독일의 생화학 및 핵무기 포기 그리고 통일독일의 안보 정책적 관계 등의 의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대외적 문제들이 해결된 이후에는 더 큰 범위의 헬싱키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협상의 목표가 결코 평화조약의 체결이 되지 않도록 하기를 요구하였다.

통일독일의 나토 회원국 지위에 관해서 미국은 '독일과의 단단한 결속'을 중시하지만, 그 구체적인 형식에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홈즈 실장 대리는 독일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동독영토에 대해 특별 지위를 선언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1 E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산하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1차 회의-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제정치과(210과) 보고

1990년 2월 14일

담당자 / 기관 서독 겐서 외무장관; 수상청장 자이테스; 그 외 연방장관들 및 정부관료;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이 작성한 것으로 연방 수상 헬무트 콜과 겐서 외무장관의 1990년 2월 10일과 11일의 모스크바 방문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련은 더 이상 원칙적으로 독일통일을 막고자 하지 않는다. 1990년 2월 12-14일 간의 오타와 공동 회담에서 독일통일의 대외적인 측면만을 2+4회담을 통해 규정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독일정책에 있어 다음 사항들을 특히 고려하고 또 준비해야 한다. A) 헌법에 합치하는 독일통일 방식 및 전승 4개국의 권한 소멸 방식 B) 유럽공동체의 회원국 C) 동맹 체결권 및 통일독일의 나토 회원국 지위 문제 등이 그것이다.

겐서 외무장관은 서독과 동독은 동독 최고인민회의의 선거 이후 상호협의 속에 6자 회담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까지는 위 A) 사항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발언권을 주장하려는’ 추가적인 국가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B) 사항과 관련해서는 동독의 유럽공동체 직접 가입의 방식은 배제하기로 하였다. 그보다는 유럽공동체의 영역을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할 동독지역까지 확장시키는 것이 가장 쉬운 방식이다. C) 사항은 먼저 정치적으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독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의 존재에 대해 해결이 필요하다. 이 협의의 결과는 헬싱키협정 정상회담 전에 도출되어야 한다.

슈톨텐베르크 서독 국방부장은 동맹 선택권 문제를 암시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는 국방체제는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문서
번호 164

동독 외무부 업무의 인적 상황-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담당) 210과 보고

1990년 2월 15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담당) 210과 소속 브란덴부르크; 동독 외무부 본 주재 동독대표부 제1비서 그라메스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정치국이 서독 주재 동독대표부 제1비서 그라메스로부터 동독 외무부 업무의 인적 상황에 대해 전달받은 것을 보고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동독 외무부 본부에는 당시 2,000명에서 2,500명의 인원이 고용된 상태였다. 나아가 약 5,000명 가량의 인원이 외무부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수상청에서 예상한 것과 같이 서독 주재 동독대표부에서도 인적 감축이 이루어졌다. 동독 외무부는 사통당 중앙위원회로 복귀한 동독 외무부 직원들의 자리를 다시 충원하지 않았다.

과거 상황을 보면, 동독 외무부 고위직의 일부만이 포츠담-바벨베르크 소재 국가-법-아카데미(Akademie für Staat und Recht)에서 교육을 받았었다. 그 외 대부분은 동독의 대학 기관에서 충원되었다. 동독에 공무원 신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에 이론적으로 동독 외무부 소속 직원도 3개월 이전에 통보하면 해고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까지 이것이 실행되지는 않았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01 E

담당자 / 기관_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대리 파쉬케; 미국 국무부 기획실 실장 대리 홈즈

내용_

이 문서에서 서독 외무부는 미국 측의 2+4회담 방식에 대한 고려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폴란드는 2+4회담에 직접 참석할 수 있을지를 문의하였다. 이 때문에 2+4회담의 체제를 제3국들에 대해 설명하고, 또 이 회담에서 그들의 이익을 고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오타와 6자 성명과 관련하여 더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한 설명에서는 사용된 개념들 ‘대외적 문제’, ‘동독지역’ 그리고 내용 범위, 즉 베를린문제의 역할 및 오타와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들을 더 자세히 정의해야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회담 진행 방식은 3단계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1. 서독과 미국 간의 상세한 협의; 2. 전승 4개국 간의 협의; 3. 동독 최고인민회의 선거일인 1990년 3월 18일 이후에는 2+4회담 내에서 자문회의 개최. 미국은 위의 2단계와 3단계는 서독 측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1 E

문서
번호 166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산하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본(Bonn) 설립
회의

1990년 2월 19일

담당자 / 기관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수상청; 내무부; 법무부; 재무부; 내독부;
국방부; 경제부; 환경부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내에 겐서 외무장관을 의장으로 개최된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산하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의 설립 회의에 관한 보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타와회담에서 열린 연방 수상 헬무트 콜과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회담 및 외무장관들의 회담 결과에 따라, 독일통일의 국내적 측면들은 동독과 서독이, 국제적 측면들은 전승 4개국과 함께 다루도록 한다. 그를 위한 헌법적 토대와 유럽공동체 관련 문제 그리고 나토 및 바르샤바조약 관련 동맹조약에 대해 검토 및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겐서 외무장관은 기본법 23조에 따른 가입을 지지했는데, 이는 기본법, 즉 헌법에 합치하기에 새로운 헌법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외교정책에 있어서, 평화조약과 유사한 해결책은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방부장관 슈톨텐베르크는 나토의 보호 영역이 동독영토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질문하면서 소련 군대의 동독 주둔은 단지 과도기적으로만 용납될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겐서 외무장관은 동독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발언하였다.

(이하 내용_ 실무단 구성)

출처 Bundesarchiv, BArch/B 136/ 20244, 221-34900 Wi 14 Band 1

담당자 / 기관_ 수상청: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내용_

이 문서는 겐서 외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산하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의 두 번째 회의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겐서 외무장관은 실무단의 기록 및 업무가 앞으로는 비밀 등급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다루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독과의 결합을 통한 동독의 유럽공동체 가입은 유럽공동체 기본 체제의 변경을 요하지 않음.
- 헌법적 구조-기본법 23조에 따른 가입은 동독의 특별한 이해를 탄력적으로 고려하는 규정을 가능케 함. 영토문제가 분명히 해명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특히 전쟁 배상과 같은 다른 문제들이 뒤따르게 되어서는 안된다.
- 공무원들은 안전보장 정책 관련 문제들을 질문 리스트로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실무단은 내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서는 안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0244, 221-34900 Wi 14 Band 1

문서
번호 168

‘독일과 동맹’ 문제에 대한 외무부의 개관
1990년 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나토 및 방위 담당) 201과 과장 드레어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나토 및 방위 담당) 201과 과장 드레어가 변화된 유럽 내 상황 속에서 또 새로운 평화적 질서의 구축을 목표로 할 때 ‘독일과 동맹’ 문제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분석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통일과 동맹 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유럽 국가들, 특히 소련의 안보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통일된 독일은 그 자신의 안보 이익을 고려할 때 서방 동맹에 속해야 하며, 중립화나 비군사화의 길을 택해서는 안된다. 통일독일은 유럽 내 협력 안전보장체제의 구축에 동참함으로써 자신의 행위 반경 및 예측가능성에 있어 이익을 얻을 것이며, 또한 유럽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독일의 주권 및 그의 자기 방위권은 유연현장에 의거해 보장되었으며, 여기에는 자국 내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대한 조약을 통한 규정권도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유럽 내 안전보장체제는 미소 간의 변화된 상호 관계 및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간의 변화된 관계 등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는 각 동맹의 전략과 지침에 있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단들이 존재한다: -군비 통제 및 군축 프로세스의 속행 및 강화; -헬싱키협정 프로세스의 제도화; -전 유럽적 제도의 창설; -서유럽 통합의 지속 및 가속화 등이 그것이다.

중요한 것은 통일독일의 근린 국가들, 특히 폴란드와 소련이 나토의 영향력이 증대된다는 인상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하 문서에는 이상의 문제들에 대한 세부 사항이 열거되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39 E

담당자 / 기관_ 수상청: 수상청 (외교 및 내독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국장
겸 수상청 차관보 텔릭; 연방 수상 콜

내용_

이 문서는 텔릭 국장이 콜 수상에게 소련의 독일문제에 대한 언급 내용에 대해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고르바초프와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독일인의 통일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그 방식에 대해 엄격한 노선을 견지하였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평화협정과 같이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을 지니는 조치를 요구하였다.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이 ‘완고주의자’라면,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그와 반대로 ‘미래 예견자’와 같은 면모를 보였다. 그에 너무 지나칠 정도의 단호한 정책으로 맞서서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입지를 약화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통일독일을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시도할 경우 소련이 그냥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바르샤바조약의 붕괴는 개연성이 없다.

통일은 소련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산업 분야에서 생산의 60-70%에 달하는 소련에 대한 동독의 의무적 물자 공급의 중단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다.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이 때문에 독일통일은 최소한 수년을 요한다고 생각하였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경들의 불가침성을 강조하였다. 그가 구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유럽의 안전보장체제의 형성이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212-35400 We 35, Band 1

담당자 / 기관_ 외무부 기획실 '독일통일' 프로젝트 그룹 에라트 계장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기획실 독일통일 프로젝트 그룹에서 평화조약과 관련하여 개최한 내부회의에서 보고된 문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보고에서 에라트 계장은 먼저 그때까지의 모든 서독정부에서 독일문제를 미해결 문제로 두었다는 점을 앞서 확인하였다. 이 점은 수많은 문서들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특히 국경문제나 전후 배상문제가 평화협정의 체결 시까지 미루어진 것으로도 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역대 서독정부들이 평화조약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였던 것은 단지 독일문제를 미해결 문제로 두기 위한 목적의 수단에 불과했다.

서독정부는 현존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평화조약 체결보다 헬싱키협정 회담이나 현재 진전 중인 유럽평화규약(Europäische Friedensordnung)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소련의 평화조약에 대한 입장은 전후 수 차례 변화했다. 폴란드와 최근에는 유고슬라비아도 전후 배상 요구를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폴란드는 1953년에 이를 포기했던 바 있다.

서독 외무부는 서독이 평화조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평화조약은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전쟁상태의 종료, 정상관계의 복구 그리고 안정적인 안보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들은 현재 이미 다른 방식을 통해 성취된 상태이다.

서독 외무부는 전후 배상 문제 역시 종결된 것이라고 보았다. 전쟁 상태는 실제로 또 법적 으로 이미 오래 전에 종료되었다. 외무부는 전승 4개국의 권한의 소멸에 대한 '6개국'의 성명이 통일에 맞추어 발표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외무부는 또한 전승 4개국이 서로 간에 이를 규정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선거 이후 동·서독정부가 공동으로 폴란드와의 국경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폴란드 측의 전후 배상요구 문제는 위 성명 이전에 답해져야만 한다고 보았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39E

문서
번호 171

독일통일 과정이 헬싱키협정 정상회담 안에 통합되는 문제-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보고

1990년 2월 23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담당) 210과 소속 브란덴부르크

내용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 담당 국제정치과(210과) 과장 람바흐는 독일 통일 과정이 헬싱키협정 정상회담 안에 통합되는 문제를 의제로 1990년 2월 22일에 외무부에서 처음 열린 회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헬싱키협정의 틀 안에서의 독일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위해 소련은 포츠담의정서에 근거해 독일 측에서 평화 위협 금지, 나치즘, 반유대주의 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서독 측은 독일을 별도로 취급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화 위협 금지, 나치즘, 반유대주의 등의 보장과 같은 표현이 모든 헬싱키협정 참가국들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에 있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내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독일통일로 말미암아 혹시 모를 독일로부터 초래될 위험 요소에 대한 안보정책적 보호 장치의 중요성이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도 독일을 별도로 취급하는 것은 피하도록 해야 한다. 비핵화 지대, 생화학 및 핵무기 청정 지대 등과 같은 여러 '지대(Zone)'에 대한 구상안들이 논의되기도 했다.

국경문제와 관련해서는 폴란드가 독일-폴란드 간 국경조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내용을 인지하는 것만으로서 혹은 동·서독의 양 국회의 성명을 헬싱키협정 참가국들이 인지하는 것으로서 이를 충분한 조치로서 간주하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39 E

문서
번호 172

폴란드 서부 국경 그리고 다른 중·동유럽 내 국경들-서독 외무부 ‘독일통일’ 실무단 회의 내용

1990년 2월 23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독일통일’ 실무단; 외무부 법무국 (일반 국제법 담당) 500과 과
장 대리 퇴쉬너

내용

이 문서는 1990년 2월 23일에 서독 외무부 ‘독일통일’ 실무단이 폴란드 서부 국경 그리고 다른 동유럽 내 국경들에 대해 논의한 회의보고서이다. 이 회의에서 외무부 법무국 일반 국제법 담당과의 퇴쉬너가 폴란드와 소련 측에서 폴란드 서부 국경의 인정을 요구한다는 점을 녹음된 내용을 통해 전달하였다. 소련은 그 외에도 다른 동유럽 내 현존 국경들의 인정도 요구하였다. 동독과 서독이 이와 관련하여 오테르-나이세 강 경계인 현 폴란드의 서부 국경을 인정한다는 동일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폴란드의 요구대로 공동성명을 두 독일국가가 폴란드와 국경조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조약은 미래의 통일된 독일과 폴란드 간의 최종 협정을 통해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한편, 독일의 북부, 서부 및 남부 국경에는 획정과 관련한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과 체코슬로바키아 간의 국경의 경우, 이는 1973년 12월 11일의 프라하조약 및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 간의 1967년 3월 17일자 조약에 의해 구속력 있게 논의가 종결된 바 있다.

이하 문서에는 소련과 폴란드 간의 국경 획정 문제 등이 추가적으로 논의되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39 E

문서
번호 173

서독 외무부 '독일통일' 실무단-외무부 업무 분야에 있어서 동·서독 간의 균등화에 대한 동독 측과의 논의-군축 및 군비 통제 담당 연방 부서(외무부 2A 분과)의 제안

1990년 2월 23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2A 분과(군축 및 군비 통제 담당 연방관)

내용_

이 문서는 외무부 '독일통일' 실무단이 외무부 업무 분야에 있어서 동·서독 간의 균등화에 대한 동독 측과의 논의를 준비하면서, 그 다음과 같은 논의 쟁점 및 제안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핵무기-재래식 전력의 군비 통제; 유럽 내 재래식 전력 조약(유럽통상전력조약, VKSE);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비엔나문서(Wiener Dokument 2011 der Verhandlungen über vertrauens-und sicherheitsbildende Maßnahmen, VVSBM/ WD 11)-유엔 군축 부문-제네바 군축회의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39 E

담당자 / 기관 연방 수상 헬무트 콜; 수상청 (외교 및 내독 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국장 겸 수상청 차관보 텔착; 수상청;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 미국 국무 장관 베이커

내용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 방문 중에 연방 수상 헬무트 콜은 부시 대통령과 독일통일 과정의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콜 수상은 미국 측에게 소련에 입장을 밝혀준 점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서독과 미국 간의 우호 관계가 특히 중요하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동유럽과 소련 내의 변화가 고무적이라고 언급하였다.

독일통일을 향해 진행되는 변화들이 극적이며, 아무도 그렇게 동독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독 이탈주민 문제와 경제붕괴는 현재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화폐통합 및 경제공동체를 제의했다고 콜 수상은 설명했다. 동독 선거 이후에는 이 지역에서 연방주들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중요하고, 폴란드와의 국경 문제가 실제로 문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콜 수상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많게는 110개 국가가 관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하였다. 더욱이 서독은 이미 충분한 전후 배상금도 지불하였다고 못박았다. 그는 2+4회담 협상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2+4회담 협상이 연내로 종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독일문제를 1990년 11월 파리의 헬싱키협정 정상회담으로 연기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파리의 정상회담에서 2+4회담에서 내려진 결론을 동의하는 방식으로 수용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콜 수상은 언급하였다. 베이커 국무장관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는 독일이 나토에 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일부 경과 규정들이 필요할 것인데, 38만 명에 달하는 주둔 소련군에 대한 경과 규정이 바로 그런 예라고 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유럽의 미래에 있어 미국과 독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그는 유럽 내 동맹국들 간의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Bundesarchiv, BArch/BK, 21-30100 (56) Ge 28 (VS) Band 80, Bl. 113-138

문서
번호 175

독일통일에 대한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과 초썩 모스크바 주재 폴란드
대사의 모스크바 회담-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의 보고

1990년 2월 24일

담당자 / 기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초썩 모스크바 주재 폴란드 대사; 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 정치국장 요아힘 폰 아르님

내용

이 문서는 소련 주재 서독 대사가 보낸 전문으로 신임 모스크바 주재 폴란드 대사 초썩이 독일통일 및 그와 연관된 협상에 폴란드가 참가하는 문제에 관한 내용이 담긴 마조비에츠키 폴란드 외무장관의 서한을 소련 지도부에 전달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폴란드 측 요구사항들에 대해 이해를 표하면서, 특히 서독 내에 폴란드 서부 국경을 문제시하는 일부 의견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고 전했다. 소련은 폴란드가 3개 서방 전승국 및 서독과 동독 간 협상에 있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확인해 주었다고 하였다.

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 정치국장 요아힘 폰 아르님은 소련은 국경선 확정 문제가 소련의 서방 국경에도 적용될 수 있기에 자신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간주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에 있어 폴란드 국경문제는 국경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의 개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파악되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3 E



문서
번호 176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의 독일통일 관련 입장에 대한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회고

1990년 2월 25일

담당자 / 기관 _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 나토; 유럽평의회;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마하일 고르바초프; 연방 수상 헬무트 콜;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 이탈리아 총리 줄리오 안드레오타;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

내용

이 문서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회고로 독일통일에 대한 대처 영국 수상의 입장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대처 영국 수상은 처음에는 독일통일에 대해 발언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보기에 독일통일의 시점을 늦추려는 전술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1990년 1월 24일이 되어서야 대처 영국 수상이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이러한 입장 전환은 역사적 사건들의 전개에 대처 영국 수상이 압도되어 독일통일에 찬성하도록 이끌어진 데에 기인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입장 전환 이후 대처 영국 수상은 독일통일 과정을 진두지휘하고자 시도했으며 자신이 홀로 고립된 채 통일을 위해 싸웠노라고 주장하였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는 이를 대처 영국 수상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묘사하였다.

출처 _ Mitterrand, François. 1996. De l'Allemagne. De la France. Paris: Odile Jacob. S. 39-44.

담당자 / 기관_ 런던 주재 서독 대사 폰 리히트호펜

내용_

이 문서는 런던 주재 서독 대사 폰 리히트호펜이 독일문제에 대한 영국 측 입장에 대해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처 영국 수상은 전통적 안보 사고에 갖힌 강한 자존심을 지닌 인물로, 새로운 목표 설정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그녀는 독일통일이 우려스러운 일이기에 매우 조심스럽게 또 모든 인근 국가들의 참여 하에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기본적 생각은 영국 외무장관 허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달 간 서독과 영국 간의 관계에 부담을 주었다. 하지만 런던 주재 서독 대사 폰 리히트호펜은 대처 영국 수상의 입장과 영국의 입장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비록 대처 영국 수상이 여전히 영국의 외교정책을 결정하고는 있지만, 그에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정치인들 및 공공에 있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의 평가이다.

최근 대처 영국 수상은 독일통일이 유럽공동체에 대해 끼칠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바 있다. 그녀는 동독이 유럽공동체에 자동가입하는 것이 전제되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또한 서독이 통일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통일독일이 유럽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더욱 더 유럽연합에 반대의 입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영국 외무장관 허드는 이러한 입장과 거리를 두었는데, 즉 그는 영국 하원에서 분단이 곧 극복될 것이라는 점과 2+4협상 형식에 대한 만족스러움에 대해 기뻐한다고 표현한 바가 있다.

폰 리히트호펜 대사는 서독이 확고하게 유럽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가장 잘 또 장기에 걸쳐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대처 영국 수상은 연방 수상 헬무트 콜의 10개항 계획 발표에 대해 자신에게 사전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실망했다”라고 표현하였다. 그래서 그는 연방 수상이 런던을 짧게 방문하는 것이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제안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051 E

문서
번호 178

통일과정에 대한 동독의 1990년 2월 23일자 비망록-서독 외무부 21실의 분석
1990년 2월 27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부; 서독 연방 외무부 21실 회의 실장; 연방 외무장관 겐서

내용_

서독 연방 외무부 21실 회의 실장은 이 문서의 부록으로 포함된 동독 외무부의 ‘독일통일의 전 유럽통합 과정 내 정초(zur Einbettung der Vereinigung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in den gesamteuropäischen Einigungsprozess)’에 대한 1990년 2월 23일자 비망록을 분석해 겐서 서독 외무장관에 보고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동독정부는 제작된 비망록을 조만간 헬싱키협정 회원국 전체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은 이에 대한 분석을 3개 서방 전승국에 전달할 것이다. 나토에서도 그에 관한 설명이 있을 것이다.

동독의 비망록에 담긴 11개의 제안들은 모드로우 동독 총리의 노선, 즉 동독에게 새로운 ‘기사회생의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에는 ‘동·서독의 통일’을 6자 회담뿐만 아니라 헬싱키협정 그리고 인근 국가들까지 초청된 틀 안에서 다루는 방안이 들어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전술적 목표는 서독정부의 입장에 반한다. 동독은 가능한 한 다수의 국가를 깊이 연관시키고자 하는데, 이를 통해 조속한 통일에 대한 우려와 문제제기가 충분히 수면 위로 올라와서 통일과정을 늦추게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 동독 측 비망록은 안보 부문에 있어서도 통일은 새로운 유럽 안전보장체제가 수립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독 외무부와 정부는 통일과정의 속도는 새로 선출될 동독정부가 정해야 할 것이며, 대외적 측면이 결부되어 그 속도가 늦추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문서의 다음 내용에는 추가적인 대처 방안이 논의되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1 E

문서
번호 179

소련대사관과 동독 사민당 간의 접촉
1990년 초

담당자 / 기관_ 동독의 사민당 소속 홀거 자피어 의원; 주 동베를린 소련대사관 소속 제2비서 포포로프스키

내용_

2+4회담이 개시되기 전에 동독의 사민당 소속 의원 홀거 자피어는 주 동베를린 소련대사관 소속 제2비서 포포로프스키를 만났다. 이 문서는 그의 대화록이다.

포포로프스키는 안전보장 문제 관련 서독의 입장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그는 자피어 의원이 이 주제로 겐서 외무장관과 최근 가졌던 회동에 대해 질문하였다. 자피어 의원은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였다. 자피어 의원을 안심시키려는 목적으로 포포로프스키는 동독 사민당과 소련 간에 입장의 일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4협상과 관련하여 포포로프스키는 소련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포포로프스키는 동독이 협상에서 가능한 한 자신감 있는 자세로 대처한다면, 소련도 이를 지원할 것이지만, 단지 서독이 단독으로 독일을 대표하는 일이 생긴다면 협상은 ‘막다른 길에 빠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나아가 통일된 독일이 나토 회원국이 되는 일은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2

담당자 / 기관_ 유럽 경제공동체; 서독; 동독; 중·동유럽 국가들

내용_

이 문서는 포르투갈의 경제전문지에 발표된 독일통일과 유럽 경제공동체(EWG)에 관한 분석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럽경제공동체는 현재 다음과 같은 커다란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공동통화, 역내 시장, 사회적 통합 그리고 경제적인 결합이 그것이다. 동유럽지역에서의 변화 속에서 유럽 경제공동체가 더 강화될 것인지 아니면 약화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이 제기된다. 이는 서독이 앞으로 나아가갈 방향에 의해 좌우된다. 서독은 동유럽과 관련하여 독자적 노선을 취할지 아니면 유럽 경제공동체와의 공동보조 노선을 취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아직 서독이 그중 어떠한 노선을 취할지 불분명하다. 프랑스는 당연히 그중 두번째 선택지를 선호한다. 서독의 지원 없이는 유럽은 약화될 것인데, 왜냐하면 독일 없이 유럽 통화 체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서독은 유럽 경제공동체 예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서독 내의 상황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극우세력이 10 퍼센트의 득표율을 달성했다. 그로부터 기인한 압력 때문에 연방정부가 독자 노선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비록 유럽 통화 체제가 영국 파운드 없이도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결합을 위해서는 서독이 필요하다. 포르투갈의 경우 수출, 재정적 지원 및 이민 관련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중기적으로 동유럽 국가들의 강화가 포르투갈의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동유럽의 성장이 유럽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포르투갈은 어떠한 경우라도 재정적 지원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의 이민자들이 유입 될 것이다.

출처_ Da Silva Lopes, José. 1990. Alemães condicionam futuro da CEE. In: Cadernos de Economia. Januar/März 1990. Nr. 10. 3. Jahrgang. S. 25-26.

문서
번호 181

유럽공동체, 동유럽 그리고 통일
1990년 3월 1일

담당자 / 기관 연방 수상 헬무트 콜; 유럽위원회 의장 자끄 들로르; 프랑스 외무장관 롤랑 뒤마;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연방 대통령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내용

이 문서는 프랑스의 뢰로프 영 포마시옹(L'Europe en formation)지가 유럽공동체가 동구권 국가들의 개혁 움직임 및 앞으로 다가온 독일통일을 염두에 두고 자체 개혁 역시 수행할 수 있을지 질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들 개혁들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서 유럽의회는 12월에 개최 예정인 유럽연합 경제통화동맹의 정부 간 회의상의 일정을 확대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다. 무엇보다 유럽연합을 경제통화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확한 시간적 계획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이 신문은 강조하고 있다. 유럽위원회가 더 강화되어야 하며 유럽의회가 더 많은 공동 결정권 및 통제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논지이다. 유럽공동체가 미래에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공동체와 빨리 거리를 둘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출처 Le rendez-vous de Dublin. In: L'Europe en formation. Frühjahr 1990. Nr. 277. S. 3-5.

문서
번호 182

통일과 전후배상 문제 1990년 3월 1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법무국 (전후 문제-군대 주둔, 외국자산, 외채, 보상, 서독영토 범위 등의 전쟁 및 점령으로 비롯된 문제 담당) 503과 과장 괴츠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25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후배상 문제를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서독에서는 국제법적 현실에서 광범위한 의미의 전후배상 개념이 통용되고 있다는 점을 국제법적인 기초적 배경으로 설명하였다. 한 국가가 전후배상 요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통상 그 국민의 요구권의 포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한다. 전후배상의 의무는 전쟁 당시의 행위로 인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약을 통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다수의 국가들은 독일의 전후배상에 대해 오래 전에 이미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더욱이 서독은 전후배상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나치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배상의무를 계속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강조하였다. 전후배상에 있어서도 균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독 외무부 법무국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다양한 국가들이 통일을 전후배상의 문제와 결부시킬 것도 예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해 '통일과 결부된 최종 배상금의 지불', 예를 들어 하나의 국제기구에 전액을 단일 지불하는 방식 등을 통해 서독정부의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동독에 대해서 전후배상 문제는 종결된 상태이며, 그것은 서독에도 해당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39E

독일통일 그리고 동독의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그룹 이탈의 영향-서독
외무부 (유럽공동체, 대외 관계, 유럽자유무역지대, 공동 무역정책, GATT 등 담
당) 411과 중간보고

1990년 3월 1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유럽공동체, 대외 관계, 유럽자유무역지대, 공동 무역정책,
GATT 등 담당) 411과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가 통일 이후 동독이 코메콘(COMECON)을 탈퇴 할 경우 가져올
영향에 대해 예측해 본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동독이 코메콘의 다른 회원국과 맺고 있는 경제관계는 다양하다. 그것은 단기적,
장기적 혹은 무기한적인 협약들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들 중 몇몇 협약들은 단지 정
치적 의무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중 일부에 불과
하다. 일반적으로 동독은 산업자원 및 에너지를 수입하였다. 수출품은 투자상품, 기계설
비 및 선박 등이었다.

동독의 코메콘 이탈 그리고 독일의 통일은 동독의 기존 각종 의무사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이 계속 나온다. 소련은 앞으로도 다양한 원자재를 동독에 수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고르바초프는 동독이 자신의 권리 및 의무
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국제법적으로 보면 기존의 무역협정들의 효력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영 사업체
들의 원자재 등의 공급 및 인수에 대한 합의들의 경우,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국제법의 적
용을 받는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들에 대해 일치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추가적
인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동독과 코메콘 간의 무역 상황에 대한 더 정확한 자료가 시급하게 요청
된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39 E

‘6개국’ 협상에 있어 소련 측 입장 및 그 입장의 배경-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의
보고

1990년 3월 1일

담당자 / 기관_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클라우스 블레히

내용_

이 문서는 소련 주재 서독 대사가 작성한 보고서로 소련의 정부 각 기관 및 기구들에서는 현재 독일통일이 가져올 중·장기적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련의 독일정책은 대내외적 요소들의 상호 연관 속에서 결정된다. 동독을 서방 측에 내주게 될 것이라는 소련주민들의 두려움과 보수파의 비판 때문에 소련 지도부는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만 한다. 소련 지도부는 지금 ‘압력에 쉽게 반응하는’ 양상을 보이며, 통치 행위를 하면서도 그 발언에 있어 특별한 ‘언어적 지참’을 지키고자 노력한다.

유럽 및 독일과 관련한 구상과 실행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변함없이 소련의 외무부이다. 그러나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국제부도 장기적이고 역동적인 정책을 수립 후 이에 따르고 있다.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독일통일을 계기로 소련이 전 유럽적 통합과정에 연계될 수 있기를 의도하고 바라고 있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이 생각을 독일통일이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표현으로 대변하였다. 또 다른 소련 내 그룹은 모스크바에 위치한 보고모로프연구소, IMEMO, 미국 및 캐나다 연구소와 같은 학술 연구기관들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독일연방의 이해에 상응하는 진보적인 내용의 분석을 하고 있다.

이하에는 2+4협상과 관련한 소련 측의 입장이 정리되었다. 원칙적으로 독일통일에 대한 동의 자체에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독이 기본법 23조에 따라 서독에 가입하는 것은 소련 국내 정치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소련은 협상에서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경우에 따라 평화조약 논의를 고수할 수 있다는 것이 그중 하나이다. 하지만 소련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는 통일독일의 지위 및 안보 문제이다. 그에 있어 서방이 전 유럽적 안보체제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에 동의할 것인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폴란드 국경문제와 관련해서는 독일이 통일 이전에 그와 관련된 보장을 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7 E

1990년 3월 5일

담당자 / 기관_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동독·폴란드 실무단 단장 코프텔제프; 모스
크바 주재 서독 대사 클라우스 블레히

내용_

이 문서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동독·폴란드 실무단 단장 코프텔제프와의 면담에 대해 소련 주재 서독 대사가 작성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코프텔제프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서독의 기본법 23조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 소련은 전승국으로서의 유보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기본법 23조에 따라 동독 안에 신설될 연방주들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것도, 또는 동독 자체가 서독에 가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한편으로는 소련은 동독의 자기 해체의 경우 발언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독의 헌법은 그러한 방식의 통일에 반하기 때문이다. 동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동독이 맺었던 국제조약들도 그와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서는 안된다. 경제·화폐통합은 동독에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완결되어야 한다. 그에 반해 헌법적인 통일로 나아가는 것은 더 나중에 행해져야 한다. 그 외에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기본법 23조와 116조는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한편 소련은 통일독일의 중립화 요구를 철회한다. 그러나 '만일 동독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토의 일부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나토에 대한 기존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하지만 만일 나토가 그의 역할을 '군사적 성격에서' 더 정치적인 기구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앞서의 '통일독일이 나토에 속하게 된다'는 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 다른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들도 나토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평화조약과 관련하여 코프텔제프 단장은 이 조약에 현 서독 및 이후 통일된 독일연방공화국에 무리한 요구가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단지 몇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여기에는 국경문제, 독일 안보정책, 군비의 수준 그리고 기존의 국제법적 의무들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의 문제 등이 포함된다. 소련은 전후배상을 의제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프텔제프 단장은 향후 동독정부의 실행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했다. 협상에 있어 신뢰할 만한 상대방이 필요한 것인데, 필요할 경우 독일 연방정부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3 E

문서
번호 186

서독정부 ‘독일통일’ 내각위원회-독일통일이 달성될 경우 대외적·안보 정책적 측면들에 대한 외무부의 중간 보고

1990년 3월 5일

담당자 / 기관 서독정부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겐서 서독 외무장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 수상청; 슈톨텐베르크 서독 국방부장관; 그 외 연방장관들 및 정부 관료

내용

이 문서는 겐서 외무장관이 서독 연방정부의 ‘독일통일’ 내각위원회에서 독일통일의 실현과 관련하여 대외적·안보 정책적 측면들에 대해 발언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 특히 소련은 갑자기 통일이 자신의 개입 전에 다 진행되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서독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오기를 바라지 않는다. 민감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독일통일의 대외적 측면들은 대내적, 즉 동·서독 간의 상호적 과정 전에 해결되어야 한다. 독일통일의 대외적 측면들은 2+4회담에서 헬싱키협정 정상회담 이전까지 논의되고 또 그를 통해 ‘축복을 받으며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대내적 통일’과 관련하여 기본법 23조에 따른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을 선호한다. 그에 있어 중요한 것은 유럽공동체와 관련하여 독일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기본법 23조에 따른 통일의 경우 유럽공동체조약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그에 반해 기본법 146조에 따라 통일이 될 경우에는 그 때문에 한번에 파악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다.

그에 이어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은 1990년 2월 28일의 런던에서 열린 3개 서방 전승국 정치국장급 회담 내용 및 1990년 3월 2일 아다미사힌 소련 외무부차관과의 제네바회담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안보, 국경 및 전승 4개국 권한 해소라는 3개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3개 서방 전승국들은 나토조약 5조 및 6조의 보호 규정이 현 동독영토에 적용될 것인지의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 외 폴란드가 공식적으로 2+4회담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배제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카스트롭 국장은 평화조약과 관련해서 그에 반하는 분명한 법적, 정치적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이하 문서에는 2+4회담 일정 및 기본법 23조 관련 각 소관 부처 입장 등의 상세 내용이 포함)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39 E

1990년 3월 6일

담당자 / 기관 수상청; 수상청 (외교 및 내독 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국장 겸 수상청 차관보 텔치; 연방 수상 콜

내용

텔치 국장은 곧 개최될 2+4회담에 대한 영국 대사의 서신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정부에게 앞으로의 유럽의 안전보장 합의는 중요한 주제이다. 2+4회담 이전에 서방 국가들은 소련에 대한 입장을 협의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텔치 국장에게, 특히 다음 내용을 포함한 참고 사항 및 질문들의 리스트가 전달되었다.

- 영국은 콜 수상이 구동독을 비군사화하지 않겠다고 한 성명을 환영한다.
- 상기 지역에 나토조약의 5조 및 6조 조항 자동군사개입 또는 집단적 자기방위도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 겐서 외무장관과 슈톨텐베르크 국방부장관이 성명에서 독일연방군 전력을 위 지역에 주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한 점과 관련하여, 그렇다면 이 지역을 어떻게 방위할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그러한 상황이 될 경우 어떻게 이 지역의 방위를 조직할 수 있을 것인가?
- 독일연방 군대를 베를린에서 주둔시키는 것은 가능한가?

이러한 문제들이 2일 후 나토의 회의에서 콜 수상과의 대화에서 제기될 것이다.

출처 Bundesarchiv, BArch/BK, 222-35400 De 7 Band 2



문서 번호 188 독일 연방의회 외교위원회 64차 회의-독일문제-서독 외무부 214분과 보고
1990년 3월 7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담당) 214분과 과장 대리 쉬뎀브겐스

내용_

이 문서는 겐서 서독 외무장관이 서독 연방의회 외교위원회 64차 회의에서 통일과정에 대한 협의 및 그와 관련된 외무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그는 1990년 2월 12-14일 간의 오타와 공동 회담에서 '2+4회담'이라는 안을 관철시킬 수 있었는데, 이는 또한 특히 소련 측이 현재의 동독 지도부의 참가와 2+4회담이 1990년 3월 18일 전에 개시될 것을 주장했다 때문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동·서독의 '2'가 '4'개 강대국과 통일과정의 논의를 하는 것을 다른 '중소국'에 대해 납득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폴란드가 2+4협상에 참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했다.

겐서 외무장관은 동독에서 3월 18일 선거 이후 신속하게 정부가 구성되어 대내외적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그와 관련하여 동·서독 정부 및 양 국회 간에 긴밀한 연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하 문서에는 독일 연방의회 외교위원회의 각 참가 위원들의 발언 및 그에 대한 겐서 외무장관 및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의 답변이 포함되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1990년 3월 7일 (서독) 연방의회 군축 및 군비 통제위원회에서의 동독 외무부와 국방부의 발언-서독 외무부 201과의 보고

1990년 3월 8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연방의회 군축 및 군비 통제위원회; 동독 외무부 대사 빌란트; 동독 국방부 한스 베르너 다임 소장; 서독 외무부 (나토 및 방위 담당) 201과 과장 대리 그뢰닝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연방의회 군축 및 군비 통제위원회에서 동독 외무부 대사 빌란트와 동독 국방부 한스 베르너 다임 소장이 동독정부를 대표하여 동독의 안전보장정책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 발표에서 두 대표는 동독 인민군의 존속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었다.

동독 외무부 대사 빌란트: 군비 통제, 군축 및 유럽 내 안전보장체제의 진전은 독일통일 및 유럽 내 상호접근 과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동독에서 병역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동독 인민군은 바르샤바조약기구에서 탈퇴하고 서방 전력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과정에서 서독 연방군 역시 변화가 되어야 한다. 통일독일의 동맹 가맹에 관련해서는 다음의 방안들이 가능할 것이다: 나토와 바르샤바조약 양자를 모두 탈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보다는 동독에서 전력의 과도기를 갖거나, 혹은 동독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독 국방부 한스 베르너 다임 소장은 동독 인민군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동독은 오는 2-3년 내에 그 병력을 1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다. 동독 주둔 소련군 병력은 19만 5,000명으로 감축되어야 한다. 그는 통일독일을 비군사화하거나 중립화시킨다는 것은 '유토피아적'인 생각으로 간주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2 E



문서
번호 190

2+4회담의 일환으로 개최된 연방정부 및 동독정부 대표자 간 동베를린 회담
1990년 3월 9일

담당자 / 기관_ 수상청; (독일정책 담당) 20국 국장 뒤이스베르크; 연방정부 및 동독정부 대표자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와 동독정부 대표자들이 1990년 3월 14일 본에서 열린 2+4회담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동베를린에서 가졌던 회의에 대한 보고서이다. 수상청 독일정책 담당 20국 국장 뒤이스베르크 박사는 이 회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회담의 절차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동독은 2+4회담의 틀을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국가들을 연루시키고자 하였다. 다음의 4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논의의 대상이었다. 국경문제, 군사정책적 상황, 전승 4개국의 권한 종료 및 평화협정이 그것이다. 서독정부는 정치적, 법적인 이유 때문에 평화협정을 거부하였다. 서독정부는 그 대신 전승 4개국의 권리가 중국적으로 종료되는 조치를 희망하였다.

동독은 앞으로 계속 이번과 같은 형식의 회동에서 재산권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서독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거부하였다.

뒤이스베르크 국장은 두 가지 이유, 즉 한편으로는 통일에 대한 헌법적 고려사항 및 재산권 문제 등을 포함한 사안의 전문성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부의 관련 하에 외교정책 관련 회담들을 더 잘 조율하는 문제 등을 포함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콜 수상이 가능한 한 2+4회담의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0244, 221-34900 Wi 14 Band 1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부 외무차관 크라바취;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룹

내용_

이 문서는 '6자 회담' 개최 이전에 동독 외무차관 크라바취와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룹이 베를린에서 비공개로 입장 타진을 위해 만난 것에 대한 보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크라바취 차관은 기본법 23조에 따른 통일은 합병과 유사하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하였다. 카스트룹 국장은 통일의 완성 이전에 통일의 외적 요소들이 명확히 확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는 동독에서 기본법 23조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독의 선거 이후 동등한 권리 하에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 외에 2+4회담의 진행 절차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독정부는 이에 대해 3개 서방 전승국과 논의할 것이다. 동독은 소련 측에 영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어느 정도로 폴란드가 2+4회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지가 논의되었다. 그에 있어 양자는 폴란드는 단지 폴란드와 관련되는 국경선 확정 문제를 포함한 논의 쟁점에 대해서만 참여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1990년 3월 3일에 폴란드 서부 국경과 관련한 연방의회 결의가 존재한다.

카스트룹 국장은 통일된 독일은 서방 측 동맹국으로 남아야 하는데, 단 그 관련 시설들이 현재 동독영역 내로 이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서독과 동독은 군축을 위한 신속한 협상을 원한다. 그에 있어 크라바취 외무차관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전 독일이 생화학 및 핵무기 안전 지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4회담 종료 시점에 전승 4개국의 권리가 '종료되었다'라는 내용의 조치가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192

서독 연방 외무부에 대한 연방 재무부의 서신-1990년 3월 13일 예정 베를린 개최
독-독 간 경제·통화·공동체 준비전문가 위원회를 위한 연방장관들 간 기본법 23
조 관련 합의문

1990년 3월 10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연방 재무부장관 슈미트-블리이프토로이; 연방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
트롭 국장; 연방 내무부; 연방 법무부; 연방 경제부; 연방 노동·사회질서부; 연방 내독부

내용

서독 연방 재무부는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에게 ‘기본법 23조와 기본법
의 헌법적 체계’라는 제목의 연방장관들 간 합의문을 전달하고, 이를 1990년 3월 13일에
예정된 베를린 개최 독-독 간 경제·통화·공동체 준비전문가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
였다. 이 합의문에서는 다음의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1. 기본법 23조 2항에 따른 독일연방 가입 절차
2.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주의적 질서의 의미. A) 입법권 B) 행정권 C) 사법권 D) 그 외 연
방주의적 체계 내에서 연방주들의 영향력 행사 방식들 E) 기초지역단체의 자치행정권
3. 가입과 관련하여 기본법적 사회국가 규정이 지닌 의미
4. 각 연방주의 자립성 확보를 위한 재정·세법적 일반규정의 의미
5. 동독이 기본법적 재정체제에 귀속될 경우 동독에 제공 가능한 재정적·경제적 가능성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 E

담당자 / 기관_ 수상청: 수상청 (외무부, 경제협력부 담당) 21국 국장 하르트만;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내용_

하르트만 국장은 콜 연방 수상에게 폴란드 서부 국경에 대한 폴란드와 소련 및 서방의 주요 동맹국들의 입장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폴란드: 폴란드 총리는 통일 이전에 두 독일국가 간에 평화조약이 준비된 후 통일정부가 이에 서명하는 것을 원한다. 그 외에 폴란드는 미래 독일의 근린 국가들의 안전보장과 관련된다는 한에 있어, 독일의 근린 국가들 간의 회담 및 6자회담에 참여하고자 한다. 독일 연방의회는 1990년 3월 8일 결의에서 바르샤바조약 및 오데르-나이세 강 국경선이 논의되지 않은 점이 비판을 받았다. 그 외에도 독일통일은 유럽통합 및 근린 국가들의 안전보장과 보조를 맞추며 이루어져야 한다(각 국가의 군사력에 대한 확정이 필요하다).

프랑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 이전에 국제법적 조치로서 국경의 불가침성 선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폴란드를 '6자회담의 일원'으로 수용하는 데 반대하였다.

영국의 입장은 폴란드의 입장과 동일하였다.

소련은 독일통일과 관련해 매우 큰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은 협상에서 투표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폴란드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거명되지는 않았다. 종전 후 국경이 평화조약을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폴란드 국경의 불가침성을 강조하면서, 폴란드의 이해를 고려하기 위해 폭넓게 자문을 거치겠다고 발언하였다.

하르트만 국장은 다음과 같이 정치적 상황을 평가하였다. 폴란드와의 국경문제는 국제적으로 폴란드 측 입장에 대한 강한 공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과정에 난관이 되거나 다른 열강들에 의해 도구화될 수 있다.

하르트만 국장은 연방 수상이 공세적인 방식을 취할 것을 제언하였다. 2+4회담에 폴란드를 포함시키는 방안은 절대적으로 거부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하지만 조속하게 폴란드와 직접 협상을 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212-35400 De 39 NA 2 Band 2



문서
번호 194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산하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회의
1990년 3월 13일

담당자 / 기관_ 수상청; 국내정치 기본문제 실무단; 연방 내무부장관 쇼이블레

내용_

겐서 외무장관은 서독의 미래 전력이 2+4회담의 협상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슈톨텐베르크 국방부장관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이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주제들은 ‘독일통일’ 내각위원회가 아닌 연방 안전보장자문위원회(Bundessicherheitsrat)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겐서 외무장관은 2+4회담 준비를 위한 동독과의 회담 결과를 전달하였다. 동독 측에서는 다음의 질문들이 회담의 내용으로 상정되었다: 전승 4개국의 권한, 국경문제, 소유권 관계 문제 그리고 동독은 기본법 23조에 의거한 통일을 반대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폴란드는 국경문제와 같이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는 경우에만 회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전담할 하위 실무 그룹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하위 실무 그룹은 평화조약과 무관하게 전승 4개국의 권한 종료의 형식 문제, 베를린 문제, 동독 주둔 소련군 문제 및 군대주둔협정의 신규 제정 문제들을 전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련 및 여타 국가들에 대한 동독의 경제적 의무를 서독이 물려 받는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MI, GE-020 052-2/1 Band 1-Aktenzeichen G1-0020 008-AA/1

‘독일통일’ 내각위원회-‘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산하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회의-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제정치과(210과) 보고

1990년 3월 13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과장 람바흐; 외무부 21실 회의 실장; 연방 외무장관 겐서; 서독 총리청 (외교 및 내독 관
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텔칙 국장; 서독 총리청 (독일정책 담당) 20국 국
장 뒤이스베르크; 연방 국방부장관 슈톨텐베르크; 연방 법무부장관 엔겔하르트; 연방 내
독부장관 빌름스; 연방 재무부; 연방 경제부; 연방 내무부

내용

이 문서는 서독정부 ‘독일통일’ 내각위원회에서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관련 주제들에
대해 회의한 것에 대한 외무부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겐서 외무부장관과 슈톨텐베르크 국방부장관은 통일독일의 전력은 2+4협상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 대신 이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비엔나 군축협상을 위
해 제안들이 준비되고 3개 서방 전승국과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외무부 21실의 회의 실장은 정치국 카스트롭 국장이 특히 2+4회담 관련 조율을 위해 동
독 외무부와 가진 회담들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2+4회담은 가능한 한 항상
독일영토에서 동·서독지역을 순서대로 오가면서 개최되어야 한다. 전승 4개국의 권한 및 책
임의 소멸과 관련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 폴란드 서부 국경문제와 관련해서 동독 측
은 폴란드 측 입장에, 안보정책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련 측 입장에 동조하였다. 동독 측
은 또한 포츠담협정을 연관지으며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2+4협상에서 논의하고자 하였
는데,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동독 측은 일반적으로
독일통일을 점진적으로 달성하자는 의견이었는데, 그에 있어 헬싱키협정을 그에 결부시키고
자 하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된 동독 측의 1990년 2월 23일자 비망록이 헬싱키협정 회원
국들에 전달되었던 바 있다. 동독 측은 기본법 23조에 따른 가입 방식을 바라지 않았다.

겐서 서독 외무장관은 서독정부는 동독과의 협상에서 통일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외교정책적 분야에서 양측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헬싱키협정 정상회담
이전에 2+4협상을 마치는 것은 동독 지도부의 ‘지연 전술’ 때문에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서독 수상청 뒤이스베르크 국장에 따르면 동독 외무부의 중간 관료들은 그보다는 “용통
성을 보인다”.

겐서 외무부 장관은 서독정부는 평화조약의 체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서독 총리청 텔칙 국장은 연방 수상 헬무트 콜과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간에 동독의 소련
에 대한 경제적인 의무들을 통일독일이 인계받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던 합의 내용을 상
기시켰다. 서독 외무부 법무국 국장 외스터헬트는 그에 대한 실태 파악은 동독 측의 협조
가 없이는 어렵다고 하였다.

연방 재무부를 대표한 포스는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에 대한 콜 수상의 약속은 단지 국영



기업체를 제외한 국가 간 의무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혹시 모를 소련과 동독 간의 협상이 있기 전에 ‘실제로 존재하는 의무 사항들’에 대해 확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하 동 회의 상세 논의 및 그 결과에 대한 외무부의 요약)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문서 번호 196 본에서 열린 2+4회담(최초의 실무자급 회담)-동독 외무부 보고
1990년 3월 14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부 외무차관 크라바츨;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롭; 미국 참사관 조엘락; 미국 국장 라이스; 소련 외무부차관 아다미친; 소련 대사 크위진스키; 영국 정치국장 웨스턴; 프랑스 정치국장 뒤푸크 등

내용_

이 문서는 6자회담에 대한 동독 외무부의 보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참가국 정부의 대표들은 회담의 절차 및 일정 중 논의할 주제에 대해 토의하였다. (1) (폴란드와 독일 간) 국경문제 (2) 안전보장 (3) 베를린 문제 (4) 전승 4개국의 권한 및 책임이 그것이다. 동독은 그 밖에도 다음의 주제들을 논의하길 원했다. 두 독일국가의 일체화는 전 유럽적 변화와 보조를 맞추며 이루어져야 함; 동독 내 소유권 관계의 보호. 예를 들어 1945-1946년의 나치 및 전범의 재산권 박탈 및 농지개혁; 양자 간 및 다자간 부문에 있어 동독과 서독의 국제 조약상의 의무 등이 그것이다. 이 부분에서 소련은 동독을 지지하였다. 3개 서방 전승국과 서독은 논의 범위의 확대에 반대했다. 모든 참여국들은 실무자급회담이 앞으로 동·서독에서 번갈아 개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음 회의는 1990년 4월에 동독의 새 정부 구성이 이루어진 이후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6개국의 외무장관 간의 첫 회담이 개최된다. 서독은 그 개최 장소로 본을 제안했다. 모든 참여국들은 폴란드와 관련되는 국경 확정 문제를 포함한 논의 쟁점이 있을 시 항상 폴란드를 회담에 초청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소련은 평화협정을 원했다. 이와는 반대로 서독과 3개 서방 전승국은 ‘최종규정의 도입’에 찬성했다. 실무자급 회담 상의 결정은 합의(Kon-sens) 원칙을 따른다. 각 참여국은 중요한 필요가 있을 때 실무자급 회담을 요구할 수 있다. 1990년 3월 14일의 첫 실무자급 회담 이후 언론에 내용을 전달하지만, 질문은 받지 않는다. 외무장관들은 외무장관 간 회담 내용을 공표할 지를 스스로 결정하기로 했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과장 노이베르트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과장 노이베르트가 외무부 21실 회의 실장의 요청에 따라 독일의 통일과 관련한 소련의 안보 이익에 대해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독일 때문에 소련의 안보에 위협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독일은 공격 수단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다. 소련 지도부는 전보다 더 ‘좁게 정의된’ 안보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동유럽에서 소련군을 철수하는 것에 대해 소련 측이 위협을 느끼는 정도에 변화가 생겼음을 인식할 수 있다. 소련 지도부는 이러한 더 좁게 이해된 안보 개념에 기초하여 통일독일의 나토 회원국 지위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회원국들의 바르샤바조약기구에서의 탈퇴와 같은 변화 때문에 소련은 기존의 공격 및 반격을 위한 군사적 수단들의 일부를 상실하고 있다.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위원들은 ‘더 광의의’ 전통적 안보 개념에 따라 소련의 ‘동유럽’ 내 군사적 영향의 포기는 소련 안전보장 가능성의 축소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때문에 소련 측의 입장은 독일에 대한 중립화 요구와 나토 회원국 지위 개방의 두 가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흔히 소련의 국내 정치가 이러한 입장들을 규정하였다.

노이베르트 과장은 이 문제를 뒤집어 독일의 안보 문제를 성찰해야 한다고 하였다. 두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해답은, 독일이 유럽 내 재래식 전력 조약(유럽통상전력조약, VKSE)에 의거해 자신의 군사적 전력을 증강하는 대신 오히려 감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독일이 중립화된다고 해도 독일이 무장된 채라면 이는 독일에도, 소련에도 군사적 안정성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독일이 이와는 반대로 나토라는 집단 방위체제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관련국에 대해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8 E



문서
번호 198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헬싱키협정 유럽안보체제 안으로의 포섭-서독 외무부
(나토 및 방위 담당) 201과의 보고

1990년 3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나토 및 방위 담당) 201과 과장 드레이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의 나토 담당과 과장 드레이가 외무부 내에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서독과 동독이 기존의 두 동맹 진영에 속하게 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새로운 유럽안보체제에 관해 분석·정리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조건: 통일독일의 중립화는 수용될 수 없음, 군축협상의 진전, 유럽 내 소련 및 미국의 영향력 지속, 민족주의적 경향 및 독일을 고립시키려는 시도의 방지,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를 상위에서 포섭할 수 있는 헬싱키협정 유럽 안보 체제의 구축.

특히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 군사적인 안정보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안정, 헬싱키협정의 제도화된 통제장치를 통해 핵무기와 관련한 상호 신뢰와 투명성 제고, 형식화된 갈등조정절차(유럽사법재판소), 유럽에서의 영토 현상유지 보장

기본원칙: 모든 참가국의 평등, 유연성과 투명성, 민주적 선거권

실행되어야 할 것: 조정규정과 기구 그리고 국제법적 절차의 도입을 통한 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유럽안보협력기구 사무국의 설치, 군축통제를 위한 상호협정과 신뢰구축의 제도적 보장

현실적 결론: 동독의 선거 이후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 동서독이 서로 다른 군사동맹에 속한다는 사실이 이 과정에 방해되지 않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통일이 최종적인 목표, 독일통일이 유럽의 틀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럽의 안보구조의 확장이 조속히 시작되어야 함.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39 E

담당자 / 기관_ 서독 연방경제부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의 경제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의 일부로 유럽공동체에 포함될 때 유럽공동체법을 적용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이 유럽공동체에 포함되면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지역이 조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전환규정도 도입되어야만 한다. 전환규정의 적용기간은 경제화폐통합이 이루어진 후 최종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간이 될 것이다.

이 문서의 결론에서 언급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거나 또는 내용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유럽공동체의 법규정의 경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 다른 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대부분 단순한 기술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 유럽공동체 법규정의 대부분은 조정이 필요없겠지만 대부분 전환규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 공동체의 법규정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분야에서는 통일독일의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
- 개정과 전환규정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유럽공동체법에 근거하게 된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39E

문서
번호 200

프라하에서 열린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 외무장관 회담-프라하 주재 서독
대사의 보고

1990년 3월 17일

담당자 / 기관_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 외무장관들; 프라하 주재 서독 대사 헤르만 후버

내용_

프라하 주재 서독 대사 헤르만 후버는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 외무장관 간 회담에 대해 서독 외무부에 보고하였다. 소련 측의 기대와는 달리 동 회담에서 독일통일 과정에 대한 입장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거의 모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참가국 의견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 회담의 결과는 (체코슬로바키아 외무장관이었던) '딘스 트비어 노선'의 성공이라고 평가되었으며, 그에 있어 앞서 있었던 그와 연방 외무장관 겐서 간의 회담이 도움을 주었다. 딘스 트비어 체코슬로바키아 외무장관의 대변인인 도브로프스키에 따르면 이는 '이데올로기가 끼어들지 않고 순전히 실용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진 최초의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 간 회담이었다. 소련은 이 회담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노선을 그대도 관찰하지 못했고 다른 참가국들도 각자의 입장을 충실히 개진할 수 있었다. 이 점은 동 회담일(1990년 3월 17일)이 동독 최고인민회의 선거 직전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한편,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과 피셔 동독 외무장관은 통일독일의 나토 회원국 지위 및 기본법 23조 연방 가입규정에 따른 통일 방식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들은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 상응하는 공동 커뮤니케 작성을 이루어내지는 못했다. 이에 명시적으로 반대한 것은 헝가리,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였다. 모든 참가국들은 새로운 유럽안보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 이를 위해 독일통일이 추동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문서
번호 201

서독 외무부와 동독 외무부 공동 외교위원회의 선임-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제정치과(210과) 보고

1990년 3월 18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동독 외무부

내용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선거 이후 서독 외무부와 동독 외무부 간의 공동 외교위원회의 선임이 이루어졌다. 양국의 두 외무장관이 위원회 위원장을 함께 맡았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외무부 업무에 있어 협력할 수 있는 부문을 만드는 것이었다.

동 위원회에는 부처 내 구조에 상응하는 개별 산하그룹이 포함되었다. 개별 산하그룹은 그에 해당하는 각국의 국장이 맡았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의 교환 및 협력 분야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39 E

문서
번호 202

구동독지역을 포함하는 나토조약 적용 영역의 확대

1990년 3월 19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법무국 (일반 국제법 담당) 500과 과장 힐젠베르크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나토조약의 보호 대상이 되는 지역을 지금까지 동독영토였던 지역에까지 확대하는 것의 문제에 관해 정리한 것이다.

이 실무안은 독일통일의 달성에 있어 나토조약의 법적 측면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특히 나토조약의 회원 지위와 동 조약 5조 및 6조에 의거한 전쟁에서의 조력 의무 그리고 군사 배치 및 군사적 통합의 세 가지가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무국 산하 ‘국제법적 문제’ 담당 실무단은 나토조약 5조 및 6조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 별도의 조약 변경은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동 조항 해석에 대한 나토 회원국들의 일치된 견해를 이끄는 것으로 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98439E

문서
번호 203

겐서 연방 외무장관과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1990년 3월 22일 빈트후크 회담 논의안

1990년 3월 19일

담당자 / 기관 서독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예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과장 람바흐

내용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선거 다음날인 19일에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제정치과(210과) 과장 람바흐는 겐서 연방 외무장관과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1990년 3월 22일 빈트후크 회담 논의를 위한 준비안을 작성하였다. 동 회담의 목적은 독일통일 과정의 진행에 대한 소련 측의 불안함에 반응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특히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통일이 빠르게 진행될 것임을 보인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선거 결과; 소련의 국내 정치적 상황과 통일과정;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과 겐서 서독 외무장관 간의 앞선 1990년 3월 2-14일 중의 서신 교환 등이 그것이다.

그 외에 다음의 통일의 대내적 측면들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동독 선거 결과; 소련의 경제적 이익의 침해 없이 경제, 통화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전제 조건들을 달성하는 문제; 기본법 23조에 의한 동독의 연방 가입 문제; 두 독일 외무부 간의 조율 문제 등이 그것이다.

또한 다음의 통일의 대외적 측면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1990년 3월 14일 본에서 열린 실무자급 2+4 회담 결과; 아직 논쟁적인 주제들의 확정 (a. 국경문제 b. 정치-군사적 문제 c. 베를린 문제 d. 전승 4개국의 권한 및 책임 문제) 등이 그것이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0 E

문서
번호 204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국내 정치적 입장-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의
보고

1990년 3월 19일

담당자 / 기관_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과장 노이베르트

내용_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과장 노이베르트는 연방 외무장관 겐서에 대한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서신 교환 내용의 맥락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소련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 대한 본 보고를 작성하였다.

이는 독일의 통일에 대한 소련의 입장에 소련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소련 내에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자국에서 헌법 개혁 및 당 개혁을 추진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그에 있어 중요한 목표는 보수파의 저항을 약화시키거나 혹은 제거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수파는 소련의 중·동유럽에서의 지위를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과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에 던지고 있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이는 옳지 않다고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그 비판에 맞선 바 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1.641 E



문서
번호 205

통일독일과 소련의 동독지역에서의 소련군의 철수에 대한 협정-위킹페이퍼
1990년 3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외무부 법무국 산하 ‘국제법적 문제’ 담당 실무단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가 통일독일과 소련의 동독지역에서의 소련군의 단계적 철수문제와 관련된 협정을 준비하기 위해 작성한 실무안이다. 여기에서는 현재 동독과 서독에 주둔 중인 외국 군대에 대한 조약을 이 협정에 적용함에 있어 필수적인 내용에 대해 개관이 이루어졌다.

외무부에 따르면 동독지역에서의 소련군의 단계적 철수에 있어 2가지 안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는 부대의 주둔 및 철수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지위법상의 문제까지를 포괄하는 전체 조약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부대철수조약’과 ‘부대의 지위’에 대한 조약을 서로 분리하는 방식이다. 동 문서에는 두 방식에 대한 조약안이 포함되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79532E

1990년 3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서독정부 나토 상주 대표 플뢰츠 박사

내용_

이 문서는 나토 주재 서독 상주대표가 나토 사무총장 뵈르너와 만나서 나눈 대화에 대한 보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는 나토가 영국 및 미국 그리고 서독과 2+4회담의 맥락에서 비공개로 나토 자문단(NAC)과 자문회의를 개최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서방 측 4개국 참가자들은 그 주제로 언제 자문회의를 열지 결정하였다. 자문회의와 2+4회담 사이에 시간적으로 개최의 진행 순서를 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독일통일의 나토에 대한 영향과 관련한 쟁점 리스트는 나토 동맹 3개국 파트너가 의견교환을 통해 작성한 것으로, 비공식적이며 임시적인 성격을 띤 문서이다.

서독정부 나토 상주대표 플뢰츠는 서독정부가 자문회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독일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자문회의 개최 여부가 아니라, 이를 언제 또 무엇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할 것인지의 질문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나아가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으로 남을 것인지의 질문을 고위 나토 대표가 제기한 바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2+4협상에서 다루는 것은 비생산적일 수도 있다. 몇몇 질문들이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안보 부문 관련한 다수의 질문들은 독일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제기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나토 사무총장 뵈르너는 이 점에 있어 반드시 비밀엄수 및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 이어서 플뢰츠 대표는 쟁점 리스트에 대한 자문 절차는 절대적으로 비공식적이며 비공개적 방식으로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0 E



문서
번호 207

동독 최고인민회의 선거에 대한 헝가리 측의 입장-부다페스트 주재 동독대사관의 보고

1990년 9월 24일

담당자 / 기관_ 부다페스트 주재 동독 대사 페레스; 헝가리정부 대표 및 정치인들

내용_

이 문서는 부다페스트 주재 동독 대사 페레스가 동독 외무부에 보낸 보고서이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헝가리정부 대표 및 일반 여론이 독일(통일)문제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서독) 가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달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헝가리정부가 현재 동유럽의 '경제적, 정치적, 도덕적 위기'는 오직 '유럽으로의 개방'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헝가리 외무장관 호른은 통일독일이 나토에 남는 것이 중립화된 통일독일보다 더 작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그는 나아가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두 동맹의 통합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를 위해 우선 할 일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기구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호른 외무장관은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외무장관도 이와 관련하여 대체로 같은 의견이라고 한다. 호른 장관은 1990년 3월 17일 프라하에서 열린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의에 자신이 참석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합의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가하였다고 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R 334/09 E

1990년 3월 21일

담당자 / 기관 스쿠비셰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 나토 자문단(NAC); 서독정부 나토 상주
대표 플뢰츠 박사

내용

이 문서는 나토 주재 서독 대표가 나토 자문단(NAC)과 폴란드 외무장관 스쿠비셰프스키
의 대화에 관해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대화에서 폴란드 측이 바르샤바조약기구 및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가 해체될
것으로 전제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폴란드는 나토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폴란드가 통일된 독일이 나토 회원국으로 잔류하는 것을 지지
한다고 하였다.

스쿠비셰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이 프라하에서 열린 바
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보여준 태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전히 소련이
미소 간 경쟁 구도에 사로잡힌 채 독일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에 있어 일방적으로 이익
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고 발언하였다. 통일독일의 나토 회원국 지위 문제가 이러
한 상황을 '단면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서방 측은 소련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가능한 제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유럽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이 강화되어야 한다.

폴란드는 '안보 이익을 근거로' 독일의 중립화에 반대한다. 독일의 군사적 지위를 별개로
정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예를 들어 동독
지역의 비군사화 같은 안이 가능할 것이다. 폴란드는 그 지역에 독일-폴란드 군대나 독일-
체코 군대의 공동주둔 등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폴란드는 2+4회담 진행 때문에 비엔
나 군축협상이 지체되는 것에 반대한다.

폴란드는 소련 측의 생각처럼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정치적인 기능을 맡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폴란드, 헝가리 및 체코슬로바키아 간에는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
고 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독일문제의 해결 과정-미국 국무부 기획실 검토 사항-워싱턴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

1990년 3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미국 국무부 기획실 독일 전문가 로저 조지;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대리 파쉬케

내용_

이 문서는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가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선거 결과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반응을 정리·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동독 최고인민회의 선거 결과가 “놀라울 정도로 좋다”고 평가했다. 이는 ‘빠른 통일’에 찬성한다는 의미라고 이해했다. 동독의 기독교민주당이 강력해졌기에 통일독일의 나토 회원국 지위 유지와 관련해 ‘긴장을 풀어도’ 좋을 것이며, 2+4회담 진행도 더 간단해질 것이라고 본다. 소련에 있어 사통당-민사당(SED-PDS)의 선거 결과는 그 체면을 조금 살려주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사통당-민사당은 이제부터는 독일통일 과정에 어떠한 역할도 더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소련은 23조에 의한 가입 통일방안을 보면서 나치 독일이 행했던 ‘병합’을 연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만 한다고 보고 있다. 폴란드 서부 국경선 문제는 2+4협상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폴란드가 2+4회담에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1회로 한정하거나 필요한 최소의 회수로 제한하고, 개최 장소도 바르샤바를 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일회적인 ‘2+5’협상이 이미 합의된 독일-폴란드 간 합의의 청취 기능만을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2+4회담과 관련한 미국의 목표는 전후 시기를 유럽의 정상화를 달성함으로써 종결짓는 것이다. 헬싱키협정이 이를 위한 정신적 기초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정상적 안보 상태’의 특징은 독일이 나토, 유럽공동체 및 헬싱키협정 등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독일 측은 이 결정을 자기 스스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내려야 할 것이다.

미국 측은 2+4 최종 문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다. 이를 통해 전승 4개국의 권한이 가장 분명하고도 간단한 방식으로 소멸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는 미국 상원의 비준을 받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1 E

1990년 3월 21일

담당자 / 기관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 외무장관;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 서독 외무부 연방
장관실 실장 프랑크 엘베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에서 작성한 겐셔 외무장관과 베이커 미 국무장관 간의 회담에 관
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은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선거 결과를 환영하였다. 선
거결과로 인해 통일된 독일이 나토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가 더 수월해졌다고 평가
하였다. 겐셔 외무장관은 동독 드 메지에르 총리 및 동독의 자유주의 정치인들이 이 문제
에 관해 지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은 1990년 3월 14일 본에서 열린 실무자급 2+4회담이 2+4협상의 좋
은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프랑스가 예정된 브뤼셀에서의 관련 나토 보고에 오
지 않으려고 한 점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는 자신의 모스크바에서의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과의 회담에 대해 설명하였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이 회담에서 소련
국내 정치적 문제들, 특히 보수파와 군부의 군축 문제 및 독일의 나토 회원국 지위 문제와
관련한 압력들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였다. 소련은 리투아니아 독립 관련 문제에 대해 상
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겐셔 서독 외무장관은 1990년 3월 18일 프라하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 외무장관 회담에
서 폴란드, 헝가리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독일의 중립화에 반대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
한 바르샤바조약기구 및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의 해체 국면에서 헬싱키협정 정상
회담의 중요성이 커졌음을 지적하였다. 그에 있어 기존의 나토와 같은 기구들은 계속 유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미국이 이 새로운 전 유럽적 체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발언
하였다. 겐셔 외무부장은 기본법 23조에 의한 가입 통일을 선호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
후에 23조, 146조 및 전문의 일부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독일인들이 빠른 통일
을 원하기 때문에, 2+4회담의 일정을 헬싱키협정 정상회담 이전에 잡는 것이 요구된다.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은 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하면서도, 독일문제와 유럽통합
문제가 동조화될 위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후자는 나토의 역할과 조화되기 어렵다는 것
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안전보장정책에 대한 설명을 헬싱키협정 체제에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것은 나토의 틀에서 더 적절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서독 외무장관 겐서와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의 빈트후크회담-외무부 외
무장관실 보고

1990년 3월 22일

담당자 / 기관_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예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양국 대표단; 서독 외무부 연방장관실 실장 프랑크 엘베

내용_

겐서 서독 연방 외무장관과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아프리카 상황에 대해 잠시 의
견을 나눈 후 곧 독일통일 및 2+4협상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조용하게 치뤄졌으며,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정치인들을 전면에 등
장시켰다.

앞으로의 2+4 외무장관급 회담의 의제에 대한 겐서 외무부 장관의 질문에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평화조약을 언급하였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평화조약을 통
해 모든 문제를 이번 세대에서 종결지어야 한다고 하였다. 겐서 외무장관은 그에 반해 평
화조약은 ‘과거에 속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동·서독은 이미 유럽 내 안
정된 질서의 일부가 된 상태이다. 평화조약은 오히려 이 상황을 과거로 거슬러 가는 1보
후퇴가 될 것이다. 그 대신에 폴란드 서부 국경과 같은 꼭 필요한 주제에 논의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는 2+4회담이 3가지 종류의 전 유럽적 변화라는 맥락 안에 놓였다고 하였다.
즉, 미래의 경제적 협력(헬싱키협정 경제회의), 군축 노력(비엔나 군축협상), 그리고 ‘하나의
유럽’을 만드는 일(헬싱키협정 정상회담)이 그것이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새로운 유럽체제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비록 헬싱키협정 프로세스가 존재하지만, 포츠담협정을 다시 한번 ‘연필을 들고’ 한구절
한구절씩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소련은 나토의 동독지역으로의 확장, 바르
샤바조약의 해체, 그리고 유럽 내 균형 중심의 이동을 그냥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하였다.
독일통일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때에도 소련국민의 반응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
련 내 혹은 동독 내에 생길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전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측
면에서 그는 평화조약을 다시 언급했다.

겐서 외무장관은 독일이 과거 전쟁 중 모든 적국들과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으며 또한 긴 시간을 소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독일의 유럽통합을 포함한 유럽통합 과
정이 그 때문에 늦추어져서는 안된다. 그는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기본법 23조 연방 가입규정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는 통일 방식에 대해 우선 그 외형적 틀에 국한하여 설명하였다.

두 외무장관은 양국 간 경제적 관계의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문서
번호 212

동독 선거 및 독일통일 과정에 대한 프랑스 측 입장-파리 주재 서독대사관의 보고
1990년 3월 23일

담당자 / 기관_ 파리 주재 서독대사관 정치국 자문역 헬무트 엘펜캠퍼

내용_

파리 주재 서독대사관 정치국 자문역 엘펜캠퍼는 동독 선거 및 독일통일 과정에 대한 프랑스 측 입장에 대해 보고하였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뒤마 프랑스 외무장관은 동독 선거 결과는 더 조속한 독일통일을 찬성하는 투표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들은 그 외에도 유럽통합 속도에도 가속이 붙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경제·화폐통합 이전에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뒤마 프랑스 외무장관은 동독을 유럽공동체에 가입시키는 것보다 양 독일의 통일에 의한 동독지역의 유럽공동체 자동 귀속을 선호하였다. 파리 주재 서독대사관 정치국 자문역 엘펜캠퍼는 이것이 직접적인 통일에 대한 프랑스 측의 최초의 공식적인 발언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3 E

1990년 3월 14일 본에서 열린 실무자급 2+4회담 전개 및 결과에 대한 외무부의
보고

1990년 3월 27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실무자급 2+4회담 대표단: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담당) 210과

내용

이 문서는 1990년 3월 14일 본에서 열린 실무자급 2+4회담의 전개와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실무자급 2+4회담에서는 1990년 2월 13일의 오타와 공동회담에서 합의된 2+4회담의 진행 문제를 논의하였다. 원탁회의형 진행 형식은 앞으로의 실무자급 회담 및 외무장관급 회담에도 적용하기로 하였다. 서독과 동독은 그 회담은 서독과 동독지역을 번갈아 가며 독일영토 위에서 개최되는 것에 합의하였다. 회의의 의장은 알파벳 순으로 번갈아 맡기로 한다. 소련은 외무장관급 회담의 개최 장소는 6개국 모두를 돌아가며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모든 문제는 만장일치 원칙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하였다. 무엇보다 동독 내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 회담을 소집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였다. 폴란드의 포함 여부가 길게 논의되었다. 그에 대해 폴란드는 공식적으로 참석하지는 않으나, 폴란드 국경문제의 논의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4가지 의제에 우선 합의하였다: 국경문제, 정치·군사적 문제, 베를린 문제, 전승 4개국의 권한 및 책임 문제가 그것이다. 그 외에 소련은 ‘평화조약’ 및 ‘독일통일 과정과 전유럽적 과정 간의 동기화(Synchronisation)’를, 동독은 ‘동·서독의 기존 국제적 의무사항들’을 각각 의제로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들 제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동독에서의 새 정부의 구성 직후 개최될 다음 2+4회담에서는 각 의제에 대한 서독 측의 내용적 입장이 정리되어 서방 파트너 국가들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동독정부와의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독일통일’ 내각위원회-‘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산하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회의-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제정치과(210과) 보고

1990년 3월 27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과장 람바흐; 연방 외무장관 겐서; 서독 총리청 (외교 및 내독 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
장 담당) 제2국 텔칙 국장; 연방 국방부장관 슈톨텐베르크; 연방 법무부장관 앵겔하르트;
연방 내독부장관 빌름스; 연방 재무부; 연방 경제부; 연방 내무부장관 쇼이블레

내용

겐서 서독 외무장관은 ‘독일통일’ 내각위원회에서 2+4회담 및 1990년 3월 21일에서 22일
간에 열렸던 자신과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의 빈트후크회담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
다. 위 회담들에서 소련 및 폴란드에 거주하는 독일 소수민족에 대해서 논의되지는 않았
다. 이들 주제에 대해 논의를 자제해야만 다른 참가국이 다른 민감한 문제들을 의제로 내
세우는 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하였다. 그는 소련의 기존 체제가 붕괴
하고 있는 현재 헬싱키협정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소련이 2+4회담에
있어서도 영향력의 감소를 실감하고 있다고 하였다. 동독과 경제·화폐통합을 하게 될 경
우 이에 대해 공개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1+3회담 형
식도 존재하지만, 그에 있어 소련의 고립에 대한 우려를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 참가국 중 미국 측이 서독 측 입장에 대해 가장 큰 이해를 보여주었다고 보고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문서
번호 215

연방 외무장관 겐서의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에 대한 서신-경제적 협력에 대한 전문가 회의

1990년 3월 28일

담당자 / 기관_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에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 외무장관

내용

이 문서는 서독 겐서 외무장관이 소련의 세바르드나제에게 보낸 서신이다. 이 서신에서 겐서는 먼저 빈톡에서 열렸던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과의 회담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양국 관계의 장래를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그는 전했다. 나아가 그는 양국에서 '2명에서 3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경제협력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자는 세바르드나제의 의견을 헬무트 콜 수상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경험이 풍부할뿐만 아니라 결정권이 있는 대화 파트너를 참가 전문가로 지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겐서 외무장관은 나아가 소련은 동독이 소련에 대해 갖고 있는 경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서독정부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강조하였다. 유럽공동체에서도 이미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고 설명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1990년 3월 29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과장 노이베르트

내용_

국경 문제에 대한 동서독 간의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소련 측의 어법에 다시 강경한 어투가 감지되고 있다. 이것이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지 혹은 전술적 차원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1989년도 말 경에는 헬싱키협정 최종문서에 따라 소련은 단지 '국경의 불가침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1989년 12월 19일 브뤼셀에서의 연설에서 안정화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데 1990년도 2월 경에는 '강경 노선'이 더 힘을 얻었다. 이러한 강경화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했을 수 있다: 의식적으로 취한 유보적 자세; 2+4협상 중의 협상적 전술; 지나치게 빠른 통일 진행에 대한 반작용; 소련 내부 정치 및 군부 등의 영향이 그것이다.

소련 측의 어법은 대부분 불분명한 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국경'이나 '2차 세계대전으로 초래된 국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를 분명하게 정의내리지 않는다. 단지 폴란드 서부 국경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언급이 있었다. 폴란드 동부 국경이나 다른 소련의 서부 국경들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채 지나갔다.

소련은 어쩌면 포츠담협정에 따라 상이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폴란드 동부 국경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치적으로 볼 때 소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획득한 영토들을 점진적으로 서방 측에 개방하고 이를 서방 측에 열려 있는 교두보로서 만들고자 한다. 이 때문에 상기한 소련 측의 일부 '강경 노선'은 소련의 실제 이익에 합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8 E



문서
번호 217

독일 관련 프랑스 측의 우려
1990년 3월 30일

담당자 / 기관_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연방 수상 헬무트 콜; 유럽공동체; 한스-디트리히 젠서 연방 외무장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마하일 고르바초프

내용_

디 차이트(die Zeit)지의 칼럼에서 저자 프리츠-판나메는 서독과 프랑스 간의 관계가 나쁘다고 평가하였다. 콜 수상의 독자 행보와 미테랑 대통령의 실수가 상호 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진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강해질 독일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두려움이 증대되고 있다. 이제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콜 수상은 유럽공동체의 추가적인 통합을 뒷받침할 것인데, 그 목표는 정치공동체이다.

출처_ Fritz-Vannahme, Joachim. 1990. Viel Sand im Getriebe. In: Die Zeit. 30.03.1990. Nr. 14. S. 7.

양독 간 경제·화폐통합 실현의 2+4회담 및 전승 4개국에 대한 영향-서독 연방 재무부에 전달될 서독 외무부의 실무안

1990년 3월 30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연방 재무부장관; 양독 간 관계 실무단 단장 자라친; 수상청; 연방 경제부; 연방 외무부 법무국 (일반 국제법 담당) 500과 과장 힐겐베르크 및 '국제법적 문제' 담당 실무단

내용

이 문서는 1990년 3월 27일에 연방 경제부에서 열린 여러 부처의 차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작성하고 외무부 법무국 '국제법적 문제' 담당 실무단이 검토한 실무안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독과 동독 간에 체결될 예정인 경제, 통화 및 사회통합에 대한 조약은 전체 독일에 대한 전승 4개국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소련이 포츠담협정 및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체결된 다른 협정들을 인용한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들 규정들은 단지 독일 문제의 대외적 측면만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서방 측 전승 3개국들은 이제까지 서독과 동독 간의 경제적 관계를 항상 국제적 관계가 아닌 내독관계로 간주하였다. 경제, 통화 및 사회통합은 이러한 틀 속에서 만들어졌다.

경제, 통화 및 사회통합을 위해 서독과 동독은 다음 부문들에 대해 협의하였다. 경제 및 재정정책; 공동 통화; 사적 경제 허용; 국가 독점 폐지.

소련이 2+4협상 중에 언급된 합의 내지 협의 내용과 전승 4개국 권한이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었다. 소련은 동독의 주권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소련이 유보해왔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모드로우 동독 총리가 1990년 3월 2일에 발표한 소유권 관계의 보전에 대한 성명이 이러한 주장에 상응한다.

그런데 물론 포츠담협정에 경제 및 화폐 관련 합의가 포함되었기는 했지만, 이들은 단지 알타회담의 논의 목적을 이행한 것에 국한되었으며 그 효력도 과도기 동안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전승 4개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독일민족의 자결권이 통일과정에서 실현되는 것을 막을 권리를 지니고 있지 않다. 소련은 1955년에 동독에게 소련에는 통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던 바도 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39 E

문서
번호 219

유럽공동체 유럽위원회의 독일통일에 대한 견해 1990년 4월 1일

담당자 / 기관 유럽위원회; 유럽공동체; 유럽의회; 동독;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서독; 유럽 경제공동체; 중·동유럽 국가들

내용

이 문서는 유럽위원회가 독일통일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89년도 12월에 유럽의 정상들은 독일통일에 대한 지지를 피력하였다. 독일국민은 이미 통일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동독의 민주화와 독일통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이다. 독일통일은 유럽통합이라는 목표와 일치할 수 있다. 유럽공동체의 확대는 쉽지 않은 도전이다. 동독경제에 관한 자료가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동독에는 현재 심각한 구조적 후진성이 존재하지만, 또한 진정한 발전의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동독의 해외 무역은 동유럽에 치우쳐져 있었다. 동독의 환경 및 인프라 설비는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다. 주민들의 일반 교육 및 전문 교육은 양호한 상태이다. 서독의 기본법에 따르면 통일은 기본법 제 23조 혹은 제146조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동독의 유럽공동체 귀속(Eingliederung)은 형식적인 가입(Beitritt)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경과적 조치들이 포함된 단계적 통합이 될 것이다. 종래의 가입(Beitritt)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서독의 유럽공동체로의 통합은 유럽공동체조약의 변경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 내 경쟁의 교란을 막기 위해, 독일통일 과정에서 계획된 광범위한 보조금들에 대해서 유럽공동체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독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어야 한다. 동독지역에 급격한 회복 과정이 기대된다. 통일은 서독과 유럽공동체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서독은 동독경제에 대한 모든 원조 조치에 대해 유럽위원회 측에 내용을 전달할 것이다. 유럽의회는 독일통일에 대한 비정규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출처 Bulleti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1990. Sonderbeilage 4/1990. <http://www.ena.lu>

문서
번호 220

 2+4회담에 대한 소련 측 입장-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과 프로젝트르 교수와
의 대화

1990년 4월 2일

담당자 / 기관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클라우스 블레히; 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 정치
국장 요아힘 폰 아르님; 모스크바의 독일 전문가 프로젝트르 교수

내용

프로젝토르 교수는 모스크바의 저명한 독일 전문가이다. 그에 따르면 소련정부 책임자들
에게 통일된 독일의 나토 회원국 지위 문제는 큰 골칫거리이다. 이 문제에는 예를 들어 바
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와 같은 다른 큰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헝가리와 체코
슬로바키아는 곧 동 기구를 탈퇴할 것이다. 폴란드 역시 그의 국경 보장이 이루어지는 대
로 이를 뒤따를 것이다. 동독이 ‘바로 다른 편을 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은 소련 보수파
에 큰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이들은 193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소련이 다시 고립된 상황
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 정치국장 요아힘 폰 아르님은 프로젝트르 교수에게 나토 영역
의 동구권 확대를 부정하는 ‘겐셔의 방안’이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소련의 안전보장 이익이 서방 측에서도 고려되고 있다는 더 좋은 증거는 바로 비엔나
군축회담이다. 서독 측은 소련군의 동독지역으로부터의 철군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해
서도 이해를 보였다. 하지만 1991년도의 ‘동독 최고인민회의’ 선거 결과로 표출된 통일 의
지 및 동·서독 간의 새로운 신뢰 관계를 고려할 때 철군 시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
은 것 역시 아니다.

프로젝토르 교수는 소련은 철군을 위해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답하였다.

그는 동·서독 독일의회의 폴란드 국경에 대한 공동 성명을 통해 소련 내의 우려를 일정부
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 정치국장 요아힘 폰 아
르님은 그 공동 성명을 위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프로젝토르 교수는 그 외에도 독일 연방 대통령이거나 연방 수상이 종전 45주년을 맞아 독
일의 평화 의지를 성명으로 피력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공동 경제 포럼들의 개설도 여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문서
번호 221

프랑스의 관점에서 본 독일통일과 그 경제적인 영향-파리 주재 서독대사관의 보고
1990년 4월 4일

담당자 / 기관_ 파리 주재 서독대사관: (서독) 연방은행장 프라이탁; 서독 외무부

내용

이 문서는 파리 주재 서독 대사가 미래의 독일통일이 어떠한 경제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프랑스의 관점을 파악해 서독 외무부에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통일은 미래에 독일 내의 물가 및 금리 상승을 추동할 것이고, 그 여파가 다른 유럽 공동체 회원국에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프랑스는 콜 수상이 제안한 서독과 동독 간의 경제·화폐통합안을 놀랍게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제안은 먼저 국가 간 개별 국민경제의 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 미래에 유럽연합 경제통화동맹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독일연방은행이 서독 연방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며, 연방은행의 독립성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존재한다.

수요의 증가 그리고 동독재건 지원 및 연금 지불과 실업보험 비용 등으로 인한 지나친 예산상의 부담 때문에 독일 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한다. 한편 서독에서 다른 유럽공동체 국가들에 실행할 투자가 줄게 되는 것은 단기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3 E

담당자 / 기관 부시 미국 대통령; (케일 미국 부통령, 베이커 미국 국무부장,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 자문역 스킴스콧 등을 포함한) 미국정부 대표단;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위르겐 루푸스,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를 국장, 외무부 연방장관실 실장 프랑크 엘베 등을 포함한) 서독정부 대표단

내용

이 문서는 겐서 외무장관이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국정부 대표단에게 동독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것에 대한 보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겐서 장관은 동독의 선거결과를 동독주민이 통일과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얼마전 개시된 2+4회담의 실무자급 회의와 관련하여 서독정부는 소련의 요청에 따라 1990년 가을로 예정된 헬싱키협정 정상회담 이전에 2+4회담을 종결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과정이 오래 지연될 경우 동독에서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동유럽 내 변화와 관련한 어려운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소련과 분리독립 문제로 분쟁 중인) 리투아니아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제도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련은 시장경제와 관련하여 시장경제 전문가 등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발트해 연안국 문제가 소련 때문에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한, 그를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독일문제에 대한 폴란드 측 입장에 대해 폴란드 외무장관과 대화했음을 밝혔다. 그는 서독정부가 이와 관련해 합리적인 안을 제안한 점을 익히 알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서독 연방정부 및 연방총리와 긴밀한 유대 속에 있다고 하였다.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은 안보체제와 관련하여 헬싱키협정이 나토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 외 겐서 서독 외무장관은 유럽공동체 내에서 또 미국과의 서방 내에서 구체적인 관계 발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동-서독 간 상황에 대한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청문회-런던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

1990년 4월 5일

담당자 / 기관_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 영국 외무장관 허드

내용_

이 문서는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외무장관 허드가 독일분단의 대내외적인 모든 측면과 독일의 통일을 향한 진전에 대한 질문들에 답변한 것에 대한 런던 주재 서독대사의 보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허드 외무장관은 동독의 새 정부 구성이 이루어진 이후 2+4회담이 개시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국경문제 및 안전보장정책과 같은 통일의 대외적 측면이 논의될 것이라고 하였다. 전승 4개국의 권한 및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필요하지만, 안전보장정책과 관련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아마도 평화조약과 2+4 간의 합의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임시 해결책(Zwischenlösung)이 있게 될 것이다. 독일통일은 아마도 1991년도 후반기에 실현될 것이라고 보았다.

독일 연방 수상 헬무트 콜은 국경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동의하였으며, 그에 상응하는 폴란드에 대한 성명이 발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통일이 될 경우 그 이후 기본법 23조를 폐지하여, 통일된 독일연방공화국에 구동독지역 외의 또 다른 지역들이 가입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원에서 제기된 전후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허드 외무장관은 동독에 대해 약 1,000에서 1,5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금액을 제시한 바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독에 대한 요구사항은 아직 검토되지 않은 상태이다. 물론 종전 이후 45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서독정부는 그러한 요구에 답하고자 할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영국에 있어 통일독일이 나토 회원국으로 잔류하는 문제는 2+4협상의 핵심적인 의제이다. 비록 소련이 이를 용인하기는 매우 어렵겠으나, 이것이 최선의 안전보장안이다. 서방 측은 이 안을 고수해야 한다. 소련군의 동독지역 주둔 및 철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련 측을 배려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이다.

통일된 독일은 비록 유럽 내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나, 유럽공동체와 나토에 통합되어 있는 한 독일로부터 군사적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 방식과 관련하여 별도의 유럽공동체 가입협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수의 경과 규정들이 마련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0 E

문서
번호 224

독-영 관계와 통일
1990년 4월 6일

담당자 / 기관_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 연방 수상 헬무트 콜; 헬싱키회의; 나토; 서유럽 연합

내용_

디 차이트(die Zeit)지는 대처 영국 수상과 콜 수상 간의 의견 차이가 연례 쾨니히스빈터회의에서 더 명백해졌음을 보도하였다.

통일이라는 '독일문제'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지만, 안전보장정책에서는 아직 쟁점이 남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콜 수상이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에 동의함으로써 영국정부 입장에 더 접근한 바 있다. 유럽공동체와 관련해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다. 콜 수상은 이 공동체가 정치적 연합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반면, 대처 영국 수상은 그에 반대하였다.

출처_ Sommer, Theo. 1990. Die Lady läßt sich nicht erweichen. In: Die Zeit. 06.04.1990. Nr. 15. S. 3.

문서
번호 225

서독 연방 수상실장에 대한 외무부의 국회 및 내각 담당과의 전문-내각 내 논의
를 문서 기록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통지
1990년 4월 6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국회 및 내각 담당) 011과 과장 이싱어; 수상청 (연방-연방주 관계, 연방회의, 연방 수상과 연방주 총리들의 회담 담당) 122과 퀴스터

내용_

서독 외무부 국회 및 내각 담당과 과장 이싱어는 수상청 내의 연방-연방주 관계, 연방회의, 연방 수상과 연방주 총리들의 회담 담당과 퀴스터 과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내각회의 또는 '독일통일' 내각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논의에 대해 이미 합의된 것처럼 문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외무부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단지 구두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1990년 3월 30일 서독 외무부차관 주트호프와 각 연방주 수상청과의 회담에 대한 보고에도 적용되었다고 밝혔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독일통일 달성 시 국제법 조약들의 변경 1990년 4월 12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독부 법무국 산하 ‘국제법적 문제’ 담당 실무단 및 실무단 단장 아이텔 국장; 외무부 법무국 (일반 국제법 담당) 500과 과장 뢰쉬너; 외무부 법무국 (국제조약 담당) 501과; 외무부 법무국 (전후문제-군대 주둔, 외국자산, 외채, 보상, 서독영토 범위 등의 전쟁 및 점령으로 비롯된 문제 담당) 503과

내용

이 문서는 독일통일이 실현될 경우 필요할 국제법적 조약의 변경에 대해 서독 외무부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 실무안에서는 다양한 조약들의 현재성과 그 서독에 대한 각각의 의미가 검토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적 의미가 큰 서독의 조약들’이라는 제목의 제1항 1조 ‘서방 측에의 통합’ 장에서는 서방 측 전승 3개국과의 조약들이 다루어졌다. 예를 들어 독일조약과 전환협정이 여기에서 논의되었다. 또한 군사적 조약들도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1954년의) 외국군대의 서독 주둔에 대한 조약, 나토조약, 브뤼셀조약, 나토군 지위협정 및 나토군 지위 추가협정이 그것이다. 그 외 런던채무협정과 유럽 경제공동체조약 및 유럽 원자력공동체조약 등이 논의되었다. 인권에 대한 조약들 중에서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및 그 추가 협약에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정도만 기술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모스크바 및 바르샤바조약을 포함한 서독정부와 동구권과의 조약들(Ostverträge)이 검토되었다. 또한 서독과 동독, 국제기구 및 비제도적 다자 간 조약들도 다루어졌다.

제2항에서는 ‘정치적 의미가 큰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의 조약들’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내용이 논의되었다. 우선 ‘양자 간 조약’에서는 동독의 친선 조약들 및 외국군 주둔 협정이 논의되었다. ‘다자간 조약들’ 항목에서는 바르샤바조약 및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가 다루어졌다. 다음 항목들에서는 동독의 무역에 관한 합의들 및 동독의 영토와 관련된 조약들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제3항에서는 동·서독이 조약 당사자가 아니지만 독일에 대해 다루고 있는 조약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39E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과장 람바흐; 서독 내무부

내용

통일 이후 연방법을 동독지역에 도입하는 내용의 연방법 과도규정(Überleitungsgesetz)이 요구된다. 그에 따라 동독지역에도 통일이 달성되는 것과 동시에 연방법의 효력이 즉각 발생하게 되어야 한다. 연방 내무부가 이 법안을 준비할 책임을 맡았다. 연방 내무부는 다른 모든 연방부처들에 대해 각 부에서 담당하는 법률, 명령, 행정지시 및 조약들을 파악한 후 다음 두 범주로 분류할 것을 요청하였다:

범주 1: 통일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들

범주 2: 통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들

이러한 분류가 필요한 까닭은 통일 이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법규정 혹은 조약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경우 이들에 대해 서독 혹은 그 조약의 상대국이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내무부는 '통일된 독일의 가장 초기에 반드시 필요한' 연방법들만을 위의 첫 번째 범주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56313E

본에서 열린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소련 외무차관 카르포프의 회담-외무부 21실의
보고

1990년 4월 13일

담당자 / 기관_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 외무장관; 소련 외무차관 빅토르 카르포프; 서독 외
무부 21실 회의 실장

내용_

이 문서는 소련 외무차관 빅토르 카르포프와 겐셔 외무장관의 회의에 대해 서독 외무부
회의 실장이 작성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련 외무차관은 1990년 5월 4일에 개최될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과 연방 외무장관 겐
셔 간의 회의에서 논의하게 될 의제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것은 2+4회담의 구성 문제 및
경제적인 협력과 관련된 것이었다. 나아가 소련의 현재 상황이 매우 복잡하며 페레스트로
이카정책이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다고 전했다. 소련과 리투아니
아 간의 분리독립 문제를 둘러싼 분쟁은 소련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의 결정들은 소련 안보를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그중에서도 통일독일
의 군사적 지위는 특히 중요하며, 그에 대한 해결책이 ‘인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
우 그에 상응하는 반대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통일 이후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소련 및 미국 군대가 독일에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빅토르 카르포프는
소련이 군축 문제에 있어 이미 몇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렇기 때
문에 서방 측 그리고 서독 측에서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서독과 동독 간의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 때문에 소련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
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소련은 현재 동독 측과 함께 동독이 소련에 대해 갖고 있
는 의무사항들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나아가 그는 1989년도의 서독과 소련 간 공
동 성명을 기반으로 지금보다 더 나아가 공동 협력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겐셔 외무장관은 서독과 소련 간의 관계 진전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
였다. 비엔나에서의 군축 협상에서도 곧 결과가 도출될 것이며 유럽안보협력기구에 대한 서
독 측의 입장은 소련 측 입장과의 유사하다고 강조하였다. 동독의 소련에 대한 관련 의무
사항들과 관련해서도 서독은 동독 측과 논의 중이다. 겐셔 장관은 나아가 서독은 소련의
개혁 정책과 경제적 문제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나토 및 방위 담당) 201과 과장 대리 그뢰닝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나토 및 방위 담당과 과장 대리 그뢰닝이 작성한 것으로 유럽의 총체적 안보체계에 대한 제안을 포함한 보고서이다. 이 제안의 내용은 추후 연방 국방부와 협의되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뢰닝의 설명에 따르면, 앞으로 북미와 소련이 함께 참여하는 유럽의 총체적 안보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헬싱키협정 프로세스의 다음 단계는 근본적으로 변화된 유럽 내 평화질서가 총체적인 체계 하에 새롭게 구성되어야 하는 유럽통합과 함께 시작될 것이다. 독일의 통일과정이 이 유럽의 체제변화 안에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독일로서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련이 자신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한과 동독에서의 군대 주둔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가는 독일이 별개의 단위로 다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안보체제에 포함되는 것 외에는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련이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유럽체제 변화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이 포함된다: 군축;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같은 공통적 가치의 진전 및 사용; 광범위한 협력과 조정; 분쟁과 위기 관리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예를 들어 분쟁조정센터와 같은 적극적인 헬싱키협정의 제도화 및 회원국 외무장관급 회담의 정례화가 요청된다. 나토는 독일에 있어 독특히 과도기 중 안전보장을 확보해주는 제도로 유지될 것이다. 또한 이와 동시에 (나토 상위의) 새로운 안보체제의 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나토는 바르샤바조약기구 구조의 소멸로 인한 충격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 종전 회원국들의 나토가입을 포기한다는 점을 표명해야 한다.

[문서의 다음 내용에는 헬싱키협정 체제의 다양한 신규 기구들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8 E



문서
번호 230

동독의 유럽공동체 가입(Beitritt)에 대한 유럽 파트너들의 반응
1990년 4월 23일

담당자 / 기관_ 유럽위원회 의장 자끄 들로르; 역내 시장 유럽공동체 특임관 마르틴 방에만;
동독; 서독; 유럽공동체

내용_

슈피겔지는 유럽공동체 회원국들 간에 동독의 유럽공동체 가입(Beitritt)을 놓고 증가하는 불만에 대해 보도하였다. 일반적으로 동독이 여러 유럽공동체 기관들이나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의 관여 없이, 또 가입 조건에 대한 협상 없이 ‘뒷문을 통해’ 유럽공동체에 가입한 점에 대해 비판이 가해졌다. 동독의 농업정책이나 그의 동구권 국가들과의 통상 협정들, 그리고 독일연방의 동독에 대한 보조금 등이 유럽공동체 규정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보도되었다.

출처_ Durch die Hintertür. In: Der Spiegel, 23.04.1990, Nr. 17, 44. Jahrgang, S. 35-39.

1990년 4월 23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과장 람바흐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제정치과 람바흐 과장이 동베를린 주재 소련 대사 코쾨
마소프가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에 전달한 구두항의(Demarche)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를 통해 소련은 자신의 동독에 대한 광범위한 자문권(Konsultationsanspruch) 및 동독
이 바르샤바조약 국가들과 긴밀히 맺고 있던 관계를 상기시키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다
음 사항들이 언급되었다:

-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는 받아들일 수 없음
- 바르샤바조약의 성실한 준수가 유럽 전체에 이익이 됨
- 독일에 대해 소련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리와 책임을 나토 동맹이 저해하는 문제
-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형식의 평화조약 체결

하지만 그 내용의 도입부에서는 동시에 독일통일이 유럽의 안정에 필요하다고 언급이 되
기도 하였다. 한편 소련 외무부를 포함한 소련 측과의 다양한 대화 속에서 소련이 평화조약
체결이 관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구두항의
에서는 경제적, 국제법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조속히 노력할 것이 요구되었
다. 람바흐 과장은 이와 관련하여 동독과 소련과의 협의를 2+4회담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필요하다면 협력협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13 E

본에서 열린 겐서 서독 외무장관과 메켈 동독 외무장관의 회담
1990년 4월 24일

담당자 / 기관_ 한스-디트리히 겐서 서독 외무장관; 마르쿠스 메켈 동독 외무장관; 양국 정부 대표단; 동독 외무부; 서독 연방 외무부 21실 회의 실장

내용_

메켈 동독 외무장관은 새로운 동독의 외교정책의 출발 원칙에 대해 설명하였다. ‘조속한 통일’이라는 목표와 관련하여 이는 특히 유럽에 새로운 비전이 탄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였다. 그는 동독이, 특히 동유럽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유럽통합 및 새로운 안보체제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해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동독 외무부의 자체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하고자 했다.

겐서 서독 외무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 동독의 해체가 아니라 공동의 창조를 논하고자 한다고 답하였다. 외교정책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본법 23조에 의한 통일을 가능하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단기적인 과제라면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과 관련한 과제들인데, 예를 들어 소련에 대한 동독의 기존 의무에 이 통합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의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동독 및 소련 측의 물적 혹은 재정적 공급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서독정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동독의 경제 파트너들에게 계속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메켈 동독 외무장관과 동독 외무차관 미젤비츠는 동독 주둔 소련군 및 외교관 등의 현금 환전으로 인해 동독에 약 10억 동독 마르크에 상당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동독 외무부는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의 국제정치적 영향에 대해 내용을 파악하여 (소련과의) 3자 회담 이전에 서독 외무부와 양자 협의를 거칠 것임을 밝혔다. 그 외 메켈 동독 외무장관은 자신의 1990년 4월 23일의 폴란드 방문에 대해 설명하였다. 겐서 서독 외무장관이 제안한 것과 같이 1990년 5월 5일 이전, 즉 2+4협상 개시 이전에 3자 회담을 갖는 것은 소련 측에서도 분명히 환영할 일일 것이다. 메켈 동독 외무장관은 금주 주말에 소련을 방문하여 동독의 기본법 23조에 따른 통일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그에 있어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지 않는다.

겐서 서독 외무장관은 통일 이전에 그 대외적 측면들을 해결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중요한 것은 가을로 예정된 헬싱키협정 정상회담 이전에 2+4회담을 종결짓는 것이다. 서독 외무부차관 주트호프는 동·서독 외무부 간에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에 대해 언급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7 E

1990년 4월 26일

담당자 / 기관 미국 국무부 기획실 실장 로스; 미국 국무부 소속 바틀로뮤 및 로빈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속 블랙웰 및 캔터; 미국 국방부 소속 웨인로드; 서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 치트론 및 기획실 헤르만 에라트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 치트론과 미국 국무부 기획실 실장 로스가 독일 및 유럽의 통일·통합 과정에 대해 논의한 것에 대해 서독 외무부 기획실에서 작성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안보체계로서의 헬싱키협정 프로세스의 평가와 관련하여 양측은 입장을 좁힐 수 있었다. 그에 있어 미국 측의 주된 우려는 나토가 헬싱키협정과 유럽공동체의 변화 때문에 ‘정치적으로 약화’되지 않을까하는데 있었다. 헬무트 콜 서독 총리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언급했던 유럽공동체 공동의 외교 및 안보정책은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측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서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 치트론은 나토 동맹의 강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방 외무장관 겐서가 언급한 바 있는 ‘대서양 양안 선언(transatlantischen Deklaration)’도 이와 동일한 생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편, 미국 국무부 기획실은 미-소 간 대화가 신뢰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이 소련의 (리투아니아의 독립 문제를 포함한) 어려운 국내정치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다. 미국은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소련을 여러 국제적 경제기구에 장기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서독 측의 논거에 대해 미국은 이해를 표시하였다. 소련의 우려사항을 다음의 4가지 부문에서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안보, 경제, 새로운 유럽 안보질서(헬싱키협정), 나토가 더욱 정치적 기능을 .도록 변화시키는 일이 그것이다.

[문서의 다음 내용에는 동 회담의 세부 논의가 포함되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1 E

담당자 / 기관_ 영국 외무·영연방부(FCO) 정치국장 웨스턴; 영국 외무·영연방부 안보문제 담당 골텐; 런던 주재 서독 대사 폰 리히트호펜

내용_

이 문서는 런던 주재 서독 대사 폰 리히트호펜이 2+4회담 진행에 있어 안보정책과 관련한 영국의 입장에 대해 서독 외무부에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4월 13일 버뮤다에서 열린 부시 미국 대통령과 대처 영국 수상 정상회담 이후 영국 외무·영연방부(FCO) 정치국장 웨스턴은 독일에 관련된 방위 문제는 나토의 문제이기에 2+4회담의 의제에 속하지 않는다고 발언하였다. 대처 영국 수상은 이점을 연방 수상 헬무트 콜에 설명하였다. 대처 수상은 “러시아인들이 2+4회담을 방위 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영국 외무·영연방부 안보문제 담당 골텐은 물론 전승 4개국의 권한 및 책임의 소멸이나 동독 내 소련군 주둔 문제와 같은 특정 안보문제들은 2+4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외에 소련 측은 2+4회담의 틀 안에서 통일독일의 나토 회원국 지위나 미래 독일에서의 서방 군대 및 독일연방군의 주둔 범위 등을 논의하고자 했지만, 이는 2+4회담에서 답변 내지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서방 측은 그 대신 비엔나협상을 포함한 별도의 군축협상의 틀에 대해 언급하거나, 통일된 독일이 그에 대해 주권적 결정을 할 것이라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영국의 입장이다. 소련 측에서 회담의 파트너들이 자신의 우려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야 한다. 2+4회담에 있어서 소련 측이 그 진전의 지연을 시도할 경우, 예를 들어 미래 전력 등에 대한 일방적인 의향을 성명서로 발표하거나 유럽 내 재래식 전력 조약을 확대하는 것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폰 리히트호펜 대사는 소련이 자신의 국내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의 외교정책적 압력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상응해서 영국도 이제까지 예를 들어 헬싱키협정 안전보장체제의 확장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영국 측은 나토의 지배적 위상에 대해 상당한 승자로서의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에는 일면 위험한 측면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0 E

문서
번호 235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특별 회의-콜 수상의 묘사
1990년 4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유럽위원회 의장 자끄 들로르; 유럽이사회

내용_

콜 수상은 1990년 4월 28일 더블린에서 열린 유럽이사회 특별 회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이번 특별 회의에서 독일통일에 대한 유럽 각국 정부들의 폭넓은 지지를 경험하였다.

‘(유럽) 공동체와 독일통일’이라는 제목의 3단계 계획이 소개되었다. 유럽공동체는 동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승인하였다.

콜 수상은 독일통일과 유럽통합 간의 병행을 강조하면서,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동독의 가입(Beitritt) 협상과 관련해서 계속 내용을 전달받을 것임을 확인하였다고 평가했다.

출처_ <http://www.kas.de/wf/de/71.4565>

문서
번호 236

1989년도 스트라스부르 정상회담 및 1990년도 더블린 정상회담-볼프강 쇼이블레의 묘사
1990년 4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내용_

쇼이블레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1989년 12월의 스트라스부르 유럽이사회 회담 및 직전에 개최된 1990년 4월 24일의 더블린회담을 비교하였다. 첫 번째 회담에서는 아직 독일통일에 대한 상당한 회의가 지배적이었지만, 더블린의 회담에서는 이미 독일통일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통일이 유럽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이 인식된 상태였다. 동독 출신 동독 이탈주민들을 염두에 둘 때 독일통일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었다.

출처_ <http://www.kas.de/wf/de/71.4563>



문서 번호 237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특별 회의-통일의 지지
1990년 4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유럽공동체 회원국들; 유럽위원회

내용_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정상회의에서 연방정부는 독일통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각국의 국가 및 정부수반들은 독일의 통일을 명시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유럽의 통일과 연관지었다. 유럽공동체 유럽위원회는 동독의 유럽공동체 내 점진적 귀속을 위한 조치들을 의결하였다.

출처_ <http://www.kas.de/wf/de/71.4568>

문서 번호 238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특별 회의-동독의 유럽공동체 귀속 관련 조치들
1990년 4월 28일

담당자 / 기관_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유럽위원회

내용_

유럽공동체의 공보에 다음과 같은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특별 회의에서 독일통일과 관련한 의결 내용이 실렸다. 동독의 유럽공동체 귀속(Eingliederung)은 유럽공동체 조약의 변경 없이 이루어지며 공동체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다른 문서에서는 귀속과 공동체 정식 가입을 구분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에 대해 독일통일과 관련한 독-독 간 협상 내용을 상시 전달할 것이다. 동독에 대한 재정 보조가 승인되었다. 동독의 유럽공동체 귀속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은 유럽위원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

출처_ Bulleti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April 1990, Nr. 4, S. 8.

1990년 4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소련 외무차관 코발조프;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클라우스 블레히

내용_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클라우스 블레히는 서독과 동독의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대한 소련 측 비공식 문서를 서독 외무부에 전달하였다.

이 문서에서 소련정부는 서독과 동독의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은 전승 4개국의 권한 및 책임에 저촉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후자는 서독과 동독에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서독과 동독의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있어 단지 유럽공동체조약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비유럽공동체 국가들에 대한 차별적 내용이다.

2+4협상에 따라 준비되는 독일통일의 대외적 측면과 관련하여,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의 실현으로 인해 서독과 동독의 국제적 지위가 2+4협상 등에서 규정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 점은 기본법 23조에 의한 통일을 언급하고 있는 서독과 동독의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 조약안의 규정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2차 세계대전 연합국들의 당시 점령구역 내에서의 민주화, 비군사화 등의 조치에 추후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동독영토에 주둔하는 소련군 문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명이 필요하다.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 조약안 중 연방은행, 연방 각 부처의 특정 권한들도 단지 서독의 법규뿐만 아니라 동독의 법규 및 동독의 체결한 바 있는 국제적 의무의 제약 하에 놓여야 할 것이다.

이상 열거된 문제점들에 대해 2+4회담에 있어 해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2+4회담의 종료 시점의 지연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4 E



문서 번호 240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특별 회의-호르스트 텔칙의 묘사
1990년 4월 30일

담당자 / 기관_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덴마크 총리 폴 슬뤼터; 이탈리아 총리 줄리오 안드레오타; 유럽이사회 의장 찰스 제임스 호하; 소련 외무부 서유럽 담당 국장 겸 특별 대사 알렉산더 본다렌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 예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내용_

이 문서는 호르스트 텔칙이 1990년 4월 28일 더블린에서 열린 유럽이사회 특별 회의에 대해서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회의에서는 독일통일에 대한 어떠한 반대도 없었다. 단지 영국 및 덴마크, 그리고 포르투갈의 국가 및 정부 수반들이 비판적인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 그는 독일 언론도 이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고 보고했다.

텔칙은 나아가 외무장관 회의의 주제 확정 등의 논의에 그쳤던 당시 2+4회담들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그 외에 텔칙은 특히 알렉산더 본다렌코 국장과 같은 소련의 독일문제 관련 자문 전문가들이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자신이 추측하고 있는 사항을 서술하였다.

출처_ <http://www.kas.de/wf/de/71.4564>

문서
번호 241

1990년 4월 29일 메켈 외무장관과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의 회담
1990년 4월 3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장관 메켈;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내용_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의 일환으로 메켈 외무장관과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독일통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소련의 안보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한 그는 독일통일 과정에 장애가 되고자 하지 않는다고 발언하였다. 이제까지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부분은 독일의 정치·군사적 지위이다.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통일된 독일이 나토 회원국 지위를 갖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독일은 그보다는 중립화되어야 하며, 혹은 나토와 바르샤바조약의 동시 회원국 지위 유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 메켈 외무장관은 그것은 낡은 진영적 사고의 연장이라고 답변하였다.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독일에서의 평화조약 규정에 대해 질문하였다. 양자는 과거 독일과 적대국이었던 모든 국가들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소련의 입장이 요약된 비공식 문서를 전달하며, 그 입장이 동독의 서독과의 협상에서 반영되기를 희망하였다. 문제들이 불완전하게 해결될 경우 이는 다시 2+4회담의 국제적 체제 하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기본법 23조는 수정이 필요하다. 메켈 외무장관은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다. 동독 또한 소련에 대한 경제적인 의무를 계속 다할 것이다. 적당한 시점에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의 동독 답방이 있을 것이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2

문서
번호 242

독일 및 전승 4개국에 대한 최종 규정을 논의할 2+4 외무장관급 회담을 위한
외무부의 초안

1990년 4월 30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내용_

이 문서는 독일 및 전승 4개국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최종 규정을 논의하게 될 2+4 외무장관급 회담을 위해 서독 외무부가 작성한 자료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된 독일이 동등한 파트너일 때에만 통합된 유럽의 안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실현되는 시점에 독일에게 어떤 형태의 특수한 지위가 부여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 되는 날 독일이 정상국가로 완전히 서게 되는 것이며 그와 함께 유럽의 평화질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담에 참가한 모든 국가들이 통일이 실현되는 그날부터 독일영토와 베를린에 대해 갖고 있던 권한과 책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와 관련된 모든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기술적인 규정들은 서독 외무부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작성해서 공유할 것이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48E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소련담당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독일통일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모드로우 동독 총리의 1990년 1월 30일 모스크바 방문을 맞아 독일통일을 지지한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현한 바 있다. 1990년 2월 21일의 프라브다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독일인들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음과 유럽의 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전적인 신뢰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통일과정의 시간적 측면을 더 강조하면서 그 과정의 대내외적 측면 간에 점차적인 방식으로 '시간적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통일된 독일이 '유럽의 안보를 위한 핵심'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과정을 헬싱키협정 프로세스에 포함시키는 일이라고 소련 측에서는 보고 있다. 여기에는 현존 국경선의 준수, 전쟁 위험의 방지, 비군사화 및 각 동맹에서 독일의 지위에 대한 정의 문제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소련이 원하는 평화조약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통일에 대한 소련 지도부의 긍정적인 입장에 대한 소련 내 반대의 목소리는 주로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정부기관에서 나온다. 이들은 일반 국민 여론도 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에 의한 소련군 희생자들의 강조 등을 통해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을 보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반대 여론이 통일과정 자체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나, 그들의 논리가 2+4협상 중에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3 E



문서 번호 244 통일이 유럽공동체의 수입 및 지출에 주는 영향
1990년 5월 1일

담당자 / 기관_ 유럽공동체; 동독; 유럽위원회; 더블린 유럽이사회; 서독; 연방은행

내용_

이 문서는 유럽의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럽 공동체에 대해 어떠한 비용을 발생시킬지에 대한 조사 내용이 담겼다. 그 수입 및 지출 비용의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것은 통계 자료가 부족하고 동독의 경제적 상황이 가입시까지 변화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서독의 약속에 따르면 그 가입 전까지의 비용은 서독이 부담한다. 그 다음부터의 비용이 유럽공동체에 추가된다. 유럽공동체의 구조 조정 정책에 따른 추가적 지출은 약 15억 유럽 통화 단위(ECU)가, 공동 농업정책을 위해서는 약 5억 유럽 통화 단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독의 가입으로 발생하는 유럽 공동체의 추가 수입은 약 10억 유럽 통화 단위로 추정된다. 전체를 다 합치면 동독의 공동체 가입 비용은 약 10억 유럽 통화 단위로 산정된다. 이는 1990년도 유럽공동체 예산의 2.1 퍼센트에 해당한다.

출처_ Generaldirektion Wissenschaftlicher Dienst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Hrsg. 1990. The impact of the German unification on revenue and expenditure under the Community budget. Luxemburg: Office des publications officielles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S. 146-151.

문서
번호 245

두 독일국가의 경제·화폐통합의 유럽통합에 대한 영향
1990년 5월 1일

담당자 / 기관_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연방 수상 헬
무트 콜; 동독; 서독; 유럽공동체;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유럽 경제공동체

내용_

이 문서는 프랑스의 신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기사를 서독 외무부에서 스크랩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통일에 따라 서독이 유럽 경제공동체와 유럽통합을 일반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위험
성도 발생하였다. 동독 최고인민회의는 동독주민들이 자본주의와 국가 집단주의 사이의
중간적 경로를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록 너무 강해진 독일에 대한 두려움도 존재
하지만, 동독의 경제적 무게에 대한 과대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붕괴 위험이 있는 인
프라 설비 때문에 약 1조에서 1조 2,500억 마르크의 투자가 필요한데, 그를 위한 재정은
부동산과 기업의 민영화를 통해서만 마련될 수는 없기에 납세자의 부담이 될 것이다. 동·
서베를린 사이의 상이한 임금 수준 역시도 결국은 납세자의 부담을 통해 평준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독일통일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이다.

출처_ Clerc, Denis. Une chance ou un handicap pour l'Europe? In: Le Monde diplo-
matique. Mai 1990. Nr. 434. S. 6.



문서 번호 246 통일이 유럽공동체에 주는 영향
1990년 5월 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서독;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유럽위원회; 유럽공동체

내용

이 문서는 유럽의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서독과 동독 그리고 유럽공동체 각각에 대한 독일의 경제·화폐통합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독 마르크와 동독 마르크 간의 통화 간 교환비율에 대한 질문이 유럽공동체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다분히 정치적인 동기에 의거한 1:1의 통화 간 교환비율은 동독주민의 구매력을 증대시키겠지만, 그보다 더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1:1 이하로 정해진 통화 간 교환비율은 동독 내 사업체들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화폐통합 으로는 동독주민의 서독으로의 대량 이주를 저지할 수는 없다. 그를 위해서는 두 독일 간의 실질 임금과 생산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_ Generaldirektion Wissenschaftlicher Dienst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Hrsg. 1990. The impact of the German unification on the European Community. Luxembourg: Office des publications officielles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S. 4-10.

1990년 5월 3일

담당자 / 기관 유럽의회: 동독 외무장관 메켈; 서독 외무부 (유럽공동체, 유럽공동체 관련 기본 원칙 및 법적 문제, 제도, 가입, 유럽공동체 예산 담당) 410과

내용

서독 외무부 (유럽공동체, 유럽공동체 관련 기본 원칙 및 법적 문제, 제도, 가입, 유럽공동체 예산 담당) 410과는 유럽정치협력(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 EPC) 등의 의제가 논의될 1990년 5월 7일의 브뤼셀 일반 위원회의 회의 준비를 위해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본 문서를 작성하고 외무부 정치국에 보고하였다.

1. 항목 1에서는 서독정부가 독일통일 과정 동안 유럽의회와 취한 연락 내용이 열거되었다. 유럽의회는 이미 1988년부터 중·동유럽의 개혁 운동 주체들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해당국의 의회 대표단과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콜 수상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공동으로 지지를 표명했던 바 있다. 서독에 특히 중요했던 기관은 1920년 2월 15일 설립된 독일통일이 유럽공동체에 미칠 영향 조사 특별위원회(Ad-hoc-Ausschuss über die Auswirkungen der Vereinigung Deutschlands auf die EG)이다. 여기에서 긴밀한 정치적 연락망이 형성되었다.
2. 동독의 유럽의회 회의 참석에 관한 동독 외무장관 메켈의 제안. 동독 외무장관 메켈은 통일의 전단계에 이미 동독이 유럽의회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는 의향을 피력하였다. 그에 필요한 공식적 연락망, 예를 들어 의회 간 대표단 등은 이미 존재하기도 하다. 이 외에도 동독 의회 의원들은 개별적으로도 자신의 원내교섭단체를 통해 유럽의회에서의 공동 협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본에서 열린 겐서 서독 외무장관과 메켈 동독 외무장관의 회담
1990년 5월 7일

담당자 / 기관_ 한스-디트리히 겐서 서독 외무장관; 마르쿠스 메켈 동독 외무장관; 양국 정부 대표단; 서독 연방 외무부 21실 회의 실장

내용_

이 문서는 겐서 서독 외무장관과 메켈 동독 외무장관 간의 회담에 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겐서 장관은 메켈 장관에게 1990년 5월 3일의 나토 외무장관급 회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정된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나토의 정책 및 전략의 변화가 논의될 것이라고 하였다. 1990년 5월 5일에 본에서 첫 외무장관급 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하였다. 동독 외무장관 메켈은 모스크바에서의 회담 일시는 소련 측 의사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메켈 동독 외무장관은 동독정부의 바르샤바 및 모스크바에서의 회담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두 회담에서 “새로운 민주적 정부의 자부심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발언하였다. 특히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과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통일독일의 나토 회원국 지위 유지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서방 측이 변화한다”는 조건 하에서라면 모든 것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겐서 서독 외무장관은 소련 측의 행동 반경을 고려하면서 모든 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군축 문제 및, 유럽 내 나토의 문제, 그리고 헬싱키협정 프로세스의 목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외에도 소련을 국제적 경제·금융제도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은 소련의 표시한 바 있었던 우려를 고려하여 서독과 동독의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 조약의 전문을 변경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동독 주둔 소련군에 대한 서독과 동독의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의 영향은 메켈 동독 외무장관에 따르면 동독 예산 중 2,300만 동독 마르크에 상당하는 생필품 보조금 및 4,000만 동독 마르크에 달하는 동독 주둔 소련군에 대한 보조금에도 미치게 될 것이다.

동독 외무장관 메켈은 2+4회담에 있어 5개국이 소련이라는 1개의 국가에 반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는데, 이에 대해 겐서 서독 외무장관은 그를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소련 측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두 독일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7 E

문서
번호 249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특별 회의에 대한 연방정부 성명
1990년 5월 1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연방 수상 헬무트 콜; 유럽위원회; 유럽위원회 의장 자끄 들로르; 유럽공동체; 서독

내용_

콜 수상은 성명을 통해 독일통일과 유럽의 통일은 서로 부합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연방정부가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특별 회의에서 다른 국가 및 정부수반들로부터 받은 지지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독일통일과 관련한 독-독 간 협상 상황을 전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앞으로 개최될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유럽연합 경제통화동맹이 설립되어야 하며, 정치적 연합이 성립되고 유럽 역내 시장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독일통일을 위해 7월 2일에는 경제, 통화 및 사회통합 그리고 마르크의 도입이 완료될 것이며, 독일통일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세금 인상을 실시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출처_ Bulletin des Presse-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11.05.1990. Nr. 58. S. 453-456.



문서
번호 250

전승 4개국의 권한 및 책임의 소멸에 대한 보고
1990년 5월 14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율리우스 게오르크 루이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전승 4개국의 권한 및 책임의 소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2단계로 나누어진 전승 4개국의 권한 및 책임의 소멸을 논의하였다. 즉, 1) 통일 시 먼저 베를린에 2) 독일 전체는 이후 과도기 중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1, 2단계의 전승 4개국의 권한 및 책임의 소멸이 가능하게 보이는는 하나, 서독 외무부가 추구해 온 전 권한 및 책임의 동시 소멸 방식보다 더 문제가 많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전승 4개국의 권한 및 책임의 내용 및 그 범위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전승 4개국들은 민주적으로 통일된 독일을 자신의 법적 권리 행사에 있어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즉, 독일이 민주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통해 이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며 그로써 전승 4개국의 권한 및 책임도 그 목표 대상이 없어지게 된다. 이들의 점령 권한은 통일 시점까지 계속 해소되거나 수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48E

문서
번호 251

서독 외무부와 (새로운 인원이 배치된) 동독 외무부 간의 인적 협력 및 자문
-1990년 5월 11일 동베를린에서 열린 첫 대화-서독 외무부 101과 보고
1990년 5월 14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부 대표단; 동독 외무부 정부 대표단; 서독 외무부 (고위직, 명예영사 담당) 101과 베버-로르취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와 동독 외무부 간의 인적 협력 및 자문을 논의하기 위해 양 외무부에서 각각 9명의 파견단이 동베를린에서 가진 회의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메켈 동독 외무장관은 외무부 내에 과거의 외무부 기구와 병행하는 체계를 만들어 서독 외무부와와의 협력 및 자문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서독 외무부와 동독 외무부 간에 상당한 수준의 ‘호환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각각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구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장기적인 자문 및 협력이 가능한 부분은 예를 들어 수상청, 공보과, 의회담당과 및 조직 및 인사부 등이 있을 것이며, 그 외에도 2+4회담, 헬싱키 협정, 국제법, 유럽공동체 및 건축 부문에 대해서도 장기에 걸친 전문 분야 확충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기획실의 경우 베를린 자유대 알브레히트 교수가 책임을 맡고 있으며 이미 다른 서독 자문들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보고서의 작성자인 서독 외무부 고위직, 명예영사 담당과 베버-로르취는 서독 외무부 각 국과 과에 해당하는 부서를 설립하고 자문할 즉각적인 필요가 있다고 기록하였다. 특히 서독 외무부에서 파견된 자문인들이 자신의 과제가 동독 외무부 지도부가 아니라 각 부서별로 배당되었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동독 외무부의 새로운 조직 체계안도 전달되었다. 이 조직 재구성이 끝나는 대로 외국대표부 문제가 처리될 것이다. 동년 5월 22일까지 동독 외무부 관련 부서는 인사 계획을 작성할 것이다. 하지만 ‘광범위한 해고’는 더 이상 논의되고 있지 않다. 동독 외무장관 메켈, 동독 외무부차관 미젤비츠 등을 포함하는 동독 외무부의 고위 지도부는 자신감을 표시 하면서 동독 외무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구상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문서
번호 252

동독의 유럽공동체 귀속에 대한 유럽이사회 의장 연설 1990년 5월 16일

담당자 / 기관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의장 찰스 제임스 호히; 동독; 유럽공동체; 서독; 중·동 유럽 국가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헬싱키회의;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 아프리카 국가들, 카리브해 및 태평양 지역국가들 그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유엔

내용

호히 유럽이사회 의장은 자신의 유럽의회 연설에서 1990년 4월 28일에 개최된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특별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더블린회담에서는 서독으로의 가입 형태로 이루어지는 독일의 통일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고 별도로 유럽공동체 조약을 변경하지 않았다.

중·동유럽 국가들의 개혁 노력들을 재정 보조 및 무역 특혜 그리고 협력 파트너 협정 준비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벨기에, 프랑스 및 독일정부의 제안에 따라 각각 유럽연합 경제통화동맹과 정치연합을 위해 병행하는 2개의 회의들이 개최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유럽이사회의 3개 지도노선이 확정되었다. 민주적인 정당성, 효율적인 기구 및 일관적인 절차가 그것이다.

출처 <http://www.ena.lu>

담당자 / 기관_ 유럽의회; 더블린 유럽이사회; 동독 최고인민회의; 동독; 서독; 유럽공동체; 중·동유럽 국가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헬싱키회의; 유럽위원회

내용_

유럽의회는 독일통일을 지지하는 유럽이사회 결정을 환영하였다. 유럽의회는 독일통일이 유럽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있어 서독이 유럽공동체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유럽의회가 그 자문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유럽의회는 서독의 유럽공동체로의 통합이 유럽공동체 조약의 변경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제하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회는 서독의 유럽공동체로의 통합이 추가적인 경제적인 성장에 기여하리라는 유럽이사회의 의견을 인식한다. 유럽의회는 동독이 즉각적으로 유럽공동체의 여신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한다. 그러나 유럽의회는 유럽이사회가 '유럽의회가 1990년 4월 4일에 제안한 동독 특별지원프로그램'에 동의하지 않은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유럽의회는 동독에 대한 다자간 지원이 유럽공동체 가맹국들의 양자간 지원보다 더 선호되어야 하며, 이러한 다자간 지원이 가능한 한 유럽위원회가 조정하는 하나의 전체적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관된 의견을 피력하였다. 유럽의회는 헬싱키협정을 위한 정상회담이 금년 중인 1990년도 내에 개최되어야 한다는 유럽이사회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 밖에도 유럽의회는 독일의 통일과정이 동독주민들, 특히 그중 사회적 약자들의 이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출처_ Bulleti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18.06.1990, Nr. C 149, S. 172-174.



문서
번호 254

동독대사관과의 연락 및 협력에 대한 벨그라드 주재 서독 대사의 보고
1990년 5월 23일

담당자 / 기관_ 벨그라드 주재 서독 대사 한스외르크 아이프; 벨그라드 주재 동독대사관; 서독 외무부

내용_

벨그라드 주재 서독 대사 한스외르크 아이프는 동독대사관과의 연락 및 협력에 대해 서독 외무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통일과정이 시작된 이후 양 대사관 간의 연락이 강화되었다. 동독 대사인 지크프리트 북과는 1988년 여름 이후 “정확하고도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그 관계는 1989년 가을 이후 더욱 가까워졌다.” 동독 대사인 지크프리트 북이 이전에는 동독체제의 우월함의 의식을 표현했다면, 이제는 그보다는 ‘우호적이고 명확한 상황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는 그 이전에도 모두 독일인이라는 ‘우리의 느낌’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곤 했다.

즉, 전반적으로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동독 측에서는 계속 외무부에 고용이 유지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우려하는 모습이 보인다. 1주일 전에 동독 대사는 서독 대사를 정원 파티에 초대했었던 바가 있다. 동독대사관 측에 서독 측의 외교 활동이나 서독정부의 정책 내용을 신문 등의 자료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는 동독대사관 근무자들의 자녀를 (벨그라드 소재) 서독 학교에서 받을지에 대해 지시를 요청하였다.

[이하 동독대사관의 사용 건물 등에 대한 조사 자료가 첨부됨]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문서
번호 255

동독과 이스라엘 간의 외교 관계 수립 동독 측 임시 대리 대사(charge d'affaires)의 서독대사관으로의 인계 등과 관련한 서독 외무부 건물에서의 이스라엘 외무부 차관 메르하브와의 대화-서독 외무부 (근동 담당) 310과

1990년 5월 23일

담당자 / 기관_ 이스라엘 외무부차관 메르하브; 서독 외무부 (근동 담당) 310과 카울

내용_

서독 외무부 (근동 담당) 310과 카울은 동독과 이스라엘 간의 외교 관계 수립 등에 대한 이스라엘 외무부차관 메르하브와의 대화 내용에 대해 본 보고안을 작성하였다.

서독 외무부는 아직까지 동독과 이스라엘의 관련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정보를 거의 갖고 있지 못하기에, 동 대화를 통해 내용을 파악하기를 기대하였다.

서독은 다음의 방식들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1. 통상적인 의미의 동독 자체의 대사관 개설
2. 서독대사관과 행정실 공동 사용
3.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조약 46조에 근거한 보호국 대표(Schutzmachtvertretung) 방식
4.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조약 6조에 근거한 공동 대사관 개설 등이 그것이다.

[이하 이스라엘 텔 아비브의 서독대사관 건물 공간 상황 등 관련 상세내용 포함]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1990년 6월 1일 겐서 서독 외무장관과 메켈 동독 외무장관의 회담-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대화안

1990년 5월 30일

담당자 / 기관 겐서 서독 외무장관; 메켈 동독 외무장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내용

이 문서는 1990년 6월 1일 겐서 서독 외무장관과 메켈 동독 외무장관의 회담 준비를 위해
서독 외무부 정치국 내에서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에서 작성한 보
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2+4회담, 나토 정상회담 및 바르샤바조약기구 관련: 겐서 서독 외무장관은 메켈 동독
외무장관에게 자신의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허드 영국 외무장관 및 베이커 미
국 국무장관과 뒤마 프랑스 외무장관과의 회담 내용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
외 다음의 안보 정책적 의제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할 것이다: 나토의 변화, 헬싱키협정
의 틀을 통한 군축 및 안보 체제 구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독과 동독의 2+4협상
중의 입장은 가능한 한 일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나토 정상회담 및 바르샤바조약기구
정상회담의 내용을 서로 전달해야 한다.
2. 폴란드와의 대화 관련: 통일독일이 폴란드와 최종 조약을 체결한다는 점, 현존하는 국
경을 인정한다는 점, 영토 변경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폴란드의 주
권과 영토적 일체성을 인정한다는 점 등에 동·서독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경문제에 집중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소련과의 경제적 관계: 소련 측의 안전보장 이익이 독일통일 과정 중에 특별히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서독은 이와 관련해 소련과 2차례의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동·
서독 간의 경제, 통화 및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소련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소
련의 유럽공동체 내 통합 등을 통해 소련 측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금융 문제나 소련군 주둔 문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서독은 소련
과 동독 간 회담 결과를 기꺼이 전달받고자 한다.
4. 인적 측면: 이 문제는 민주화 과정에서 새로 구성된 동독정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동
독 외무부 인력의 서독 외무부 배치는 전문성에 있어서나 법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다.
[이하 문서에는 헬싱키협정에 대한 공동 이니셔티브 발의 준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문서
번호 257

동독 외무부/서독 외무부 공동위원회 개회 회의에서의 겐서 서독 외무장관의
모두 성명

1990년 6월 1일

담당자 / 기관_ 겐서 서독 외무장관; 서독 외무부; 동독 외무부

내용_

동독 외무부/서독 외무부 공동위원회 개회 회의에서 겐서 서독 외무장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모두 성명을 발표하였다.

두 정부는 국가통일(Vereinigung)을 지향하며 이 통일과정이 유럽통일(Vereinigung)의 일부로서 질서 있고도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한다. 이 과제의 수행을 위해 긴밀한 협의가 요청된다.

2+4회담의 틀 속에서 진행되는 통일의 대외적 측면에 대한 합의는 12월의 헬싱키협정 특별 정상회담 이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헬싱키협정 프로세스는 이때 더 강화되고 또 제도화될 것이다.

또한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군축 문제도 중요한 의제이다.

경제, 통화 및 사회통합의 효력 발생을 통한 동·서독의 통일에 있어 유럽 역내 시장과 관련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문에 각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동독의 소련 및 다른 국가들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문서
번호 258

동독과 이스라엘 및 대한민국과의 국교 수립-서독 외무부차관 주트호프와
동독 외무부차관 돔케의 대화-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제정치과(210과) 보고

1990년 6월 1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차관 주트호프;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 담당) 국제정치과(210과) 브란덴부르크; 동독 외무부차관 돔케 박사

내용

1990년 6월 1일의 서독 외무부장관의 동베를린 방문의 일환으로 서독 외무부차관 주트호프는 동독 외무부차관 돔케와의 회동에서 동독과 이스라엘 간의 외교 관계 수립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는 이를 통해 새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메켈 동독 외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대화 의향이 담긴 이스라엘 외무장관 아렌스의 서한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동독이 전후배상금(Wiedergutmachung)의 마지막 1/3을 지불하는 것을 그 전제로 내세우면서, 상징적인 제스처는 이를 대신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그와의 협상에서 ‘불량수표’가 발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대인 나치보상 위원회(JCC)’는 과거 재산에 대한 청구권 실현을 위한 협상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서독 외무부차관 주트호프는 재산 반환에 대한 (이스라엘과 동독 간의) 대화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 재정적 지불을 할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전체 독일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서독은 지금까지 약 1,000억 마르크를 이미 지불한 바 있다).

대한민국에 (동독) 외교 대표를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단지 독일이 한반도의 남북 관계에 있어 균형적 태도를 보이는 정도를 원한다. 이 때문에 서독은 북한의 동독대표부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문서
번호 259

서독 외무부와 동독 외무부 간 연락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제정치과(210과) 보고

1990년 6월 1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과장 람바흐; 동독 외무부; 서독 외무부와 동독 외무부 간 연락위원회

내용

1990년 6월 1일 베를린에서는 양 외무부장관의 주재 하에 서독 외무부와 동독 외무부 간
연락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었다. 양측 간에 앞으로의 과제 및 기대사항에 대한 의
견 교환이 이루어진 후에 다음과 같은 실무단이 구성되었다:

- 군비 통제 및 군축,
- 유엔,
- 유럽공동체 및 경제 문제,
- 남북 문제,
- 외국 문화정책(공공 문화외교),
- 법무 및 영사문제,
- 행정적 문제

등을 각각 담당하는 실무단들이 그것이다.

각 실무단은 각각의 재량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후 연락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문서
번호 260

동베를린에서 열린 겐서 서독 외무장관과 메켈 동독 외무장관의 회담-서독 연방 외무부 21실 보고

1990년 6월 1일

담당자 / 기관_ 한스-디트리히 겐서 서독 외무장관; 마르쿠스 메켈 동독 외무장관; 서독 연방
외무부 21실 회의 실장; 동독 외무부

내용

겐서 서독 외무장관은 통일독일의 나토 및 바르샤바조약기구 동맹 회원국 지위 문제를 비
엔나 군축협상 및 헬싱키협정 프로세스와 결부시킨다는 점을 메켈 동독 외무장관에게 강
조하였다. 그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나토의 전략 변화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도 언급하였다. 소련은 나토 및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이와 같은 변화 움직임에 많은 관심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메켈 동독 외무장관은 1990년 6월 6-7일에 모스크바에서
열릴 바르샤바조약기구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하였다. 헝가리는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겐서 서독 외무장관은 소련이 요구한 바 있는 정치분쟁해결센터
는 베를린에 설립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입증센터(Verifikationszentrum)는 또 다른 곳
에 설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메켈 동독 외무장관은 헬싱키협정 프로세스에 있어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간의 완충
지역 기능을 할 수 있을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및 동독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는 관련 내용을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및 헝가리 외무장관 및 이탈리아, 유고슬라
비아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협의 중이라고 하였다.

폴란드의 최근 바르샤바조약 관련 국경정책과 관련해 겐서 서독 외무장관은 폴란드가 국
경 관련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데 우려하였다. 그는 두 독
일 국회 간의 공동 결의가 지닐 구속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지금 시점에 국경조약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발언하였다.

향후 동베를린에서 열릴 외무장관급 2+4회담에서는 특히 전승 4개국 권한이 베를린 문제
와 결부되는 측면에 대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메켈 동독 외무장관은 동
독에 주둔하는 소련군이 남아 있는 한 연합국도 베를린에 계속 남아 있게 될 것이라는 맥
락을 지적하며, 이에 동의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7 E

문서
번호 261

동독 외무부 1990년도 하반기 수입 및 지출 개관
1990년 6월경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부

내용_

이 문서에 포함된 표에서는 동독 외무부 1990년도 하반기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개관이 이루어졌다.

이 목록에는 동독 외무부의 개별 예산안 항목들에 대한 추정 비용 및 예산안, 그리고 동독대사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유엔 기여금, 외국대표부들에 대한 서비스 비용 등이 포함되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문서
번호 262

통일 전까지 외교정책의 상호 보고, 자문 및 협의를 내용으로 동·서독 외국대표부에
전달된 지사-서독 외무부차관 주트호프

1990년 6월 3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차관 주트호프; 동독 외무부; 동·서독 외국대표부

내용_

서독 외무부는 각 외국대표부에 대해 통일 전까지 동독 외국대표부와외의 외교정책의 상호 보고, 자문 및 협의에 대해 본 지시를 전달하였다.

서독 외무부와 동독 외무부 간 연락위원회는 1990년 6월 1일에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다음의 실무단들이 구성되었다. 군비 통제 및 군축; 유엔; 유럽공동체 및 경제 문제; 남북 문제; 외국 문화정책(공공 문화외교); 법무 및 영사문제; 행정적 문제 등을 각각 담당하는 실무단들이 그것이다.

서독 외무부와 동독 외무부 간 연락위원회는 양 외무부 간 관계에 대해 다음 내용을 결정하였다.

1. 양국 외국대표부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2. 양국의 외국대표부들은 그 주재국에 대해 양국이 통일을 준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전달한다. 이 점은 다른 다자간 부문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3. 상호 간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다.
4. 상호 초청 및 지원은 '눈에 특별히 띄지 않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서독의 정보 무선통신(Informationsfunk) 및 정치·문화 업무 자료가 동독 측 외국대표부들에게도 개방될 것이다. 또 동독 외국대표부들은 서독 외국대표부들에 대해 동독 공보서비스(PID)의 정보 및 '외교정책 통문(Außenpolitische Korrespondenz)'의 내용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서독 외국대표부들은 동독 외국대표부들의 예산, 회계 등의 규정 도입에 있어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담당자 / 기관_ 파리 주재 서독 대사 페퍼; 서독 외무부

내용_

파리 주재 서독 대사 프란츠 페퍼는 파리 주재 동독대사관 총무 담당 획커와의 회동에 대해 보고하였다. 동독대사관 총무 담당 획커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서독대사관을 방문하였다.

1. 양 대사관 간의 협의 및 정보 교환(및 관련 내용의 언론 공표)
2. 프랑스와 동독 간 조약들의 검토 및 분류
3. 파리 소재 동독 부동산 자산 및 임대 관련 문제
4. 동독대사관 내 인력 감축 문제
5. 동독 드 메지에르 총리, 동독 국방부장관 에펠만의 방문 관련 논의
6. 화폐통합과 관련한 전환에 있어 동독 국영은행의 통지 내용이 서독 연방은행의 통지 내용과 상이한 점에 대해 서독 외무부 측의 검토가 필요함.

파리 주재 동독대사관 총무 담당 획커는 이상의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문서
번호 264외무부 본부 내 독일정책 관련 조직운영 조치-서독 외무부 (조직 운영 담당) 110과
1990년 6월 12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조직 운영 담당) 110과; 서독 외무부 산하 각 조직

내용

서독 외무부 조직 운영 담당과는 모든 서독 외무부 산하 조직에 대해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바뀐 조직운영에 유의하라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1. 독일통일의 달성과 관련한 외교정책적 문제에 대해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대리 직위를 도입한다. 서독 연방 외무부 21실 회의 실장이 동 신설 직위를 맡는다. 그 임기는 통일완료 시점까지로 한다.
2. 그리고 ‘2+4회담’ 실무그룹을 신설한다. 그 의장은 카스트롭 국장이 맡는다. 외무부 내 각 조직은 이에 대해 협력과 지원을 제공한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0 E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과장 람바흐; 서독 연방 수상실; 각 연방부; 서베를린 시정부(Senat) 연방과; 베를린문제
실무단 프랑스 정치자문역 그라생; 영국 정치자문역 대리 찰턴; 미국 정치자문역 대리 거
스;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단장 루이; 서베를린 시정부 시장실 실장 대리 브루흐; 그
외 각 대표자

내용

외무부는 다른 연방부들에 대해 베를린 문제 실무단(AGB)의 1990년 6월 14일 회의에 대
한 내용을 1번 첨부문서로, '연합국 권한의 소멸을 위한 실무단 준비에 대한 베를린 시정
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2번 첨부문서로 하여 전달하였다(본 문서에는 1번 첨부
문서만이 포함되었음). 그 외에도 이와 관련하여 1990년 6월 25일에 열릴 관계기관 회의에
대한 초청장도 발송되었다.

베를린 문제 실무단은 연합국들의 베를린에서의 권한과 관련된 문제를 a) 통일 달성 시기
이전 및 b) 그 기간 중, 그리고 c) 그 이후에 걸쳐 검토한다.

서독 외무부는 독일통일의 달성과 함께 전승 4개국의 권한 및 책임이 완전히 소멸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통일 당일에 있어 그에 상응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어떠한 점
령법적 규정들이 사전에 삭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3개 서방 전승국의
베를린 주둔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4개국 그룹의 명시적인 질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답변해야 한다.

[이하에는 연합국 권한 소멸에 관한 상세 내용이 포함되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2 E

문서
번호 266

1990년 6월 18일에 열린 동·서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 간의 대화-서독 외무부 기획실
보고

1990년 6월 18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기획실 소속 바이스 박사; 동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 알브레히트
교수; 폰 뎀 하겐 대령

내용

이 문서는 동·서독 외무부 기획실의 대표가 동베를린에서 가진 회의에 대한 보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회의에서는 ‘유럽의 하나로서의 독일’이라는 개념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에 대해 먼저 논의되었다. 알브레히트 동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은 나토 및 바르샤바조약기
구와 관련해서, 그리고 바이스 서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은 헬싱키협정 및 유럽공동체의 틀
안에서 유럽 내 독일이라는 목표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독 측은 자발적이며 선제적인 동·
서독 전력 감축을 공동 성명을 통해 발표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서독 측은 이 안에 대해
독일이 개별 취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는 비엔나 군축협상에서
다루어질 대상이라고 하였다.

동독 주둔 소련군의 ‘군사심리학적 상태’에, 그리고 이들과 일반 동독주민들 간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우파 성향이 띄는 저항이 일어날 위험도 커지고
있다. 동독 외무부 기획실은 2+4회담의 틀 안에서 유럽이라는 틀을 더욱 강조할 것을 제안
하였다. 이에 대해 서독 측은 통일독일의 주권문제를 더 전면에 부각시켜야 하며, 이미 복잡
한 2+4협상에 추가적인 문제들로 더 부담을 지우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알브레히트 동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은 메켈 동독 외무장관이 제안한 (두 동맹 사이에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및 폴란드로 이루어진) 3각 안전보장 지대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에 대해 서독 측은 그와 같이 ‘복잡한 안’이 ‘앞으로 남은 과도기 내에’ 실현될 수는 없
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알브레히트 동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은 위기방지센터와 같은 새로
운 유럽 내 기관의 신설에 대해 소련 측은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기만 한다면’ 만족할 것
이라고 하였다. 알브레히트 동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은 1990년 6월 7일에 모스크바에서 열
린 바르샤바조약기구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바르샤바조약
기구가 해체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2 E

문서
번호 267

독일 외교정책 관련 연방의회 의원 엠케의 1990년 6월 15일자 서신에 대한 입장-연방
외무장관 겐서에 대한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보고안

1990년 6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사민당 연방의회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대리 연방의회 의원 엠케; 연방 외무
장관 겐서; 서독 외무부 (나토 및 방위 담당) 201과 과장 대리 그뢰닝

내용_

서독 외무부 나토 및 방위 담당과 과장 대리 그뢰닝은 독일통일에 있어 외교정책적 측면에
대한 사민당 연방의회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대리 엠케 연방의회 의원의 서신에 대해 겐서
서독 외무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엠케 연방의회 의원 및 사민당은 이 서신을
통해 여론에서 좋은 인상을 확보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사민당 측은 사민당 측
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동독 외무부와와의 협력에 있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뢰닝 대리는 엠케 하원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각각 평가하였
다: 1. 유럽 내 재래식 전력 조약(유럽통상전력조약, VKSE)에 대한 동·서독의 이니셔티브;
2. 생화학 및 핵무기의 포기; 3. 화학무기 및 핵무기의 철수; 4. 유럽 내 안전보장체제에 대
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통일독일에 적용되어야 할 시한부 경과 규정들; 5. (동독 주둔)
소련군의 군축 및 소련군 관련 부담 비용의 감소; 6. 구동독지역 내 독일군 전력에 대한
특별 규정; 7. 유럽 내 안보체제 및 헬싱키협정의 제도화.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2 E

문서
번호 268

동독의 해외 토지에 대한 동·서독 간 전문가 회담-서독 외무부 111과 보고 1990년 6월 21일 및 7월 13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해외대표부 대지 및 시설 관리 담당) 111과; 동독 외무부; 건설
부문 전문가들

내용

동·서독의 법률 전문가들은 본에서 동독의 해외 토지에 대한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가졌다.

1990년 6월 22일에는 재정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동독 토지 부문의 상황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토지담당 부서는 연이어 해체될 위기에 처해있다. (개축 등을 통해) 토지를 보존하려는 조치들은 중단되었다. 이를 서독 외무부로 질서정연하게 이전시키는 데에 문제가 존재한다.

이하에는 이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열거되었다. 동경에서는 동독대사관 건물 소유주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 워싱턴에서는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때문에 계획되었던 건물 신축이 중지되었다. 모스크바에서는 상업적 대지 이용과 관련해 현황 파악이 필요하며, 거주용 주택들은 부분적으로 기존 이하의 상태에 처해 있다. 헬싱키의 동독 사무실 건물은 좋은 위치에 있기에 서독대사관 사무실로 사용할 것을 검토 중이다. (동독과 타 국가들 간의 기준) '사회주의적' 상호 합의의 법적 문제나 법적인 후속 결과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일반적으로 (독일대사관이나 문화원 등 시설용으로) 고려할 만한 건물들이 있을 경우 그 지역 대사는 이를 방문해 살펴보아야 한다.

1990년 7월 16일의 논의에서 서독 외무부는 동독 내 토지나 (필요하지 않은) 동독 외 토지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한 민간 기관의 설립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동독이 임대했던 대부분의 부동산들을 '통일독일에서' 인계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독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다른 국가들과 쌍방 간에 무상임대합의를 해지해야 하며, 이로써 동베를린 소재 외국대표부들에게도 통상 시장 가격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임대자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동독기관들 내의 설비는 꼭 필요할 경우에만 비용지불 없이 인계 받는다. 그 외의 경우에 이들은 (예술품이 아닌 한) 현지에서 판매한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담당자 / 기관_ 동독 총리 로타 드 메지에르; 유럽이사회 의장 찰스 제임스 호히;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에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내용_

비회원국 총리가 유럽이사회 회의에 초대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동독 총리 로타 드 메지에르는 더블린 유럽이사회에서 독일통일의 진행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청받았다. 유럽이사회 의장인 아일랜드 대통령 호히는 또한 아일랜드 섬 역시 언젠가 통일될 수 있으리라는 점 때문에 드 메지에르 총리를 초청하였다. 아일랜드 대통령청은 독일통일 문제를 일찍부터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였다. 드 메지에르 총리는 본 더블린으로의 초청은 유럽공동체가 서독만이 아니라 독일 전체를 연관시켜야 한다는 독일연방정부의 입장에 힘입었다는 점에 감사를 표했다. 독일통일 역시 예를 들어 어업 및 농업 부문에서 문제들에 부딪힐 수 있다. 드 메지에르 총리는 본인의 식사(武辭)에서 중·동유럽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밖에도 소련이 지닌 ‘정당한 안보 이익’에 대한 인정이 필요할 것이다. 바르샤바조약은 “시간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한계가 있다.” 소련은 독일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출처_ Frankenberger, Klaus-Dieter. De Maizière baut Brücken über alte Gräben.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7.06.1990.

문서
번호 270

워싱턴 주재 동독대사관의 지원 요청에 대한 워싱턴 주재 서독대사관의 보고
1990년 6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위르겐 루푸스; 워싱턴 주재 동독대사관; 서독 외무부

내용_

본 회동은 워싱턴 주재 동독대사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서는 워싱턴 주재 서독대사관이 그에 어떠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가 이루어졌다.

1. 부동산 관련 문제: 동독은 워싱턴에 (28개 아파트가 들어선 주거 블록, 대사 관저 및 대사관 사무실(Kanzlei) 설치 요구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본 회동에서는 그 사용처 및 금융적 지원에 대해 논의되었다.
2. 회계: 1990년 7월부터 동독대사관의 회계는 서독대사관의 원칙과 규정에 따른다. 그에 상응하여 계좌가 만들어졌다.
3. 문서 수발 업무: 동독대사관에 대해서도 연방 차원의 문서 수발 업무가 개시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논의가 되었다.
4. 그 외 일반적 사항: 동독대사관 내의 분위기는 좋지 않은 상태이다. 외교관 인력을 제외하고는 모든 파견 인력이 소재국인 미국에서 떠났다. 그에 대해 비밀번호가 부여된 전화회선과 같은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1990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 알브레히트 교수;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를 국장

내용_

동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 알브레히트 교수는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를 국장에게 “동독 측이 ‘국제법적 최종 규정’과 관련해 갖고 있는 질문들의 리스트”, 즉 ‘쟁점 리스트’라고 일컬어지는 본 목록을 전달하였다. 여기에는 각각의 관련 질문 및 쟁점, 그에 대한 해결안 또는 코멘트가 열거되었다. 이는 I. 전문, II. 국경문제 III. 유럽 내 안전보장체제를 고려한 정치·군사적 문제 IV. 베를린 문제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었다.

전문에는 독일통일에 영향을 줄 주요한 국제적 측면들에 대해 일반적인 정치적 성명이 발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전문에서는 이 문제가 국제법적 최종 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포함되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국경문제 규율을 위한 기본 원칙들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여기에서는 동·서독 공동으로 (다른 상대국들이 성명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일방 성명을 발표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성명은 전승 4개국에 의해 독일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최종 규정의 틀 안에서 양지하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세 번째 부분인 유럽 내 안전보장체제를 고려한 정치·군사적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 독일군 전력의 최대 규모 제한 등이 다루어졌다. 동 문제 역시 동·서독 공동의 일방 성명을 통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또한 구동독 영토의 군사적 지위에 대해서 동·서독 간에 조약을 통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소련군의 현재 동독지역 주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독일과 소련 간의 2자 간 협정에 의해 세부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베를린 문제를 다룬 IV절에서는 그 중에서도 전승 4개국의 권한과 기능들이 독일의 책임하로 전환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법적 최종 규정에 이은 전승 4개국의 통일독일과의 조약 체결을 통한 규정이 뒤따라야 한다. 이 외에도 전승 4개국과 통일독일 간에 항공교통 규정에 관한 새로운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3 E



문서 번호 272 본에서 열린 동-독 간 유엔 실무단 2차 회의-서독 외무부 전문
1990년 7월 5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서독 유엔 실무단

내용_

이 문서는 본에서 열린 동독과 서독의 유엔 실무단 간의 2차 회의에 대한 보고이다. 이 회의에서는 다음의 내용이 논의되었다.

유엔 사무총장이 1990년 9월 초에 동베를린을 방문할 계획이다. 동독은 그때 지난 수년간 유지했던 유엔고문금지협약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철회할 것이다. 동독은 시민 개개인의 항의권을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제1차 선택적 의정서의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곧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미국은 동독이 동유럽 국가 그룹을 탈퇴하는 것이 동 그룹의 해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독일통일에 관한 유엔에서의 통지 방식과 시점은 예상하기로는 오는 1990년 9월의 다음 동독과 서독의 유엔 실무단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다. 독일통일에 관한 유엔에 대한 전문 초안의 작성은 서독 측에서 맡는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1990년 7월 10일

담당자 / 기관_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동독대표부;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Bingel만

내용_

이 문서는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Bingel만이 코메콘 동독대표부로부터 받은 서한을 서독 외무부에 전달한 것이다. 이 서한의 내용은 경제상호원조회의의 개혁 및 동 기구 내 동독 혹은 독일의 회원자격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상호원조회의의 비회원국은 동 기구 회원국들과 협력할 수 있는 별도의 형식이 존재한다. 비회원국의 협력 및 참가를 위한 조건은 동 경제상호원조회의와의 협정 체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유고슬라비아와 핀란드, 이라크 및 멕시코와 협정이 체결되었던 바 있다.

앞으로 통일독일이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점이 전제되기 때문에, 독일이 경제상호원조회의의 정규 회원국 지위를 갖는 것은 비용 대비 효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른 한편, 경제상호원조회의에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다자간 관계들을 자의적으로 단절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11월 하순으로 예정된 경제상호원조회의 회의에서 새로운 조직 구성에 대해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때 동독의 정규 회원국 지위의 해지가 의결될 경우, 그 전에 동독의 경제상호원조회의에서의 (약 13-15%에 해당하는) 지분을 상실하지 않도록 보전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동독은 경제상호원조회의의 전 재산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자는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측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1.668 E

문서
번호 274

통일 시점의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소련 내 외교적 대표권한의 이전 과정-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의 보고

1990년 7월 13일

담당자 / 기관_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클라우스 블레히; 서독 외무부

내용_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클라우스 블레히는 서독 외무부에 대해 통일 이후 소련에서 향후 독일의 외교적 대표 문제가 어떻게 될지에 관해 자세하게 보고하였다.

독일의 주소련 대사관의 향후 형태는 소련을 독일의 정책 속에서 어떠한 비중을 두고 다룰 것인지에 달렸다. 소련과의 관계에서 동독이 남긴 유산들, 즉 양자 간의 상호관계 및 행정 인프라 구조를 적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연방독일공화국(통일독일)의 대사관 등으로 그를 대신하지 않은 채 예를 들어 민스크의 영사관 같은 소련연방 부속 국가들 내의 동독 기관들을 폐쇄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약 11,000명의 동독주민이 소련에 거주 중이기에 그에 대한 관리·보호 업무는 중요하다. 소련 내 주로 에너지산업 및 광산업에 근무하는 동독 출신 노동자 및 학생들의 수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천천히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감소는 그것이 소련산업 및 교육의 실제 국제적 비중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다.

모스크바에는 현재 동독 경제부 산하기관으로 상당부분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무역대표부가 존재한다. (동 대표부에서) 2-3개월 전에 400에서 500명 정도에 달했던 근무자들 중에 현재는 국가기관의 이전 때문에 약 80명 만이 남아 있다. 하지만 사유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이렇게 자리를 떠난 이들도 통일된 독일에서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군수산업도 동 무역대표부의 담당이었다. 두 독일 간 '사업 공동체들' 간의 구분선은 곧 사라져야 할 것이다.

소련 주재 동독 대사는 자신의 연락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는데, 동독이 역사적으로 소련에서 차지한 역할을 고려할 때 이는 독일연방공화국에 큰 이득이 될 것이다. 경제의 민영화에 있어서도 그에 상응하는 공간이 가능한 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모스크바 현지의 상황이 변화하고 있기에 경우에 따라 어려워졌고, 때로는 단지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 연방재정부의 조속한 개입이 필요하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문서
번호 275

2+4조약과 통일조약의 관계에 있어 동·서독 외무부들 간의 관할권에 대한 자문-
서독 외무부 21분과의 보고

1990년 7월 1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부; 서독 외무부 21분과 과장 폰 슈투드니츠

내용_

서독 외무부는 동·서독 외무장관들 및 차관들에 대해 동·서독 외무부들 간의 관할권에 대해 보고하면서 앞으로 남은 절차에 대해 동의를 요청하였다. 자문 주제는 2+4조약과 통일조약 간의 관계였다.

동독 측은 안전보장 정책적 주제를 통일조약의 틀 안에서 규율할 것을 요구했다. 서독 측은 그러한 규율은 해당 주제가 2+4회담에서 협상될 내용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그 외에도 2+4회담의 맥락에서 다뤄질 문제들을 너무 이른 시기에 통일조약을 통해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동·서독의 협상 공간을 축소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동독 측은 그다지 기존 입장을 전적으로 바꾸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1990년 7월 20일에 동독과 협상을 속개할 때 서독 측의 입장을 분명하게 확인시키면서 동독 측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을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요구해 보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4 E

문서
번호 276

통일조약에 대한 1990년 7월 18일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회의-서독 연방 외무부
21실 보고

1990년 7월 18일

담당자 / 기관_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서독 외무부 21분과 과장 폰 슈투드니츠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의 독일통일 내각위원회에서 겐서 서독 외무장관이 통일 이후 전승 4개국에 독일에 대해 갖고 있는 권한이 소멸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에 대한 전승 4개국의 권한과 관련하여 먼저 소련과 3개 조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1. 현 동독영토에 주둔하는 소련군의 향후 3-4년 주둔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 2. 현 동독영토에 주둔하는 소련군의 재정적 지출에 대한 통화 가치 균등화(Währungsausgleich) 조치에 대한 조약; 3. 통일독일과 소련 간의 새로운 기본조약이 그것이다. 그 밖에도 서독은 소련 측과 독일연방군이 미래에 동독 인민군을 포함할 것과, 그 전력의 수효를 제한할 것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하였다.

폴란드와의 근린 관계 조약 체결에 있어 이를 소련과의 조약 체결과 가능한 한 가까운 시기 중에 처리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이든 그 이전에 폴란드와 국경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기본법과 관련해 기본법 23조의 삭제 및 전문의 변경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은 이상에 있어 전제 사항이다. 기본법 146조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연방법의 동독에 대한 적용 문제는 더 논의되어야 한다. 연방법의 전부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적인 적용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각각의 근거를 판단하기 위해 적용될 법령들과 적용되지 않을 법령들 각각의 리스트가 작성되었다. 마찬가지로 연방 헌법재판소법의 적용과 관련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문서
번호 277

‘독일통일’ 내각위원회에 보내는 1990년 7월 17일 파리에서 개최된 2+4회담에 대한
서독 외무부의 보고-서독 연방 외무부 2국의 보고

1990년 7월 18일

담당자 / 기관_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서독 연방 외무부 2국 국장 대리 회의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가 ‘독일통일’ 내각위원회에서 1990년 7월 17일 파리에서 개최된 2+4회담에 관해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파리의 회의 중에 1990년 7월 15일과 16일 간 소련에서의 회담을 통해 독-소 간 협상에 돌
파구가 마련되었던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제 국제법적 최종 규정의 구조에 대해
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2+4협상을 다음 헬싱키협정 정상회담 이전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이제 불식된 상태이다.

이를 통해 독일통일의 대외적 측면의 핵심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2일차 회의에서는 실무자
급 회담과 함께 국제법적 최종 규정의 문안 교정이 개시될 것이다. 동 최종 규정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전문: 전승 4개국의 권한 소멸; 양독 간 공동성명 내용이 그 ‘국제법적 최종 규정’의 맥락
혹은 그 일부로 포함된다는 규정.

폴란드가 참가한 오전 회의에서는 폴란드 국경문제라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모든 참가국
들 간에 완전한 의견의 일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견 일치는 오로지 특히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서방 측 국가들의 지원 때문에 가능했다.

[이하에는 국경문제 관련 규정에 대한 상세 내용이 포함되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문서
번호 278

통일조약에 대한 서독 외무부의 발표 보고-서독 외무부 21분과를 통한 서독 연방 내무부의 보고

1990년 7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연방 내무부 소속 뒤스부르크; 서독 외무부 21실 폰 슈투드니츠 실장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21실 폰 슈투드니츠 실장이 동독과의 통일조약 관련 협상 현황 및 그 내용에 대해 보고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동독이나 서독의 제3국과의 국제법적 조약 체결을 위해서는 통일조약 내에 특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동독과의 협상 및 의견의 일치를 통해 이러한 국제법적 조약과 관련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통일조약의 서명이 2+4회담 종료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고 있기에, 서독은 동독 측과 통일조약 내용의 사후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해 서명을 발표한다는 점에 합의한 바 있다. 외무부는 동독 외국대표부들의 폐쇄 및 동 대표부 재산의 서독 외무부로의 이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일부 의사록 보고를 통일조약의 부록으로 포함하자고 제안하였다. 유럽의회에서 향후 동독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것과 관련하여, 독일은 유럽의회와 1994년도의 다음 유럽 의회 선거 이전에 그에 상응하는 규정을 만들 것에 합의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문서
번호 279

동독의 해외 기관 접수를 통한 새로운 서독 해외대표부 설립-서독 외무부 111과
보고

1990년 7월 24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해외대표부 대지 및 시설 관리 담당) 111과 바인델; 서독 외무부
(조직 운영 담당) 110과

내용

서독 외무부는 동독의 해외대표부의 대지 등의 접수 혹은 폐쇄에 대해 보고하였다.
총영사관이 설립될 가능성이 있는 민스크, 단치히, 브레슬라우, 슈테틴, 호치민시(사이공시)
및 그 외 독일정부가 활동을 위해 용도를 검토 중인 프종-장 및 프놈펜의 경우 동독의 해
외대표부의 대지의 폐쇄 절차가 중단되었다.

한편 베이라, 산시바, 기네아-비사우, 바르나 및 프레스부르크(브라티슬라바)의 경우에는
대표부의 설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서독 외무부는 후자의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대표부
설치 등의 계획이 없다는 점을 동독 외무부에 전달하였다.

이 사안들은 아직 동독 외무부가 소관해 규정할 사안들이다. 이 때문에 조속한 시간 내
에 그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문서
번호 280

통일조약과 관련한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회의-서독 외무부 21실 보고
1990년 7월 24일

담당자 / 기관_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서독 외무부 21분과 과장 폰 슈투트니츠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가 1990년 7월 24일의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회의의 결과를 정리·보고한 것이다.

통일조약의 구조와 관련해 동 내각위원회는 내무부장관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에 이어 기본법에 대한 여러 수정 사항들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방주들과 동독은 환경보호를 국가의 목표로서 기본법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으나, 그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기본법 23조는 삭제되고, 146조는 수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 현재 유효한 법령과 과도기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것을 용인하게 해주는 추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동독의 특별 권한들(Sonderrechte)에 대해서는 유엔이나 헬싱키협정이 아닌 통일조약 내에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독일통일기금’과 관련해서는 연방과 연방주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회의 참가자들은 동독에 연방법 일체가 적용되는 안을 선호하였다. 그 외에도 각 소관 부처가 제기한 개별 사항들에 관한 질문 및 그에 따른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동독에서 가능한 경제적인 지원 조치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었다. 동독 체제전환 지원에 대한 일반적인 유보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1990년 7월 31일

담당자 / 기관_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서독 외무부 21분과 과장 폰 슈투드니츠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7월 31일의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회의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회의에서는 먼저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의 동독에서의 효력 발생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 간의 교환에 있어 액수가 10만 서독 마르크를 넘는 총 6만 건 중 단지 300건에 있어서만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몇 주 간 더 작은 액수의 계좌들도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실업자의 수는 22만 명으로 보고되었다. 이들 중 단지 12만 명만이 실업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들을 위한 직업알선은 막 시작되었다. 4만 개의 취업가능한 일자리 중 단지 6천 개에 대해서만 직업알선이 이루어졌다. 다수 사업체는 재정적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서독 은행 및 신탁청의 더 적극적인 개입이 요망된다.

이 회의의 두 번째 논의 주제는 진행 중인 동·서독 간의 협상에 대해서였다. 1990년 8월 8일이나 9일에 연방의회 산하 위원회에서 선거권 조약에 대해 회의가 있을 것이다. 통일조약과 관련하여 동독정부 연정 내의 분열 때문에 동 조약이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였다. 그 외에 협상 상황이 부분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이 조약 없이 이루어지는 상황도 예상해 둘 필요가 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문서
번호 282

동독의 해외 청구권 청산-모든 서독 외국대표부에 보내는 서독 외무부 422과의
전문

1990년 8월 1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해외무역정책 원칙적 문제, 국제경제지원, 수출 및 해외투자 서비스, 대외 채무 관련 원칙적 문제, 국가 보험 무역 청구권의 차환(Umschuldung), 박람회 등 담당) 422과 소속 룽에; 각 서독 외국대표부

내용

이 문서는 동독의 해외 청구권 청산에 관해 서독 외무부가 모든 서독 외국대표부에 전달한 전문이다. 본 전문은 각 서독 외국대표부에 대해 상기 문제에 대한 처리 원칙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신뢰보호 원칙에 기반하여 동독과 채무국 간의 양자 간 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1990년 10월 3일 이후부터는 아직 존재하는 청구권의 청산은 연방 재무부장관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청산에 있어 특히 동독의 청구권이 개발원조 관련 채무나 무역채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개별 사례에 따라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조약에 따른 상황, 차환 및 경우에 따른 채무의 면제. 소위 청산 잔액(Clearing-guthaben)은 그 단기적 성격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소.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1.668 E

문서
번호 283

모스크바 소재 동독 토지의 인수 및 사용-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에 보내는
서독 외무부 (해외대표부 대지 및 시설 관리 담당) 111과의 전문

1990년 8월 1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해외대표부 대지 및 시설 관리 담당) 111과 우르모나이트; 모스
크바 주재 서독대사관

내용

이 문서는 모스크바 소재 동독 토지의 처리에 관한 서독 외무부의 전문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에서 무역 지원 및 문화정책은 국가기관이 담당하였다. 그런데 통일 이후 민간독립기
구들이 그 업무를 맡게 되자, 소련은 소련 내에 외교적 목적으로 묶여 있는 동독 토지가
이러한 독립적 기구들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
한 규정은 소련 측의 동베를린에서의 광범위한 토지 이용 이익에 대한 대가로서 간주되어
야 한다는 것이 서독 외무부의 입장이다. 모스크바 소재 동독 토지에 속한 주거 건물이
이를 독일 기업들에 임대하고자 하는 서독 국적항공사인 루프트한자에 의해 인수될 수 있
도록 노력 중이라고 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1.668 E

문서
번호 284

독일의 미래/내독부의 동독 연구-서독 외무부 기획실 보고
1990년 8월 1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연방 내독부장관 빌름스; 연방 외무장관 겐서; 서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
치트론

내용_

서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 치트론은 서독 연방 내독부장관 빌름스의 독일의 미래 및 동독 연구를 주제로 한 문서를 검토하는 보고서를 외무장관실에 제출하였다. 그는 이제까지 ‘많은 재정적 지원으로 뒷받침되었던’ 내독부의 연구들은 곧 실현될 독일통일로 이제 그 출발의 전제도 상실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내독부의 연구 프로젝트들이나 관련 학자들은 이제 예를 들어 외무부와 같은 다른 관할 부서로 인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왜냐하면 여기에 ‘축적된 전문적인 이해들’이 전환기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고 또 일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 외에도 동독기록물보관소가 문을 열고 독일 현대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동독연구를 위해 내독부는 1990년까지 연간 98억 마르크를 지원하였다. 1991년도의 예산에 이는 약 50억 마르크로 감액될 것이다. 내독부의 연구 재원의 일부가 외무부로 이전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그를 위한 더 상세한 설명과 협의가 필요하다. 연방 재무부장관과의 협의도 필요할 것이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문서
번호 285

서독과 동독 해양정책 간의 조정-외무부에서 열린 관련기관 회의-외무부 504과
보고

1990년 8월 6일

담당자 / 기관_ 솔레스비히-홀슈타인주 내무부; 본(Bonn) 주재 브레멘, 니더작센주, 솔레스비히-홀슈타인주 등 각 연방주 대표부; 서독 외무부 법무부 (남극회의 및 해상법, 항공법, 우주법, 국제환경법, 국제해양법 등 국제법적 특수부분 담당) 504과 과장 대리 킨더렌

내용_

이 문서는 솔레스비히-홀슈타인주 내무부에서 보낸 것으로 통일독일의 해양 구역 문제에 관해 논의한 회의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에 동독 측이 연안은 12해리의 폭을 지닌다고 본 반면, 서독 측은 이와는 반대로 연안이 단지 3해리의 폭을 지닌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연안 12해리가 국제법적으로 통상적인 영해 규정이 되었기에, 관련 기관에서는 동독의 연안을 동독 측의 현재 방식으로 산정해 포함시키는 데 아무런 반대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보다는 연안 12해리 규정을 통일독일에 전반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고려가 이루어졌다. 그러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공표되어야 할 것이지만, 통일조약의 내용으로 포함될 필요는 없다고 결론이 지어졌다. 그 외 5개 군사 제한구역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문서
번호 286

연방 하원 독일통일위원회의 자문-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제정치과(210과) 보고
1990년 8월 9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연방 하원 독일통일위원회;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과장 람바흐

내용

이 문서는 1990년 8월 9일에 열린 연방 하원 독일통일위원회의 자문에 대한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제정치과의 보고이다. 연방 하원 독일통일위원회는 본 회의에서 곧 이루어질 통일 의 시점과 형식, 절차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민당 소속 포겔 연방 하원의원에 따르면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원의 상당수는 가능한 한 1990년 10월 14일 이전에 이미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이 실현되는 것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의 조기 선거가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서독 연방 내무부장관 쇼이블레는 연방의회 선거일을 1990년 12월 2일로 확정하는 안을 상정하였다. 서독정부는 동독의 가입일정이 언제가 되던지 준비를 마치고자 하지만, 그 이전에 통일조약을 체결하고 비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조약이 마련되는 과정에 각 연방주들도 광범위하게 참여하였다. 동독에 대해 연방법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완료되었지만, 이와는 달리 수도문제는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하다.

겐서 외무장관은 1990년 9월 12일의 모스크바 개최 2+4회담에서 핵심적인 논의들이 완료될 것이라는 점을 전달했다. 전승 4개국들은 1990년 12월 2일 이전에 통일되는 것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5 E

1990년 8월 20일

담당자 / 기관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대리 하이켄; 울란-바토르 주재 동독 대사 첼너; 서
독 외무부

내용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대리 하이켄은 울란-바토르 주재 동독 대사 첼너가 같은 곳에
주재하는 벨기에 대사에게 토로한 어려움에 대해 보고하였다.

울란-바토르 주재 동독 대사 첼너는 통일 당일 자신이 담당하는 동독대사관을 어떻게 해
야할지 동독정부로부터 지시 받은 내용이 없어서 '완전히 당황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대리 하이켄은 이 첼너 대사가 서술한 문제는 사실 (여기에서는
통일독일을 말하는) 서독의 이해와도 관련이 있는데, 왜냐하면 서독은 서독과의 종전의
관계보다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수준이었던 동독의 '몽골과의 핵심적인 관계'를 그로부터
물려받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통일독일의 동 대사관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조속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대리 하이켄은 울란-바토르에 1-2명의 공무원을 파견하여 울
란-바토르 주재 동독대사관의 인수를 준비하고 현황 파악을 하게 하는 것을 추천하였다.
비록 이제까지 동·서독 모두 몽골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단지 동독만이 대사관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이 대사관이 지금 문제가 된 것이다.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은 1990년 10월 14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란-바토
르에서의 외교 업무의 인수인계 작업을 위해서는 외무부로부터 그에 상응한 지시가 내려
와야 한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문서
번호 288

독일통일 이후 동독 외무부 및 동독 해외대표부 청산 관련 과제들-서독 외무부 회의-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보고

1990년 8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동독 외무부

내용_

이 문서는 독일통일 이후 동독 외무부 및 동독 해외대표부 청산 관련 과제의 논의를 위해 서독 외무부에서 열린 회의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외무부 110과는 통일 이후 종전의 동독 외무부에서 청산 업무를 담당하게 될 베를린 내 행정 및 청산 담당부서의 설립을 준비하였다. 동베를린 내 행정 및 청산 담당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동독 외무부 해외대표부들의 완전한 해체 전까지 현지에서 필요한 동 대표부 직원들에 시한부 계약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동 부서에서는 서류 자료의 확보 및 필요한 정보 및 연락망의 이전 등을 포함한 업무의 인수인계를 감독해야 한다.

뉴욕과 제네바(유엔), 비엔나(헬싱키협정 및 유럽통상협력조약), 파리(유네스코) 등에 있는 동독의 해외대표부의 해체에 있어 각각 어떠한 특이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서독대표부가 이들의 청산 업무를 담당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한편 동독영토에 주둔하는 소련군 문제는 그에 대한 관할이 동독 외무부에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 소련 측이 (통일독일과의 철군 협상에서 독일보다) '정보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동독 외무부의 전문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문서
번호 289

서독 외무부 직원들의 동독 외무부 소유 대지 시찰-서독 외무부 115과 보고
1990년 8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내부 업무 담당) 15과 소속 아우어; 동독 외무부 소속 비스만 등

내용_

동독 외무부의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을 논의하고 동독 외무부 소유 대지를 시찰하려는 목적으로 1990년 8월 14일과 15일 양일 간 동베를린에서 서독 외무부 소속 아우어와 동독 외무부 소속 비스만 등의 회동이 있었다.

[이하: 다양한 동독 외무부 소유 대지들에 대한 상세 설명 및 그 처리 내용]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문서
번호 290

메켈 동독 외무장관의 동독 외무부 직원 고별 연설
1990년 8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부; 메켈 동독 외무장관

내용_

메켈 동독 외무장관의 동독 외무부 간부들과의 본 고별 연설에서 임기 중의 과제들에 대해 회고하였다.

그는 본인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유럽 내 국가들이 새로운 독일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방식으로 독일통일을 만들어가는 데 큰 의무감을 가지고 임했음을 설명하였다. 동독 외무부는 “독일통일이 유럽통합의 동인이자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및 소련과의 관계에 새로운 기초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메켈 외무장관은 자신의 선도적 역할을 과대평가했음을 시인하면서, 결국 다른 외부 요인들과 사건의 뒤를 쫓아가는 상황도 있었음을 고백하였다.

그러한 어려움의 원인으로 동 장관은 동독 드 메지에르 총리와 의사소통 내지 협의 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는 동독 드 메지에르 총리의 자세 때문에 동독의 연립정부에 균열이 생겼었음을 비판하였다.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도 동독 드 메지에르 총리가 다른 자세를 취했다면 더 많은 동독시민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동독 외무부 직원들에 감사를 표하면서, 서독 외무부가 동독 외무부 직원들의 일반적인 채용을 거부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7 E

담당자 / 기관_ 바르샤바 주재 서독 대사 귄터 크낙슈테트; 서독 외무부

내용_

이 문서는 바르샤바 주재 서독 대사 귄터 크낙슈테트가 서독 외무부에게 폴란드 내 동독 기관들의 현황 및 서독이 이들을 계속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 보고한 전문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은 폴란드 내에서 자신의 대사관과 해외무역사업체들의 다수 대표부들 외에도 2개의 문화·정보센터(KIZ)를 바르샤바와 크라쿠프(크라카우)에, 그리고 3개의 총영사관을 브레슬라우, 단치히 및 스테틴에 운영하고 있었다. 그와 더불어 동독은 신규 건물 건축용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근래 폴란드가 서방 지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통일독일도 그에 상응하는 공식 대표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폴란드에 대해 동독기관들이 서독 및 향후 통일독일에 의해 계속 운영될 것이며 앞으로의 공동 협력을 요망한다는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폴란드 측도 그에 상응하는 자신의 독일 내 대표부들과 관련한 요구 사항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체 내용을 각 기관별로그가 아니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진행 방식이 제시되었다:

- 동독의 기존 지위 계승에 대한 일반적 내용 전달 및 대화 의사 제시;
- 동독대사관 폐쇄 및 그 업무를 서독대사관이 인계한다는 내용 전달;
- 브레슬라우, 단치히 및 스테틴브레슬라우 영사관의 인수 및 경우에 따른 폐쇄;
- 문화·정보센터의 원칙적인 유지 및 그 구체적 사용 방식에 관한 협상 가능성 제시;
- 상호 합의에 기초한 동독의 대지 관련 권한의 전환;
- 동독 소재 폴란드 측 기관들에 대한 폴란드 측 요구의 파악 등이 그것이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동독의 외교적 대표 업무의 중단 및 대사관 및 영사관의 폐쇄-동독 외무부 2국 현황 보고

1990년 8월 23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부 2국 인사·교육과

내용_

동독 외무부는 동독을 외교적으로 대표하는 업무의 중단과 대사관 및 총영사관의 폐쇄 그리고 모든 해외대표부들의 인력 감축에 대해 본 내부용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동독 외무부는 서독 외무부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에 따른 독일연방기본법의 적용일(1990년 10월 3일)에 동독의 주유엔 대표부 및 파견단과 외국의 해외대표부들, 23개국 또는 35개국 간 협상파견단 그리고 비엔나의 헬싱키협정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등의 활동을 중지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동독 측에서 현지에 배치되었던 인력은 그때까지 점진적인 방식으로 송환될 것이다. 동독 측의 부동산과 소유 재산의 (서독에 의한) 인계 및 그에 상응하는 청산 업무에 관해서는 서독 외무부와 협의된 바에 따른다.

동·서독은 유엔사무총장 앞으로 동독에 기본법이 적용될 것이며 종전의 동·서독 회원 지위가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는 내용 및 그와 관련된 다른 사항들이 포함된 공동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서한은 공식적인 문서로서 유엔총회에서 회람을 위해 제출될 것이다. 1990년 9월 30일까지 동독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동독 대사나 동독 대표를 통해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에 대해 통지가 이루어질 것이다(문서 중 통지문안 첨부: 첨부 문서). 그와 병행해서 베를린에서는 신임장을 받은 (외국) 대사들 및 각국 대표들에 보고가 전달될 것이다.

1990년 8월 30일까지 6개 대사관과 3개 총영사관이 폐쇄된다. 추가적인 9개 대사관의 폐쇄 및 해당 대사 및 대사관 인력의 귀국조치는 9월 초까지 이루어진다(첨부 2). 그 외 추가적인 10개국 대사가 귀국 조치되며 그들의 기능을 해당 대표부가 인계한다(첨부 3). 9월 초까지 모든 해외대표부 인력이 약 60% 정도로 감축된다(이는 약 직원 880명에 해당하며, 그 중 320명은 외교적 인원, 나머지 560명은 비외교적 인원이다). 그 이후에도 감원 조치가 이어진다(첨부 문서 4: 소환 조치 예정인 대사들의 목록).

[이하에는 상기한 첨부 문서 1-4가 포함되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문서
번호 293

동독 외무부 해체 및 동독 해외대표부 및 다른 외국기관의 청산-서독 외무부
(조직 운영 담당) 110과 보고안

1990년 8월 23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조직 운영 담당) 110과 소속 크리스티안 마티아스 술라가

내용_

서독 외무부는 동독 외무부의 해체 및 그 기능의 중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안을 준비하였다.

동독은 독일연방공화국 가입 시점부터는 더 이상 독립적인 국제법적 주체가 아니다. 동독 외무부와 동독의 해외대표부들은 늦어도 이 시점까지 폐쇄된다. 통일독일의 해외에서의 외교적 대표 관할권에 관해서는 통일조약 및 기본법상 서독 외무부의 관할권에 대한 내용에 기초하여 정한다. 서독 외무부는 (동독 외무부와 관련해) 행정 및 청산 기구(VAS)를 설립한다.

동독의 각 부 근무자들의 노동계약 관계의 처리는 통일조약에 따른다. 그에 있어 경우에 따라 서독 각 부에서 다시 계속고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자에 대해 '대기 기간'을 정한다. 경우에 따라 해외대표부 근무자들은 더 긴 기간의 대기 기간을 부여받는다. 가능한 한 빨리 위 현지 고용인원에 대해 노동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청산 업무에는 기본적으로 동독 외무부 및 동독 해외대표부의 해체에 직접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업무들뿐만 아니라 독일통일의 결과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독일의) 외무부가 담당하게 될 지속적인 업무들이 포함된다.

동독대표부 보유 대지의 사용 문제 및 동독이 임차한 부동산 등의 처리 문제에 대해 동·서독 외무부 간에 대화가 진행 중이다.

영사 업무와 관련하여 동독의 여권 및 여행신분증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점에 대해 각 해당국에도 통지해야 한다. 동독의 기존 국제법적 조약들에 관해서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자유 민주적이자 법치국가적인 기본질서에 근거하여 조약 상대국들에 대해 설명을 전달하여야 한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문서
번호 294

독일통일로 인한 외무부 업무의 증가-서독 외무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담당) 214 분과의 의견

1990년 8월 23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 서독 외무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담당) 214 분과 소속 엘펜캠퍼와 하악; 외무부 중앙행정실장 안센

내용

외무부 중앙행정실장 안센은 서독 외무부가 앞으로 동독 외무부의 어떠한 업무들을 인계 받을 것인지 혹은 서독 외무부가 어떠한 새로운 업무를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지시를 요청하였다. 그에 대한 서독 외무부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동독 외무부의 업무 중 독일과 가깝게 위치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과 관련해 발생하는 (정치, 영사문제, 교통 및 환경 등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문제들은 (통일독일) 외무부의 업무 대상이 된다. 동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가 계획되고 있기에, 관련국 방문을 위한 협의, 준비 및 실행 업무의 증가가 예상된다.

동독과 소련의 기존 관계를 고려할 때 (통일독일) 외무부는 앞으로 소련에서의 (교환학생이나 해외노동자 등과 같은) 동독 출신의 정치·사회적인 거주자 그룹들에 대한 경제, 문화, 법률 및 영사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감독과 관리 업무를 갖게 될 것이다. 여기에 소련 연방에 속한 제 공화국들과의 강화된 관계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외에도 헬싱키협정의 제도 안에서 유럽안보체제의 확충, 법률체제와 정치구조의 균등화 그리고 경제적·환경적 협력이 포함된 유럽통합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외무부에도 새로운 과제들이 부여될 것이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문서
번호 295

동·서독 외무부의 연락그룹-독일통일의 통지에 관한 유엔의 자문-서독 외무부
정치국 230과 보고

1990년 8월 24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유엔-원칙적 문제,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담당) 230과;
동·서독 외무부의 연락그룹; 유엔

내용

유엔에 대해 동·서독 간의 통일에 대한 형식적 통지를 하기 위해, 서독 외무부는 동·서독
외무부 연락그룹을 위한 초안으로서 보고를 작성하였다.

동독 측에서는 동독 드 메지에르 총리가 유엔에서 연설하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한편 유엔에 대해 어떠한 형식으로 동·서독 간의 통일에 대한 형식적 통지를 할지에 대해
확실한 안이 작성되지 못했다. 서독 외무부는 두 독일의 통일 ‘이후에’ 통지를 하자는 의
견이었던 데 반해, 동독 외무부는 그 ‘이전에’ 하자는 견해를 보였다.

그 외에도 ‘기본법’으로의 가입인지 아니면 ‘서독’으로의 가입인지와 같은 어구상의 문제
와 외무장관의 서명 및 동·서독 기본조약의 언급 여부 등이 논란거리였다.

그 외에도 동독이 유엔 각 전문위원회(Gremien)로부터 탈퇴하는 것, 그리고 경우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의석을 (통일독일에) 인계하는 문제 등이 남아 있었다.

[부록: 동독의 유엔 전문위원회 소속 현황]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문서
번호 296

동독 및 서베를린 주재 외국 대사관들의 지위에 대한 독일통일의 영향-외교·영사
대표부들과 서독 외무부 내 각 부서에 보낸 서독 외무부 701과의 통문

1990년 8월 28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독일 내 외국 대사관 및 영사부 및 관련 외교 행사, 의전 및 훈장 담당) 701과; 모든 외교·영사 대표부들; 서독 외무부 내 각 부서

내용

모든 외교·영사 대표부들과 서독 외무부 내 각 부서를 수신인으로 하는 본 외무부의 서신에서는 동독 및 서베를린 주재 외국 대사관들의 지위 및 의전 등에 대한 독일통일의 영향을 다루고 있다. 해당국들에 대한 통문도 준비되는 중이다.

그에 따르면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과 함께 동독과 해당국 간에 존재했던 외교적·영사적 관계는 소멸한다. 이제까지 동·서독 양국과 외교적·영사적 관계를 유지했던 국가 중 자신의 동독 내 시설을 폐쇄하지 않기를 원하는 국가는 a)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조약 12조에 따라 동베를린의 종전 대표부를 본(Bonn) 소재 대사관에 속한 사무소로 사용하거나 b) 동베를린 대표부의 기능을 영사 대표부로 변경하는 것 중에 택일할 수 있다. 그곳에서 생기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조약 13조에 따라 이제까지의 대사나 새로운 관리자가 그 업무를 임시로 담당할 수 있다.

본 통문에는 외국 대사관들의 유지, 변환 및 폐쇄와 관련한 그 외 추가적인 설명이 포함되었다. 외무부는 해당 외국국가들에 대해 상기한 내용 중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하였는지에 대해 조속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9.532 E

문서
번호 297

독일통일과 관련한 기술적인 절차에 대한 해당 소재국 정부 통지용 서독 외교 대표부 서한-모든 독일연방공화국 외교 대표부에 전달한 외무부 5국의 통지문 견본 문서

1990년 8월 29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독일연방공화국 외교 대표부; 각 해당 소재국 정부

내용_

서독 외무부는 모든 독일연방공화국(서독) 외교 대표부에 대해 1990년 10월 3일의 독일통일 직전에 각 해당 소재국 정부에 독일통일과 관련한 (동독대사관 및 영사관의 폐쇄, 서독 대사관의 동독 시설 인계, 동독대사관 본국 귀환 등의) 기술적인 절차에 대해 통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본 문서에는 그 통지에 사용될 견본 문서가 포함되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문서
번호 298

동독 외무부 인사에 대한 질의-동독 직업외교관연맹의 입장

1990년 9월 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직업외교관연맹

내용_

동독 직업외교관연맹은 동독 출신 직업외교관들의 직업적·사회적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동독 직업외교관들은 자신들의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 업무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 그리고 특히 동유럽에서의 전문적인 각 외국국가에 대한 지식에 주의를 환기 시켰다. 이들은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장점들이 통일된 독일에서 발휘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통일된 독일의 외무부가 동독 출신 직업외교관들을 인계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동독 직업외교관연맹은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동독 직업외교관연맹은 물론 외무부가 모든 동독 출신 직업외교관들을 받아들일 수 없으리라는 점은 잘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단지 극소수의 인원만이 외무부에서 새 일자리를 얻었다. 부록에는 동독 출신 직업외교관들의 언어적 능력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었다. 그 외에 여기에는 동독 직업외교관들의 수와 그 직위가 표시되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0 E



문서
번호 299

서독 외무부 직원들에 대한 겐서 외무장관의 담화-2+4조약 서명 이후의 담화
내용 요약

1990년 9월 중순 추정

담당자 / 기관_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내용_

서독 외무부 직원들에 대해 겐서 서독 외무장관은 다음의 담화 내용을 전달하였다. 독일의 통일은 역사적인 사건이자, 유럽 내에 새로운 기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내의 정책 변화가 유럽 내의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서독은 통일이 소련에도 이익이 된다고 소련을 설득해야만 했다. 서독은 앞으로 헬싱키협정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기적인 국가 및 정부수반들 그리고 외무장관들의 회담이 개최될 것이다. 갈등과 충돌에 대한 미연의 방지 그리고 그 중재를 위한 센터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미 통일독일은 전력의 40 퍼센트 이상을 감축하였다. 다른 국가들도 이 좋은 선례를 따라야 할 것이다. 독일은 앞으로 유럽 내에서 더 큰 비중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더 큰 힘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이 독일에게 주어졌다는 점이다. 겐서 외무장관은 공동 유럽 통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발언하였다.

겐서 장관은 2+4회담의 경험은 국제적 공생을 위한 새로운 협력 문화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문서
번호 300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회의-신연방주 가입으로 인한 연방-연방주 공동 조정 사무소(Bund-Länder-Clearingstelle)의 확대

1990년 9월 19일

담당자 / 기관_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과장 람바흐

내용_

연방 내무부는 다음 내용을 보고하였다. 연방-연방주 공동 조정사무소(Bund-Länder-Clearingstelle)는 그 업무를 개시하였다. 1개의 신연방주마다 10명의 구연방주 소속 연방 및 연방주 공무원들이 배정되었다. 이에 1명의 조정관(Koordinator)이 각각 추가되었다. 본 문서에는 조정관들의 성명이 포함되었다. 그들의 노동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동독지역의 각 연방주 주도에서는 1990년 9월 24일 자로 자문단의 완전한 구성과 활동이 개시되었다. 본(Bonn) 소재 사무소도 그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 문서에는 앞으로 구성될 실무단들의 목록이 포함되었다. 쇼이블레 연방 내무부장관은 동독지역의 각 연방주 주도에 우편망이 확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자문단의 숙소 문제는 해결되었다. 연방 재무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하였기에, 연방 국방부는 본과 베를린 간 셔틀버스의 추가 배치를 약속할 수 있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8 E



문서
번호 301

(동독) 외무부에서 동독 외무부 직원들의 계속고용 문제-겐서 외무장관의 동독 드 메지에르 총리에 대한 서한

1990년 10월 1일

담당자 / 기관_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동독 총리 겸 외무장관 드 메지에르

내용_

서독 겐서 외무장관은 동독 총리 겸 외무장관 드 메지에르에 대해 (서독 측) 베르텔레 차관을 베를린 소재 행정관리 및 해산 사무소(Verwaltungs-und Abwicklungsstelle in Berlin)의 소장으로 임명하였으며, 동 사무소는 1990년 10월 3일부로 업무를 개시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그는 베르텔레 소장은 서독 외무부 인사과 과장, 동독 주재 서독대표부의 수장을 역임하였기에 상기한 업무에 적절할 것으로 설명하였다. 통일독일의 외무부 및 여타 부처에서는 통일조약에 근거하여 적합한 동독정부 인사들을 적절한 선에서 인계할 것이다. 서독 외무부 역시 얼마 전부터 동독 외무부에서 근무할 기회에 대해 해당 인사들에 대해 홍보 조치를 한 바 있다. 고위 외무부 직위를 위한 선발 과정에 현재 100명이 넘는 동독 출신의 인사들이 참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중 많은 이들은 동독 외무부의 직원들이었다. 베르텔레 소장은 선발된 인사들의 배치 및 직업전환교육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257.754 E

문서
번호 302

레닌그라드와 민스크 소재 동독 보유 토지의 사용 가능성 검토-서독 외무부
(해외대표부 대지 및 시설 관리 담당) III과의 출장 보고

1990년 10월 2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해외대표부 대지 및 시설 관리 담당) III과 소속 브라운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해외대표부 대지 및 시설 관리 담당과에서 레닌그라드와 민스크에 위치한 동독 보유 토지의 현황 및 그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지 답사를 한 것에 대한 출장보고서이다.

먼저 레닌그라드에 위치한 동독 보유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전반적으로 사무실 환경이나 거주 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민스크에 위치한 동독 보유 토지의 현황이 보고되었다. 민스크의 동독 총영사관이 임차한 건물은 중심가에 위치하여 좋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갖고 있다. 인근에 넓은 주차장도 존재한다. 건물의 상태도 양호하여, 바로 업무를 개시할 적절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배치된 사무설비는 불충분한 수준이다. 그 외 동 문서에는 5년 기간으로 고용된 현지 인력이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고용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1.668 E

문서
번호 303

모스크바와 키예프 소재 동독 보유 토지의 사용 가능성 검토-독일 외무부
(해외대표부 대지 및 시설 관리 담당) 111과의 출장 보고

1990년 10월 29일

담당자 / 기관_ 독일 외무부 (해외대표부 대지 및 시설 관리 담당) 111과 소속 브라운

내용_

이 문서는 해외대표부 대지 및 시설 관리 담당과의 출장 보고서이다. 여기에서는 모스크바와 키예프에 위치한 동독 보유 토지의 현황 및 그 사용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먼저 모스크바에 위치한 동독 보유 토지의 현황이 검토되었다. 지난 수십 년 간 소련은 서독에 사무소 건물을 임대했다. 이 건물은 매우 열악한 상태로, 모스크바 소재 대사관 업무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 그 외에도 동 대표부에서의 인력 수요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현재 모스크바 대사관 앞에는 매시간 1,000에서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 한편, 모스크바의 동독대표부 건물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회사들에 의해 임시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에 대한 임대료는 아직까지 징수되지 않았다. 독일연방공화국(즉, 통일독일) 대사관은 상기 구동독 건물의 일부를 향후 10년에서 15년 간 독일문화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동 건물의 다른 부분은 독일의 기업 등에 대해 임대될 것이다.

그런데 모스크바 소재 독일대사관은 이상과 관련한 자신의 1990년 10월 25일자 계획안을 서독 외무부 해외대표부 대지 및 시설 관리 담당과와 협의하지 않았다. 모스크바 소재 독일대사관의 제안은 모호하고 부분적으로는 모순점을 포함하고 있다. 본 보고서 작성자는 소련이 독일이 독일 보유 부동산에 대한 전적인 처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키예프 소재 동독대표부 사무소 건물은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약 6개월에서 12개월을 소요하는) 개축 정비가 필요하다. 어쩌면 키예프시는 다른 부동산을 제공할지도 모른다. 반면 키예프시의 (구서독) 대표부 건물 및 대사 관저는 양호한 상태에 놓여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1.668 E

담당자 / 기관_ 동독지역 연방주들; 유럽공동체; 유럽위원회 의장 자끄 들로르; 연방 수상 헬
무트 콜; 폴란드; 헝가리; 독일 연방의회

내용_

프란츠 에페는 1992년도 6월부터 작센주 주농업·식량·농림부장관의 자문위원이다. 이전에 그는 유럽위원회의 농업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부문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였다. 에페는 동독주민들이 유럽공동체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유럽공동체는 독일통일의 조속한 실현에 도움을 주었다. 유럽공동체의 외부 국경은 이제 폴란드 사이에 존재한다. 에페는 동독지역을 포괄하는 유럽공동체의 확장을 큰 성공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동독주민들의 유럽공동체에 대한 이미지는 구체적이지 않거나 모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동독주민들이 아직 서독도 새로운 고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과 유럽공동체를 동일시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동독의 유럽공동체 가입은 전통적인 유럽공동체 가입 형태와 매우 상이하다. 동독은 유럽공동체의 13번째 회원국이 아니다. 본 소재 연방정부가 유럽공동체에 대한 유일한 대화 파트너이다. 동독주민들에게 유럽 통화는 이들에게는 이미 새로운 통화인 마르크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지는 않았다. 물론 동독지역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은 독-독간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유럽공동체가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사항은 아님을 기억할 필요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공동체에 있어 동독지역에 대한 지원은 남유럽 국가들 및 아일랜드에 대한 지원과 비견할 만하다. 에페는 이 문서에서 동독지역에 대한 7가지 조치들을 제안하였다.

출처_ Eppe, Franz. Les difficultés de l'intégration de l'ex-RDA dans la Communauté. In: Revue du Marché commun et de l'Union européenne. Mai 1993. Nr. 368. S. 405-409.

담당자 / 기관 독일 연방의회;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라인란트-팔츠 주총리 루돌프 샤르핑; 독일 연방의회 기민당/기사당 연합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 외무장관 클라우스 킨켈; 민주사회당/좌파당 원내교섭단체 소속 한스 모드로우; 동맹 90/녹색당 원내교섭단체 소속 볼프강 울만; 재무부장관 테오 바이젤; 사민당 원내교섭단체 유럽정책 대변인 하이데마리 비쇼렉-조일; 자민당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대리 우타 뷔르펠; 독일 연방의회 의원 루돌프 카를 크라우제(무소속/공화주의자); 독일 연방의회 의원 울리히 브리프스(무소속); 독일 연방의회 의원 오르트빈 로박(무소속)

내용

독일 연방의회에서는 다양한 맥락에서 유럽정책에 관련한 논쟁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통일이 곳곳에서 논의되었다.

서독에서 콜 수상은 유럽정책에 대한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서독을 유럽공동체에 통합한 것은 독일통일을 근린 국가들의 동의 하에 실현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기초가 되었다. 콜 수상은 1992년의 마스트리흐트조약의 의미 및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및 노르웨이의 가입에 독일이 특별히 노력했던 점을 강조하였다. 남유럽 및 중·동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공동체 가입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이다. 후자에 대해서 1993년도 말에 약 370억 마르크가, 그리고 소련에 대해서는 약 900억 마르크가 지원되었다. 이들이 과거 체제로 회귀할 경우 독일 역시도 많은 비용을 치뤄야 한다.

사민당 소속 라인란트-팔츠 주총리 루돌프 샤르핑은 프라하와 바르샤바 그리고 부다페스트도 유럽의 도시들임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독일이 '1989년과 1990년에 했던 말보다 행동이 부족했던 점'을 인식할 수 있다. 정부는 유럽연합이 더욱 동독지역 재건에 예를 들어 구조개혁 펀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해야 한다.

기민당/기사당 연합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볼프강 쇼이블레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1994년에서 1999년까지 약 250억 마르크를 신연방주에 대한 지원금으로 계획하였다. 동 지역은 유럽 내 다른 문제 지역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통일된 독일을 유럽공동체 안으로 통합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사회당/좌파당 원내교섭단체 소속 한스 모드로우) 역내 지역 간 빈부 격차가 커지는 것은 독일통일 및 유럽통합 모두와 연관되어 있다. 빈곤한 지역의 사업체들은 건전화 혜택을 받아볼 기회도 없이 청산되었다.

출처 Deutscher Bundestag, 12. Wahlperiode, 231. Sitzung, Plenarprotokoll 12/231

담당자 / 기관_ 유럽공동체; 서독; 유럽 원자력공동체(EURATOM); 유럽 경제공동체; 동독;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 에곤 크렌츠; 동독 동독내각회의 의장 한스 모드로우;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내용_

겐서 외무장관은 동독을 유럽공동체로 통합시키는 데 있어 다양했던 가능성들에 대한 자신의 회상에서, 자신은 동독이 서독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가입이 되는 방식을 선호했었음을 밝혔다.

사후적으로 살펴 보자면 유럽공동체와 관련해서 동독의 특수한 법적 지위가 통일과정에서 장점이 되었는데, 특히 독일의 관세 및 경제법적 통일 그리고 독일 국적의 단일성 원칙이 그러한 장점을 제공하였다.

스트라스부르와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회담들에 있어 겐서 외무장관은 독일통일 협상에 대해 내용을 정기적으로 전달할 것을 약속하면서 독일통일에 대한 유보적 자세를 막기 위해 오데르-나이세 강 국경선을 재확인하였다.

출처_ Genscher, Hans-Dietrich. 1995. Erinnerungen. Berlin: Siedler. S. 391-393.

